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사업설명자료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가기술표준원)

2016. 12.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사업설명자료

|   |   |   |   |   |   |   |
|---|---|---|---|---|---|---|
| 국 | 가 | 기 | 술 | 표 | 준 | 원 |
| 경 | 제 | 자 | 유 | 구 | 역 | 기 |
| 무 | 역 | 위 | 원 | 회 | 단 |   |

2016.12

산업통상자원부

# 목 차

|                         |           |
|-------------------------|-----------|
| <b>1. 무역위원회</b>         | <b>1</b>  |
| <b>&lt;일반회계&gt;</b>     |           |
| (1) 무역구제지원사업            | 4         |
| <b>2. 경제자유구역기획단</b>     | <b>15</b> |
| <b>&lt;일반회계&gt;</b>     |           |
| (1) 자유무역지역관리            | 18        |
| (2)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 24        |
| (3) 동해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사업    | 29        |
| <b>&lt;지특회계&gt;</b>     |           |
| (4)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 36        |
| (5)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 42        |
| (6) 구역청투자유치지원           | 47        |
| (7) 주요 기반시설지원           | 52        |
| (8) 기타 기반시설지원           | 57        |
| <b>3. 국가기술표준원</b>       | <b>63</b> |
| <b>&lt;일반회계&gt;</b>     |           |
| (1)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          | 66        |
| (2)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ODA)  | 80        |
| (3)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사업      | 88        |
| (4)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사업       | 98        |
| (5) 안전제도기반조성사업          | 111       |
| (6)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사업 | 120       |
| (7)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사업    | 131       |

|                                   |     |
|-----------------------------------|-----|
| (8)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 .....           | 141 |
| (9)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사업 .....           | 150 |
| (10) 국가표준활성화사업 .....              | 162 |
| (11) 신기술제품인증사업 .....              | 174 |
| (12)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사업 .....          | 186 |
| (13) 기술규제개혁 선진화 체계 구축사업 .....     | 198 |
| (14)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사업(정보화) ..... | 205 |
| (15)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사업 .....          | 217 |
| (16)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        | 234 |
| (17)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             | 245 |
| (18)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사업 .....          | 271 |
| (19) 기술표준정책사업 .....               | 276 |

# 무역위원회



## 무역위원회

(백만원, %)

| 사업명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감<br>(B-A) |      |
|---------|-------|--------------|--------------|-------------|------|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무역구제지원 | 1,392 | 1,327        | 1,234        | △93         | △7.0 |
| 소계      | 1,392 | 1,327        | 1,234        | △93         | △7.0 |
| 총계      | 1,392 | 1,327        | 1,234        | △93         | △7.0 |

## 무역구제지원사업 (계속)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무역구제지원사업 | 1,392 | 1,327        | 1,234        | △93          | △7.0 |

\* 사업코드 : 110 - 113 - 1200 - 1233 - 301

\* 담당자 : 무역조사실장(조영태), 무역구제정책과장(정경희, 044-203-5850), 사무관(오재열, 5855)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 사업시행주체 |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

### 2. 사업목적

- FTA 확대 등 시장의 지속적 개방에 따라 덤핑·지재권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증가가 우려되는 여건에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무역구제기능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국제무역질서 확립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390백만원

- 최근 FTA확대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및 무역피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국내산업 보호

\* 감시·발굴 등 조사활동 및 전문가 자문료(140백만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80백만원), 무역위원회 개최·운영(90백만원), 법률자문 및 인쇄 등(80백만원)

② 무역구제진흥 : 197백만원

- 중소기업 등의 무역구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학술세미나 등 홍보 및 미래 무역구제 인력양성을 위한 논문대회·경연대회 개최 등

\* 무역구제전문지발간 및 학술세미나(80백만원), 논문발표대회 및 모의재판 경연대회(80백만원), 간담회 및 무역구제제도 홍보 등(37백만원)

③ 산업경쟁력 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 : 300백만원

- 산업피해·덤핑·불공정무역행위 관련 국내외 조사제도 연구, 조사 사례별 이슈 및 시사점 분석 등 무역구제제도 연구

\* 산업경쟁력 조사(150백만원), 무역구제제도 연구(150백만원)

④ 전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 347백만원

- 양자간·다자간 무역구제 협력회의 참여,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참여 및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등 국제협력행사 개최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행사 개최(190백만원),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및 회의 참석(107백만원), 직원교육 및 해외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등(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FTA 등 시장의 지속적 개방으로 관세율이 인하되고 무역량(수입)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덤핑·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증가 우려

- 불공정한 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역구제지원사업의 예산지원 필요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등

- 특히, 기반이 열악하고 법적 대응능력이 미비한 국내 중소기업이 덤핑 등 불공정 무역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지원 필요
- 무역구제제도의 확산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세미나 등 홍보, 산업피해 진단,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판정 및 관련 정책 연구 추진 필요
- 국내·외 기업 간 특허권 분쟁 등과 같은 지재산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수요 증가 예상
  -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위한 현지조사,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 설명회 등의 소요예산 지원 필요
  - 업종별 협·단체 등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실태조사와 상담, 감시 및 조사, 자문기능 강화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 <b>1,392</b> | <b>1,327</b> | <b>1,234</b> | <b>△93</b>   | <b>△7.0</b> |
|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              | 246          | 390          | 390          | -            | -           |
| ▪ 무역구제진흥                        | 391          | 290          | 197          | △93          | △32.1       |
| ▪ 산업경쟁력 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          | 410          | 300          | 300          | -            | -           |
| ▪ 전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 345          | 347          | 347          | -            | -           |
| <input type="checkbox"/> 비목(합계) | <b>1,392</b> | <b>1,327</b> | <b>1,234</b> | <b>△93</b>   | <b>△7.0</b> |
| ○ 일반수용비 (210-01)                | 748          | 623.5        | 526          | △97.5        | △15.6       |
| ○ 일반용역비 (210-14)                | -            | 190          | 190          | -            | -           |
| ○ 국내여비 (220-01)                 | 10           | 20           | 19           | △1           | △5.0        |
| ○ 국외여비 (220-02)                 | 96           | 102          | 107          | 5            | 4.9         |
| ○ 업무추진비 (240-01)                | 8            | 11.5         | 12           | 0.5          | 4.3         |
| ○ 일반연구비 (260-01)                | 410          | 300          | 300          | -            |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 120          | 80           | 80           | -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덤핑,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우리 수출업계의 대응능력 제고
  - FTA의 피해를 사전에 진단하고 신속히 지원하는 선제적 무역피해 방지체제 구축, FTA 시대에 맞는 국제협력 전략의 재정비
- 국내 산업피해구제 수준의 합리화 및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구제제도 운용
  -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커지는 새로운 무역구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기법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 추진
- 특히 사업적 기반이 열악하고 법률적 대응 능력이 미비한 국내 중소기업이 불공정 무역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13.27 |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3.9), 무역구제진흥(2.9),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3.0), 전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3.47)  |
| '17 | 12.34 |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3.9), 무역구제진흥(1.97),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3.0), 전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3.47) |
| '18 | 11.60 | ▪ 무역구제지원사업 11.6억원                                                                     |
| '19 | 11.02 | ▪ 무역구제지원사업 11.02억원                                                                    |
| '20 | 12.55 | ▪ 무역구제지원사업 12.55억원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제6조(직권조사), 제25조(산업경쟁력영향조사) 등
-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등
-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및 관세법시행령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등

#### ○ 추진경위

- 미국 ITC의 개별산업 경쟁력조사 및 무역정책연구(미관세법332조)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02년 산업경쟁력 조사 예산 확보(3억원)
- '05년 제5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 '06년 무역구제포털시스템 구축
- '07년 지재권 침해조사 기능 확대방안 및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보고
- '08년 지재권 침해 조사 활성화 방안 발표
- '09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사업 수행
- '10년 EU의 아국산 폴리에스터강력사 반덤핑조치 무혐의 판정
- '11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무역구제경연대회 개최
- '12년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및 자료 현행화
- '13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강화를 위한 무역위·경찰청간 공조체제 강화
- '14년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무역위원회·WTO 공동 개최
- '15년 덤핑 및 지재권침해 등 조사자료 DB구축 및 홈페이지 공개
- '16년 제1차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개최

###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무역구제지원사업 | 12    | 14.7  | 13.97 | 13.27 | 12.34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 : 경상비로 분류되어 정부 전체 예산절감(10%) 차원에서 99백만원 (8.3%) 불용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개발비 15백만원 이월
- 2014년 : '14년 하반기까지의 WTO 분쟁사례를 연구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비 12백만원 이월 및 집행잔액 8백만원 불용
- 2015년 : 해당없음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12<br>( )    | -<br>( )    | -<br>( )    | 12<br>( )       | 10.86<br>( ) | 0.15<br>( ) | 0.99<br>( ) |
| '14년 | 14.7<br>( )  | 0.15<br>( ) | -<br>( )    | 14.85<br>( )    | 14.65<br>( ) | 0.12<br>( ) | 0.08<br>( ) |
| '15년 | 13.97<br>( ) | 0.12<br>( ) | -<br>( )    | 14.09<br>( )    | 14.09<br>( ) | -<br>( )    | 0.17<br>(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강화 사업 확대·추진 필요('13년 결산 산업위 검토보고서)
- 조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강화 사업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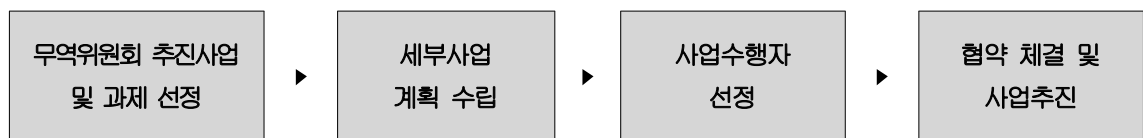
\* 2014년(220백만원) → 2015년(250백만원) → 2016년(390백만원)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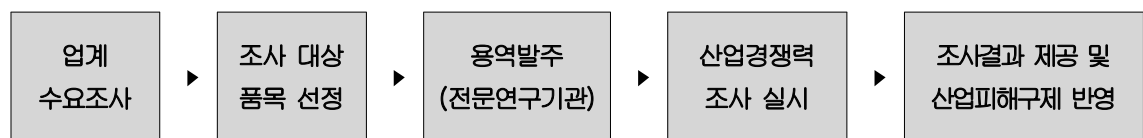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 (5) 사업추진절차

- 무역구제진흥



- 산업경쟁력 조사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 6. 참고자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등 무역구제 제도 관계 법령

## 참고

## 무역구제제도 관계 법령

| 법령명                                         | 조 항                                                                                                                                                                                                                                                                                                                                                                                                                                  | 비 고 |
|---------------------------------------------|--------------------------------------------------------------------------------------------------------------------------------------------------------------------------------------------------------------------------------------------------------------------------------------------------------------------------------------------------------------------------------------------------------------------------------------|-----|
| 불공정<br>무역행위<br>조사 및<br>산업피해<br>구제에<br>관한 법률 |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①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br>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 제6조(직권 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職權)으로 조사할 수 있다.                                                                                                                                                                                                                                                                                                                                                                 |     |
|                                             | 제9조(판정 및 통지 등) ① 무역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판정하여야 한다.<br>②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br>1.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br>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br>3. 그 밖에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br>③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                                             | 제14조의3(포상금의 지급)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br>1. 해당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br>2.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경우 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자<br>②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 제25조(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이나 서비스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

|                                                                 |                                                                                                                                                                                                                                                                                                                                                                                                                                                                                                                                                                                                                                                                                                                                                                                                                                                                                                                                                                                                                                                                                                                                                                                                                                                                                            |  |
|-----------------------------------------------------------------|--------------------------------------------------------------------------------------------------------------------------------------------------------------------------------------------------------------------------------------------------------------------------------------------------------------------------------------------------------------------------------------------------------------------------------------------------------------------------------------------------------------------------------------------------------------------------------------------------------------------------------------------------------------------------------------------------------------------------------------------------------------------------------------------------------------------------------------------------------------------------------------------------------------------------------------------------------------------------------------------------------------------------------------------------------------------------------------------------------------------------------------------------------------------------------------------------------------------------------------------------------------------------------------------|--|
|                                                                 | <p>제25조의2(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①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와 관행으로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li> <li>2.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li> <li>3.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li> <li>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건의, 중간 재검토 또는 연장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li> <li>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li> <li>다.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li> <li>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li> </ul> </li> <li>5. 제22조의5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판정 및 무역피해지원조치의 건의</li> <li>6. 제25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li> <li>7. 제25조의2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li> <li>8.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li> <li>9.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相計關稅)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li> <li>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li> <li>11.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 사례 등의 조사·연구</li> <li>12. 다른 법령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li> <li>13. 그 밖에 공정무역의 촉진 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li> </ol> |  |
| <p>불공정<br/>무역행위<br/>조사 및<br/>산업피해<br/>구제에<br/>관한 법률<br/>시행령</p> | <p>제27조(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이하 "무역구제등"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li> <li>2. 그 밖에 무역구제등의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li> </ol> <p>③ 무역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무역구제등 관련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무역구제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

|            |                                                                                                                                                                                                                                                                                                                                                                                                                                                                                                                                                                                                                                                                                                                                                                                                                                                                                                                                                                                                                                                                                                                                                                                                                                                                                                                                                                                                                                                                                               |  |
|------------|-----------------------------------------------------------------------------------------------------------------------------------------------------------------------------------------------------------------------------------------------------------------------------------------------------------------------------------------------------------------------------------------------------------------------------------------------------------------------------------------------------------------------------------------------------------------------------------------------------------------------------------------------------------------------------------------------------------------------------------------------------------------------------------------------------------------------------------------------------------------------------------------------------------------------------------------------------------------------------------------------------------------------------------------------------------------------------------------------------------------------------------------------------------------------------------------------------------------------------------------------------------------------------------------------------------------------------------------------------------------------------------------------------------------------------------------------------------------------------------------------|--|
| 대외무역법      | <p>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li> <li>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li> <li>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li> </ol>                                                                                                                                                                                                                                                                                                                                                                                                                                                                                                                                                                                                                                                                                                                                                                                                                                                                                                                                                                                                                                                               |  |
| 관세법<br>시행령 | <p>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lt;개정 2006.5.22., 2008.2.29.&gt;</p> <p>②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③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li> <li>나. 당해 물품의 공급국·공급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li> <li>다.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li> <li>라.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li> <li>마.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li> <li>바. 국내의 동종물품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li> </ol> </li> <li>2.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li> <li>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2.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p> |  |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백만원, %)

| 사업명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감<br>(B-A)   | %           |
|---------------------|---------------|---------------|---------------|---------------|-------------|
| <b>&lt;일반회계&gt;</b> | <b>3,897</b>  | <b>5,228</b>  | <b>5,383</b>  | <b>155</b>    | <b>3.0</b>  |
| ○ 자유무역지역 관리         | 3,360         | 4,543         | 4,244         | -299          | -6.6        |
| ○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   | 537           | 685           | 639           | -46           | -6.7        |
| ○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확충   | -             | -             | 500           | 500           | 순증          |
| <b>소계</b>           | <b>3,897</b>  | <b>5,228</b>  | <b>5,383</b>  | <b>155</b>    | <b>3.0</b>  |
| <b>&lt;지특회계&gt;</b> | <b>70,157</b> | <b>71,813</b> | <b>66,601</b> | <b>-5,212</b> | <b>-7.3</b> |
|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 6,757         | 8,185         | 4,135         | -4,050        | -49.4       |
|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 970           | 952           | 917           | -35           | -3.7        |
| ○ 구역청투자유치지원         | 5,050         | 4,450         | 3,800         | -650          | -14.6       |
| ○ 주요 기반시설지원         | 19,287        | 43,503        | 34,992        | -8,511        | -19.6       |
| ○ 기타 기반시설지원         | 38,093        | 14,723        | 22,757        | 8,034         | 54.6        |
| <b>소계</b>           | <b>70,157</b> | <b>71,813</b> | <b>66,601</b> | <b>-5,212</b> | <b>-7.3</b> |
| <b>총계</b>           | <b>74,054</b> | <b>77,041</b> | <b>71,984</b> | <b>-5,057</b> | <b>-6.6</b> |

## 자유무역지역관리(계속)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자유무역지역관리 | 3,360 | 4,543        | 4,244        | -299         | -6.6 |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5-301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권오정), 산업물류투자팀장(정재남, 044-203-4630), 주무관(홍성진, 4635)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71~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2. 사업목적

- 국유건물(표준공장, 청·관사 등) 및 국유시설물(가로등, 도로·보도 등)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국유재산의 효용가치 유지
- 시설관리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하여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 자유 무역지역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 지원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1,108백만원)
  - 관리용역비 355백만원, 공사비 753백만원
- ② 군산자유무역지역 관리(760백만원)
  - 관리용역비 430백만원, 공사비 204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7백만원, 일반수용비 19백만원

③ 대불자유무역지역 관리(531백만원)

- 관리용역비 433백만원, 공사비 98백만원

④ 동해자유무역지역 관리(288백만원)

- 관리용역비 288백만원

⑤ 울춘자유무역지역 관리(325백만원)

- 관리용역비 295백만원, 공사비 30백만원

⑥ 울산자유무역지역 관리(627백만원)

- 관리용역비 422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백만원, 공사비 191백만원

⑦ 김제자유무역지역 관리(378백만원)

- 관리용역비 378백만원

⑧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원(227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홍보책자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35백만원, 투자유치 활성화 여비 19백만원, 사업추진비 5백만원,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비 6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물들을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해 국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안)<br>(B)                                        | 증 감<br>(B-A)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자유무역지역관리 | 3,360 | 4,543                                                  | 4,244                                                  | -299         | -6.6  |
|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                      | 1,073 | 1,414<br>관리용역비 269<br>설시설계비 95<br>공사비 1,050            | 1,108<br>관리용역비 355<br>공사비 753                          | -306         | -21.6 |
|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                      | 519   | 793<br>일반수용비 19<br>시설장비유지비 102<br>관리용역비 367<br>공사비 305 | 760<br>일반수용비 19<br>시설장비유지비 107<br>관리용역비 430<br>공사비 204 | -33          | -4.2  |
|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                      | 497   | 516<br>시설장비유지비 39<br>관리용역비 422<br>공사비 40<br>무형자산 15    | 531<br>관리용역비 433<br>공사비 98                             | 15           | 2.9   |
|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                      | 248   | 342<br>관리용역비 292<br>무형자산 50                            | 288<br>관리용역비 288                                       | -54          | -15.8 |
| ▪ 울춘자유무역지역관리                      | 251   | 328<br>관리용역비 275<br>공사비 53                             | 325<br>관리용역비 295<br>공사비 30                             | -3           | -0.9  |
|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                      | 385   | 642<br>시설장비유지비 49<br>관리위탁비 353<br>무형자산 240             | 627<br>시설장비유지비 14<br>관리위탁비 422<br>공사비 191              | -15          | -2.3  |
|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                      | 261   | 358<br>관리용역비 358                                       | 378<br>관리용역비 378                                       | 20           | 5.6   |
| ▪ 자유무역지역운영지원                      | 126   | 150<br>일반수용비 41<br>여비 21<br>사업추진비 3<br>정책연구비 85        | 227<br>일반수용비 135<br>여비 19<br>사업추진비 5<br>정책연구비 68       | 77           | 51.3  |
| <input type="checkbox"/> 비목(합계)   | 3,360 | 4,543                                                  | 4,244                                                  | -299         | -6.6  |
| ○ 일반수용비 (210-01)                  | 98    | 60                                                     | 154                                                    | 94           | 156.7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3    | 190                                                    | 121                                                    | -69          | -36.3 |
| ○ 관리용역비 (210-15)                  | 1,652 | 2,336                                                  | 2,601                                                  | 265          | 11.3  |
| ○ 국내여비 (220-01)                   | 15    | 10                                                     | 9                                                      | -1           | -10.0 |
| ○ 국외업무여비 (220-02)                 | 9     | 11                                                     | 10                                                     | -1           | -9.1  |
| ○ 사업추진비 (240-01)                  | 3     | 3                                                      | 5                                                      | 2            | 66.7  |
| ○ 정책연구비 (260-02)                  | 107   | 85                                                     | 68                                                     | -17          | -20.0 |
| ○ 실시설계비 (420-02)                  | 29    | 95                                                     | 0                                                      | -95          | 순감    |
| ○ 공사비 (420-03)                    | 1,080 | 1,448                                                  | 1,276                                                  | -172         | -11.9 |
| ○ 시설부대비 (420-05)                  | 5     | 0                                                      | 0                                                      | 0            | 0     |
| ○ 무형자산 (440-00)                   | 309   | 305                                                    | 0                                                      | -305         | 순감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유건물 및 시설물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가치 유지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45.4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보수 16.38</li> <li>▪ 외부위탁 23.36</li> <li>▪ 관사임차 보증금 3.05</li> <li>▪ 운영지원 2.64</li> </ul> |
| '17 | 42.4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보수 13.97</li> <li>▪ 외부위탁 26.01</li> <li>▪ 운영지원 2.46</li> </ul>                          |
| '18 | 41.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보수 13.75</li> <li>▪ 외부위탁 25.01</li> <li>▪ 운영지원 2.40</li> </ul>                          |
| '19 | 40.9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보수 13.57</li> <li>▪ 외부위탁 24.95</li> <li>▪ 운영지원 2.39</li> </ul>                          |
| '20 | 40.7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보수 13.42</li> <li>▪ 외부위탁 24.90</li> <li>▪ 운영지원 2.38</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9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마산개원('70.4) 군산('00.10), 대불('02.11), 동해('05.12), 울촌('05.12), 김제('08.12), 울산('09.1) 지정 이래 매년 국유재산(건물, 기반시설물) 및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계속사업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자유무역<br>지역관리 | 25.67 | 32.08 | 36.28 | 45.43 | 42.44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 불용사유 : 시설유지보수 및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 1.1억원(마산), 시설비 낙찰차액 0.07억원(군산), 관리원 준공 연기 1.28억원(김제)
- 전용사유 : 기본경비 중 공공요금(210-01) 부족으로 인한 0.1억원 전용(동해)

○ '14년

- 불용사유 : 시설공사 낙찰차액 0.55억원(마산), 시설공사 낙찰차액 0.08억원(군산), 보험료 절감 0.1억원(군산), 낙찰차액 등 0.08억원(대불), 낙찰차액 0.22억원(김제) 0.03억원(울산)
- 전용사유 : 청사동 준공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0.7억원 전용(울산)

○ '15년

- 불용사유 : 시설공사 낙찰차액 1.31억원 집행잔액 0.56억원
- 전용사유 : 군산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0.02억원, 울산 공공요금 부족 등으로 0.79억원 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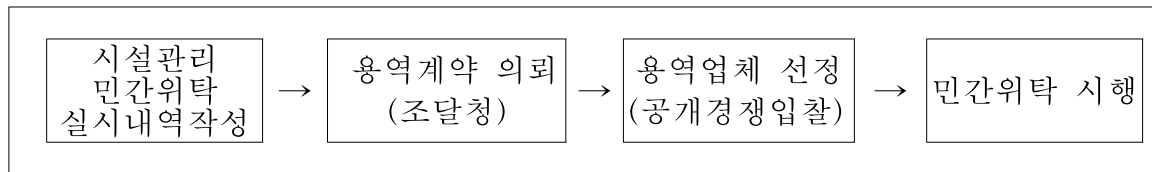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25.6<br>( ) | -<br>( )    | 0.1<br>( )  | 25.5<br>( )     | 23.0<br>( ) | -<br>( ) | 2.5<br>( ) |
| '14년 | 32.1<br>( ) | -<br>( )    | 0.7<br>( )  | 31.4<br>( )     | 30.3<br>( ) | -<br>( ) | 1.1<br>( ) |
| '15년 | 36.3<br>( ) | -<br>( )    | 0.8<br>( )  | 35.5<br>( )     | 33.6<br>( ) | -<br>( ) | 1.9<br>(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계속)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 589   | 685          | 639          | -46          | -6.7 |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6-451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권오정), 산업물류투자팀장(정재남, 044-203-4630), 주무관(홍성진, 4635)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71~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2. 사업목적

- 자유무역지역 내 공동시설물(도로, 가로등, 울타리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기반 여건을 조성

\* 공동부담금을 징수하는 수입대체경비 세출 사업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마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400백만원)

-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78백만원, 도로 청소용역비 322백만원

#### ② 군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73백만원)

-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8백만원, 도로 청소용역비 55백만원

③ 대불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62백만원)

-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2백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4백만원, 수목관리 및 울타리 등 공동시설 유지보수 36백만원

④ 동해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9백만원)

-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2백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7백만원

⑤ 울춘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10백만원)

-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1백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9백만원

⑥ 울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53백만원)

-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2백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7백만원, 제초작업 등 공동시설유지보수 34백만원

⑦ 김제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32백만원)

- 역내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4백만원, 공동시설 유지보수용역 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역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및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납부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 및 입주업체 생산기반여건 조성

## < 세 부 내 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자유무역지역공동<br>시설유지관리 | 589   | 685                                         | 639                                         | -46          | -6.7  |
| ▪ 마산자유무역지역<br>공동시설유지관리                      | 393   | 428<br>공공요금 및 제세 78<br>시설장비유지비 350          | 400<br>공공요금 및 제세 78<br>시설장비유지비 322          | -28          | -6.5  |
| ▪ 군산자유무역지역<br>공동시설유지관리                      | 70    | 80<br>공공요금 및 제세 18<br>시설장비유지비 62            | 73<br>공공요금 및 제세 18<br>시설장비유지비 55            | -7           | -8.8  |
| ▪ 대불자유무역지역<br>공동시설유지관리                      | 72    | 72<br>일반수용비 4<br>공공요금 및 제세 24<br>시설장비유지비 44 | 62<br>일반수용비 2<br>공공요금 및 제세 24<br>시설장비유지비 36 | -10          | -13.9 |
| ▪ 동해자유무역지역<br>공동시설유지관리                      | 4     | 9<br>일반수용비 2<br>공공요금 및 제세 7                 | 9<br>일반수용비 2<br>공공요금 및 제세 7                 | 0            | 0     |
| ▪ 울춘자유무역지역<br>공동시설유지관리                      | 10    | 10<br>일반수용비 1<br>공공요금 및 제세 9                | 10<br>일반수용비 1<br>공공요금 및 제세 9                | 0            | 0     |
| ▪ 울산자유무역지역<br>공동시설유지관리                      | 38    | 54<br>일반수용비 3<br>공공요금 및 제세 17<br>시설장비유지비 34 | 53<br>일반수용비 2<br>공공요금 및 제세 17<br>시설장비유지비 4  | -1           | -1.9  |
| ▪ 김제자유무역지역<br>공동시설유지관리                      | 2     | 32<br>공공요금 및 제세 17<br>시설장비유지비 15            | 32<br>공공요금 및 제세 17<br>시설장비유지비 15            | 0            | 0     |
| <input type="checkbox"/> 비목(합계)             | 589   | 685                                         | 639                                         | -46          | -6.7  |
| ○ 일반수용비 (210-01)                            | 36    | 10                                          | 7                                           | -3           | -30   |
|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119   | 170                                         | 170                                         | 0            | 0     |
|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 434   | 505                                         | 462                                         | -43          | -8.5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 공동시설물(도로, 보도블럭, 가로등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사업활동 지원 및 투자환경 개선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공동부담금(수입대체경비)을 활용하여 공동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활용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6.85 | ▪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 6.85 |
| '17 | 6.39 | ▪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 6.39 |
| '18 | 6.36 | ▪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 6.36 |
| '19 | 6.31 | ▪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 6.31 |
| '20 | 6.28 | ▪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 6.28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9조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 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하며 그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8조 :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 ○ 추진경위

- 마산개원('70.4) 군산('00.10), 대불('02.11), 동해('05.12), 울춘('05.12), 김제('08.12), 울산('09.1) 지정 이래 매년 공동시설물(도로, 보도블럭, 가로등 등)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계속사업임

####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자유무역지역<br>공동시설유지관리 | 5.96  | 5.82  | 6.39  | 6.85  | 6.39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 이·전용

- 기본경비 부족 : ('14년 동해) 2백만원, ('14년 울산) 22백만원, ('15년 동해) 5백만원, ('15년 울산) 14백만원

###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경비 절감: ('13년마산) 3백만원, ('13년 군산) 2백만원, ('14년 마산) 6백만원, ('14년 군산) 3백만원 ('15마산) 7백만원, ('15 군산) 4백만원, ('15김제) 20백만원
- 청사 준공연기에 따른 불용 : ('13년 김제) 62백만원, ('14년 김제) 12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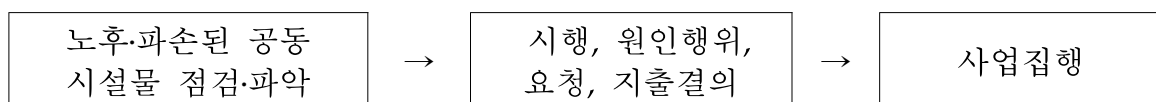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5.96<br>( ) | ( )         | ( )          | 5.96<br>( )     | 5.29<br>( ) | ( )  | 0.67<br>( ) |
| '14년 | 5.82<br>( ) | 0<br>( )    | △0.24<br>( ) | 5.58<br>( )     | 5.37<br>( ) | ( )  | 0.21<br>( ) |
| '15년 | 6.39<br>( ) | 0<br>( )    | △0.19<br>( ) | 6.20<br>( )     | 5.89<br>( ) | ( )  | 0.31<br>(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 (5) 사업추진절차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 동해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 확충사업(신규)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동해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사업 | -     | -            | 500          | 500          |   |

\* 사업코드 : 21- 11 - 0 - 110 - 114 - 3300 - 3331 - 319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권오정),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장기천, 033-522-6111), 주무관(이용욱, 6183)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 '17~'19년(3년)                                                                                  |
| 총사업비   | ○ 280억원(국비 196억원, 지방비 84백만원)                                                                    |
| 사업규모   | ○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1개동 건축<br>- 지상 3층, 연면적 10,136㎡<br>- 일시저장 냉동 2만톤·냉장 5천톤, 가공공장 3,300㎡, 물류 자동화 시설 등 |
| 지원조건   | ○ 지방비 매칭(국비 70% : 지방비 30%)<br>*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의거, 총사업비의 3/4의 범위 내 국비 지원              |
| 사업시행주체 | ○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2. 사업목적

- 중소·중견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저온물류창고형 표준 공장)조성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통한 수출·외투·고용 촉진 도모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축 설계
  - 설계비 1,054백만원 중 국비분 500백만원
- 설계비 산출근거
  - 총공사비(26,626백만원) x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 효율(3.96%)

## □ 지원 필요성

-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적합한 biz모델로 저온 물류창고형 표준공장을 건립하여 글로벌 콜드체인 허브 구축으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추진

### <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 동해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 -     | -            |              |              |    |
| ▪ 설계비<br>[(공사비 x 설계비 요율) - 지방 매칭액] | -     | -            | 500(국비 지원)   | 500          | 순증 |
| □ 비목(합계)                           | -     | -            | 500          | 500          | 순증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500          | 500          | 순증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글로벌 콜드체인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조성 추진
- 환동해권 중심에 위치한 동해자유무역지역을 對 러·일·중 수산물 가공수출 및 원자재 유통허브로 특화
  -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시설을 중심으로 수산 가공·무역·국제물류 등 가치사슬 기업체를 유치하여 제조와 물류의 복합단지로 조성 계획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  | -                                      |
| '17 | 5  | ▪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축 설계비                  |
| '18 | 10 | ▪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축 공사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 '19 | 10 | ▪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축 공사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 '20 | 10 | ▪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축 공사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기반시설 확충 노력)
- 자유무역지역운영지침 제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 ○ 추진경위

- ('15. 9월) 자유무역지역 콜드체인 허브 구축 및 연계방안 연구용역  
: 동해자유무역지역의 특화된 biz Model로 수산물 가공 수출 및 유통모델 제시
- ('16. 2월) 동해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 선정  
: 입주기업 유치발굴, IR활동 지원 등으로 동 사업과 연계성 강화
- ('16. 5월) 동해 콜드체인 허브구축 사업 사전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  
: 동해기반시설확충사업의 사전 사업 타당성(BC 1.12) 및 입주 수요 조사
- ('16. 5월)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확충사업 예산안 제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동해자유무역지역<br>기반시설확충사업 | -     | -     | -     | -     | 5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벨기에) 앤트워프항 콜드체인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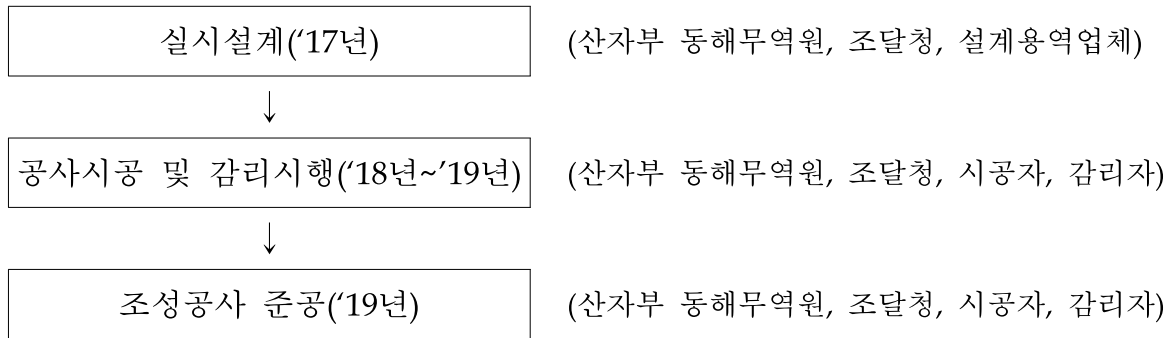
- 앤트워프항은 보관, 품질관리, 숙성, 패키징, 관세 및 수송 서비스 등 신선 식료품 특화서비스를 다수의 기업에 제공
- 유럽내에서 신선물류 허브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이 입주하여 식품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특화
- 2014년 기준 1억 9,900톤의 물동량을 기록

○ (중국) 다롄 콜드체인물류 및 식품가공원구

- 다롄원구는 다롄 싱슈 어항의 배후지에 위치한 해산물 식품 가공단지
- 해삼, 전복 등 수산물 가공기업과 해양식품 물류기업이 입주하여 친환경 해양식품과 콜드체인물류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중
- 콜드체인 상품 물동량 확보와 원자재 수입 후 가공수출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허브 기지로 구축

## (5) 사업추진절차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을 설계, 시공함에 있어 관련분야 감독전문인력을 확보한 조달청(맞춤형서비스제도)에 의뢰하여 시설물 신축



###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 시설공사의 전문인력이 없는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단계별 (기획, 설계, 계약, 시공, 사후관리 등)로 대행하는 서비스제도
-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문인력을 확보한 조달청에서 품질·안전·하도급관리 등 전단계를 일괄 대행하는 맞춤형 서비스임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해당없음

- 동 사업은 법령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아니나,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시행,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 도출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경제성 분석 용역('16.5월) : B/C=1.13, NVP=5,576백만원, IRR=6.8%(KDI 할인율 5.5%)

## 6. 참고자료

- 참고1 [총사업비 산출 내역 및 집행 계획]
- 참고2 [토지이용 계획도 및 시설 조감도]

## 참고 1 총사업비 산출 내역 및 집행 계획

### □ 총사업비 산출 내역

○ 총사업비(280억원) : 공사비(266억원), 시설부대경비(14억원)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         | 합계     |
|-----|--------------|------------|----------|---------|--------|
|     |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
| 금 액 | 26,626(95.1) | 1,054(3.8) | 263(0.9) | 61(0.2) | 28,004 |

- 공사비는(266억원) 동해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과 유사한 시설\*의 m<sup>2</sup>당 건축공사비에(263만원) 건축연면적을(10,136m<sup>2</sup>) 곱하여 산정

\* 기선권현망수협 마산지소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시설부대경비는(14억원)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각 요율을 곱하여 산정

\* 예산작성지침: △설계비 요율(3.96%) △감리비 요율(0.99%) △시설부대비 요율(0.23%)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합 계   |
|------|--------------|--------------|--------------|-------|
| 금 액  | 1,054        | 263          | 61           | 1,378 |
| 산출근거 | 266억 원*3.96% | 266억 원*0.99% | 266억 원*0.23% |       |

### □ 예산 투입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17년  | ‘18년   | ‘19년   | 합 계    |
|-------|----------|-------|--------|--------|--------|
| 예산 투입 | 국 비(70%) | 500   | 9,551  | 9,552  | 19,603 |
|       | 지방비(30%) | 564   | 3,918  | 3,919  | 8,401  |
| 예산 집행 | 총 사업비    | 1,064 | 13,469 | 13,471 | 28,004 |
|       | 공 사 비    | -     | 13,313 | 13,313 | 26,626 |
|       | 시설부대경비   | 1,064 | 156    | 158    | 1,378  |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총사업비 매칭 협의 완료(‘16.9.5(강원), 9.8(동해))

## 참고 2 토지이용 계획도 및 시설 조감도

### □ 토지 이용 계획도



- 부지 1 :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립 예정 부지(12,676m²)
- 부지 2 : 관련기업 유치 자가공장 부지(34,794m²)

### □ 유사 시설 조감도(인천콜드프라자)



##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계속)

###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 6,757 | 8,185        | 4,135        | △4,050       | △49.5%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4900 - 4901 - 301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권오정), 지식서비스투자팀장(한영열, 4620), 사무관(이무일, 4621)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 사업규모   | 유치대상 외국대학 및 외국연구소 초기운영비 지원 등 |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매칭지원(국비 25~50%)      |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

## 2. 사업목적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환경조성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으로 동북아 교육 허브 구축을 위해 해외 우수 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 2,985백만원

- 외국교육기관(3개) 2,985백만원

② 외국교육연구기관 성장기반구축 : 1,150백만원

-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 운영·관리 지원(1,000백만원)

- 성과평가 등 용역(150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는 핵심 국정과제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투기업 경영환경 및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의 주요 요건에 해당
- 비영리기관인 대학·연구소의 특성상 재정적 인센티브가 유치의 필수조건으로 외국도 재정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B-A)        | %     |
| <input type="checkbox"/> 외국교육연구<br>기관 유치지원 | 6,757                           | 8,185                      | 4,135                                       | △4,050       | △49.5 |
| ▪ 설립준비비 및<br>초기운영비<br>(산출근거)               | 5,735<br>(10개×1,147백만원<br>×50%) | 4,685<br>(6개×1,562백만×50%)  | 2,985<br>(3개×1,990백만×50%)                   | △1,700       | △36.3 |
| ▪ 성장 기반 구축<br>(산출근거)                       | 1,022<br>(1개×2,000백만원×<br>50%)  | 1,000<br>(1개×1,000백만×50%)  | 1,150<br>(1개×1,000백만×50%)<br>(3개×50백만×100%) | 150          | 15    |
| ▪ 건축비<br>(산출근거)                            | -                               | 2,500<br>(1개×10,000백만×25%) | -                                           | △2,500       | 순감    |
| <input type="checkbox"/> 비목(합계)            | 6,757                           | 8,185                      | 4,135                                       | △4,050       | △49.5 |
| ○ 자치단체 경상<br>보조(330-01)                    | 6,757                           | 5,685                      | 4,135                                       | △1,550       | △27.3 |
| ○ 자치단체 자본<br>보조(330-03)                    | -                               | 2,500                      | -                                           | △2,500       | 순감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해외 우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동북아 교육·연구 Hub 달성
- 특히,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국내 최초로 외국대학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으로서 동북아 지식 cluster 및 FDI 촉진의 Ancho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09.5 국경위 대통령 보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8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10억원)</li> <li>▪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47억원)</li> <li>▪ 명지독일캠퍼스 조성 건축비(25억원)</li> </ul>                                    |
| '17 | 5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10억원)</li> <li>▪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39억원)</li> <li>▪ 명지독일캠퍼스 조성 건축비(5억원)</li> <li>▪ 충주 국제학교 건축비(1억원)</li> </ul>         |
| '18 | 5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5억원)</li> <li>▪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42억원)</li> <li>▪ 명지독일캠퍼스 조성 건축비(5억원)</li> <li>▪ 충주 국제학교 건축비(1억원)</li> </ul>          |
| '19 | 5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5억원)</li> <li>▪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38억원)</li> <li>▪ 명지독일캠퍼스 조성 건축비(5억원)</li> <li>▪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2단계) 건축비(5억원)</li> </ul> |
| '20 | 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5억원)</li> <li>▪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41억원)</li> <li>▪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2단계) 건축비(5억원)</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

####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외국교육연구기관<br>유치지원 | 154   | 125   | 77    | 82    | 41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 '13년 불용 및 이월

- 교육부 설립승인 지연(유타대) 및 UCLA 등 협약체결 무산으로 초기운영비 5,556백만원 불용
- 초기운영지원 관련 협의지연(젠트대) 및 광특회계 세수부족(CISCO 등 4개 연구소)으로 5,777백만원 이월

### ○ '14년 불용 및 이월

- 경남도의 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추진)에 따라 창원 국제학교 설립 추진 유보·변경에 따른 2,350백만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집행잔액 발생으로 1,094백만원 불용
- 애버딘대 사업계획서 보완 등에 따른 설립추진 지연으로 600백만원, 러시아 정부의 외국분교 설립승인 지연에 따른 러시아 국립음악원 추진 지연으로 인한 600백만원 이월

### ○ 2015년 불용 및 이월

- 러시아정부의 외국분교 설립승인 지연에 따른 러시아 국립음악원 추진지연으로 600백만원 불용
- 외국교육연구기관 집행잔액 발생으로 33백만원 불용
- FAU 부설연구소 MOU 체결지연 등에 따른 설립추진 지연으로 1,000백만원 이월
- 이란 경제제재 해제 지연에 따른 이란전통의학연구소 설립추진 지연으로 500백만원 이월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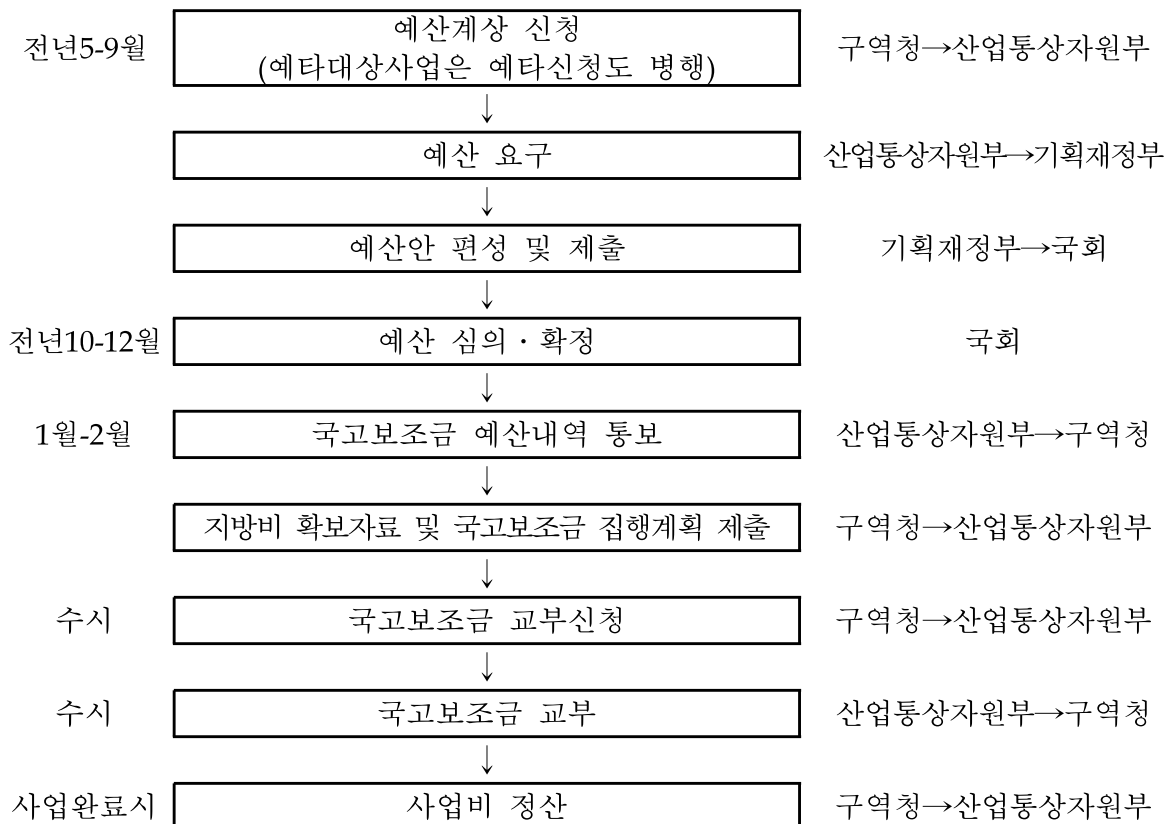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15,425<br>(5,042)  | 950<br>(3,300) | -<br>(-)    | 16,375<br>(8,342)  | 9,469.5<br>(7,193) | 5,777<br>(175)   | 5,555.5<br>(975) |
| '14년 | 12,450<br>(13,583) | 5,777<br>(175) | -<br>(-)    | 18,227<br>(13,757) | 13,583<br>(12,438) | 1,200<br>(763)   | 3,444<br>(556)   |
| '15년 | 7,690<br>(6,757)   | 1,200<br>(763) | -<br>(-)    | 8,890<br>(7,520)   | 6,757<br>(6,222)   | 1,500<br>(1,300) | 633<br>(-)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싱가포르(World-Class University Program)
  - (추진배경) 경제개발위원회 주관으로 10년간('98~'07) 세계 수준의 10개 대학을 유치하여 Education Hub 조성
  - (유치대학 및 정부보조금) MIT(1억불), 듀크대(3억불) 등
- 카타르(Education City)
  - (추진배경) 국가적 고급인력 양성
  - (유치대학 및 정부보조금) 코넬의대, 카네기멜론대, 텍사스 A&M대, 조지타운대 유치를 위해 부지, 건물, 학습용 기자재 제공 및 연간 10억불의 대학 운영비 지원

###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국 가  | 지 원 내 용 |                                                                                                                                                                                                                                                                       |
|------|---------|-----------------------------------------------------------------------------------------------------------------------------------------------------------------------------------------------------------------------------------------------------------------------|
| 싱가포르 | 설립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간 대학부지 무상 제공</li> <li>·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li> <li>* 과실송금 허용 경우 법인세 면제대상에서 제외</li> <li>· 정부가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및 행정적 편의 제공</li> </ul>                                                                                   |
|      | 운영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운영비용 및 연구비 50% 지원<br/>(학생 1,200명 시 운영비만 약 650만 달러 상당- 조지메이슨대 재정계획 상 산출시)</li> <li>· 대학의 각종 세금면제 및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지원</li> </ul>                                                                                             |
|      | 사 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T와 싱가포르국립대(NUS)에 각각 1억 달러 지원</li> <li>· 듀크 의대 유치 시 싱가포르 정부가 3억1천만 달러 기부</li> <li>· 예일대 Liberal Arts College 설립(NUS와 공동)시 운영비, 본교 교수 인건비, 건축비 지원</li> </ul>                                                                 |
| 카타르  | 설립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교지, 건물, 학습용 기자재 등의 교육용 인프라 제공</li> <li>·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li> </ul>                                                                                                                                               |
|      | 운영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교수들의 봉급, 보너스, 주택 등 제공</li> <li>· 유치된 5개 해외대학 운영비로 연간 10억 달러 지원</li> <li>* 코넬 의대 유치를 위해 11년간 7.5억달러 지원</li> <li>· 재단이 학생의 학비 무이자대출 지원</li> </ul>                                                                           |
|      |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 분교의 교육프로그램은 본교와 동일하게 운영</li> <li>· 외국대학 유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과학기술재단 건설</li> </ul>                                                                                                                                                |
| 두바이  | 설립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부지 장기임대 및 50년간 무상 제공</li> <li>· 민간기업으로부터 자금 조달 가능</li> <li>·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li> </ul>                                                                                                                             |
|      | 운영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모든 세금의 50년간 100% 감면</li> </ul>                                                                                                                                                                                |
|      |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 업무승인, 통신 등의 서비스 제공</li> <li>· 이민지원, 동반가족 취업 알선 등</li> <li>· 뉴욕대에 5천만 불을 기부 조건으로 분교설립 계약</li> </ul>                                                                                                                       |
| 중 국  | 설립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부지 및 건설비용 무상 제공</li> <li>·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li> <li>· 민간기업(영리법인)과의 합작설립 허용</li> </ul>                                                                                                                               |
|      | 운영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혜택 및 의료보험제도 등의 도입</li> <li>· 해외학생 유치 장려금</li> </ul>                                                                                                                                                              |
|      | 사 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ingbo시의 영국 노팅엄 대학 유치 시 토지 무상 제공(4,340억 상당) 및 건설비용액(1,650억) 부담</li> <li>· 장쑤성 쑤저우 공업원구의 '국제대학촌'의 경우, 건축 및 토지 비용 100% 부담, 초기 임대료는 무상이나 관리비는 입주대학 부담</li> <li>※ 중국은 중국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합작 설립형태만 인정 (외국대학 단독 분교 설립 불인정)</li> </ul> |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계속)

###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 970   | 952          | 917          | △35          | △3.7 |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301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권오정), 정책기획팀장(장금영, 4610), 주무관(김재환, 4617)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3년~계속           |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 2. 사업목적

- 경자유구역의 지정·운영을 통해 외국인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경제자유구역 정책 및 제도의 수립·지원을 위해 설치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사업비 지원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917백만원 요구
  - 운영비 : 717.9백만원
    - 국내외 투자유치 및 홍보(360), 경자유역 성과평가 실시(150), 위원회 개최비용(88), 인쇄비 및 사무용품구입비 등(86), 기타 기획단운영 기본경비 등(33.9)
  - 국내·외 여비 : 114.1백만원(국내 44.1, 국외 70)

- 경제자유구역 관계기관과의 업무활성화 추진 : 60백만원
-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비 : 25백만원

| 구 분             | '16예산                                                        | '17예산                                                           |
|-----------------|--------------------------------------------------------------|-----------------------------------------------------------------|
| 경제자유구역<br>기획단운영 | 운영비 733.9백만원, 여비<br>127.1백만원, 업무추진비 66백만원,<br>연구개발비 25백만원 지원 | 운영비 717.9백만원, 여비<br>114.1백만원, 업무추진비<br>60백만원, 연구개발비<br>25백만원 지원 |

## □ 지원 필요성

- 경제자유구역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을 위해 설치된 기획단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 및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주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내실화 추구

\*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구역청의 운영경비 차등지원

## < 세부 내역 >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백만원) |
|-------------------|-------|--------------|--------------|--------------|-------|
|                   |       |              |              |              | %     |
|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 970   | 952          | 917          | △35          | △3.7  |
| □ 비목(합계)          | 970   | 952          | 917          | △35          | △3.7  |
| ○ 일반수용비(210-01)   | 641.8 | 702.9        | 687          | △16          | △2.3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1    | 28           | 28           | -            | -     |
| ○ 특근매식비(210-05)   | 42    | -            | -            | -            | -     |
| ○ 임차료(210-07)     | 3     | 3            | 3            | -            | -     |
| ○ 기타운영비(210-16)   | 13.2  | -            | -            | -            | -     |
| ○ 국내여비(220-02)    | 47    | 46.1         | 44           | △2           | △4.6  |
| ○ 국외업무여비(220-02)  | 84    | 81           | 70           | △11          | △13.6 |
| ○ 사업추진비(240-01)   | 68    | 66           | 60           | △6           | △9.1  |
| ○ 연구개발비(260-01)   | 30    | 25           | 25           | -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간 개발 중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의 개발성과 등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본격 추진

\* 현재 인천 등 총 8개 구역, 335.82km<sup>2</sup>를 경자구역으로 지정·운영 중

-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투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지원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 적극 추진
  - 경제자유구역 법제의 운영, 관련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
  - 경제자유구역내 해외 우수대학·연구소 중점 유치 추진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협의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안작성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보좌
  - 경제자유구역 관련 홍보, 성과평가, 국제협력, 통계 및 자료의 조사 등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9.52 | ▪ 운영비 7.339, 여비 1.271, 업무추진비 0.66, 연구개발비 0.25 |
| '17 | 9.17 | ▪ 운영비 7.179, 여비 1.141, 업무추진비 0.60, 연구개발비 0.25 |
| '18 | 8.76 | ▪ 운영비 6.76, 여비 1.09, 업무추진비 0.66, 연구개발비 0.25   |
| '19 | 8.67 | ▪ 운영비 6.67, 여비 1.09, 업무추진비 0.66, 연구개발비 0.25   |
| '20 | 8.32 | ▪ 운영비 6.42, 여비 0.99, 업무추진비 0.66, 연구개발비 0.25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 추진경위

- '02.12.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3. 7.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 8.~10. :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10.~'04. 3. : 3개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8. 3.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자단 지식경제부로 이관
- '08. 4. : 3개 경자구역 추가 지정(황해 : '08.7.22, 대구·경북 : '08.8.13, 새만금 : '08.8.28)
- '09. 1.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특별법 전환, 외국인 임대주택공급규정 등)
- '10. 9. :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수립(위기관리대책회의)
- '12. 4. : 경자구역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위기관리대책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
- '12. 9.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 '12. 9. : 2개 경자구역(동해안권, 충북) 추가지정 후보지역 선정
- '13. 2. : 2개 경자구역(동해안권, 충북) 추가지정('13.2.4 경자위 의결)
- '13. 7. : 제1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경제자유구역<br>기획단운영 | 11.2  | 11.3  | 9.7   | 9.5   | 9.2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이월(0.3억원) : 광특(지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용역비 미집행
- '14년 이월(0.2억원) : 연구용역 기간('14.12.22~'15. 5.21)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이월
- '15년 이월(0.1억원) : 연구용역비 이월 및 집행잔액 4백만 불용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11.18<br>(-) | -<br>(-)    | -<br>(-)    | 11.18<br>(-)    | 9.26<br>(-)  | 0.27<br>(-) | 1.65<br>(-) |
| '14년 | 11.28<br>(-) | 0.27<br>(-) | -<br>(-)    | 15.5<br>(-)     | 11.06<br>(-) | 0.18<br>(-) | 0.31<br>(-) |
| '15년 | 9.70<br>(-)  | 0.18<br>(-) | -<br>(-)    | 9.88<br>(-)     | 9.75<br>(-)  | 0.09<br>(-) | 0.04<br>(-)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 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 구역청 투자유치지원(계속)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구역청투자유치지원 | 5,050 | 4,450        | 3,800        | △ 650        | △ 14.6 |

\* 사업코드 : 120 - 126 - 2700 - 2733 - 302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권오정), 정책기획팀장(장금영, 044-203-4610), 사무관(임경숙, 4615)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 사업규모   |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정액 보조) |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

### 2. 사업목적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자구역 내 국가 및 시도 위임사무를 전담 처리하는 구역청 운영비를 지원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7개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 3,600백만원
  - 평가결과 차등 1,440백만원, 균등 1,440백만원, 규모비례 720백만원 배분
- ② 在中 전시관 운영비 지원 : 150백만원
  - 인천경자관 82백만원, 광양만권경자관 43백만원, 대구경북경자관 25백만원
- ③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링 지원 : 50백만원
  - 회의실 대관료 20백만원, 차량임차료 등 15백만원, 만찬비 등 15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해 경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투자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등에 기여

### <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감<br>(B-A) |        |
|-------------------------|---------------------------|---------------------------|---------------------------|-------------|--------|
|                         |                           |                           |                           |             | %      |
| □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 5,050                     | 4,450                     | 3,800                     |             |        |
| ▪ 구역청 운영비               | 4,450<br>(7개청×평균635.7백만원) | 4,450<br>(7개청×평균635.7백만원) | 3,600<br>(7개청×평균514.3백만원) | △ 850       | △ 19.1 |
| ▪ 바이오네트워크 구축            | 600<br>(9개×평균0.66백만원)     | -                         | -                         | -           | -      |
| ▪ 在中 전시관 운영             | -                         | -                         | 150<br>(3개청×평균50백만원)      | 150         | 순증     |
| ▪ 해외비즈니스 파트너링           | -                         | -                         | 50<br>(1개청×50백만원)         | 50          | 순증     |
| □ 비목(합계)                |                           |                           |                           |             |        |
| ○ 자치단체 경상보조<br>(330-01) | 4,450                     | 4,450                     | 3,800                     | 650         | △ 14.6 |
| ○ 자치단체 자본보조<br>(330-03) | 600                       | -                         | -                         | -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경제자유구역 사무를 전담하는 구역청의 안정적인 운영과 투자유치 활동강화를 위한 적정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경자구역 활성화 도모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44.5  | ▪ 구역청 운영비 44.5억원(7개 구역청 × 6.35억원)                                                                |
| '17 | 40    | ▪ 구역청 운영비 44.5억원(7개 구역청 × 6.35억원)<br>▪ 재중 전시관 1.5억원(7개 구역청 × 5.43억원)<br>▪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링 0.5억원 |
| '18 | 39.2  | ▪ 구역청 운영비 44.5억원(구역청 7개 × 6.35억원)<br>▪ 재중 전시관 1.5억원(7개 구역청 × 5.43억원)<br>▪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링 0.5억원 |
| '19 | 38.04 | ▪ 구역청 운영비 44.5억원(구역청 7개 × 6.35억원)<br>▪ 재중 전시관 1.5억원(7개 구역청 × 5.1억원)<br>▪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링 0.5억원  |
| '20 | 36.52 | ▪ 구역청 운영비 44.5억원(구역청 7개 × 6.63억원)<br>▪ 재중 전시관 1.5억원(7개 구역청 × 5.43억원)<br>▪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링 0.5억원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 추진경위

- ('02.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3.7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8~10월)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10~'04.3월) 3개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8.4월)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추가 지정
- ('08.7~8월) 3개 경제자유구역청(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개청
- ('08.5월) 경제자유구역내 투자활성화대책 대통령 보고(국경위)
- ('09.1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특별법 전환, 외국인 임대주택공급규정 등)
- ('09.5월)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 대통령 보고(국경위)
- ('10.9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수립(위기관리대책회의)
- ('11.4월) 경자법령 개정(지정요건 신설, 사업시행자 요건 신설 등)
- ('12.9월) 경자법령 개정(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 ('12.12월) 경자법령 개정(환지개발방식 도입 등)
- ('13.2월) 2개 경제자유구역(동해안, 충북) 추가 지정
- ('13.5월) 2개 경제자유구역청(동해안권, 충북) 개청
- ('13.7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 ('14.12월) 경자법 개정(SPC 출자비율 완화 등)
- ('15.3월) 경자법령 개정(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 완화)
- ('15.7월) 경자법령 개정(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제도 보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 48.3  | 49.5  | 50.5  | 44.5  | 38.0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특이사항 없음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48<br>(48)     | -<br>(1)    | -<br>(-)    | 48<br>(49)      | 48<br>(45)  | -<br>(1) | -<br>(3) |
| '14년 | 50<br>(50)     | -<br>(1)    | -<br>(-)    | 50<br>(51)      | 50<br>(46)  | -<br>(2) | -<br>(3) |
| '15년 | 44.5<br>(44.5) | -<br>(2)    | -<br>(-)    | 44.5<br>(46.5)  | 44.5<br>( ) | -<br>(3) | -<br>(2)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                       |                                           |
|-------|-----------------------|-------------------------------------------|
| 1/4분기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구역청→산업부<br>(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
|       | ↓                     |                                           |
| 1/4분기 | 1차 교부(균등배분, 규모별 차등배분) | 산업부→구역청<br>(경자법제28조의2, 구역청운영경비집행지침)       |
|       | ↓                     |                                           |
| 2/4분기 | 구역청 성과평가 실시           | 산업부<br>(경자법제28조의3, 성과평가관리지침)              |
|       | ↓                     |                                           |
| 2/4분기 | 성과평가 결과확정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br>(경자법제28조의3, 시행령제29조의2) |
|       | ↓                     |                                           |
| 3/4분기 | 2차 교부(평가결과 차등배분)      | 산업부→구역청<br>(경자법제28조의3, 구역청운영경비집행지침)       |
|       | ↓                     |                                           |
| 익년초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구역청→산업부<br>(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없음

## 주요 기반시설지원(계속)

###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주요 기반시설지원 | 19,287 | 43,503       | 34,992       | -8,511       | -19.6 |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415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권오정), 지식서비스투자팀장(한영열, 4620), 사무관(김진구, 4637)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 총사업비   | 4개 도로 총사업비 7,531억원(2,689억원 기 투입) |
| 사업규모   | '17년 4개 기반시설(도로) 건설 지원           |
| 지원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50% 매칭)                 |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인천, 부산·진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

## 2. 사업목적

-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도로) 건설 지원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경제자유구역내 4개 도로 건설 지원(34,992백만원)
  - (인천)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4,000백만원
  - (부산·진해) 소사-녹산간 도로 9,000백만원, 석동-소사간 도로 8,261백만원

- (대구·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13,731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개발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국비지원 필요

#### < 세부 내역 >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B-A)        | %     |
| <input type="checkbox"/> 주요 기반시설<br>지원 | 19,287                           | 43,503                           | 34,992                           | -8,511       | -19.6 |
| ▪ 소사-녹산간<br>도로<br>(산출근거)               | -                                | 3,000<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9,000<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6,000        | 200   |
| ▪ 석동-소사간<br>도로<br>(산출근거)               | 14,600<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17,618<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8,261<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9,357       | -53.1 |
| ▪ 경산지식산업지구<br>진입도로<br>(산출근거)           | 1,000<br>(설계비 1식)                | 22,885<br>(보상비 1식)               | 13,731<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9,154       | -40.0 |
| ▪ 잠진도-무의도간<br>연도교<br>(산출근거)            | -                                | -                                | 4,000<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4,000        | 순증    |
| ▪ 수성의료지구<br>간선도로<br>(산출근거)             | 3,687<br>(포장 등 준공 소요<br>공사비 1식)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비목(합계)        | 19,287                           | 43,503                           | 34,992                           | -8,511       | -19.6 |
| ○ 자치단체 자본<br>보조(330-03)                | 19,287                           | 43,503                           | 34,992                           | -8,511       | -19.6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반시설 조기구축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세부사업별 사업기간내 사업 준공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435 | ▪ 3개 도로 연차 사업비 435억원 |
| '17 | 350 | ▪ 4개 도로 연차 사업비 350원  |
| '18 | 401 | ▪ 도로 연차 사업비 401억원    |
| '19 | 300 | ▪ 도로 연차 사업비 300억원    |
| '20 | -   | ▪ -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추진경위

- '02.12.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3. 7.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 8.~'03.10. :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10.~'04. 3. : 3개 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4. 5. :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 마련(제4차 경자위)
- '08. 4. :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추가 선정
- '08. 7~'08. 8. : 3개 구역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개청
- '13. 2.~'13. 4 : 2개 경제자유구역(충북, 동해안권) 추가 선정 및 개청
- '15.10. :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 의결(제81차 경자위)

###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주요 기반시설지원 | 837   | 319   | 229   | 435   | 350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이월 : 광특(지특)회계 세수 부족으로 187억원 이월  
\*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187억원
- '15년 이월 : 관급자재 설계변경(레미콘 육상 → 해상 공급)에 따른 계약기간('15. 7~'16. 6) 소요로 36억원 이월  
\*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36억원
- '15년 불용 : 국비 지원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0.7억원 불용  
\*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0.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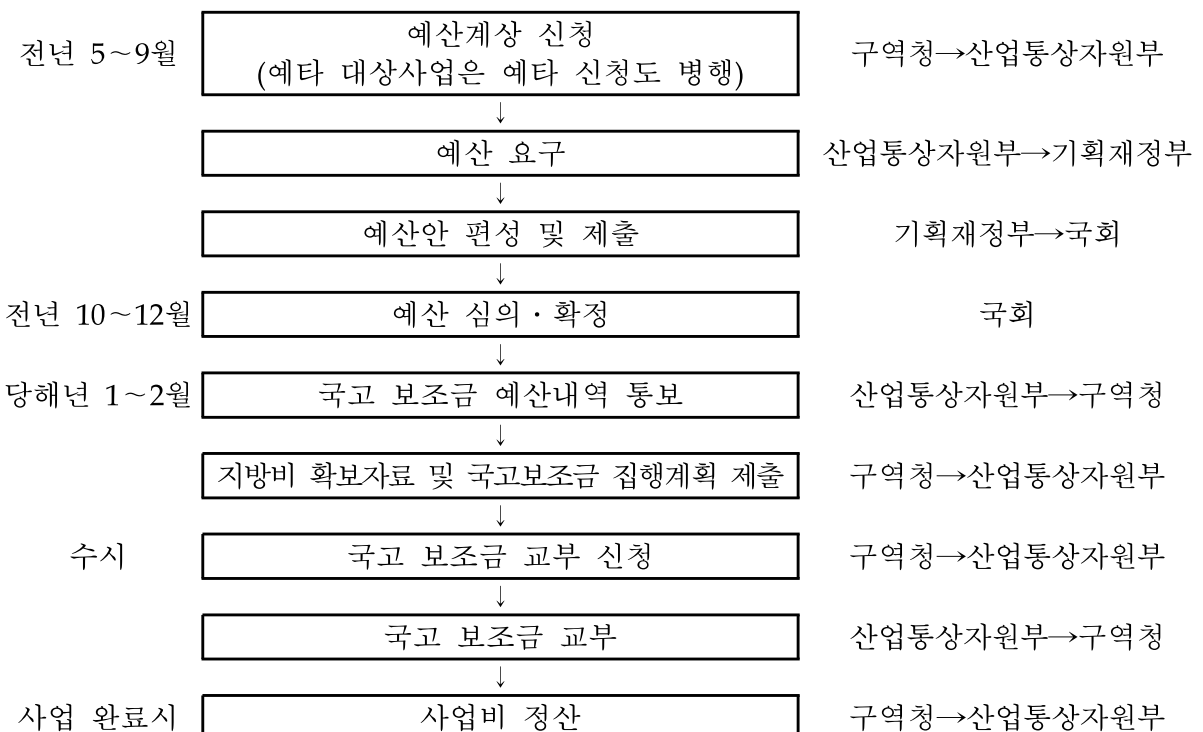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837<br>(837) | -<br>(145)   | -<br>(-)    | 837<br>(982)    | 650<br>(734) | 187<br>(248) | -<br>(-) |
| '14년 | 319<br>(319) | 187<br>(248) | -<br>(-)    | 506<br>(567)    | 506<br>(543) | -<br>(24)    | -<br>(-) |
| '15년 | 229<br>(229) | -<br>(24)    | -<br>(-)    | 229<br>(253)    | 192<br>(219) | 36<br>(34)   | 1<br>(-)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 (5) 사업추진절차



## (6)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사업명           | 조사기관         | 기간            | 결과                      |
|---------------|--------------|---------------|-------------------------|
|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 한국개발연구원(KDI) | '13. 2~'13.11 | B/C 1.13,<br>AHP 0.555  |
| 소사-녹산간 도로     | 한국개발연구원(KDI) | '04. 6~'04. 9 | B/C 0.99,<br>AHP 0.627  |
| 석동-소사간 도로     | 한국개발연구원(KDI) | '05.12~'06. 8 | B/C 1.67,<br>AHP 0.653  |
| 명지지구 간선도로     | 한국개발연구원(KDI) | '09. 3~'09. 8 | B/C 0.872,<br>AHP 0.501 |
|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 한국개발연구원(KDI) | '12. 3~'12.12 | B/C 1.1,<br>AHP 0.532   |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 한국개발연구원(KDI) | '13.11~'14. 8 | B/C 1.21,<br>AHP 0.609  |

## 6. 참고자료 : 해당 없음

## 기타 기반시설지원(계속)

###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기타 기반시설지원 | 38,093 | 14,723       | 22,757       | 8,034        | 54.6 |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409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권오정), 지식서비스투자팀장(한영열, 4620), 사무관(김진구, 4637)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 총사업비   | -                                       |
| 사업규모   | '17년 12개 기반시설(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건설 지원        |
| 지원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50% 매칭)                        |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

## 2. 사업목적

-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도로, 공동구 및 용수공급시설 등) 건설 지원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경제자유구역내 11개 도로 건설 지원(19,857백만원)

- (인천) 아암로 확장 4,000백만원
- (부산·진해) 웅동지구 진입도로 4,050백만원
- (광양만권)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500백만원 및 4호선 500백만원, 팔마사거리-신대단지간 연결도로 1,803백만원

- (대구·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1,000백만원, 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 진입도로 5,500백만원 및 간선도로 500백만원
- (황해) 포승지구 진입도로 500백만원 및 간선도로 1,504백만원

② 경제자유구역내 2개 용수공급시설지원 2,900백만원

- (대구·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2,500백만원, 포항융합 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4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개발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국비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B-A)        | %    |
| □ 기타 기반시설<br>지원                 | 38,093                          | 14,723                          | 22,757                          | 8,034        | 54.6 |
| ▪ 송도 6-8공구<br>간선도로<br>(산출근거)    | 500<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874<br>(포장 등 준공 소요<br>공사비 1식)   | -                               | -874         | 순감   |
| ▪ 아암로 확장<br>(산출근거)              | -                               | 3,000<br>(보상 등 착공 소요<br>공사비 1식) | 4,000<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1,000        | 33.3 |
| ▪ 웅동지구 진입도로<br>(산출근거)           | -                               | 1,000<br>(보상 등 착공 소요<br>공사비 1식) | 4,050<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3,050        | 305  |
| ▪ 미음지구 진입도로<br>(산출근거)           | 3,026<br>(포장 등 준공 소요<br>공사비 1식) | -                               | -                               | -            | -    |
| ▪ 명지지구 진입도로<br>(산출근거)           | 5,782<br>(포장 등 준공 소요<br>공사비 1식) | -                               | -                               | -            | -    |
| ▪ 신행 북측배후지<br>-용원간 도로<br>(산출근거) | 1,520<br>(포장 등 준공 소요<br>공사비 1식) | -                               | -                               | -            | -    |
| ▪ 갈사만 진입도로<br>1호선<br>(산출근거)     | 557<br>(포장 등 준공 소요<br>공사비 1식)   | -                               | -                               | -            | -    |

|                                  |                                 |                                 |                                  |        |       |
|----------------------------------|---------------------------------|---------------------------------|----------------------------------|--------|-------|
| ▪ 갈사만 진입도로<br>2호선<br>(산출근거)      | 4,668<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1,810<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500<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1,310 | -72.4 |
| ▪ 갈사만 진입도로<br>4호선<br>(산출근거)      | 1,898<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838<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500<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338   | -40.3 |
| ▪ 갈사만조선산단<br>내부간선도로<br>(산출근거)    | 3,000<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                               | -                                | -      | -     |
| ▪ 대송산단<br>내부간선도로<br>(산출근거)       | 1,530<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                               | -                                | -      | -     |
| ▪ 화양지구 간선도로<br>(산출근거)            | 2,710<br>(포장 등 준공 소요<br>공사비 1식) | -                               | -                                | -      | -     |
| ▪ 신태지구 간선도로<br>(산출근거)            | 4,547<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1,080<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                                | -1,080 | 순감    |
| ▪ 팔마사거리-신대<br>단지간 연결도로<br>(산출근거) | 3,575<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1,073<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1,803<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730    | 68.0  |
| ▪ 경산지식산업지구<br>간선도로<br>(산출근거)     | 4,780<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1,788<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1,000<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788   | -44.1 |
| ▪ 경산지식산업지구<br>용수공급시설<br>(산출근거)   | -                               | 2,000<br>(보상 등 착공 소요<br>공사비 1식) | 2,500<br>(자재비 등 연차<br>소요 공사비 1식) | 500    | 25    |
| ▪ 포항융합기술지구<br>진입도로<br>(산출근거)     | -                               | -                               | 5,500<br>(보상비 1식)                | 5,500  | 순증    |
| ▪ 포항융합기술지구<br>간선도로<br>(산출근거)     | -                               | -                               | 500<br>(보상비 1식)                  | 500    | 순증    |
| ▪ 포항융합기술지구<br>용수공급시설<br>(산출근거)   | -                               | -                               | 400<br>(설계비 1식)                  | 400    | 순증    |
| ▪ 포송지구 진입도로<br>(산출근거)            | -                               | -                               | 500<br>(설계비 1식)                  | 500    | 순증    |
| ▪ 포송지구 간선도로<br>(산출근거)            | -                               | 1,260<br>(보상 등 착공 소요<br>공사비 1식) | 1,504<br>(포장 등 연차 소요<br>공사비 1식)  | 244    | 19.4  |
| □ 비목(합계)                         | 38,093                          | 14,723                          | 22,757                           | 8,034  | 54.6  |
| ○ 자치단체자본<br>보조(330-03)           | 38,093                          | 14,723                          | 22,757                           | 8,034  | 54.6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반시설 조기구축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세부사업별 사업기간내 사업 준공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147 | ▪ 9개 도로 및 1개 용수공급시설 연차 사업비 147억원  |
| '17 | 228 | ▪ 11개 도로 및 2개 용수공급시설 연차 사업비 228억원 |
| '18 | 138 | ▪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연차 사업비 138억원        |
| '19 | 119 | ▪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연차 사업비 119억원        |
| '20 | 175 | ▪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연차 사업비 175억원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추진경위

- '02.12.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3. 7.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 8.~'03.10. :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10.~'04. 3. : 3개 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4. 5. :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 마련(제4차 경자위)
- '08. 4. :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추가 선정
- '08. 7.~'08. 8. : 3개 구역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개청
- '13. 2.~'13. 4. : 2개 경제자유구역(충북, 동해안권) 추가 선정 및 개청
- '15.10. :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 의결(제81차 경자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기타 기반시설지원 | 537   | 491   | 441   | 147   | 228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이월) 광특(지특)회계 세수부족으로 100억원 이월
  - \*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90억원), 송도 6-8공구(광3-29호선) 간선도로(10억원)
- ('14년 이월) 사업 지연(소송 등) 및 지방비 미매칭으로 61억원 이월
  - \* 갈사만조선산단 내부간선도로(30억원),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15.3억원), 신항 북측배후지-용원간 도로(15.2억원)
- ('15년 이월) 사업 지연(소송 등) 및 지방비 미매칭으로 111억원 이월
  - \* 갈사만조선산단 내부간선도로(60억원),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51억원)
- ('15년 불용) 지특회계 이월제한규정\*에 따라 단위사업(경제자유구역 지원-총액 731억원)의 이월 가능(146억원) 초과금액 불용(10억원\*\*)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5년도, 기재부)」 중 지특회계 예산은 단위사업비 총액의 20%까지만 원인행위 없이 이월 가능(경제자유구역지원 '15년 예산 73,052백만원 × 20% = 14,610백만원)

\*\* 갈사만조선산단 내부간선도로(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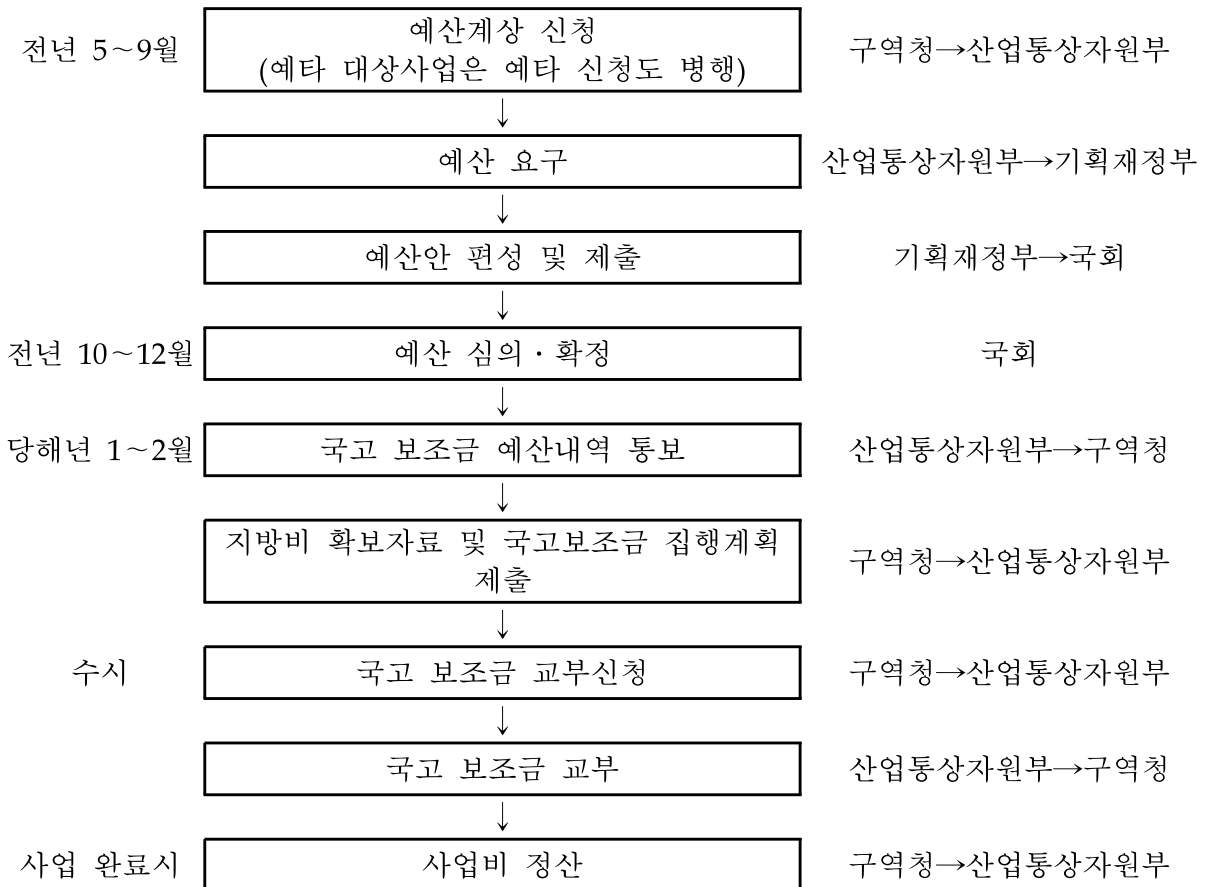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537<br>(537) | 45<br>(327)  | -<br>(-)    | 582<br>(864)    | 482<br>(595) | 100<br>(269) | -<br>(-)  |
| '14년 | 491<br>(491) | 100<br>(269) | -<br>(-)    | 591<br>(760)    | 530<br>(331) | 61<br>(429)  | -<br>(-)  |
| '15년 | 441<br>(441) | 61<br>(429)  | -<br>(-)    | 502<br>(870)    | 381<br>(526) | 111<br>(344) | 10<br>(-)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없음

# 국 가 기 술 표 준 원



## 국가기술표준원

(백만원, %)

| 사업명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감<br>(B-A)  | %          |
|------------------------------|---------------|---------------|---------------|--------------|------------|
| <b>&lt;일반회계&gt;</b>          |               |               |               |              |            |
| ○ 국제 표준 활동 지원                | 2,638         | 2,298         | 2,105         | △193         | △8.4       |
| ○ 개도국 표준 체계 보급 지원(ODA)       | 890           | 1,115         | 1,200         | 85           | 7.6        |
| ○ 국가인증제도 혁신기반 구축             | 1,281         | 1,197         | 1,200         | 3            | 0.25       |
| ○ 제품 시장 감시 역량 강화             | 3,494         | 3,749         | 4,025         | 276          | 7.4        |
| ○ 안전제도 기반 조성                 | 2,449         | 1,977         | 1,899         | △78          | △3.9       |
| ○ 제품 사고 조사 및 수입 제품 안전 관리     | 525           | 627           | 878           | 251          | 40.0       |
| ○ 어린이 제품 안전 관리 생태계 조성        | -             | -             | 950           | 950          | 100        |
| ○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보급            | 1,215         | 1,095         | 1,010         | △85          | △7.8       |
| ○ 법정 계량 선진화 기반 구축            | 1,239         | 1,445         | 1,332         | △113         | △7.8       |
| ○ 국가 표준 활성화                  | 4,157         | 4,287         | 3,919         | △368         | △8.6       |
| ○ 신기술 제품 인증                  | 2,247         | 2,137         | 2,223         | 86           | 4.0        |
| ○ 무역 기술 장벽 대응 지원             | 1,972         | 4,059         | 4,380         | 321          | 7.9        |
| ○ 기술 규제 개혁 선진화 체계 구축         | 1,119         | 1,119         | 1,172         | 53           | 4.7        |
| ○ IT 기반 기술 표준 정보화 체계 구축(정보화) | 631           | 755           | 590           | △165         | △21.9      |
| ○ 국제적 합성 평가 기반 구축            | 1,968         | 2,266         | 2,311         | 45           | 2.0        |
| ○ 국가 표준 기술 개발 및 보급           | 29,145        | 30,096        | 29,962        | △134         | △0.4       |
| ○ 표준 안전기반 구축                 | 21,660        | 22,089        | 24,166        | 2,077        | 9.4        |
|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 운영              | 1,385         | 1,451         | 1,444         | △7           | △0.4       |
| ○ 기술 표준 정책                   | 2,004         | 1,687         | 1,529         | △158         | △9.4       |
| <b>소계</b>                    | <b>80,019</b> | <b>83,449</b> | <b>86,295</b> | <b>2,846</b> | <b>3.4</b> |
| <b>총계</b>                    | <b>80,019</b> | <b>83,449</b> | <b>86,295</b> | <b>2,846</b> | <b>3.4</b> |

## 국제 표준 활동 지원 사업(계속)

< 00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 | 2,638 | 2,298        | 2,105        | △193         | △8.4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1 - 302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강병구), 국제표준과장(박재훈, 043-870-5350), 사무관(김종대, 043-870-5469)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

### 2. 사업목적

- ISO/IEC 등 국제표준화 회의에 의장·간사 및 국내전문가(학계·산업계 등) 참가지원을 통해 표준 선진국과의 표준협력을 증진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임원진출 확대 및 주요 국제표준화 총회의 국내유치 등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
-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교역에서 비관세 기술무역장벽(TBT)을 제거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원천 표준인프라 확충
-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확대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 지원 : 555백만원

- 18회 × 약 20백만원(평균 1회 개최 임차비용) = 360백만원
- 회의자료 인쇄, 통역비 등 운영비 : 18회 × 약 3.5백만원 = 63백만원
- 주요국 표준(ASTM, ASME) 등 자료구입비 : 38백만원
- 국제표준화 동향(국제표준회의 참가결과보고서, 회의개최결과보고서 등) 전파를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 20백만원
- 국제표준화활동 업무지원 보조인력 활용비 : 10백만원
- 국제회의 개최시 업무협력비 : 64백만원

##### ②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및 주요 국가(기구) 표준협력강화 지원 : 700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 160명(지원대상자수) × 약 3.5백만원(1회 평균 출장여비) = 560백만원
-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 : 40명 × 약 3.5백만원(1회 평균 출장여비) = 140백만원

##### ③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100백만원

- 3건 × 약 33.3백만원 = 100백만원

##### ④ 국제 의장·간사 활동 지원(민간보조) : 750백만원

-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 : 126회 × 약 5백만원 = 630백만원
- 전문간사 인건비 : 2.5백만원 × 2명 × 12월 = 60백만원
- 의장간사협의회 및 워크숍 : 10백만원 × 2회 = 20백만원
- 전략기획 등 국제 의장·간사 지원 경비 : 40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기술의 세계시장 선점 필요**
  -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대응,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진출, 국제표준회의 국내유치, 양자·다자 국제표준협력 등 기술외교 지원확대가 절실
- **‘10.5.29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의 공통표준화 등 표준협력을 추진키로 선언하는 등 표준협력사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
- 국가표준기본계획의 비전인 「2018년 세계 7위의 국제표준강국(상임이사국) 목표」 달성을 위해,
  - 국제표준화회의 임원(정책위임원, 기술위원회 의장, 간사, 컨비너) 수입을 2010년의 2배로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화활동 대폭 강화 필요
    - \*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수입 확대 : (‘10) 112명 ⇒ (‘18) 220명
  - 또한, 우리 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활동지원 확대 필요
    - \* 신규 국제표준 제안 확대 : (‘10) 390건 ⇒ (‘18) 840건
- 최근(‘12년) 중국이 일본에 이어 ISO/IEC 상임이사국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한·중·일 중 **한국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기술이 국제표준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 제기
  - \* 이제는 ‘국제표준 도입국’에서 더 나아가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
-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 추진 중
  - \* 국정과제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 세부과제 3 (기술과 아이디어, 상상력을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 창출)
  - \* 단위과제 1 (우리 기술의 국가·국제표준화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세 부 내 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국제표준활동지원 | 2,638 | 2,298                                                                                                             | 2,105                                                                                                           | △193         | △8.4  |
| ▪ 국제표준화회의개최<br>(산출근거)             | 578   | 836<br>(임차료) 30회×20=600<br>(운영비) 30회×3.5=105<br>(자료구입비) 21<br>(자산취득) 20<br>(보조인력 인건비) 11<br>(사업추진비) 69            | 555<br>(임차료) 18회×20=360<br>(운영비) 18회×3.5=63<br>(자료구입비) 38<br>(자산취득) 20<br>(보조인력 인건비) 10<br>(사업추진비)64            | △281         | △33.6 |
|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지원<br>(산출근거)         | 596   | 512<br>(외부 전문가<br>국제표준화 여비)<br>125명×3.5=437.5<br>(내부 전문가<br>국제표준협력<br>여비)21명×3.5= 73.5                            | 700<br>(외부 전문가<br>국제표준화 여비)<br>160명×3.5=560<br>(내부 전문가<br>국제표준협력<br>여비)40명×3.5= 140                             | 188          | 36.7  |
|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 연구<br>(산출근거)         | 100   | 200<br>(정책연구용역)6건×33.3<br>=300                                                                                    | 100<br>(정책연구용역)3건×33.3<br>=100                                                                                  | 100          | △50.0 |
| ▪ 국제의장·간사 활동 지원<br>(산출근거)         | 650   | 750<br>(국제의장간사 등 여비)<br>150회×4=600<br>(전문간사 인건비)<br>2.7×2명×12월=64.8<br>(의장간사협의회 및<br>워크숍) 10×2=20<br>(의장간사 경비) 60 | 750<br>(국제의장간사 등 여비)<br>126회×5=630<br>(전문간사 인건비)<br>2.5×2명×12월=60<br>(의장간사협의회 및<br>워크숍) 10×2=20<br>(의장간사 경비) 40 | -            | -     |
| ▪ ISO 총회 개최                       | 714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비목(합계)   | 2,638 | 2,298                                                                                                             | 2,105                                                                                                           | △193         | △8.4  |
| ○ 일용임금(110-04)                    | -     | 14                                                                                                                | 10                                                                                                              | △4           | △28.5 |
| ○ 일반수용비(210-01)                   | 70    | 210                                                                                                               | 101                                                                                                             | △100         | △47.6 |
| ○ 임차료(210-07)                     | 387   | 523                                                                                                               | 360                                                                                                             | △163         | △31.1 |
| ○ 국외업무여비(220-02)                  | 702   | 512                                                                                                               | 700                                                                                                             | 188          | 36.7  |
| ○ 사업추진비(240-01)                   | 73    | 69                                                                                                                | 64                                                                                                              | △5           | △7.24 |
| ○ 연구개발비(260-00)                   | -     | 200                                                                                                               | 100                                                                                                             | △100         | △50   |
| ○ 민간경상보조(320-01)                  | 750   | 750                                                                                                               | 750                                                                                                             | -            | -     |
| ○ 자산취득비(430-01)                   | 17    | 20                                                                                                                | 20                                                                                                              | -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의한 비전인 「2018년 세계 7대 국제표준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표준화회의 임원(기술위원회 의장, 간사, 컨비너) 수임을 2010년의 2배로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화활동 대폭 강화
  - 국제표준화기구 임원(기술위원회 의장, 간사, 컨비너) 수임 확대 : ('10) 112명 → ('15) 168명 → ('18) 220명
  - 국제표준 제안 확대 : ('10) 390건 → ('15) 670건 → ('18) 840건
- 국제표준화 주요 선진국\*은 양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총회 유치로 통해 국제표준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며, 우리나라도 총회의 국내개최 및 유치에 지속적 경주
  - \* 주요 IEC 총회 개최국 : 중국('90, '02, '19), 미국('98, '10, '22), 독일('96, '06, '16), 일본('99, '14), 한국('04, '18)
  -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표준화회의 총회 개최 실적 : IEC 서울총회('04), W3C 서울총회('14), ISO 서울총회('15)
  - 총회 유치 : 2018년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총회 유치 확정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 (억원) |       |                                                                                                                                                                                                  |
|------|-------|--------------------------------------------------------------------------------------------------------------------------------------------------------------------------------------------------|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16  | 22.9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회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8.36</li> <li>▪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4.07</li> <li>▪ 국제협력활동 강화 : 1.05</li> <li>▪ 국제표준정책수립 : 2</li> <li>▪ 국제 의장 간사 활동지원 : 7.5</li> </ul> |
| '17  | 21.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회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5.55</li> <li>▪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5.6</li> <li>▪ 국제협력활동 강화 : 1.4</li> <li>▪ 국제표준정책수립 : 1</li> <li>▪ 국제 의장 간사 활동지원 : 7.5</li> </ul>   |
| '18  | 20.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4.15</li> <li>▪ 국제회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5.99</li> <li>▪ 국제협력활동 강화 : 1.55</li> <li>▪ 국제표준정책수립 : 1</li> <li>▪ 국제 의장 간사 활동지원 : 7.5</li> </ul> |

|     |       |                                                                                                                                                                                             |
|-----|-------|---------------------------------------------------------------------------------------------------------------------------------------------------------------------------------------------|
| '19 | 17.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4</li> <li>▪ 국제회의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4.38</li> <li>▪ 국제협력활동 강화 : 1</li> <li>▪ 국제표준정책수립 : 1</li> <li>▪ 국제 의장 간사 활동지원 : 7.5</li> </ul> |
| '20 | 17.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4</li> <li>▪ 국제회의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4.38</li> <li>▪ 국제협력활동 강화 : 1</li> <li>▪ 국제표준정책수립 : 1</li> <li>▪ 국제 의장 간사 활동지원 : 7.5</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추진)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 추진경위

- WTO 출범 이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활동 강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
- 국가차원의 국제표준화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국제표준화기구 (ISO, IEC)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02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
- '10.5.29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의 공통표준화 등 표준협력을 추진키로 선언하는 등 표준협력사업 중요성의 지속적 증대
-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실적이 '02년에 24건에서 '15년 670(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제표준 도입국에서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
-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산업 경쟁력 증가에 대하여 인식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국정과제(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로 추진 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국제표준화활동지원 | 21    | 22    | 27    | 23    | 21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 : 예산절감액(98백만원) 불용
- 2014년 : 집행잔액(11백만원) 불용
- 2015년 : 집행잔액(4.5백만원) 불용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20.98<br>(7.5)   | ( )         | ( )         | 20.98<br>( )    | 20.00<br>(7.5)   | ( )  | 0.98<br>(0) |
| '14년 | 21.48<br>(7.5)   | ( )         | ( )         | 21.48<br>( )    | 21.37<br>(7.5)   | ( )  | 0.11<br>(0) |
| '15년 | 26.42<br>(13.64) | ( )         | ( )         | 26.42<br>( )    | 26.38<br>(13.64) | ( )  | 0.04<br>(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영국 통상부(DTI)는 자국 표준화기구인 '영국 표준화협회'(BSI)의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02년 6월부터 영국 정부(DTI)와 BSI간의 MoU 체결을 통해 지원을 명문화(4.3조 4항)  
\* 국제회의경비지원(AITS, Assisted International Travel Scheme, 1982년 시작)
- 일본은 「일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연구개발·표준화 전략 방안('08.7월 공표)」을 수립하여, 정부예산으로 표준전문가에 대하여 국제표준화활동 참가경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 중
- 미국은 「표준우산(Standard umbrella)」정책으로 APEC국가의 결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표준주도권 장악을 위해 국제 의장·간사 진출에 총력을 기울임
- EU는 뉴어프로치 정책으로 표준을 「경제·사회 통합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실용적인 표준화 정책을 통해 세계 2위 기술수출국으로 도약
- 중국도 표준정책을 10대 국가 정책 중 하나로 추진('07)하고, 후진 타오 주석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自主创新 보고서'에서 자주적 표준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연계

### (5) 사업추진절차

#### 【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

- ① 국가기술표준원내 각 국별 내부수요조사 및 외부기관/개인 수요조사 공고를 통해 국제표준화활동 수요조사(전년 12월)
- 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지원내역 각과 통보(1월)
- ③ 연중 사업시행 및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12월-익년 1월)

#### 【 보조금 수행 : 한국표준협회 】

- ① 보조금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수립(전년 12월)
-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월)
-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 ④ 사업집행결과 정산 및 분석·평가 (12월-익년 1월)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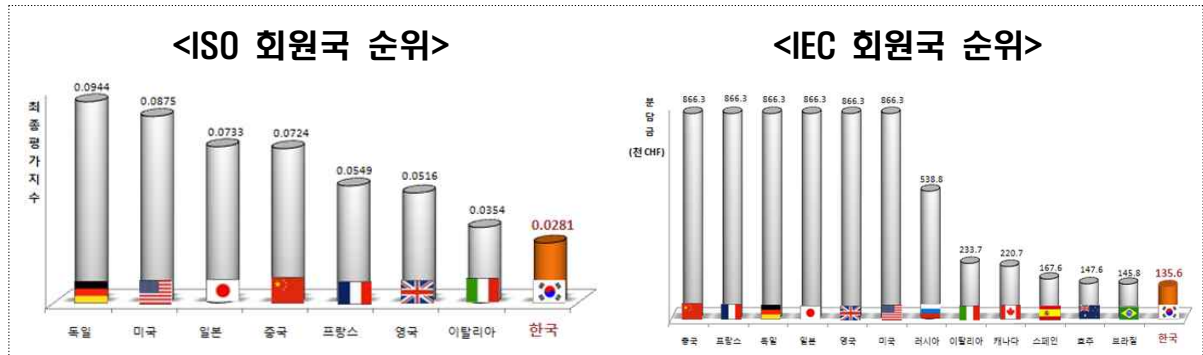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 6. 참고자료

-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현 주소 및 관련 법 조문 및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현황

## 참고 1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현 주소(기준:'16년)

### □ (국가 순위) ISO 8위, IEC 13위



\* <평가기준> (ISO) 분담금(60%)+간사수입(20%)+정회원률(20%)= 최종평가지수  
(IEC) 인구, 국민총소득(GNI), 전력소비량로 산출 = 분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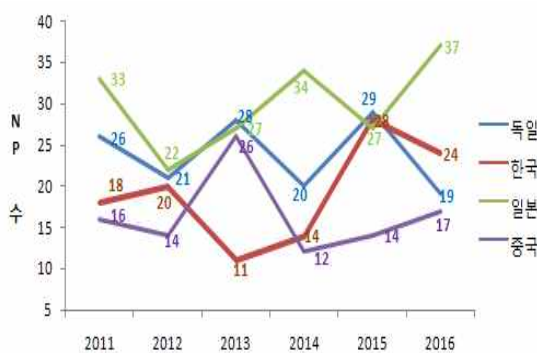
### □ (간사국 수입) ISO 10위, IEC 9위

\* 국제 간사국 수입은 현안 논의를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지위로 실질적 국제표준화 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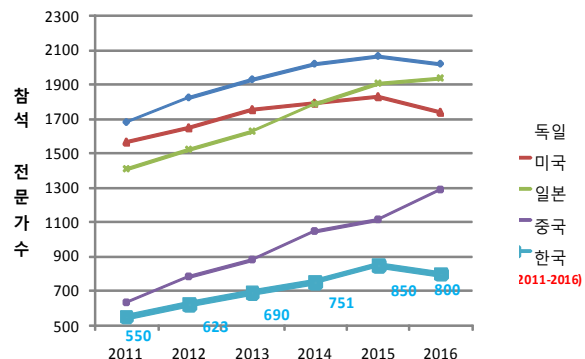


### □ (IEC 표준 제안/전문가 참여) 제안국가 2위, 전문가 참여수 7위

<IEC 국제표준 제안, '15-16년>



<IEC 전문가 참여수, '15-16년>



## 참고 2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기준:'16.10)

### □ 국제표준화 활동 현주소

- 세계 7위 표준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ISO/IEC 국제의장·간사」 진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절실
- 우리나라가 실질적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는 현재 10위권 수준(ISO 8위, IEC 13위)에서 7대 표준강국으로 도약하여 국제표준화 기구 상임이사국 진출이 요구
  - \* ISO 상임이사국 : 국제표준화 활동 순위별 6개국(독일,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 상임이사국 선정기준(분담금-60%, 간사-20%, 정회원수-20%) 고려, 한국은 분담금·정회원수의 확대에 한계가 있어 「간사수입」에 전략적 대응 필요
  - \* ISO 임원(간사)을 '11년 17명에서 40여명까지 확대 필요

### (1) ISO/IEC 기술위원회(TC/SC) 가입현황

- 우리나라는 ISO/IEC 기술위원회(TC/SC)의 82.8%가 정회원에 가입하고 있으나, 정회원 가입 위원회 미참여시 지위 박탈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제안 등이 원천 불가하여 적극적 참여가 요구

| 구분  | 기술위원회 수 |     |     | 우리나라 가입 |     |     |      |    |     |     |     |     | P<br>멤버<br>가입<br>율 |
|-----|---------|-----|-----|---------|-----|-----|------|----|-----|-----|-----|-----|--------------------|
|     |         |     |     | P 멤버    |     |     | O 멤버 |    |     | 계   |     |     |                    |
|     | 계       | TC  | SC  | 계       | TC  | SC  | 계    | TC | SC  | 계   | TC  | SC  |                    |
| ISO | 750     | 246 | 504 | 551     | 175 | 376 | 173  | 61 | 112 | 724 | 236 | 488 | 73.5%              |
| IEC | 190     | 101 | 89  | 132     | 69  | 63  | 35   | 26 | 9   | 168 | 95  | 72  | 69.5%              |
| 합계  | 940     | 347 | 593 | 683     | 244 | 439 | 208  | 87 | 121 | 892 | 331 | 560 | 72.7%              |

- \* 작업반(WG) 등의 회의를 합하면 매년 3천개 이상의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음을 추정
- \* P(participant)멤버 : 투표권 보유회원, O(observer)멤버 : 회의 참석만 가능
- \* P멤버가 3번 연속 회의 불참시, O멤버로 강등되어 지속적인 회의 참석이 필요

## (2) ISO/IEC 기술위원회 국제간사 및 의장 진출현황

-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의 지속적 확대(연평균 증가율 21.97%) 추세에 부응하는 적극적 국제표준활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이 요구

| 구 분<br>(단위 : 명) | 국제의장 | 국제간사 | 컨비너 | 계   |
|-----------------|------|------|-----|-----|
| ISO*            | 13   | 19   | 99  | 131 |
| IEC**           | 2    | 5    | 35  | 42  |
| 계               | 15   | 24   | 134 | 173 |

\* ISO WG 간사 총 5명 불포함, ISO현황에 JTC 현황 포함, 코컨비너 포함

\*\* IEC TA의장 1명, TA간사 2명, TA부간사 1명, 부의장 2명, 부간사 4명 총 10명 불포함

| 구 분<br>(단위 : 명) |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10 |
|-----------------|-----|-----|-----|-----|-----|-----|-----|-----|-----|-----|-------|
| ISO             | 의장  | 13  | 16  | 16  | 13  | 13  | 14  | 14  | 14  | 14  | 13    |
|                 | 간사  | 11  | 12  | 14  | 15  | 17  | 17  | 17  | 18  | 18  | 19    |
|                 | 컨비너 | 25  | 37  | 46  | 56  | 59  | 67  | 79  | 90  | 95  | 99    |
| IEC             | 의장  | 1   | 2   | 3   | 3   | 2   | 1   | 1   | 1   | 2   | 2     |
|                 | 간사  | 4   | 4   | 4   | 4   | 4   | 4   | 4   | 4   | 4   | 5     |
|                 | 컨비너 | 9   | 10  | 12  | 16  | 17  | 19  | 25  | 33  | 35  | 35    |
| 합계              | 의장  | 14  | 18  | 19  | 16  | 15  | 15  | 15  | 15  | 16  | 15    |
|                 | 간사  | 15  | 16  | 18  | 19  | 21  | 21  | 21  | 22  | 22  | 24    |
|                 | 컨비너 | 34  | 47  | 58  | 72  | 76  | 86  | 104 | 123 | 130 | 134   |
|                 | 소계  | 63  | 81  | 95  | 107 | 112 | 122 | 140 | 160 | 168 | 173   |

## (3) 국제표준화회의의 참가현황(TC/SC/WG)

| 구분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10 |
|---------|-------|-------|-------|-------|-------|-------|-------|-------|-------|-------|
| 회의수(회)  | 298   | 276   | 279   | 209   | 202   | 176   | 196   | 225   | 200   | 127   |
| 참가인원(명) | 1,484 | 1,561 | 1,591 | 1,321 | 1,519 | 1,328 | 1,382 | 1,387 | 1,153 | 687   |

## (4) 국제표준화회의의 국내 개최현황

| 구분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10 |
|---------|-------|-------|-------|-------|-------|-------|-------|-------|-------|-------|
| 개최수(회)  | 40    | 52    | 42    | 28    | 32    | 33    | 34    | 20    | 26    | 16    |
| 참가규모(명) | 2,407 | 4,313 | 2,649 | 1,534 | 3,217 | 1,797 | 3,122 | 2,496 | 1,703 | 1,297 |

## (5)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현황(누계)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국제표준화활동 강화를 추진 중으로 '15년 686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였으며, IEC의 경우는 세계 2위의 국제표준 제안국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나, 국제표준 선진국 대비 관련 예산 미흡으로 적극적 활동에 제한적

| 구분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10 |
|--------|-----|-----|-----|-----|-----|-----|-----|-----|-----|--------|
| ISO*제안 | 22  | 39  | 51  | 51  | 48  | 44  | 42  | 43  | 39  | 43     |
| IEC제안  | 5   | 6   | 10  | 12  | 30  | 19  | 18  | 15  | 16  | 35     |
| 제안실적   | 27  | 45  | 61  | 63  | 78  | 63  | 60  | 58  | 55  | 78     |
| 누적합계   | 80  | 125 | 186 | 249 | 327 | 390 | 450 | 508 | 563 | 641    |

\* ISO 제안 현황에 JTC 신규제안 현황 포함

## (6) 국제기구 정책위원회 위원 활동

| 구분             | 직책                  | 구성   | 위원                   | 임기         | 담당과  |
|----------------|---------------------|------|----------------------|------------|------|
| ISO<br>(162개국) | Council(이사회)<br>위원  | 20개국 | 강병구<br>(표준정책국 국장)    | '15.11~'16 | 국제표준 |
|                | TMB(기술관리이사회)<br>위원  | 14개국 | 전진수<br>(한국표준협회 본부장)  | '16~'18    |      |
| IEC<br>(83개국)  | CB(이사회)<br>위원       | 15개국 | 최갑홍<br>(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 '12~'17    | 국제표준 |
|                | SMB(표준화관리이사회)<br>위원 | 15개국 | 이정준<br>(LS산전 이사)     | '15~'17    |      |
|                |                     |      | 신명재<br>(한국표준학회 부회장)  | '09~'17    |      |
|                | CAB(적합성평가이사회)<br>위원 | 15개국 | 이병국<br>(성균관대학교 교수)   | '16~'18    |      |
|                |                     |      | 이승로<br>(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 | '07~       |      |

## (7) 국제기구 기타위원회 위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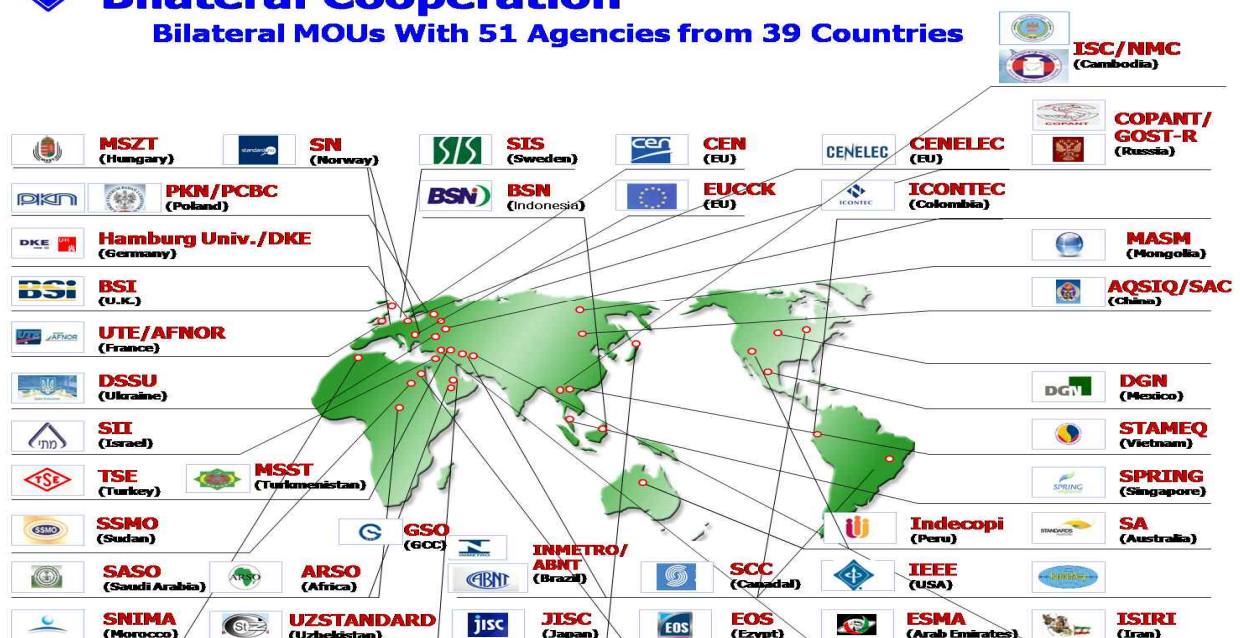
| 구분  | 분야                  | 위원                  | 임기     | 담당과       |
|-----|---------------------|---------------------|--------|-----------|
| ISO | TMB/CCCC(기후변화조정위원회) | 오대균<br>(에너지관리공단 실장) | '14~   | 화학<br>서비스 |
|     | COPOLCO/TG 3(위조제품)  | 박현호<br>(용인대학교 교수)   | '13~   |           |
|     | TMB/SAG A(고령 사회)    | 이지용<br>(LG전자 책임)    | '16.9~ |           |
|     |                     | 이석민<br>(재활공학연구소 팀장) | '16.9~ |           |

|     |                                                  |                   |         |          |
|-----|--------------------------------------------------|-------------------|---------|----------|
| IEC | SMB/ACTAD<br>(전기송배전자문위원회)                        | 최종웅(인코어테크놀로지 대표)  | '05~    | 전기<br>전자 |
|     |                                                  | 심응보(한전전력연구원 수석)   | '11~    |          |
|     | SMB/ACEA(환경자문위원회)                                | 이화조(영남대학교 교수)     | '14~    |          |
|     | SMB/ACEE(에너지효율자문위원회)                             | 최준영(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책임) | '11~    |          |
|     | SMB/ACSEC(안보자문위원회)                               | 김정덕(중앙대학교 교수)     |         |          |
|     |                                                  | 문승빈(세종대학교 교수)     |         |          |
|     | SMB/ACART(로봇응용기술)                                | 임성수(경희대학교 교수)     |         |          |
|     |                                                  | 이정준(LS산전 이사)      | '15.7~  |          |
|     | SMB/SG 9(통신 기술)                                  | 배승호(국가기술표준원 연구사)  | '15.7~  |          |
|     |                                                  | 강신각(ETRI 실장)      |         |          |
|     | SMB/SG 10(웨어러블 스마트기기)                            | 박성규(중앙대학교 교수)     | '15.11~ | 국제<br>표준 |
|     |                                                  | 신명재(한국표준학회 부회장)   | '15.7~  |          |
|     |                                                  | 차철웅(전자부품연 책임)     |         |          |
|     | SMB/ahG 66(스마트홈/오피스빌딩시스템)                        | 박호진(ETRI 책임)      | '16.3~  |          |
|     | SMB/ahG 67(TCSC 회의록)                             | 한상미(국가기술표준원 과장)   | '16.3~  |          |
|     | SMB/ahG 70(시스템 활동 리뷰)                            | 이정준(LS산전 이사)      | '16.~   |          |
|     | SMB/ahG 71<br>(적합성평가/표준 가이드스)                    | 신명재(한국표준학회 부회장)   | '16.~   |          |
|     | SMB/ahG 73(CDV FDIS 번역)                          | 이정준(LS산전 이사)      | '16.~   |          |
|     | SMB/DMT(디렉티브 개정팀)                                | 김경아(KTC 책임연구원)    | '16.6~  |          |
|     | CAB/WG 14(홍보)                                    | 이응로(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  | '15~    | 전지<br>전자 |
|     | CAB/WG 17(사이버 보안)                                | 고병각(KTL 연구원)      | '16.11~ |          |
|     | MSB White Paper on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 김호근(한국전력 박사)      | '15.12~ |          |
|     |                                                  |                   |         |          |

## (9) 표준 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현황(39개국 51개 기관)

### ◆ Bilateral Cooperation

Bilateral MOUs With 51 Agencies from 39 Countries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ODA)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 | 890   | 1,115        | 1,200        | 85           | 7.6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1 - 303

\* 담당자 : 기술규제대응국장(안병화), 기술규제협력과장(공석, 043-870-5560), 연구관(이원식, 043-870-5564)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전액보조) |
| 사업시행주체 | 한국표준협회       |

### 2. 사업목적

- 개도국의 표준 및 기술규제 체계를 우리와 동질화시키기 위한 교육·컨설팅·포럼·표준체계보급 등의 ODA사업 추진으로 협력국의 산업발전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시험인증산업 협력기반 마련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기술표준 초청과정 운영 : 개도국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 한국의 표준 체계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친한 네트워크 확보(175백만원)
    - 5개국×5명×5백만원=125백만원, 동남아 지역 포럼(4개국×5명×25백만원)=50백만원
- \* [기존협력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파라과이, 페루 [신규협력국] 방글라데시/에콰도르(수출연계), 키르기스스탄(유리시아이니셔티브 일환), 인도네시아(시험인증시장 확보), 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순방 후속)

- ② 양자협력 프로젝트 운영 : 한국형 기술표준인프라 전수를 위한 양자협력시 국가표준역량진단, 세부협력과제도출, 법령·표준제·개정(안) 협력 등 추진(625백만원)
- 5개국×125백만원=625백만원
- ③ 공동시험소 협력 지원 : 개도국 시험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험검사인증 시장 진출 타당성 조사(240백만원)
- 2개국×120백만원=240백만원
  - \* 시험인증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방글라데시, 카르키스스탄 시험검사인증 시장 조사
- ④ 표준화체계보급지원기반강화 : 수원국 만족도 조사 50백만원(2개국×25백만원), 역량진단 전문가 교육·양성 포럼 20백만원, 한국형 표준체계 교육 콘텐츠 개선·개발 45백만원, 국가표준역량진단 툴 인트라넷 분석 툴 개발 45백만원 등(160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최근 EU,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우리의 수출전략지역인 아세안, CIS,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국가의 기술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
  - 동 지역의 표준체계 부재로 인해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무역촉진 필요
- 수출전략지역의 표준 및 기술규제 체계를 우리와 동질화시키기 위한 교육·컨설팅·포럼·양자프로젝트 등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수출시장 확대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우리 표준체계 전수, 공동시험소 설립을 통해 사전 기술무역장벽 대응, 수출활성화 추진

< 세 부 내 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 890   | 1,115                        | 1,200                                 | 85           | 7.6   |
| ▪ 기술표준초청과정운영<br>(산출근거)       | 160   | 100<br>(4개국×5명×5백만)          | 175<br>초청(5개국×5명×5백만)+지역(4개국×5명×25백만) | 75           | 75    |
| ▪ 양자협력프로젝트 운영<br>(산출근거)      | 400   | 585<br>(5개국×117백만)           | 625<br>(5개국×125백만)                    | 40           | 6.8   |
| ▪ 공동시험소협력 지원<br>(산출근거)       | 170   | 360<br>(2개국×25종×7.2백만)       | 240<br>(2개국 타당성조사)                    | △120         | △33.3 |
| ▪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기반 강화<br>(산출근거) | 160   | 70<br>(수원국민족도조사,<br>전문가양성 등) | 160<br>(수원국민족도조사, 역량<br>진단툴인트라넷개발 등)  | 90           | 128.6 |
| □ 비목(합계)                     | 890   | 1,115                        | 1,200                                 | 85           | 7.6   |
| ○ 민간경상보조(320-01)             | 890   | 1,115                        | 1,200                                 | 85           | 7.6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국형 표준체계 전수)** 수출전략지역 주요 국가들과 맞춤형 협력 사업을 추진, 한국형 기술표준인프라(법, 제도, 기술기준, 장비, 인력 등) 전수를 통해,
  - 동 국가의 표준체계 부재·상이함으로 인해 시장진입·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및 FTA(TBT) 대응 강화
  - 공동시험소 설립으로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 **(親한국 네트워킹 구축)** 국제표준화 분야에 친한국형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여, 우방국을 확보하고 한국의 영향력 극대화
  -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및 기술위원회 등 임원진출 확대 및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채택 강화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 (억원) |       |                                                                                                                                                                                                                                 |
|------|-------|---------------------------------------------------------------------------------------------------------------------------------------------------------------------------------------------------------------------------------|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16  | 11.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4개국×5명×5백만) ⇒ 1</li> <li>▪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5개국×117백만) ⇒ 5.85</li> <li>▪ 공동시험소 협력 지원 : (2개국×25종×7.2백만) ⇒ 3.6</li> <li>▪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강화 : 0.7</li> </ul>                    |
| '17  | 12.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5개국×5명×5백만 + 지역포럼 4개국×5명×1.5백만) ⇒ 1.75</li> <li>▪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5개국×125백만) ⇒ 6.25</li> <li>▪ 공동시험소 협력 지원 : (2개국×120백만) ⇒ 2.4</li> <li>▪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강화 : 1.6</li> </ul> |
| '18  | 13.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5개국×5명×5백만 + 지역포럼 4개국×5명×1.5백만) ⇒ 1.75</li> <li>▪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6개국×125백만) ⇒ 7.5</li> <li>▪ 공동시험소 협력 지원 : (2개국×120백만) ⇒ 2.4</li> <li>▪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강화 : 1.47</li> </ul> |
| '19  | 10.4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5개국×5명×5백만 + 지역포럼 4개국×5명×1.5백만) ⇒ 1.75</li> <li>▪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4개국×125백만) ⇒ 5</li> <li>▪ 공동시험소 협력 지원 : (2개국×120백만) ⇒ 2.4</li> <li>▪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강화 : 1.27</li> </ul>   |
| '20  | 10.4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5개국×5명×5백만 + 지역포럼 4개국×5명×1.5백만) ⇒ 1.75</li> <li>▪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4개국×125백만) ⇒ 5</li> <li>▪ 공동시험소 협력 지원 : (2개국×120백만) ⇒ 2.4</li> <li>▪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강화 : 1.27</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추진)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 추진경위

- WTO 출범 이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강화를 위해 시작된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02년)」의 일환으로, 개도국과 비정기적인 협력사업 시작
  - \* 2000.11월 ASEAN+3 정상회담시, 대통령님께서 ASEAN 국가에 대한 적합성평가분야 교육훈련계획 발표
- 최근 개도국은 국가필수인프라인, 표준인증체계의 부재로 불량 제품 유통 등 안전문제가 발생 및 산업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표준체계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 우리 기업들도 표준화, 적합성평가 등의 표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개도국의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 직면
- 동 사업은 '10.12.21일 발표한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11년 기획재정부에 의해 심의·승인되었고, 기재부 요구에 따라 '12년부터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되어 ODA사업으로 독자 추진
- 2014년 현재 국정과제 21번(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의 사업으로 포함됨

###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개도국표준체계<br>보급지원(ODA) | 9.0   | 9.0   | 8.9   | 11.15 | 12.0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6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 (지적사항) 공동시험소 설립 지원을 위한 유희·불용장비 재생·이전 사업은 타 사업과 유사하므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6년 협력 대상국인 미얀마로부터 공식요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사업계획 미흡
  - (평가결과) KOTRA의 유희장비 이전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상이 하고, 미얀마는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15.9.22)하였기에 국회(예결위, 산업위) 예산 심의시 평가 제외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UN은 UNIDO를 중심으로 시험, 인증, 계량측정, 표준화, 인가 등 5개 분야에서 필요한 TCB(Trade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을 ISO, ILAC, IAF, OIML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추진
- EU는 EuroeAid(유럽원조협력청)을 '01년에 발족,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인 독일, 스웨덴, 영국 등과 공동으로 표준, 적합성, 품질관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 장기 전문가파견, 집합교육, 현지워크샵 등

-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국제표준화  
우균 확보 및 일본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을 위해 표준 및 적합성  
평가분야 교육을 추진해왔고, 특히 '01년부터 '아세안 표준인증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 전폭적 예산투입으로 전략적 협력 프로그램 추진
- \* METI를 중심으로 국제협력기구(JICA), 해외기술자연수협회(AOTS),  
일본무역기구(JETRO) 등과 함께 민관합동 형태로 운영
- 미국은 USAid(국제개발처)를 통해 표준·적합성평가 분야 협력을  
추진중이며, WTO가입에 요구되는 국제제도를 갖추도록 수원국의  
제도 구축·개선을 통해 자국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
- \* NIST, FDA, DOC 등의 부처에서 민관합동으로 수행

## (5) 사업추진절차

- ① 보조금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수립(전년 12월)
-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월)
-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 ④ 사업집행결과 정산 및 분석·평가 (12월-익년 1월)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 6. 참고자료

- ODA 협력 개요 및 절차

## 참고 ODA 협력 개요 및 절차



### - 협력절차



##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사업 (재량, 계속, 국정과제)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사업 | 1,281 | 1,197        | 1,200        | 3            | 0.25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3700 - 3731 - 307

\* 담당자 : 적합성정책국(진종욱), 인증산업진흥과(정상용, 043-870-5500), 연구관(이정근, 043-870-5505)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1381 운영)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2. 사업목적

-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인증제도 효율화를 통해 인증난립에 따른 소비자 혼란방지 및 중복인증 해소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는 제품 인증마크를 통합하고 인증기준과 절차를 국제규범에 부합화하여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국내기업이 제품 출하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운영

### ※ 국정과제 137-⑤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해당사업

137-⑤ 기술규제 영향평가 등을 통한 기술인증제 합리화

- 부처별 인증제도 중복, 강제기준의 국제표준 부조화에 따른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해 시험·검사·인증 등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8백만원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 x 1회 = 5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 x 1회 = 3백만원
- ②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92백만원
  - KC마크 활성화 등 국가인증제도 운영 : 3개매체×21백만원=63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실태조사(여비) : 8백만원
  - 인증제도 혁신 관련 회의 개최(범 부처 실무자협의회 등) : 21백만원
- ③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0백만원x1개과제=20백만원
- ④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1,080백만원
  -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7명=680백만원
  - 콜센터 고도화 : 90백만원×1회=90백만원
  -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개월=90백만원
  - 콜센터 상담원 재교육 : 2.5백만원×8회=20백만원
  -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10개매체×20백만원=200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인증제도는 각 부처에서 개별 운영중으로 다수·중복인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포럼 운영 필요
- 8개부처 19개의 법정 의무인증이 도입하여 사용 중인 KC마크를 국가 대표인증 브랜드로 육성
- 다수·중복인증 문제해결을 위해 인증별 현황조사 및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필요

-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내기업이 제품 출하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b>□ 사업명</b>           | <b>1,281</b> | <b>1,197</b>                                                                                              | <b>1,200</b>                                                                                              | <b>3</b>     | <b>0.25</b> |
| ▪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8            | 8<br>((임차료)1회×5백만,<br>(운영비)1회×3백만)                                                                        | 8<br>((임차료)1회×5백만,<br>(운영비)1회×3백만)                                                                        | -            | -           |
|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224          | 117<br>((KC홍보)4개매체×22백만<br>(여비)8백만<br>(업추비) 21백만)                                                         | 92<br>((KC홍보)3개매체×21백만<br>(여비) 8백만<br>(업추비) 21백만)                                                         | △25          | △21.36      |
|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br>연구 | 49           | 32<br>(1개×32백만)                                                                                           | 20<br>(1개×20백만)                                                                                           | △12          | △37.5       |
|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1,000        | 1,040<br>((인건비) 15명×40백만<br>(콜센터 고도화) 130백만<br>(유지보수) 12개월×7.5백만<br>(재교육) 8회×2.5백만<br>(1381홍보) 8개매체×25백만) | 1,080<br>((인건비) 17명×40백만<br>(콜센터 고도화) 90백만<br>(유지보수) 12개월×7.5백만<br>(재교육) 8회×2.5백만<br>(1381홍보) 10개매체×20백만) | 40           | 3.85        |
| <b>□ 비목(합계)</b>        | <b>1,281</b> | <b>1,197</b>                                                                                              | <b>1,200</b>                                                                                              | <b>3</b>     | <b>0.25</b> |
| ○ 일반수용비(210-01)        | 347          | 291                                                                                                       | 266                                                                                                       | △25          | △8.59       |
| ○ 임차비(210-07)          | 5            | 5                                                                                                         | 5                                                                                                         | -            | -           |
| ○ 국내여비(220-01)         | 5            | 5                                                                                                         | 5                                                                                                         | -            | -           |
| ○ 국외여비(220-02)         | 4            | 3                                                                                                         | 3                                                                                                         | -            | -           |
| ○ 업무추진비(240-01)        | 21           | 21                                                                                                        | 21                                                                                                        | -            | -           |
| ○ 연구용역비(260-00)        | 49           | 32                                                                                                        | 20                                                                                                        | △12          | △37.5       |
| ○ 민간경상보조(320-01)       | 850          | 840                                                                                                       | 880                                                                                                       | 40           | 4.76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내 인증제도간의 상호인정 및 통합 등을 통해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법정 의무인증분야에서 하나로 통합된 KC마크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대표 인증 브랜드로의 육성을 통해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 국가인증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기업 인증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 운영을 통한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 국내기업이 제품 출하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운영 및 개선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 (억원) |       |                                                                                                                                                                                                                                                                                                                                                                                                                                                                                                                                                                                                                                                                                                                                                             |
|------|-------|-------------------------------------------------------------------------------------------------------------------------------------------------------------------------------------------------------------------------------------------------------------------------------------------------------------------------------------------------------------------------------------------------------------------------------------------------------------------------------------------------------------------------------------------------------------------------------------------------------------------------------------------------------------------------------------------------------------------------------------------------------------|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16  | 11.9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li> <li>-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li> </ul> </li> <li>▪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88백만원</li> <li>-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8백만원</li> <li>-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li> </ul> </li> <li>▪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0.32</li> <li>▪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1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5명=600백만원</li> <li>- 방화벽 및 보안시스템 등 구축 : 130백만원×1회=130백만원</li> <li>-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회=90백만원</li> <li>- 콜센터 상담원 재교육 : 2.5백만원×8회=20백만원</li> <li>-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200백만원</li> </ul> </li> </ul> |

|     |       |                                                                                                                                                                                                                                                                                                                                                                                                                                                                                                                                                                                                                                                                                                                                                                                                 |
|-----|-------|-------------------------------------------------------------------------------------------------------------------------------------------------------------------------------------------------------------------------------------------------------------------------------------------------------------------------------------------------------------------------------------------------------------------------------------------------------------------------------------------------------------------------------------------------------------------------------------------------------------------------------------------------------------------------------------------------------------------------------------------------------------------------------------------------|
| '17 |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 x 1회 = 5백만원</li> <li>-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 x 1회 = 3백만원</li> </ul> </li> <li>▪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마크 활성화 등 국가인증제도 운영 : 3개매체×21백만원=63백만원</li> <li>- 국내·외 인증제도 실태조사 : 8백만원</li> <li>-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li> </ul> </li> <li>▪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0.2</li> <li>▪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7명=680백만원</li> <li>- 방화벽 및 보안 시스템 등 구축 : 90백만원×1회=90백만원</li> <li>-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회=90백만원</li> <li>- 콜센터 상담원 재교육 : 2.5백만원×8회=20백만원</li> <li>-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10개매체×20백만원=200백만원</li> </ul> </li> </ul> |
| '18 | 10.5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li> <li>-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li> </ul> </li> <li>▪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74백만원</li> <li>-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8백만원</li> <li>-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18백만원</li> </ul> </li> <li>▪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0.2</li> <li>▪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5명=600백만원</li> <li>-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 100백만원×1회=100백만원</li> <li>-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회=90백만원</li> <li>- 콜센터 상담원 재교육 : 2백만원×8회=16백만원</li> <li>-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118백만원</li> </ul> </li> </ul>                                                 |
| '19 | 9.3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li> <li>-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2백만원</li> </ul> </li> <li>▪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50백만원</li> <li>-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6백만원</li> <li>-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10백만원</li> </ul> </li> <li>▪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0.19</li> <li>▪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5명=600백만원</li> <li>-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 80백만원×1회=80백만원</li> <li>- 콜센터 유지보수 : 7백만원×12회=84백만원</li> <li>- 콜센터 상담원 재교육 : 1.5백만원×4회=6백만원</li> <li>-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70백만원</li> </ul> </li> </ul>                                                   |

|     |      |                                                                                                                                                                                                                                                                                                                                                                                                                                                                                                                                                                                                                                                                                                       |
|-----|------|-------------------------------------------------------------------------------------------------------------------------------------------------------------------------------------------------------------------------------------------------------------------------------------------------------------------------------------------------------------------------------------------------------------------------------------------------------------------------------------------------------------------------------------------------------------------------------------------------------------------------------------------------------------------------------------------------------|
| '20 | 9.3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li> <li>-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2백만원</li> </ul> </li> <li>▪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0.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50백만원</li> <li>-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6백만원</li> <li>-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10백만원</li> </ul> </li> <li>▪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19백만원</li> <li>▪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5명=600백만원</li> <li>-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 80백만원×1회=80백만원</li> <li>- 콜센터 유지보수 : 7백만원×12회=84백만원</li> <li>- 콜센터 상담원 재교육 : 1.5백만원×4회=6백만원</li> <li>-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70백만원</li> </ul> </li> </ul> |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 (제품인증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2 (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 (표준인증심사제의 운영 등)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 추진경위
  - '04.10. 국정감사 : 인증제도 난립에 따른 통합 필요성 제기
  - '05.5.~'06.5 : 「인증제도 혁신 T/F팀」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 12차에 걸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개최 (산업자원부)
    - \* 국내 인증업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500여 기업)

**<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주요내용 >**

- ① 부처별 인증업무를 종합·조정할 총괄관리 체계 구축
- ② 국가통합인증마크(National Mark) 및 모듈방식 인증제도 검토
- ③ 인증기관의 시설·인력 강화 및 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 ④ 국제적 인정기구 육성 및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 규격간 통일화

- '09.4.1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공포
  - \* KC마크 및 표준인증심사제 도입, 종합조정시스템 구축 규정
- '09.7.1 : 산업부 소관 9개 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도입
- '12.6.29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개정
  - \* 복수의무인증제품 추가(33개→46개) 및 상호인정 시험항목 확대(9개→11개)
- '12.8.30 : 산업부內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상호인정 추진완료
  - \* 전기용품·공산품·에너지소비효율·가스용품검사·고효율에너지기자재-KS간 134개 품목
- '13.8.7 : “수출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활성화 계획”에 따라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 추진
- '14.2.18 : 미래부로부터 “1381” 네자리 특수번호 획득
- '14.3.26 : “1381” 인증표준콜센터 개통식

- 참 석 : 산업부 김재홍차관 중기청, 협단체, 업체 등 약 300 여명
- 장 소 : 국가기술표준원 중강당(과천) 3.26(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국가인증제도<br>혁신기반구축 | 4.43  | 4.43  | 12.82 | 11.97 | 12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

- 불용 : 기재부 경상경비절감계획에 따라 44백만원 예산절감

○ 2014년

- 전용 : KC마크 및 1381 콜센터 집중 홍보 필요에 따라 국내여비 1백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자체 전용
- 불용 : 집행잔액 1백만원

○ 2015년

- 불용 : 집행잔액 1백만원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4.43<br>( )     | ( )         | ( )          | 4.43<br>( )     | 3.99<br>( )     | ( )  | 0.44<br>( )   |
| '14년 | 4.43<br>( )     | ( )         | ±0.01<br>( ) | 4.43<br>( )     | 4.42<br>( )     | ( )  | 0.01<br>( )   |
| '15년 | 12.82<br>( 850) | ( )         | ( )          | ( )             | 12.81<br>( 850) | ( )  | 0.01<br>(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3년 예산 재정사업자율평가 시 보통등급(65.0점)으로 평가(기획재정부)
- '15년 산업위 지적사항 : 신제품(NEP)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미흡하므로 NEP 인증제도의 운영방식 개선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예산인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1억 1,800만원 감액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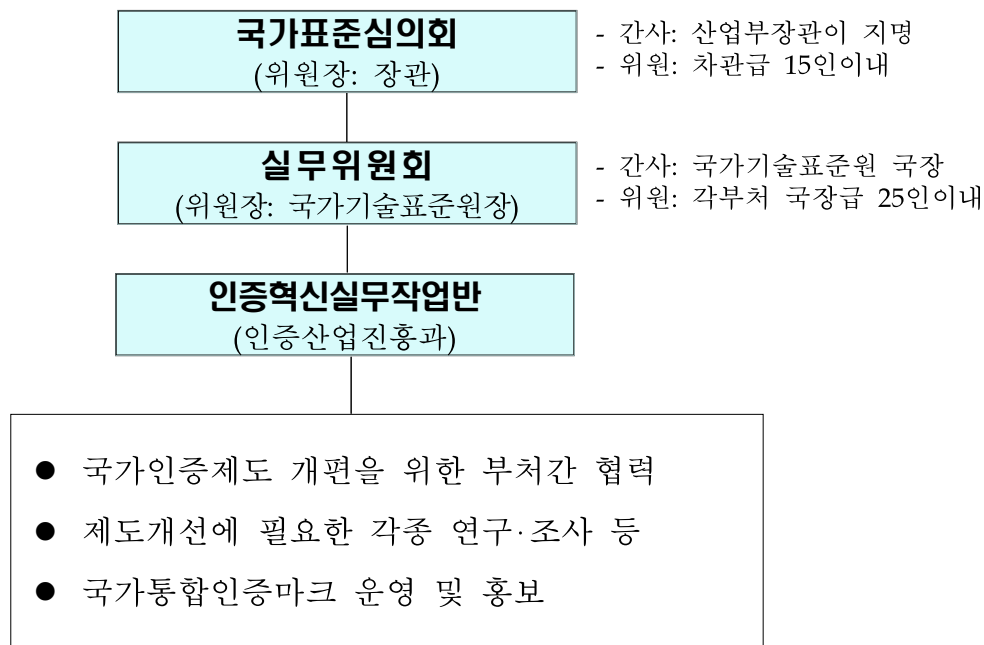
- (EU) 유럽통합과 함께 안전·위생·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 관련 의무규제 대상을 CE마크로 통합 운영 ('93.7)
  - \* 소비자의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전기 및 공산품 중심의 22개 품목군 22천여 제품 (인증제도 정비 소요기간 : 8년)
- (중국) 국내제품(CCEE)과 수입제품(CCIB)에 달리 적용하던 의무 인증 제도를 CCC마크로 통합 ('02.5)
  - \* 전기제품, 통신기기, 완구류, 압력용품 등 19개 유형, 325개 제품을 CCC마크로 통합 (인증제도 정비 소요기간 : 3년)

- (일본) 의무인증제도를 PS(Product Safety) 마크로 통합·표시
  - \* PSE(전기제품), PSC(공산품), PSTG(가스용품), PSLPG(가스)

## (5) 사업추진절차

-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부처의 협력 절차

### < 인증 추진 체계 >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 6.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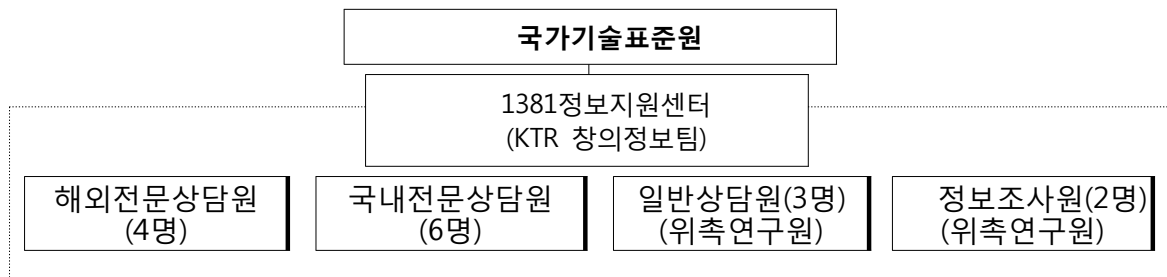
- 인증·표준 정보제공 1381 콜센터 현황

## 참고 인증·표준 정보제공 1381 콜센터 현황

### □ 인증표준콜센터(1381) 구축현황

- (운영목적) 인증·표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off-line 형태의 “인증·표준 정보제공
- (운영조직) 국가기술표준원은 콜센터 관리기관을 맡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운영 실무 및 상담업무 수행

#### < 인증표준콜센터 조직도 >



- (인력운영) 총 15명 중 전문상담원 9명과 일반상담원 5명 및 총괄 1명  
\* '15년 13명 ⇒ '16년 15명 ⇒ '17년 17명(예정)

### □ 1381콜센터 구축실적

- 상담실적

(11.30기준)

| 구 분      |     | 14년도<br>(191일) | 15년도   |            | 16년도(11.30.기준) |            |
|----------|-----|----------------|--------|------------|----------------|------------|
|          |     |                | (253일) | 전년비<br>증가율 | (225일)         | 전년비<br>증가율 |
| 상담<br>건수 | 총계  | 19,752         | 48,451 | -          | 49,742         | -          |
|          | 일평균 | 104            | 192    | 84%        | 221            | 28%        |

\* '14년 대비 '15년 84% 증가, '16년은 28% 증가

- 콜센터 시스템 및 인프라 기반구축
  - 시스템 중단 방지를 위한 콜센터시스템 이중화 구성
  - 상담내용 DB화를 지원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 콜센터 운영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용 서버실 구축

## 제 품 시장 감 시 역 량 강 화 사 업 (계 속)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 | 3,494 | 3,749        | 4,025        | 276          | 7.4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3700 - 3732 - 303

\* 담당자 : 제품안전정책국장(김정희), 제품시장관리과장(오경희, 043-870-5420), 사무관(신상훈, 043-870-5422)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6. ~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 2. 사업목적

-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
  - 생활제품이 국민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생활제품(공산품·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안전모니터링,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등을 실시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769백만원

-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뒤 부적합제품에 대해 리콜명령·권고의 행정 조치를 실시

- 시중 유통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 2,769백만원

(산출내역)

- 시료구입비:  $5,891 \times 10 \text{만원} = 589 \text{백만원}$
- 시험수수료:  $5,891 \times 35 \text{만원} = 2,061 \text{백만원}$
- 일반수용비: 67백만원
- 국내여비: 22백만원
- 업무추진비: 30백만원

②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756백만원

- 불법·불량제품(KC 미인증제품 등) 조사 및 고발, 리콜이행점검 및 불이행시 고발 실시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756백만원

(산출내역)

- 인건비:  $21 \text{명} \times 30 \text{백만원} = 630 \text{백만원}$
- 출장비:  $180 \text{회} \times 14 \text{명} \times 50 \text{천원} = 126 \text{백만원}$

③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 380백만원

-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감시원(안전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하여 불법·불량제품 및 리콜조치 대상 제품의 시장 유통 여부를 감시

- 제품안전감시원 관리 : 80백만원

(산출내역)

- 4개분야\* $\times 20 \text{백만원} = 80 \text{백만원}$ 
  - \* 어린이용품, 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전기용품 등 4개 분야

- 사이버쇼핑몰 감시 : 40백만원

(산출내역)

· 1개분야×40백만원=40백만원

- 제품안전감시원 수당 : 260백만원

(산출내역)

· 186명×28일×50천원=260백만원

####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 120백만원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 80백만원

- 개발SW(AP) 유지보수 : 48백만원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개발('09) : 185백만원(구축비)×15%(유지보수율)  
= 27.75백만원

· 중소유통범용SW 개발('10) : 40백만원(구축비)×15%(유지보수율)  
= 6백만원

·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 개발('14) : 100백만원(구축비)×15%(유지보수율)  
= 15백만원

- 상용SW 유지보수(Cubrid Database 외 1종) : 19백만원

· Cubrid Database 연 유지보수 = 7백만원

· JS-Consol ebMS 연계서버 80백만원(도입비)×15%(유지보수율) =  
12백만원

- HW 유지보수(서버 총3종) : 13백만원

· 코리안넷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WAS 서버 SunFire T200 2식 60  
백만원(도입비) × 15%(유지보수율) = 9백만원

· Database 및 연계용 서버 HP DL580 G7 : 30백만원(도입비)×15%(유지보수율)  
= 4.5백만원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중소유통매장 확산 시범사업 : 40백만원

- 중소유통매장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확산을 위해 중소유통매장용 차단SW 개발 및 설치지원·운영을 추진하고 점검·보완하기 위한 시범사업 운영
- 중소유통매장 배포용 차단 SW모듈 개발 : 32백만원
  - 인건비 : [중급기술자(4,648,875)×1인+초급기술자(4,006,527)×1인]×2개월=17백만원
  - 제경비 및 기술료 : [제경비(18백만원)+기술료(7백만원)]×60%=15백만원
  - \* 제경비(인건비의 105%), 기술료(인건비+제경비의 20%)
- 중소유통매장 연계모듈 설치 지원 및 운영 : 8백만원
  - 매장방문 작동 점검 등 : 10만원×50개 매장=5백만원
  - 자문위원회 운영 등 : 3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① 수입제품의 증가, 융·복합신제품 출시, 온라인 시장의 발전 등으로 위해사례가 매년 크게 늘어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수요 증가
  - \* 소비자원 위해사례 접수건수 : ('13)26,079 → ('14)30,375 → ('15)27,166
- ②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사전 인증품목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제품 출시 후 시장감시를 강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와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성조사, 불법제품 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안전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 시장관리기능을 강화
- ③ 중·소매장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필요성
  - 멜라민 파동, 폐질환 유발 가습기 살균제 등 빈번한 危害상품 판매사고 발생으로 상품 안전성 및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 그러나,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위해상품 정보가 별도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유통업체에 신속히 전달되지 않아 상품안전성 점검효과 감소

- 유통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유통매장은 시스템 확산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안심 쇼핑의 기반을 마련

\* 위해상품 전담조직 有無: 백화점(70%), 대형마트(80%), 편의점(97%), 일반소매점 (0%)

<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감<br>(B-A)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3,494                                                                                                          | 3,749                                                                                                          | 4,025                                                                                                          |             |   |
|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514<br>시료구입비512백만원<br>(5,121×10만원)<br>시험수수료1,792백만원<br>(5,121×35만원)<br>일반수용비99백만원<br>국내외여비81백만원<br>업무추진비30백만원 | 2769<br>시료구입비589백만원<br>(5,891×10만원)<br>시험수수료2,061백만원<br>(5,891×35만원)<br>일반수용비67백만원<br>국내외여비22백만원<br>업무추진비30백만원 | 2769<br>시료구입비589백만원<br>(5,891×10만원)<br>시험수수료2,061백만원<br>(5,891×35만원)<br>일반수용비67백만원<br>국내외여비22백만원<br>업무추진비30백만원 |             |   |
|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br>리콜제품 이행점검         | 600<br>인건비17명×30백만원<br>출장비180회×10명×<br>5만원                                                                     | 600<br>인건비17명×30백만원<br>출장비180회×10명×<br>5만원                                                                     | 756<br>인건비21명×30백만원<br>출장비180회×14명×<br>5만원                                                                     |             |   |
| ▪ 안전모니터링단<br>구성·운영 등                | 380<br>제품안전감시원관리<br>80백만원<br>사이버소광물감사<br>40백만원<br>제품안전감시원수당<br>260백만원                                          | 380<br>제품안전감시원관리<br>80백만원<br>사이버소광물감사<br>40백만원<br>제품안전감시원수당<br>260백만원                                          | 380<br>제품안전감시원관리<br>80백만원<br>사이버소광물감사<br>40만원<br>제품안전감시원수당<br>260백만원                                           |             |   |
|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br>구축및확산              | -                                                                                                              | -                                                                                                              | 120<br>위해상품판매차단<br>시스템 운영 유지보수<br>80백만원<br>위해상품판매차단<br>시스템 중소유통매장<br>확산사업사업<br>40백만원                           |             |   |
| <input type="checkbox"/> 비목(합계)     | 3,494                                                                                                          | 3,749                                                                                                          | 4,025                                                                                                          |             |   |
| ○ 시험연구비(210-13)                     | 2,484                                                                                                          | 2,739                                                                                                          | 2,739                                                                                                          |             |   |
| ○ 일반용역비(210-14)                     | 380                                                                                                            | 380                                                                                                            | 380                                                                                                            |             |   |
| ○ 사업추진비(240-01)                     | 30                                                                                                             | 30                                                                                                             | 30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 600                                                                                                            | 600                                                                                                            | 876                                                                                                            |             |   |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사업(120백만원)을 제품시장감시역량 강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16.12.2, 국회)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목표)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확산하여 제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선진형 안전 관리제도 구축
- (추진방향) 제품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내·외 환경에 맞는 안전기준과 정책개발을 통하여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반영하고, 홍보,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한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 추진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37.49 |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27.69<br>·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6.0<br>· 안전모니터링구성·운영 : 3.8                                |
| '17 | 40.25 |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27.69<br>·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7.56<br>· 안전모니터링구성·운영 : 3.8<br>·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1.2 |
| '18 | 34.14 |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21.58<br>·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7.56<br>· 안전모니터링구성·운영 : 3.8<br>·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1.2 |
| '19 | 30.38 |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17.82<br>·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7.56<br>· 안전모니터링구성·운영 : 3.8<br>·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1.2 |
| '20 | 30.38 |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17.82<br>·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7.56<br>· 안전모니터링구성·운영 : 3.8<br>·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1.2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 「제품안전기본법」

- 제9조(안전성조사 등)
-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제19조(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제14조(안전인증 등)
-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 제24조(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제3조(안전인증)
-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 제14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제6조(안전성조사)
- 제9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 제10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명령)
- 제17조(안전인증 등)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제25조(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 추진경위

- '03. 5월 대통령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어린이 안전사고 경감 지시
- '04. 4월 감사원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지적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 1월 공산품안전망구축사업(세부사업) 시작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 '06.12월 공산품안전관리종합 5개년계획 수립
- '08. 5월 대통령 대국민담화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도록 모든 조치강구”
- '08. 9월 대통령 “성인용보다 어린이용을 빨리 조치하여 유통을 중단해야함”
- '09.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09.1.1)
- '09.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10.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본 사업 추진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 '11. 3월 제1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4. 1월 제2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6. 5월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 기본계획 수립
- '16.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제 품 시 장 감 시<br>역량강화 | 34.7  | 34.9  | 34.9  | 37.5  | 40.25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 : 집행잔액 144백만원(예산절감분)
- 2014년 : 해당없음
- 2015년 : 집행잔액 1백만원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34.72<br>( 4.5 ) | ( )         | ( )         | 34.72<br>( 4.5 ) | 33.28<br>( 4.5 ) | ( )  | 1.44<br>( ) |
| '14년 | 34.95<br>( 6 )   | ( )         | ( )         | 34.95<br>( 6 )   | 34.95<br>( 6 )   | ( )  | ( )         |
| '15년 | 34.95<br>( 6 )   | ( )         | ( )         | 34.95<br>( 6 )   | 34.94<br>( 6 )   | ( )  | 0.01<br>(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

| 평가시기   | 회계/기금 | 단위사업명<br>(세부사업) | 평가점수 | 평가등급 | 비고 |
|--------|-------|-----------------|------|------|----|
| 2015년도 | 일반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82.0 | 우수   |    |

○ '16년 보조금사업평가 결과 : 정상추진

- 제품시장의 감시를 통해 불법 및 불량제품의 유통을 상시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유통에 있어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으로 향후에도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평가시기   | 회계/기금 | 보조사업명      | 평가결과 | 비고 |
|--------|-------|------------|------|----|
| 2016년도 | 보조금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정상추진 |    |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NEISS\*, 웹포털 등으로부터 각종 상해·사고 정보를 취합하여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위험군 분류 및 리콜조치

\* 상해정보수집시스템(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 100여개 종합병원으로부터 CPSC 웹을 통해 매년 약 36만건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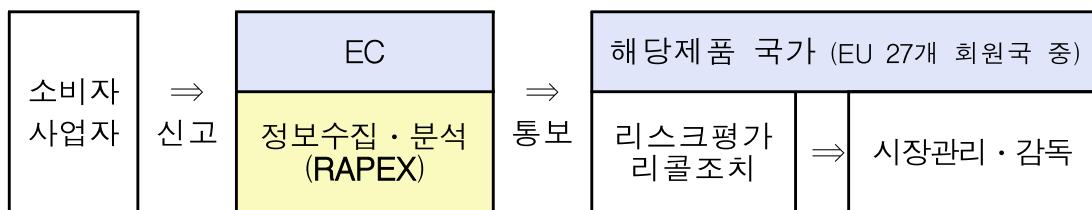
-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비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세관에서의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통해 수입제품 단속

- (EU) Rapex\*를 운영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평가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제품별 상세한 안전기준을 통해 사전 규제의 강도가 높고 광범위한 사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리콜 조치

- 회원국들은 '리스크평가기법'을 활용해 통보된 위해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 등 시장감시활동 이행

\* 위해정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dangerous products)을 활용하여 수집·분석된 정보의 약 90%가 리콜조치됨

##### <EU 위해정보 수집 및 활용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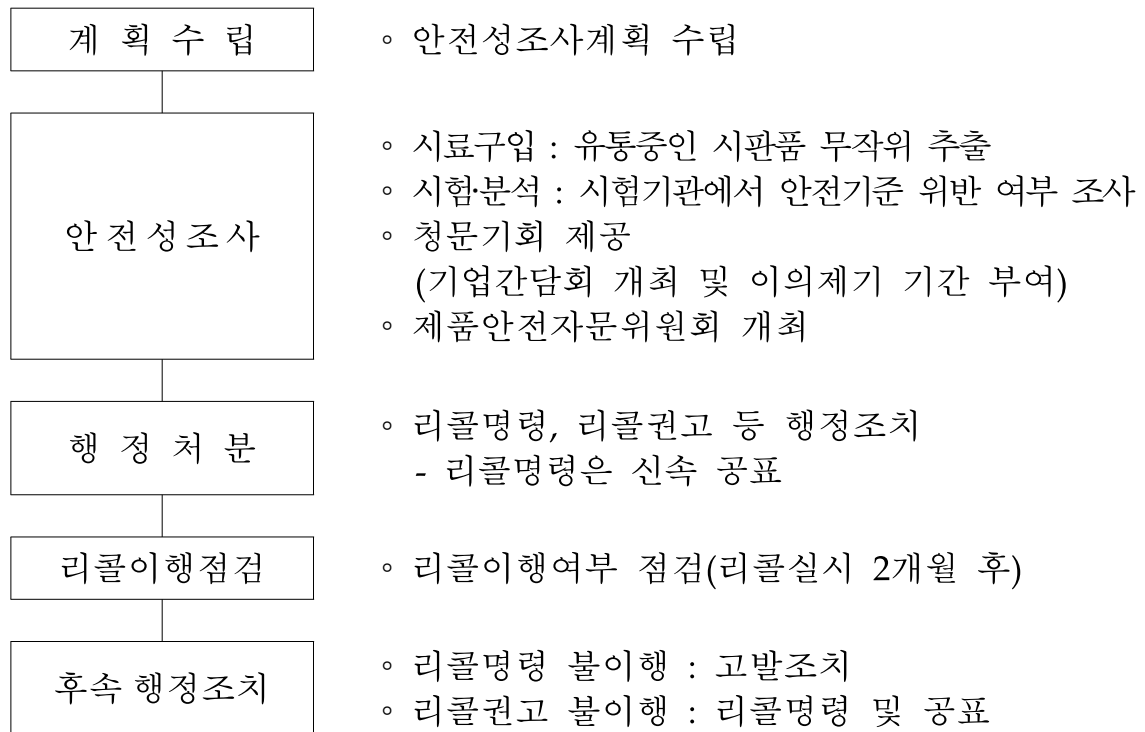
- (일본) NTE(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에서 제품사고조사 후 R-map(Risk-map) 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경제산업성에 통보하여 리콜조치 등 시장감시 활동 수행

- (호주) Clearinghouse\*를 통해 제품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등 사고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업무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자료 DB를 구축하여 리콜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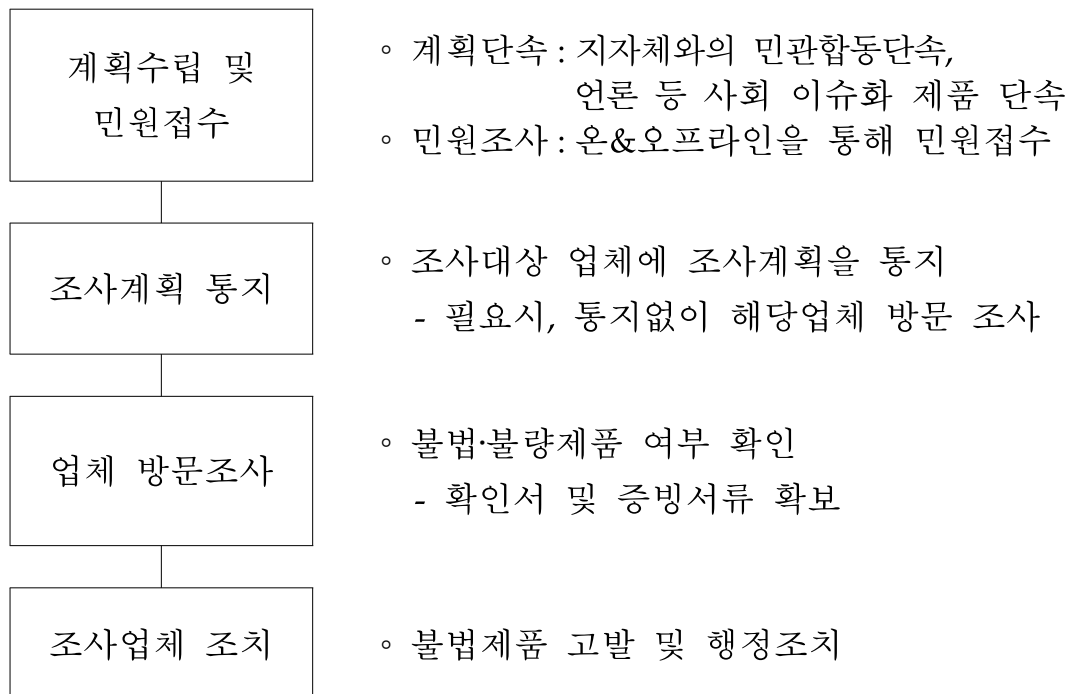
\* 사고정보시스템(Clearinghouse)의 업무처리 절차 : 사고정보수집→데이터 입력→초기평가→상세평가→제품안전위원회 행정조치 결정

##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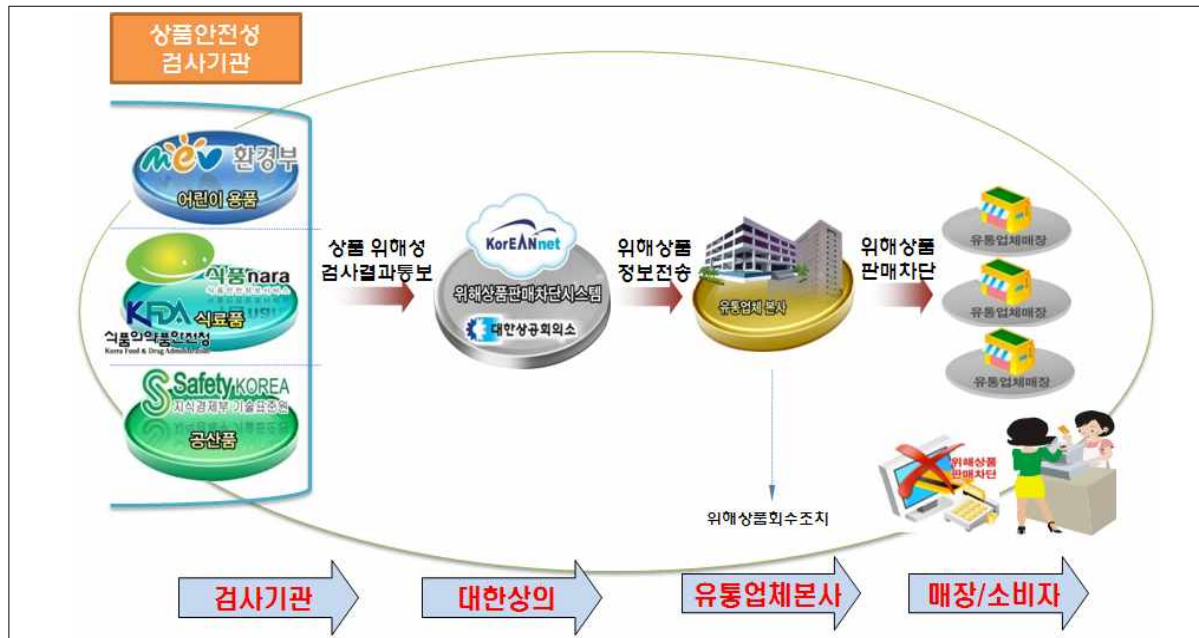
### ○ 제품 안전성조사



### ○ 불법·불량제품 단속



##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 코리안넷(KorEANnet) : 대한상공회의소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카탈로그로써 국내외 1만여 수입·제조업체의 140만개 상품에 대한 정보(바코드번호, 업체명, 상품이미지 등)를 저장, 유통업체에 실시간 제공중 ('12.1월 기준)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 6. 참고자료

○ 제품 안전관리 제도

## 참고

## 제품 안전관리 제도

□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 대해 제품 시장 출시 전후 소주기에 걸쳐 제품안전관리 실시

\* 제품출시 前 안전성확인제도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15.6.4 시행)

\* 제품출시 後 결함제품 리콜관련 : 제품안전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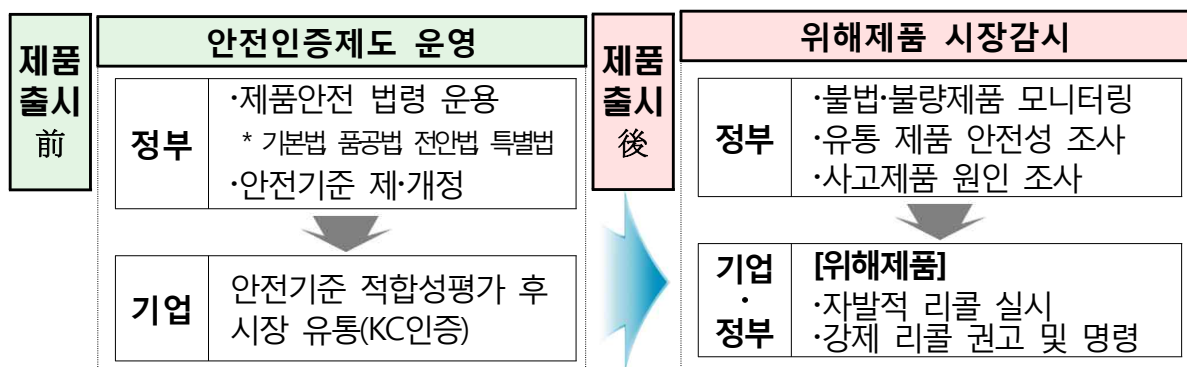
○ (시장출시 前) 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사전인증 등을 통해 확인 후 시장에 출시토록 의무화

\* 소비자 위해정도에 따라 3단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로 안전관리

| 안전인증                      |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br>(안전·품질표시) |
|---------------------------|------------------------------------------------------------------------------------------------|------------------------------|-----------------------|
| 높음                        |                                                                                                | (소비자의 위해도)                   | 낮음                    |
| 구 분                       | 마크                                                                                             | 대상품목<br>(공산품/전기용품/<br>어린이용품) | 적 용 절 차               |
| ① 안전인증                    | <br>(인증번호:) | 60개(11/45/4)                 | 제품시험 + 공장심사 → 인증 → 판매 |
| ② 안전확인                    | <br>(신고번호:) | 118개(33/68/17)               | 제품시험 → 신고 → 판매        |
| ③ 공급자 적합성 확인<br>(안전·품질표시) |             | 117개(43/59/15)               | 제품시험 → 판매             |

○ (시장출시 後) 정부의 안전성 조사 또는 소비자 신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 기준 위반에 대해 원인 조사 후 리콜(권고 또는 명령) 및 고발 조치

### <제품안전관리 체계>



\*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안전제도기반조성사업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안전제도기반조성사업 | 2,449 | 1,977        | 1,899        | △78          | △3.9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2 - 304

\* 담당자 : 제품안전정책국장(김정희), 제품안전정책과장(임현진, 043-870-5410), 서기관(장요한, 043-870-5411)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

### 2. 사업목적

- 신제품 출시 등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안전기준 개발·보급, 대국민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한 제품안전 문화 확산
- 제품안전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 환경에 맞는 제품안전 정책과 안전기준 개발에 적극 활용
- 제품안전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제도 참여 촉진 및 자발적 리콜 분위기 조성 등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 추진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안전기준 정비 및 정책개발 : 720백만원

- 제품안전 기준 제·개정 : 400백만원(20종×20백만원)

- 제품안전 정책개발 조사·분석 : 320백만원(8종×40백만원)

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1,079백만원

- 제품안전 교육·홍보 등 : 540백만원(민간보조)

- \* 제품안전 중요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제작/지상파·지하철 등 홍보 : 300백만원(1식×300백만원)
- \* 리콜기업, 제조·유통업체, 일반 소비자·사업자 등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 100백만원(1식×100백만원)  
(교육내용 : 리콜제도 매뉴얼, 품목별 안전기준, 불법·불량제품 식별요령 및 신고방법 등)
- \* 소비자, 기업, 지자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포럼 및 협의체 운영 등 : 100백만원(1식×100백만원)
- \* 제품안전분야 연구개발, 안전사고 감소 및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단체) 포상 : 40백만원(1식×40백만원)  
(제품안전의 날 포상규모(총46점) : 훈장1, 포장1, 대표1, 국표3, 장표24, 원표16점)

- 제품안전 관련 문화 확산 및 국제기구 협력 등 : 539백만원

(일반수용비 376, 재료비 30, 국·내외여비 60, 임차료 50, 사업추진비 23백만원)

- 제품안전 관련 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 제작 및 회의 개최 등 : 439백만원
- 제품안전국제기구(ICPSC, ICPHSO 등) 참석 등 협력 : 100백만원

③ 제품안전 관련 대국민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 : 100백만원

- 제품안전정보제공 및 안전기준전산화 유지보수 : 100백만원

- \* 제품사고, 리콜, 인증 정보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수집 및 안전기준 개정 이력 관리 등

□ 지원 필요성

-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한 리콜 등 강력한 안전관리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하고 어린이용품의 위해성분 검출, 전기제품으로 인한 화재·감전사고  
등 제품으로 인한 안전위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위해사례 접수건수 : '13년) 26,079건 → '14년) 30,375건 → '15년) 27,166건

- 제품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내·외 환경에 맞는 안전기준과  
정책개발을 통하여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반영하고, 홍보,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한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 추진 필요

\* (안전기준 및 정책개발) 제품시장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안전기준 운영을 위  
하여 주요국 안전기준 제·개정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융·복합화 및 다양화되는  
제품의 특성 파악을 통한 신속한 안전기준 제·개정 필요

\* (제품안전문화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소비자·기업의 선제적인 제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진 제품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교육 및 포상 등이 필요  
하며, 국제기구(ICPSC, ICPHSO 등)와 협력을 통해 주요국과의 제품안전 채널 구축

\* (제품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제품사고, 리콜정보, 안전인증 등 제품안전 정보 포털  
운영을 위한 DB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시스템 운영 필요

➡ 제품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안전 기준정비, 안전정책개발 및 제품안전의식 보급·확산을 추진하는 “안전제도 기반조성”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안전제도기반조성                | 2,449 | 1,977                                                                                                                                                                                                                       | 1,899                                                                                                                                                                                                                       | △78          | △3.9  |
| ▪ 안전기준정비 및 정책개발           | 681   | 700<br>-연구용역비:700<br>· 안전기준 제·개정<br>(20종×25=500)<br>· 안전정책 개발<br>(5종×40=200)                                                                                                                                                | 720<br>-연구용역비:720<br>· 안전기준 제·개정<br>(20종×20=400)<br>· 안전정책 개발<br>(8종×40=320)                                                                                                                                                | 20           | 2.9   |
| ▪ 제품안전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1,084 | 1,177<br>-민간보조:700<br>· 제품안전홍보<br>(1식×400=400)<br>· 제품안전교육<br>(1식×100=100)<br>· 안전의날행사<br>(1식×80=80)<br>· 제품안전 포럼 등<br>(1식×120=120)<br>-안전문화 확산 및<br>국제협력:477<br>· 일반수용비(320)<br>· 시료구입비(50)<br>· 국·내외여비(63)<br>· 임차료 등(44) | 1,079<br>-민간보조:540<br>· 제품안전홍보<br>(1식×300=300)<br>· 제품안전교육<br>(1식×100=100)<br>· 안전의날행사<br>(1식×40=40)<br>· 제품안전 포럼 등<br>(1식×100=100)<br>-안전문화 확산 및<br>국제협력:539<br>· 일반수용비(376)<br>· 시료구입비(30)<br>· 국·내외여비(60)<br>· 임차료 등(73) | △98          | △8.3  |
| ▪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br>시스템 운영 | 184   | 100<br>-포털 운영 및 유지<br>보수:100<br>· 위탁사업비<br>(1식×100=100)                                                                                                                                                                     | 100<br>-포털 운영 및 유지<br>보수:100<br>· 위탁사업비<br>(1식×100=100)                                                                                                                                                                     | -            | -     |
| ▪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 500   | -                                                                                                                                                                                                                           | -                                                                                                                                                                                                                           |              |       |
| □ 비목(합계)                  | 2,449 | 1,977                                                                                                                                                                                                                       | 1,899                                                                                                                                                                                                                       | △78          | △3.9  |
| ○ 일반수용비(210-01)           | 333   | 320                                                                                                                                                                                                                         | 376                                                                                                                                                                                                                         | 56           | 17.5  |
| ○ 임차료(210-07)             | 11    | 20                                                                                                                                                                                                                          | 50                                                                                                                                                                                                                          | 30           | 150.0 |
| ○ 재료비(210-11)             | 48    | 50                                                                                                                                                                                                                          | 30                                                                                                                                                                                                                          | △20          | △40   |
| ○ 일반용역비(210-14)           | 98    | 100                                                                                                                                                                                                                         | 100                                                                                                                                                                                                                         | -            | -     |
| ○ 국내여비(220-01)            | 16    | 23                                                                                                                                                                                                                          | 22                                                                                                                                                                                                                          | △1           | △4.3  |
| ○ 국외업무여비(220-02)          | 50    | 40                                                                                                                                                                                                                          | 38                                                                                                                                                                                                                          | △2           | △5.0  |
| ○ 사업추진비(240-01)           | 24    | 24                                                                                                                                                                                                                          | 23                                                                                                                                                                                                                          | △1           | △4.2  |
| ○ 일반연구비(260-01)           | 583   | 700                                                                                                                                                                                                                         | 720                                                                                                                                                                                                                         | 20           | 2.9   |
| ○ 민간경상보조(320-01)          | 1,200 | 700                                                                                                                                                                                                                         | 540                                                                                                                                                                                                                         | △160         | △22.9 |
| ○ 자산취득비(430-01)           | 86    | -                                                                                                                                                                                                                           | -                                                                                                                                                                                                                           | -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목표) 제품안전 기준 제·개정, 제품안전 정책개발을 통한 국민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기업 안전관리 능력 제고로 국제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국제안전기준과 국내환경에 맞는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교육·홍보사업을 확대하여 안전사회 기반조성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19.7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7</li> <li>▪ 보급확산·국제협력 : 11.77</li> <li>▪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1</li> </ul>   |
| '17 | 18.9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7.2</li> <li>▪ 보급확산·국제협력 : 10.79</li> <li>▪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1</li> </ul> |
| '18 | 17.3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7</li> <li>▪ 보급확산·국제협력 : 9.37</li> <li>▪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1</li> </ul>    |
| '19 | 15.3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7</li> <li>▪ 보급확산·국제협력 : 7.39</li> <li>▪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1</li> </ul>    |
| '20 | 15.3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7</li> <li>▪ 보급확산·국제협력 : 7.39</li> <li>▪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1</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외국 정부에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사업자에게 권고하거나 명령한 경우

4.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 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교육

2.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과 보급

3.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4. 기업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06.12.23.)
- '07.12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7.12.21)
- '10. 1월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인정제도” 시행
- '10. 2월 “제품안전기본법” 제정(2.4)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2.5)
- '11. 3월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3.21)
- '14. 2월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2.2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안전제도기반조성 | 26.62 | 24.14 | 24.93 | 19.77 | 18.99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 : 155백만원 불용

\* 예산절감(연구개발비 74백만원, 일반수용비 28백만원, 시험연구비 44백만원) 및 집행잔액(9백만원)

○ 2014년 : 30백만원 불용 및 12백만원 전용

\* 예산 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일반운영비 19백만원) 및 진행잔액(연구개발비 8백만원 등)

\*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 운영비 內 임차료(12백만원)를 일반수용비로 전용

○ 2015년 : 44백만원 불용

\* 집행잔액(업무용역비 17백만원, 자산취득비 14백만원, 운영비 13백만원)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26.62<br>( 10 ) | ( )         | ( )          | 26.62<br>( )    | 25.07<br>( 10 ) | ( )  | 1.55<br>( ) |
| '14년 | 24.14<br>( 11 ) | ( )         | ±0.12<br>( ) | 24.14<br>( )    | 23.84<br>( 11 ) | ( )  | 0.30<br>( ) |
| '15년 | 24.93<br>( 12 ) | ( )         | ( )          | 24.93<br>( )    | 24.49<br>( 12 ) | ( )  | 0.44<br>(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 외부기관 지적사항

- '1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산업위 지적사항)
  - 민간경상보조로 수행하는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 방법전파” 내역사업의 성격이 연구개발비와 유사하여 예산과목, 지원 및 추진방식 변경 필요
  - 이에, '16년 예산 요청시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 방법전파”사업의 예산과목 및 수행방식을 변경 추진
- \* (예산과목 변경) 민간경상보조(320-01) → 연구개발비(260-00)  
(수행방식 변경) 1개기관 지정 → 공개입찰

#### ○ 사업평가 결과

#####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

| 평가시기   | 회계/기금 | 단위사업명<br>(세부사업)                         | 평가점수 | 평가등급 | 비고 |
|--------|-------|-----------------------------------------|------|------|----|
| 2015년도 | 일반    |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br>(안전제도기반조성,<br>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82.0 | 우수   |    |

#####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감축

| 평가시기   | 회계/기금 | 보조사업명         | 평가결과 | 비고 |
|--------|-------|---------------|------|----|
| 2016년도 | 보조금   | 제품안전교육 및 홍보 등 | 감축   |    |

\* 본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타당한 사업으로 인정되나, 본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약한 내역사업(포럼 및 제품안전의 날,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 등)의 축소 등을 통해 사업비의 10% 정도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 미국 >

- ▶ 취약계층지원(Minority Outreach) 캠페인 및 사고정보의 신속한 전달
- ▶ 웹 환경에 맞는 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CPSC 2.0 구축

- 다인종 밀집지역에서 취약계층의 안전의식 환기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후원)하에 전시회와 축제 등을 개최. 사망사고나 중상사고에 대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언론사나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정보제공
-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는 CPSC 2.0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고 정보제공 및 블로그, 유튜브, 위젯 등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
-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 EU >

- ▶ The Consumer Scoreboard 및 RAPEX annual report의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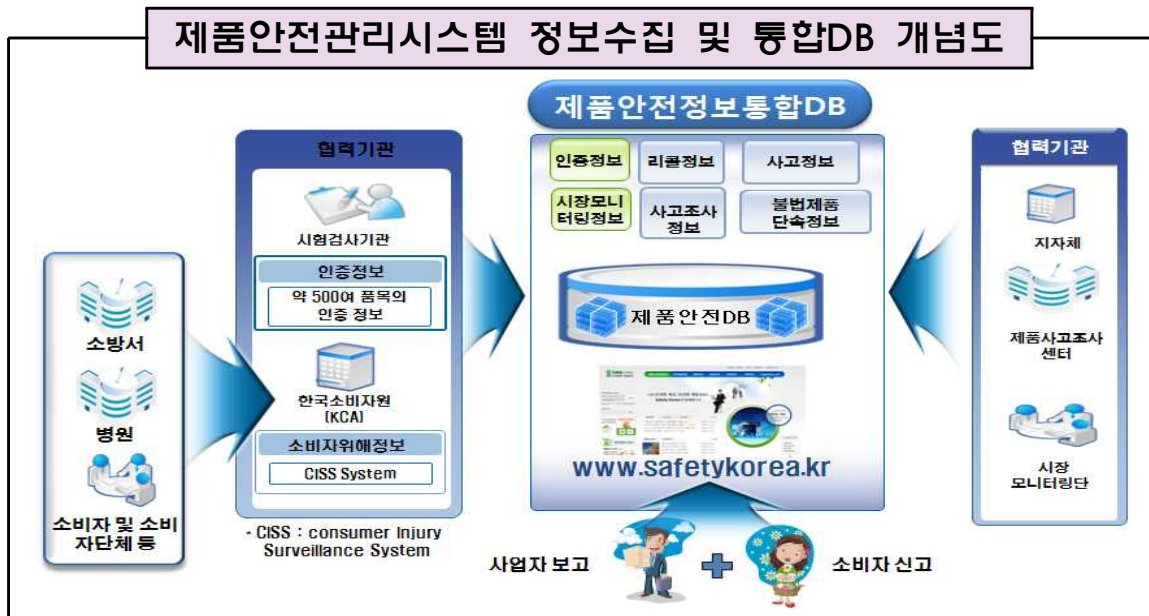
- E-News를 통해 소비자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메일을 받아 볼 수 있으며, Health and Consumer Voice Newsletter를 통해 식품안전·소비자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하여 제공
- 「Your rights a consumer」 책자를 발행하여 소비자 권리를 알리며 매년 정기적으로 European Commision을 개최(Open door day) 하여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EU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컨퍼런스를 진행

##### < 일본 >

- ▶ 제품안전강좌 개설 및 다양한 교육·홍보 책자 발간
- ▶ 제품안전 우수대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 운영
- ▶ 제품안전점검의날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제품안전 문화정착 추진

- NITE는 주부연합회, NPO법인 간사이 소비자 연합회 등과 공동 참여하에 제품안전에 관한 무료강좌 개설
- 제품안전에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고 있는 기업을 '제품안전대책 우량기업'으로 표창하여, 제품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 및 기업의 제품안전활동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 운영

## (5) 사업추진절차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 제 품 사 고 조 사 및 수 입 제 품 안 전 관 리 사 업 (재 량, 계 속)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사업 | 525   | 627          | 878          | 251          | 40.0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3700 - 3732 - 306

\* 담당자: 제품안전정책국장(김정희), 제품안전정보과장(오유천, 043-870-5430), 연구관(김종윤, 043-870-5434)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15~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 2. 사업목적

- 각종 제품안전 정보수집을 기반으로 사고조사제도를 이행(사고조사 후 결함제품 리콜)하고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 이행

- 생활제품(공산품,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으로 인한 제품사고에 대해, 사고조사를 통한 리콜 등 사고조사제도 이행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제품은 제10조, 11조에 따른 제품 수거 등의 행정조치

-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소비자, 기업 등에 제공하는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수행

\* 인증정보, 소비자위해정보, 안전성조사결과정보 등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 정부 3.0차원의 관세청과 협업으로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수입 제품을 적발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안전관리제도 이행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제9조의3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조항 신설('15. 5. 18)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180백만원)

###### - 사고접수 제품 결함여부 조사 등 : 60백만원

\* 조사범위 : 자동차(국토부), 식·의약품(식약처) 등 타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모든 생활 가정용제품 (완구, 의류 등 공산품과 컴퓨터, 세탁기 등 가전제품 포함)

1) 시험비 : 30백만원=60건\*40만원(시험수수료) + 60건\*10만원(재료비)

2) 출장비 : 20백만원=100건\*2명\*10만원

3) 조사결과 결함판정 자문위원회 등 수당 : 10백만원 = 16건\*4명\*15만원

###### - 사고다발제품에 대한 원인분석·평가 이행(정기조사) : 120백만원

1) 전기장판 등 사고다발 제품에 대한 평가 및 분석 : 30백만원 \* 4개 제품

##### 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275백만원)

###### - 제품사고·결함신고 콜센터(☎1600-1384) 운영·홍보: 90백만원

1) 콜센터운영 : 50백만원 = 4백2십만\*12월

2) 사고조사사례 등 홍보 : 40백만원 = 10백만원\*4건

###### - 사고정보, 리콜정보 등 제품안전정보 보급: 85백만원

\* “제품안전매거진(계간Safetykorea)”발간·보급 ☞ 소비자, 기업 등에게 제품 안전정보 보급을 통해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제고유도

1) 제품안전매거진 발간·보급 : 85백만원 = 21백만\*4회

######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전파 : 100백만원

1)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 100백만\*1건

##### 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423백만원)

###### -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인증여부 실물확인 및 안전성조사(제품시험)

1) 시험평가비: 145백만원=290건\*40만원(시험수수료)+290건\*10만원(운송비)

2) 인건비 : 238백만원=18만원\*22일\*12개월\*5명

3) 통관단계 협업 조사시스템 운영 : 40백만원=40백만원\*1건

## □ 지원 필요성

- 각종 생활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고\*가 증가되고 있어, 사고조사 후 결함제품 리콜조치 등 사고조사 제도 이행 필요

\* 공산품/전기용품 위해사례현황(건) : 26,079('13) → 30,375('14) → 27,166('15)

\* 어린이제품 사고접수현황(건) : 3,043('13) → 4,361('14) → 4,873('15)

(조사절차) : 사고신고 접수 ⇒ 사고조사 ⇒ 결함여부판정 ⇒ 리콜이행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를 통한 결함제품 리콜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11.2.5.)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행 미흡

-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민에게 보급\*하는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기능 확충  
 (“제품안전정보센터” 운영)이 필요

\* 공산품, 전기용품, 어린이제품의 제품인증정보, 위해정보, 사고조사 정보, 사업자 리콜이행 정보, 국내외 리콜동향 등

☞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소비자, 기업, 관련단체 등에 On&Off-Line으로 보급하여 소비자 안전과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제고를 유도

- 정부3.0 협업사업으로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인증진위 확인, 안전성조사(제품시험)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을 사전 차단하는 통관단계 수입제품안전관리 이행이 필요

\*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14. 8. 21)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제9조의3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조항 신설('15. 5. 18)

### <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감                                                                                                                                                   | % |  |
|------------------------|----------------------------------------------------------------------------------------------------------------------------------------------------------------------------------------------------------------|-------------------------------------------------------------------------------------------------------------------------------------------------------------------------------------------|-----------------------------------------------------------------------------------------------------------------------------------------------------------------------------------------|------------------------------------------------------------------------------------------------------------------------------------------------------|---|--|
|                        |                                                                                                                                                                                                                |                                                                                                                                                                                           |                                                                                                                                                                                         | (B-A)                                                                                                                                                |   |  |
| ☐ 제품사고조사 및<br>수입제품안전관리 | 525                                                                                                                                                                                                            | 627                                                                                                                                                                                       | 878                                                                                                                                                                                     |                                                                                                                                                      |   |  |
| ▪ 사고조사제도 이행            | 222<br>① 제품사고조사(62백만)<br>1) 시험비: 27백6십만<br>=69간30만(수수료)<br>+69간10만(재료비)<br>2) 출장비: 20백7십만<br>=69간3명*10만<br>3) 조사결과 수당 등<br>:13백8십만=69간2명*10만<br>② 정기 사고조사<br>: 110백만=14백만*8개<br>③ 위해도평가모델 개발<br>: 50백만=50백만*1건 | 200<br>① 제품사고조사(80백만)<br>1) 시험비: 50백만<br>=100간40만(수수료)<br>+100간10만(재료비)<br>2) 출장비: 20백만<br>=100간2명*10만<br>3) 조사결과 결함판정<br>자문위원회 등 수당<br>: 10백만= 16간4명*15만<br>② 정기 사고조사<br>: 120백만=30백만*4개 | 180<br>① 제품사고조사(60백만)<br>1) 시험비: 30백만<br>=60간40만(수수료)<br>+60간10만(재료비)<br>2) 출장비: 20백만<br>=100간2명*10만<br>3) 조사결과 결함판정<br>자문위원회 등 수당<br>: 10백만= 16간4명*15만<br>② 정기 사고조사<br>: 120백만=30백만*4개 |                                                                                                                                                      |   |  |
|                        | ▪ 소비자 위해정보<br>수집·분석보급                                                                                                                                                                                          | 171<br>① 사고조사사례 홍보 등<br>: 41백만=18백만*2건<br>+5백만*1건<br>② 콜센터운영<br>:50백만=4백2십만*12월<br>③ 계간 SafetyKorea 발간보<br>급<br>: 80백만=20백만*4회                                                            | 185<br>① 사고조사사례 홍보 등<br>: 50백만=10백만*5건<br>② 콜센터운영<br>: 50백만=4백2십만*12월<br>③ 계간 SafetyKorea 발간보급<br>: 85백만=21백만*4회                                                                        | 275<br>① 사고조사사례 홍보 등<br>: 40백만=10백만*4건<br>② 콜센터운영<br>: 50백만=4백2십만*12월<br>③ 계간 SafetyKorea 발간보급<br>: 85백만=21백만*4회<br>④ 조기경보시스템 운영<br>: 100백만=100백만*1건 |   |  |
|                        | ▪ 통관단계 수입제품<br>안전관리                                                                                                                                                                                            | 132<br>① 시험평가비: 32백만<br>=131간15만(수수료)<br>+131간9.5만(운송비)<br>② 인건비 100백만<br>=33백만*3명                                                                                                        | 242<br>① 시험평가비: 52백만<br>=104간40만(수수료)<br>+104간10만(운송비)<br>② 인건비 190백만<br>=18만*22일12개월*4명                                                                                                | 423<br>① 시험평가비: 145백만<br>=290간40만(수수료)<br>+290간10만(운송비)<br>② 인건비: 238백만<br>=18만*22일12개월*5명<br>③ 통관단계 협업조사<br>시스템 개선운영 40백만<br>=40백만*1건               |   |  |
|                        | ☐ 비목(합계)                                                                                                                                                                                                       | 525                                                                                                                                                                                       | 627                                                                                                                                                                                     | 878                                                                                                                                                  |   |  |
| ○ 일반수용비(210-01)        | 36                                                                                                                                                                                                             | 45                                                                                                                                                                                        | 35                                                                                                                                                                                      |                                                                                                                                                      |   |  |
| ○ 시험연구비(210-13)        | 62                                                                                                                                                                                                             | 80                                                                                                                                                                                        | 60                                                                                                                                                                                      |                                                                                                                                                      |   |  |
| ○ 관리용역비(210-15)        | 312                                                                                                                                                                                                            | 377                                                                                                                                                                                       | 658                                                                                                                                                                                     |                                                                                                                                                      |   |  |
| ○ 사업추진비(240-01)        | 5                                                                                                                                                                                                              | 5                                                                                                                                                                                         | 5                                                                                                                                                                                       |                                                                                                                                                      |   |  |
| ○ 업무용역비(260-01)        | 110                                                                                                                                                                                                            | 120                                                                                                                                                                                       | 120                                                                                                                                                                                     |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내외 리콜정보, 사고정보 등 제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보급하고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조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이행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6.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조사제도 이행 : 2</li> <li>▪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 1.85</li> <li>▪ 통관단계 수입제품안전관리: 2.42</li> </ul>   |
| '17 | 8.7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조사제도 이행 : 1.8</li> <li>▪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 2.75</li> <li>▪ 통관단계 수입제품안전관리: 4.23</li> </ul> |
| '18 | 5.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조사제도 이행 : 1.5</li> <li>▪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 1.59</li> <li>▪ 통관단계 수입제품안전관리: 2.42</li> </ul> |
| '19 | 4.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조사제도 이행 : 1.5</li> <li>▪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 1.43</li> <li>▪ 통관단계 수입제품안전관리: 1.95</li> </ul> |
| '20 | 4.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조사제도 이행 : 1.5</li> <li>▪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 1.43</li> <li>▪ 통관단계 수입제품안전관리: 1.95</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 이행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한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 추진경위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 이행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한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 -     | -     | 5.35  | 6.27  | 8.78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불용사유 : 정기사고조사 용역(120백만원) 계약체결시 면세  
기관의 부가세 제외분(입찰 공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및 집행잔액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br>( - )    | -<br>( - )  | -<br>( - )  | -<br>( - )      | -<br>( - )    | -<br>( - ) | -<br>( - )   |
| '14년 | -<br>( - )    | -<br>( - )  | -<br>( - )  | -<br>( - )      | -<br>( - )    | -<br>( - ) | -<br>( - )   |
| '15년 | 5.35<br>( 0 ) | 0<br>( 0 )  | 0<br>( 0 )  | 5.35<br>( 0 )   | 5.25<br>( 0 ) | 0<br>( 0 ) | 0.1<br>( 0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위 지적사항)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조치제도”(「제품안전정책」 내역사업) 및 “사고조사제도 이행사업”(「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내역사업) 간 중복

- 제품에 대한 결함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조치·이행에 유사점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관리 등의 효율성을 위해 두 내역사업을 통합·조정할 필요
- (조치결과) 「제품안전정책」 내역사업인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조치제도 운영”예산(‘15년, 174백만원)을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내역사업 “사고조사제도 이행” 예산(‘15년, 200백만원)으로 포함하여 통합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사고조사 및 정보수집·분석)

- 유럽, 일본, 미국 등은 각국의 특성에 맞는 사고정보수집과 위험성평가 및 사고조사를 통해 리콜제도 운영

##### < EU >

- 유럽연합국 차원의 위해정보수집시스템(RAPEX)을 운영하고 수집된 위해정보를 근거로 해당국에서 위험성 평가후 리콜조치 이행
  - Rapex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위해제품에 대해 각 회원국 담당부처가 조사를 이행하고 조사결과 결함제품에 대해 사업자가 리콜토록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

##### < 일본 >

- “제품평가기술키반기구”(NITE)에서 제품사고조사 이행하고 위험성평가 후 경산성에 통보하면 경산성에서 결함제품에 대한 사업자 리콜조치
  - 소비자청(위해정보 수집), 경제산업성(리콜제도 이행), NITE(사고조사 이행) 등으로 역할배분을 통한 제품안전제도 운영

##### < 미국 >

- 15,000여종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상시 감시프로그램 운영, 결함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권고, 안전위해정보 수집 등의 업무 추진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사업자(판매자 포함)의 위해 제품 보고 의무화 제도 등 종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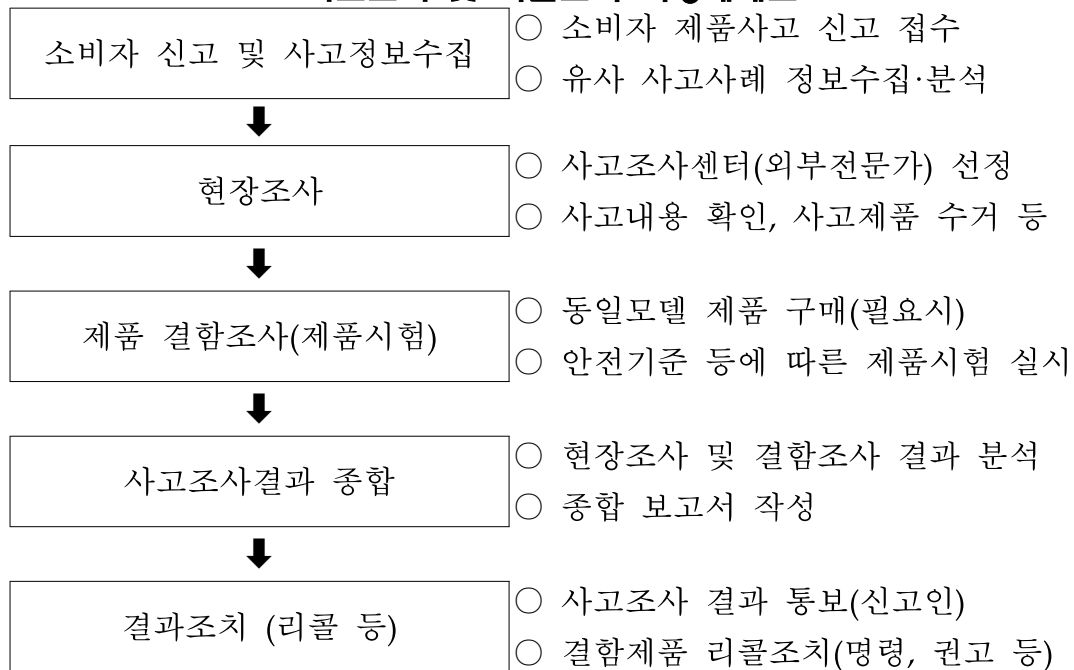
## (수입제품안전관리)

- 美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세관(CBP)이 합동으로 수입물품 단속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관에서 조사 후 통관단계에서 반송폐기 등 조치 이행

## (5) 사업추진절차

- (제품사고조사) 소비자의 제품사고 신고 및 사고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제품사고조사센터(11개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및 제품시험 등 사고조사를 수행하고 결함제품은 리콜 등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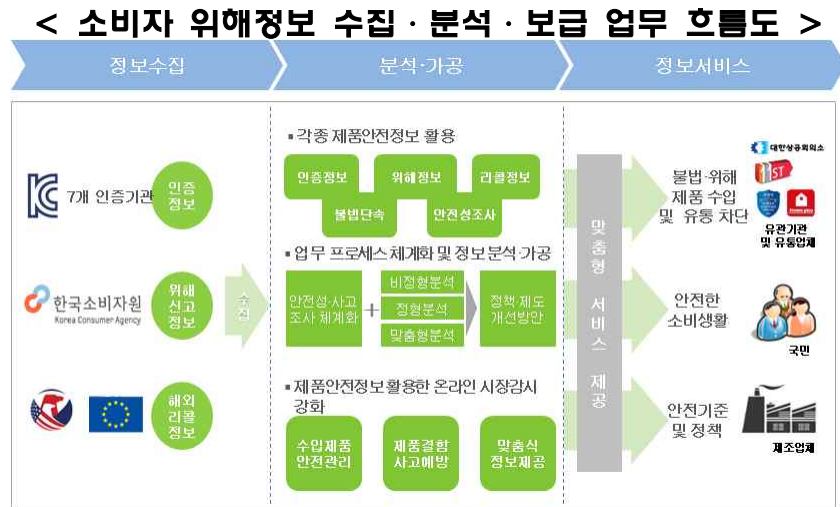
### <사고조사 및 리콜조치 이행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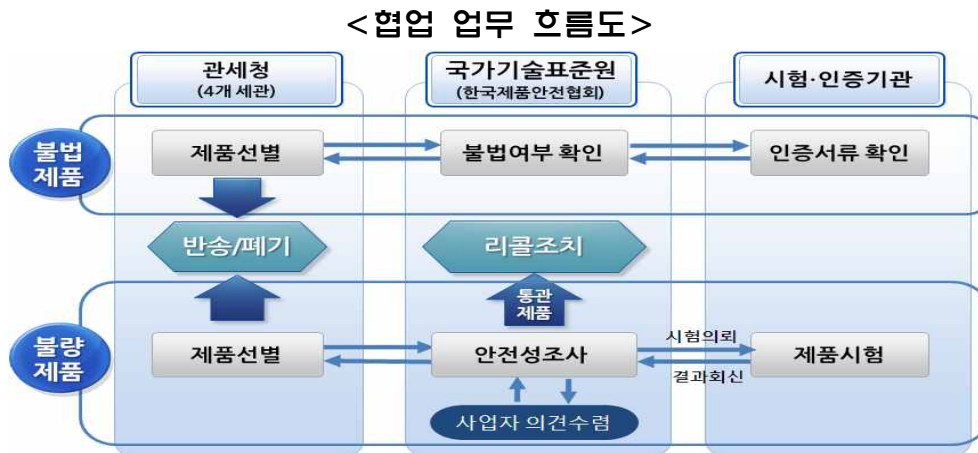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소비자, 기업 등에 보급

\* 인증정보, 소비자위해정보, 안전성조사결과정보 등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 (수입제품안전관리)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제품을 선별하고,
  -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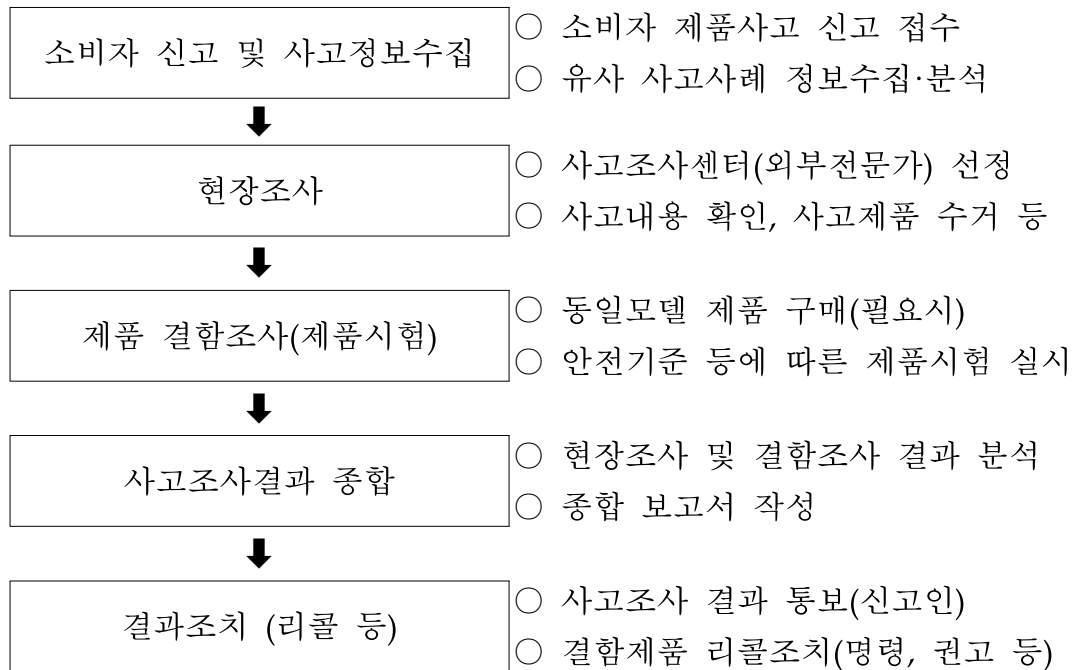
- 해당없음

## 6. 참고자료

- 제품사고조사 이행 체계 및 “제품안전정보센터” 주요업무,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협업체계

## 참고1 제품사고조사 이행 체계 및 “제품안전정보센터”주요업무

### ◆ 제품사고조사 및 조치 이행 체계도



### ◆ 제품안전정보센터 주요업무

☞ 제품안전정보 “수집→분석→지원→보급” 체계 구축

- (수집) 다양한 정보원\*으로 부터의 직접적인 정보수집 채널 구축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PL단체 등
- (분석) 각종 제품안전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분석시스템 구축
  - \* 인증정보, 소비자위해정보, 불법제품단속정보, 안전성조사결과정보 등
- (지원) 분석·평가된 정보에 대해 사고조사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 (보급) 월·분기별 분석된 정보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간을 통해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주기적으로 전파

## 참고2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협업체계

### I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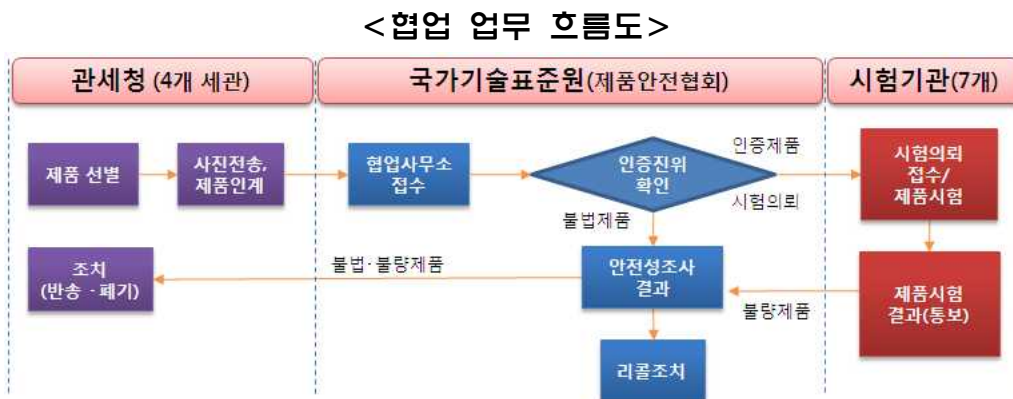
- 통관단계에서 협업을 통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표원은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관세청은 통관 단계 위해제품을 적발하는 등 제품안전관리를 각각 수행

### II 추진 경과

- '14. 08. 21 :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동 협업안 상정·확정
- '14. 09. 15 : “인천본부세관” 사무소 설치 및 시범사업 실시
- '14. 12. 18 : 시범사업 결과 보도자료 배포 (관세청 공동)
- '15. 03. 25 : 전국 4개 세관(인천본부, 인천공항, 평택 및 부산본부세관)확대 시행
- '15. 08. 13 : '15년 상반기 협업사업 결과 보도자료 배포 (관세청 공동)
- '15. 09. 23 : 「관세청-국표원-환경부-식약처간 정부3.0 협업검사체계」 협약식

### III 협업추진 내용

-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수입사업자를 선별하고,
  - 적발된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 또는 국표원에서 리콜 조치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사업 (재량, 신규)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사업 | -     | -            | 950,000      | 950,000      | 순증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4 - 3700 - 3732 - 302

\* 담당자 : 제품안전정책국장(김정희), 생활제품안전과장(송양희, 043-870-5450), 김홍준 연구관(043-870-5574)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

### 2. 사업목적

-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을 유지·증진
  - 근본적으로 어린이제품의 유해성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근본적으로 안전한 어린이제품의 시장 유통 촉진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재 등 교육기반 조성,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범국민적 안전의식 고취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 강화 : 450백만원

- 어린이제품 유해·안전성 검증·분석(어린이제품안전시험분석센터)  
: 400백만원(10품목×40백만원)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원스톱지원체계」 구축·운영 : 50백만원  
(10개사×5백만원)

②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기반 조성 : 230백만원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교재 개발 : 160백만원(4종×25백만원)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 70백만원(100명×0.5백만원)

③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70백만원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 100백만원(10개교×10백만원)
- 어린이제품 찾아가는 안전 교육 : 70백만원(20개교×3.5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어린이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중 외국제조 제품이 72.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대책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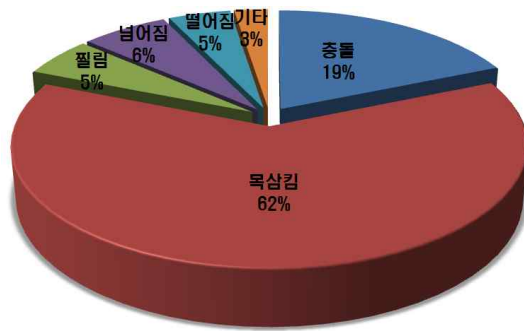
\* 위해사례 접수건수 : '12년) 25,231건 → '13년) 26,079건 → '14년) 30,375건



##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14.6.3.) 및 시행('15.6.4.)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수요자(어린이, 학부모 및 교사 등) 안전의식 부족에서 기인
  - 최근 5년간(2010~2015) 어린이제품 안전사고가 15,940건 발생하였으며, 완구에 의한 안전사고가 23.4%(3,734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그중,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삼킴 등)가 가장 큰 사고원인으로 기록

**<최근 5년간 완구류 안전사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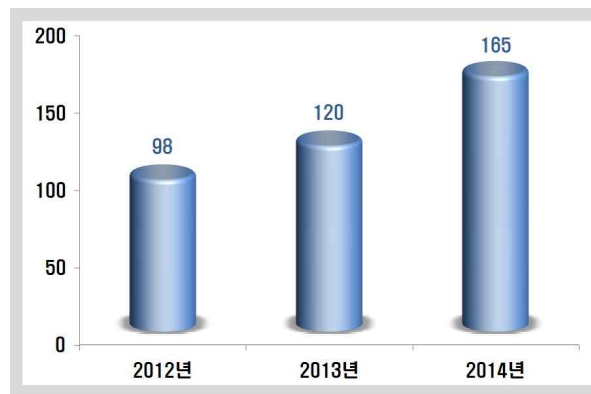


- 그러나, 그동안 불량제품 제조 수입업자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 학부모 및 교사 등 소비자 중심의 안전교육은 미비

➔ **어린이, 학부모 및 교사 등 어린이안전사고 현장 소비자 중심의 안전의식 제고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절실히 필요**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은 10인이하 영세기업이 많고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안전성이 확보된 품질의 제품 개발 역량이 현저히 부족
  - \* 어린이제품(의류/문구/장난감 등) 업계 평균 종사자 수는 2.4명('10년 통계청)
-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2012~2014, 총 3,980개 제품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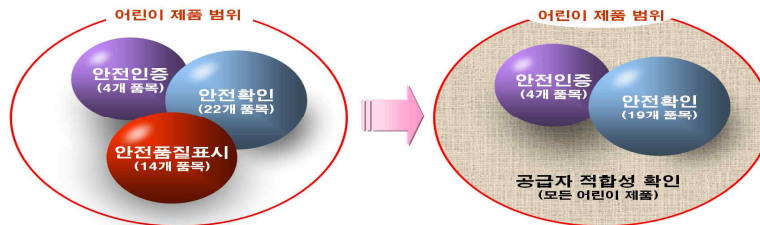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부적합 현황>**



- 또한, 최근 신소재 등을 사용한 어린이제품 출시가 확대되는 추세로 신종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신종위해 가능성 대두
  - \* (EU) 유해중금속 관리대상 8종 → 19종 확대, (미국) 위해가소제 관리대상 6종 → 10종 확대
- 신제품 · 융복합제품 등의 출현으로 어린이행동 · 제품특성에 맞는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어린이제품 공급가능성 증대
  - \* 어린이제품 위해불만 접수 증대 : ('12년) 3,403 → ('13년) 4,043건 → ('14년) 4,361건

➡ 어린이제품의 근본적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제조기업의 개발 역량 강화,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한 어린이제품 안전품질 향상이 요구**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품목이 40개 품목에서 모든 어린이 제품으로 확대
- \* 최근, 드론, 웨어러블 완구, 사물인터넷 완구, 세그웨이 등 신기술 제품의 출시로 대상 품목 확대



<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 조성     | -     |              | 950                  | 950          | 순증 |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 강화    | -     | -            | 450                  | 450          | 순증 |
| - 어린이제품 유해 안전성 검증·분석 | -     | -            | 400<br>(10품목×40백만원)  | 400          | 순증 |
| - 제조기업 원스톱 지원 체계     | -     | -            | 50<br>(10개사×5백만원)    | 50           | 순증 |
| ▪어린이제품안전교육 기반조성      | -     | -            | 230                  | 230          | 순증 |
| - 교재개발               | -     | -            | 160<br>(4종×40백만원)    | 160          | 순증 |
|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 -     | -            | 70<br>(100명×0.7백만원)  | 71           | 순증 |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 270                  | 270          | 순증 |
|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연구학교    | -     | -            | 100<br>(10개교×10백만원)  | 100          | 순증 |
|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교육     | -     | -            | 70<br>(20개교×3.5백만원)  | 70           | 순증 |
| - 어린이제품 안전 체험관       | -     | -            | 100<br>(2개소 × 50백만원) | 100          | 순증 |
| □ 비목(합계)             | -     | -            | 950                  | 950          | 순증 |
| ○ 일반수용비(210-01)      | -     | -            | 50                   | 50           | 순증 |
| ○ 임차료(210-07)        | -     | -            | 30                   | 30           | 순증 |
| ○ 일반연구비(260-01)      | -     | -            | 140                  | 140          | 순증 |
| ○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710                  | 710          | 순증 |
| ○ 자산취득비(430-01)      | -     | -            | 20                   | 20           | 순증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목표) 어린이제품에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생활제품과는 차별화된 안전관리체계 마련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추진방향) 근본적으로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를 위한 제품 개발 역량 확충, 범사회적 어린이제품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반 구축 및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 안전 사고 사전 근절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     | -                                                                                                                                              |
| '17 | 9.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 강화 : 4.5</li> <li>▪ 어린이제품안전교육 기반조성 : 2.3</li> <li>▪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2.7</li> </ul> |
| '18 | 35.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제품 개발 역량 강화 : 22.15</li> <li>▪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기반 조성 : 4.35</li> <li>▪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 8.5</li> </ul>     |
| '19 | 35.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제품 개발 역량 강화 : 22.15</li> <li>▪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기반 조성 : 4.35</li> <li>▪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 8.5</li> </ul>     |
| '20 | 35.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제품 개발 역량 강화 : 22.15</li> <li>▪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기반 조성 : 4.35</li> <li>▪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 8.5</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3.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4.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4.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6.03)
- '15.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6.04)
- '16. 3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포 예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어린이제품안전<br>관리생태계조성 | -     | -     | -     | -     | 9.5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중금속,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추세
- ◆ 미국, 일본 등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품안전 교육을 위한 안전교육센터 설립 등 수요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추진

<안전관리 강화>

① (EU) 신제품 위해성평가 결과를 기준에 반영하고, 중금속 규제를 8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

\* 납, 카드뮴, 비소 등 8종 ⇒ 망간, 알루미늄, 붕소, 니켈 등 11종 추가(2013.7월 시행)

\*\* 재질별, 성상별로 관리기준 차등화 등 신형 재질을 고려하여 유해물질을 추가관리

- 14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가 사용할 의도로 고안된 모든 어린이제품은 완구기준으로 관리

\* 완구 : 디렉티브 2009/48/EC(법령) 및 REACH(법령, 화학물질), EN71(물리+화학기준) 적용

\*\* 카시트 : 디렉티브 2003/20/EC(법령) 및 규정144(물리적 성능), EN71(유해물질 기준) 적용

② (미국)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시장출시전 안전성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유해물질(프탈레이트가소제) 규제대상 확대 적용\*\*을 검토

\* 제3자 적합성확인 의무화, 자기적합인증서 제출의무화,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의무화, 완구·보행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품에 취급상 주의표시 의무화

\*\* 프탈레이트가소제(내분비계교란물질)는 전세계적으로 6종(DEHP, DBP, BBP, DINP, DIDP, DNOP)을 규제하고 있으나, 미국은 4종(DIBP, DPENP, DHEXP, DCHP) 추가 규제를 검토

○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2009.1)후,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장관급)의 예산·조직을 보완

\* CPSC 예산을 71%(\$107백만) 증액, CPSC 인원을 50% 이상 증원('07년 대비)

\*\* CPSC : 50개 지소, 520명('14년 예산 약 1,370억원)

## <안전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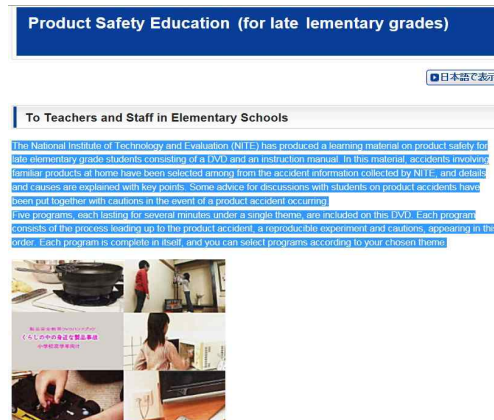
### ① (미국)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안전교육센터(Safety Education Centers)」를 설립

○ 안전교육센터는 사고다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수칙, 사고정보, 사고이력 등에 대한 지속적 정보 수집을 물론 사고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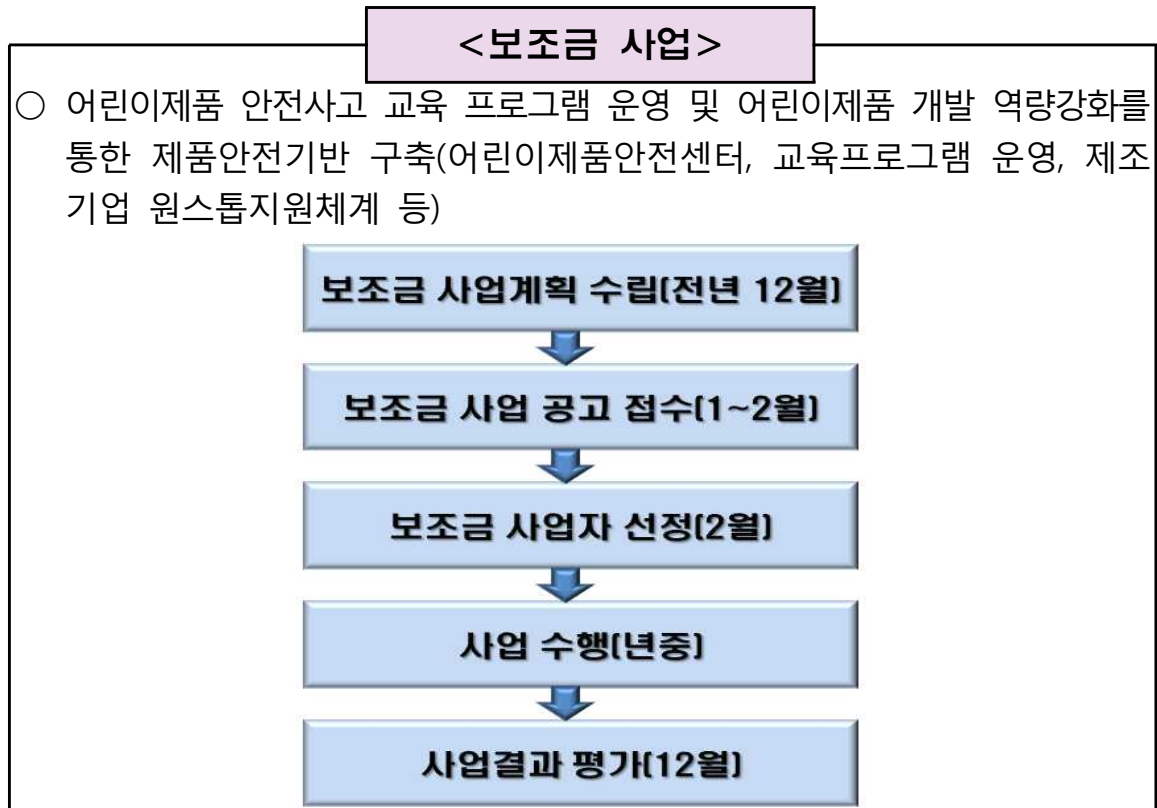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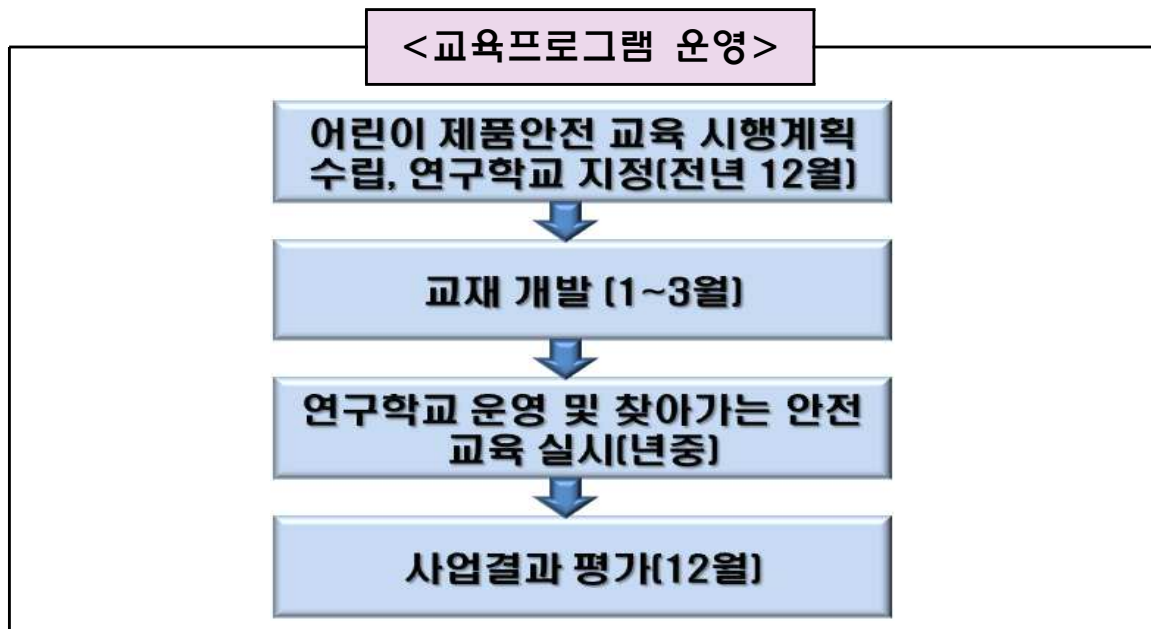


### ② (일본) 국립제품평가기술기반연구원(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NITE는 초등학생은 물론 교사 및 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운영



## (5) 사업추진절차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 6. 참고자료

-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경과

#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경과

## □ 기본계획 수립배경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14.6.3 제정, ‘15.6.4시행) 제5조에 따라 어린이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6~2018)을 수립

##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대상을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확대하고 불법 危害제품 유통·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중
  - \* 통관단계 및 유통시장 안전성조사,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등
- (필요성) 어린이는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 제품위험 대처능력이 떨어지므로 성인대상 공산품과 차별화된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 및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 등 유통경로 다양화로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
  - \* 제품안전주체(정부, 소비자, 시험기관, 기업)의 역할수행을 위한 유기적 안전생태계 구축

## □ 어린이 제품안전 비전 및 추진전략



☞ "어린이 안전이 중심이 되는 Safety Korea 건설"의 어린이제품안전비전을 위해 3대 추진전략下 30개 세부과제를 도출

**전략① 전주기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포괄적 안전관리제도 정착, 유통 어린이제품 안전관리강화, 어린이제품 인프라확충" 추진

**전략② 어린이제품안전 생태계 기반조성** "기업의 제품안전역량강화와 수출지원 추진"

**전략③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제품안전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제품안전홍보활동"을 통해

➡ "안전취약 어린이제품 부적합률 개선, 어린이제품사고 감축을 추진"

## □ 소요예산 2018년까지 총 18,219백만원 투입

- \* 2017년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신규사업(3,500백만원) 확보추진

## □ 기본계획 발표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회 (2016.3.9)

##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 (계속)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 | 1,215 | 1,095        | 1,010        | △85          | △7.8%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3700 - 3733 - 304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강병구), 화학서비스표준과장(김숙래, 043-870-5390), 사무관(김윤근, 043-870-5391)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 총사업비   | 1,010백만원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 2. 사업목적

- 인체적합성이 우수한 제품과 생활에 필요한 인체치수, 인체형상, 인체활동범위, 인지적 데이터 등을 조사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기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국제규격 제안, 인체정보가 반영된 KS규격의 제·개정에 활용과 기업의 인간공학적 제품설계 및 기술 개발에 활용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인체정보 측정사업

- 고령자 인체의 동적범위 측정을 위한 사업비: 410백만원
  - (산출내역) 인건비(216)+측정경비(134)+피측정자 사례비(60)=410백만원
    - (인건비) 9명×8개월×300백만원=216백만원

- (측정경비) 측정장비 대여비 60(10종×6백만원)+측정피복비 24(3종×200개×4만원)+전산장비비 20(4종×5백만원)+회의비 20(20회×10명×10만원)+소모품비 10백만원 = 134백만원
- (피측정자 사례비) 1000명×60,000원=60백만원

## ② 인체정보 보급사업

- 산업계의 한국인 인체치수정보 활용가이드 개발 및 보급 : 300백만원
  - (산출내역) 인건비(168)+개발경비(132)=300백만원
    - (인건비) 7명×8개월×4백만원=168백만원
    - (개발경비) 시제품 제작비 30(3종×2회×5백만원) + 측정장비 대여비 20(5종×4백만원)+재료비 30(10종×3백만원)+회의비 20(20회×10만원×10명)+전산장비 20(5종×4백만원)+피조사자 사례비 9(150명×6만원)+소모품 3백만원(132백만원)=132백만원
- 서비스 플랫폼 구축(인체치수정보 활용 스마트앱 모델 개발) : 200백만원
  - (산출내역) 인건비(128)+개발경비(72)=200백만원
    - (측정 연구원 등 인건비) 4명×8개월×4백만원=128백만원
    - (개발경비) 소프트웨어 구입비30(2종×15백만원), 전산장비 대여비 20(4종×5백만원), 회의비 20(20회× 10만원×10명), 소모품비 2백만원=72백만원
- 산업계 지원을 위한 표준인체정보실 운영 : 100백만원
  - (산출내역) 인건비(50)+개발경비(50)=100백만원
    - (측정 연구원 등 인건비) 2명×10개월×2.5백만원=50백만원
    - (개발경비) 회의비 15(15회×10만원×10명), 임차료 20(4회× 5백만원), 재료비 15(15종×1백만원)=50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제품 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정보 및 3차원 인체형상정보, 동적측정 정보 등 종합적인 인체표준정보 DB 구축 및 주기적인 인체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구축 고도화 가능
- 측정 정보를 활용한 KS 표준 제·개정 추진 지원 필요

-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매년 한국인인체관련 정보 보급 추진을 통하여 산업계의 인체 친화적 제품 생산 및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

<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input type="checkbox"/>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 1215  | 1095                                                                                          | 1010                                                                                                                                                                                  | △ 85         | △ 7.8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체 정보 측정사업                             | 700   | 325                                                                                           | 410                                                                                                                                                                                   | 85           | 26.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체정보 측정사업<br/>(산출근거)</li> </ul>     |       | 325<br>인건비180(10명x6개월x3<br>백만원)<br>측정경비70(장비대여비<br>50+피복비10+회의비10)<br>피측정자사례비75(250명x3<br>만원) | 410<br>인건비269(9명x8개월x300<br>백만원)<br>측정경비134(측정장비 대여<br>비60(10종x6백만원)+측정피<br>복비24(3종x200개x4만원)전산<br>장비비20(4종x5백만원)+회의<br>비20(20회x10명x10만원)+소<br>모품비10)피측정자사례비<br>60(1000명x6만원)         | 85           | 26.1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체 정보 보급사업                             | 515   | 770                                                                                           | 600                                                                                                                                                                                   | △ 170        | 22.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용가이드 개발 및 보급<br/>(산출근거)</li> </ul> |       | 200<br>인건비150(10명x5개월x3<br>백만원)<br>개발경비50(시제품제작<br>10+측정장비대여20+회의<br>비14+피조자사례비6)             | 300<br>인건비168(7명x8개월x4백만원)<br>개발경비132(시제품제작비<br>30(3종x2회x5백만원)+측정장<br>비대여비20(5종x4백만원)+재<br>료비30(10종x3백만원)+회의<br>비20(20회x10만원x10명)+전<br>산장비20(5종x4백만원)+피조<br>자사례비9(150명x6만원)+<br>소모품3) | 100          | 5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플랫폼 구축<br/>(산출근거)</li> </ul>    |       | 300<br>인건비252<br>(4명x6개월x3)<br>개발경비48<br>(장비대여20+회의비10+회<br>장하드4+자료구입5+활용<br>소프트구입8+소모품1)     | 200<br>인건비128(4명x8개월x4백만원)<br>개발경비72(소프트웨어구입<br>비30(2종x15백만원)+전산장<br>비대여비20(4종x5백만원)+회<br>의비20(20회x10만원x10명)+<br>소모품2)                                                                | △ 100        | 33.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실 운영<br/>(산출근거)</li> </ul>        |       | 270<br>인건비50(2명x10개월x250)<br>운영경비20(재료비, 자료<br>구입비)<br>측정장비구입비270(3d측<br>정기200)               | 100<br>인건비50(2명x10개월x250)<br>개발경비50(회의비15(15회x10<br>만원x10명)+임차료20(4회x5<br>백만원)+재료비15(15종x1백<br>만원))                                                                                   | △ 170        | 63.0  |
| <input type="checkbox"/> 비목(합계)                                            | 1215  | 1095                                                                                          | 1010                                                                                                                                                                                  | △ 85         | △ 7.8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험연구비(210-13)</li> </ul>            | 44    | 45                                                                                            | 45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추진비(240-01)</li> </ul>            | 4     | 4                                                                                             | 4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비(260-01)</li> </ul>            | 1167  | 846                                                                                           | 961                                                                                                                                                                                   | 115          | 13.5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취득비(430-00)</li> </ul>            | -     | 200                                                                                           | -                                                                                                                                                                                     | △ 200        | △ 10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의 한국인 인체정보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기업의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체정보의 신속한 보급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업제품에 대한 인체친화적 제품 설계기능 지원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10.9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3.25</li> <li>▪ 인체정보보급사업: 7.7</li> </ul> |
| '17 | 1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4.1</li> <li>▪ 인체정보보급사업: 6</li> </ul>    |
| '18 | 9.6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2</li> <li>▪ 인체정보보급사업: 7.62</li> </ul>   |
| '19 | 8.5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2</li> <li>▪ 인체정보보급사업: 6.52</li> </ul>   |
| '20 | 8.5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2</li> <li>▪ 인체정보보급사업: 6.52</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3조(정의),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산업표준화법 :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 확인 등)
- 통계법 : 제2조(기본이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
- 통계법시행령 :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 ○ 추진경위

- ('79~'02년) 의류치수 등 산업표준 제·개정을 위해서 국민체위조사 실시한 이후 5~7년 주기로 4차례 측정사업 수행
- ('03~'09년)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격한 체형변화로 최신의 인체치수 정보와 3차원 인체형상 자료, 동적치수 등을 조사하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및 인체형상 측정 사업 실시하고, 관련 정보에 대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승인 통계로 지정
- ('10~'14년)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과 계층별 3차원 인체형상 측정 및 3차원 인체표준형상을 개발하여 보급
- ('15~'16년)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과 인체정보 활용을 위한 제품설계디자인 가이드 개발하여 보급 및 3D 인체형상 활용시스템 구축(3D시각화)중장년층(40~69세), 고령자(70~85세)

####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 9.50  | 8.12  | 12.16 | 10.95 | 10.10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불용 사유 : 경상경비 절감
- '14년 불용 사유 : 조달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 '15년 불용 사유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 잔액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9.50<br>( )  | 0.28<br>( ) | -<br>( )    | 9.78<br>( )     | 8.63<br>( )  | -<br>( ) | 1.15<br>( ) |
| '14년 | 8.12<br>( )  | -<br>( )    | -<br>( )    | 8.12<br>( )     | 8.06<br>( )  | -<br>( ) | 0.06<br>( ) |
| '15년 | 12.16<br>( ) | -<br>( )    | -<br>( )    | 12.16<br>( )    | 12.15<br>( ) | -<br>( ) | 0.01<br>(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 미국 인체치수조사사업 동향

- 2차대전 이후 인체치수DB 확보 중요성을 인식하여 '78년 미국 표준국에서 부처별 인체치수 조사사업을 통합하여 NASA를 통해 950개 항목을 조사
- '03~'04년 TC<sup>2</sup>(Textile Clothing Technology Cooperation)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3차원스캐너를 통해 10,000여명을 대상으로 인체측정 실시
- 데이터는 자체 전문가집단을 통해 가공한 후 이를 판매하고 있음

### ○ 유럽 인체치수조사사업 동향

- 영국은 '03~'04년 3차원스캐너 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들 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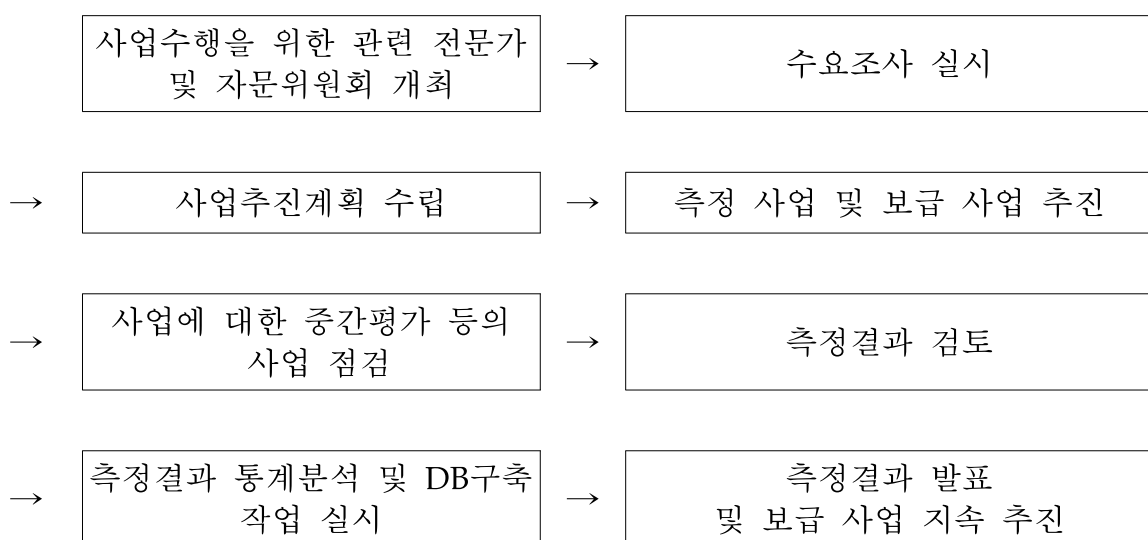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1,000여명에 대한 3차원측정과 직접측정을 시행하여 참여한 기업에 한하여 Raw Data를 보급하고 그 외의 경우 가공하여 판매

- 프랑스는 '03~'04년 IFTH(The French Textile and Clothing Habillement)에서 10,000여명을 대상으로 인체측정을 실시하고, 공동 참여한 기업은 Raw Data를 사용 하고 그 외의 기업에는 Data를 판매

#### ○ 일본 인체치수조사사업 동향

- '65년 정부에서 기성복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3년간 4~29세 남녀 32,000명을 대상으로 64개부위를 측정하고 '71~72년에는 30세이상 남녀 9,000명을 조사하여 공개함
- '04~'07년 HQL(Research Institute of Human Engineering of Quality life)에서 10,000여명(0~80세이상)을 대상으로 3차원측정을 실시하고 측정된 자료는 HQL를 통해 Raw Data나 데이터를 가공하여 판매

#### (5) 사업추진절차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 6. 참고자료

- 국내외 인체치수조사 추진현황

## 참고 국내외 인체치수조사 추진현황

- '79~'02년 : '79년 정부주도로 "제1차 국민체위조사" 명칭으로 시작하여 5~6년 주기로 4차례 실시
  - \* 측정데이터는 의류·신발·책상·의자 등 관련 한국산업규격에 활용
- '03~'09년 : '03년부터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Size Korea)”으로 명칭 변경하여 제5차 사업 실시
  - \* '05년 통계청으로부터 한국인 인체정보를 승인 통계로 지정
  - \* 직접치수측정 이외 3차원 인체형상측정 등 과학적 측정기법 도입
  - \* 전국 남녀(0~70세이상) 2만여명에 대한 인체치수 및 3D인체형상 DB 구축
- '10~'15년 : 제6차 및 제7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 사업과 계층별 3D인체형상 및 3D표준인체형상 개발 사업실시

| 사업연도       | 표본수     | 연령층    | 측정항목 |
|------------|---------|--------|------|
| 제1차 (1979) | 16,000명 | 0-50세  | 117개 |
| 제2차 (1986) | 21,000명 | 6-51세  | 80개  |
| 제3차 (1992) | 9,000명  | 6-50세  | 84개  |
| 제4차 (1997) | 13,000명 | 0-70세  | 120개 |
| 제5차 (2003) | 14,200명 | 0-70세  | 125개 |
| 제6차 (2010) | 14,016명 | 7-69세  | 139개 |
| 제7차 (2015) | 6,413명  | 16-69세 | 133개 |

- \* 계층별(5개) 3D인체형상 측정 및 표준형상 제작보급 : 성인(20~39세: '11년), 어린이(7-13세: '12년), 중장년층(40~69세: '13년), 청소년(14~19세: '14년), 고령자(69~85세: '15년)

### <사례분석>

- \* 인체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전국민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진료비 절감효과는 연간 약1,525억원 추정 [2011년 (주)날리지웍스 조사분석]
  - 근골격계질환 관련 진료비 지출규모 : 4,550,890백만원
  - 인간공학적 설계적용을 통한 의료비 절감효과[67%, 미국의 작업안전위생국 자료(OSHA)] : 3,049,096백만원
  - 인체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비 절감효과(5%, 관련전문가 추정치) : 152,455백만원

### <산업적 효과>

- \* 인체치수 사업으로 100억을 투입할 경우[2011년 (주)날리지웍스 조사분석]
  - 생산유발효과 : 158.3억, 부가가치 창출 : 108.7억원, 고용창출 : 368.5명

##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사업(계속)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사업 | 1,239 | 1,445        | 1,332        | △ 113        | △ 7.8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3 - 308

\* 담당자 : 적합성정책국장(진종욱), 계량측정제도과장(최미애043-870-5510), 주무관(조정웅043-870-5511)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민간보조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 2. 사업목적

- 선진화된 법정계량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반 확충 및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통한 공정 상거래 질서 확립
- 지능화되는 불법계량기 위조 등의 부정 계량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단속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른 법적규제대상의 엄정한 관리가 필요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706백만원

- 제도개선 정책 및 기술기준·지침 개발 : 125백만원

- \* 형식승인·검정기준(2종)×계량분야 '16년 평균용역 단가(25백만원) : 50백만원
- \* 지침서·해설서(2종)×계량분야 '16년 평균용역 단가(25백만원) : 50백만원
- \* 계량기관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1종×25백만원 : 25백만원
- 계량공무원 대상 전문교육(민간보조) : 64백만원
  - \* 계량공무원 정기검사 및 재검정을 위한 실무교육 (20백만원×2회=40백만원)
  - \* 인건비 24백만원 (1명×4.7백만원×12월×43% = 24.3백만원)
- 계량기사업자 대상 교육(민간보조) : 48백만원
  - \* 교육대상 2,270명중 900명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 임차료 등 (4백만원×5회=20백만원)
  - \* 인건비 28백만원 (1명×4.7백만원×12월×50% = 28.2백만원)
- 계량 사후관리 및 불량계량기 신고에 대한 홍보(민간보조) : 52백만원
  - \* 사후관리 계획 및 불량계량기 신고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20백만원×1회) 및 계도용 인쇄·홍보물 2종(16백만원×2종)
- 소비자감시원 운영(민간보조) : 322백만원
  - \* 수당 225백만원(=50천원× 5개 지역 × 30명 × 30일)
  - \* 교육 및 워크숍 50백만원(1회×50백만원)
  - \* 인건비 47백만원 (2명×4.7백만원×10월×50%)
- 불법·불량계량기 신고시스템운영(민간보조) : 68백만원
  - \* 신고시스템 운영비 : 40백만원
  - \* 포상금 및 계도비 : 28백만원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APLMF 등) 대응 및 국제협력 : 27백만원
  -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기구포럼(APLMF) 및 OIML 실량표시기술위원회, (한일, 한중) 계량기술협력위원회, BIPM 국제도량형기구 총회 등 참가 : 20백만원
  -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대응 기술위원회 간담회(7백만원)
  - \* OIML에는 총 18개의 기술위원회(TC)와 46개의 분과위원회(SC)에서 연간 30~40건 정도의 투표를 진행 함

## ②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261백만원

- '평(坪)', '돈(匁)' 등 非법정단위 근절 및 'm<sup>2</sup>', 'g' 등의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 103백만원
  - \* 부동산 중개업소, 귀금속업소 등 홍보 58백만원 (리플렛3종, 홍보물3종 등 48백만원, 기타 10백만원)
  - \* 대중홍보 45백만원 (지하철 5개 지역×1개월×9백만원)

- 일간지, 공중파 15개 분야에 대한 'm<sup>2</sup>', 'g' 등의 법정단위 모니터링 : 75백만원
  - \* 일간지, 공중파 등 11분야 (전년도 용역단가(3.5백만원) : 35백만원  
(일간지 3社, 경제지 3社, 공중파 3社 · YTN · MBN 등 11개 분야)
  - \* 부동산, 현수막 등 3분야 모니터링 : 40백만원
- IT기반 법정계량기 및 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 83백만원
  - \* 디지털정보 추출 알고리즘 개발 및 시스템 구축 1건 × 83백만원

### ③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195백만원

- 계량기 종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예산: 40백만원
  - \* 계량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용(5백만원×8개월) : 40백만원
- 계량·측정 데이터의 DB화 비용 : 30백만원
  - \* 2.3백만원×2명×8월×80% ≒ 30백만원
- 시스템 애로·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40백만원
  - \* 1건×40백만원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민간보조) : 65백만원
  - \* 사전알림 시스템 운영비 : 1건 × 38 백만원
  - \* 우편발송비 27백만원 (90천건×300원)
- 수입물품 세관장 확인 온라인 시스템 구축 운영 : 20백만원
  - \* (운영비 1건×20백만원)

### ④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70백만원

-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조사 : 91백만원
  - \* 시료구입비(계량기 구입 30종×시료3개×250천원=22,500천원) : 22백만원
  - \* 시험수수료 (시험 수수료 30종×시료1개×2,300천원=69,000천원) : 69백만원
- 검정계량기 오차검사 : 43백만원
  - \* 수당(150천원×4명×10일×4종=24백만원), 출장비(100천원×4명×9.5일×5회=19백만원)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 36백만원
  - \* 정량표시상품 : 시료 구입비 20천원×연450개=9,000천원, 정량 검사비 60천원×연450개=27,000천원
  - \* 정량상품 업체는 2만개로 업체별 20개를 가정하면 상품수는 40만개('14년 기준)

## □ 지원 필요성

- 계량 관련기업의 고용창출 및 수출 증대의 견인적 역할을 위해 스마트 미터 등 IT 융·복합화에 따른 새로운 계량기에 대해 신뢰성 있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표준 지원이 필요
-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계량기로 인한 공공 상거래 질서 훼손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의 엄정한 관리(사후관리)가 필요

### <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 1,239 | 1,445                                                                                | 1,332                                                                               | △ 113        | △ 7.8  |
|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br>(산출근거)               | 667   | 821<br>6건×25<br>2건×100<br>3회×17.3<br>150명×30일×0.05+1회×50+2명×5월×4.7<br>1건×68<br>1건×29 | 706<br>5건×25<br>2건×56<br>3회×17.3<br>150명×30일×0.05+1회×50+2명×5월×4.7<br>1건×68<br>1건×27 | △ 115        | △ 14.0 |
|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br>모니터링<br>(산출근거)       | 218   | 178<br>2건×51.5<br>2건×37.5                                                            | 261<br>2건×51.5<br>2건×37.5<br>1건×83                                                  | 83           | 46.6   |
|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br>활용·지원<br>(산출근거)       | 202   | 275<br>3건×36.7<br>1건×65<br>1건×100                                                    | 195<br>3건×36.7<br>1건×65<br>1건×20                                                    | △ 80         | △ 29.1 |
|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br>감독 및 사후관리<br>(산출근거) | 152   | 171<br>30종×3개×0.25+30종×1개×2.3<br>1건×44<br>1건×36                                      | 170<br>30종×3개×0.25+30종×1개×2.3<br>1건×43<br>1건×36                                     | △ 1          | △ 0.6  |
| □ 비목(합계)                               | 1,239 | 1,445                                                                                | 1,332                                                                               | △ 113        | △ 7.8  |
| ○ 일반수용비(210-01)                        | 133   | 127                                                                                  | 127                                                                                 | -            | -      |
| ○ 시험연구비(210-13)                        | 102   | 127                                                                                  | 127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137   | 210                                                                                  | 130                                                                                 | △ 80         | △ 38.1 |
| ○ 국내업무여비(220-01)                       | 18    | 20                                                                                   | 19                                                                                  | △ 1          | △ 5.0  |
| ○ 국외업무여비(220-02)                       | 30    | 22                                                                                   | 20                                                                                  | △ 2          | △ 9.1  |
| ○ 사업추진비(240-01)                        | 7     | 7                                                                                    | 7                                                                                   | -            | -      |
| ○ 일반연구비(260-01)                        | 224   | 200                                                                                  | 258                                                                                 | 58           | 29.0   |
| ○ 정책연구비(260-02)                        | -     | 25                                                                                   | 25                                                                                  | -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 588   | 707                                                                                  | 619                                                                                 | △ 88         | △ 12.4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성과목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및 법정계량 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
- (추진방향)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년~'20년) 및 법정계량선진화 추진계획('12.2)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계량측정 체계 기반 마련 및 계량법 전부개정('14.5)에 따른 신규 법정계량·측정 업무 수행
- (제도개선사항) 계량관리 체계를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고 관련 계량측정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계량법 전부개정 추진('15.1월 시행)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14.4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8.21</li> <li>▪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1.78</li> <li>▪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2.75</li> <li>▪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71</li> </ul> |
| '17 | 13.3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7.06</li> <li>▪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2.61</li> <li>▪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1.95</li> <li>▪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7</li> </ul>  |
| '18 | 12.7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6.44</li> <li>▪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2.61</li> <li>▪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1.95</li> <li>▪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7</li> </ul>  |
| '19 | 11.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4.99</li> <li>▪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2.61</li> <li>▪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1.95</li> <li>▪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7</li> </ul>  |
| '20 | 11.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4.99</li> <li>▪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2.61</li> <li>▪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1.95</li> <li>▪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7</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비법정단위 사용금지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 제49조(보고), 제50조(조사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사업의 육성 지원)
  - \* 계량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지원 가능

○ 추진경위

-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추진방안”(국무회의, ‘06.10.17)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3.30)의 “법정계량단위 정립으로 생활 속 상거래 질서 확립”과제 추진
- 사업명 변경 : 법정단위정착지원(‘09년) →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12년)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추진(‘12.2월)
- 계량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계량법 전부개정 (‘14.5월 공포/‘15.1월 시행)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자율감시 지원(소비자 감시원 제도, 리콜제도) 제도 신설(‘15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 | 4.93  | 10.00 | 12.50 | 14.45 | 13.32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사유 : ‘13년) 예산절감, ‘14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15년) 집행잔액

\* ‘12년 전용: 법정단위 홍보를 위해 위탁사업비 20백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목 조정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4.93<br>( - )    | ( )         | ( )         | 4.93<br>( )     | 4.36<br>( - )    | ( )  | 0.57<br>( - ) |
| ‘14년 | 10.00<br>( 0.80) | ( )         | ±0.2<br>( ) | 10.00<br>( )    | 9.61<br>( 0.80)  | ( )  | 0.39<br>( - ) |
| ‘15년 | 12.50<br>( 5.88) | ( )         | ( )         | 12.50<br>( )    | 12.39<br>( 5.88) | ( )  | 0.11<br>(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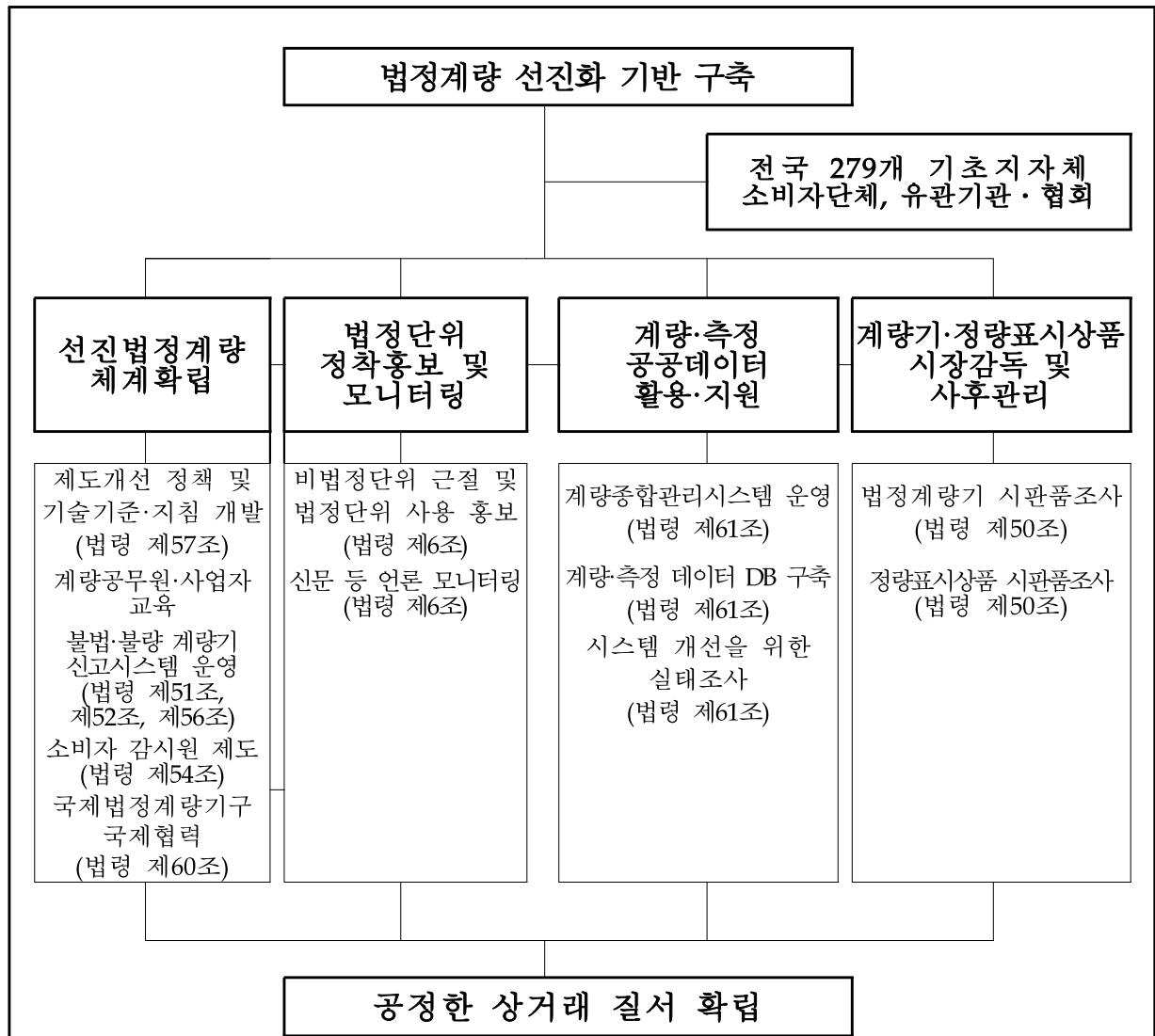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6년도 재정자율평가(단위사업명 : 신산업표준개발)
  - 기획재정부 : 보통(71)
- '09년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 계량단위 전환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언론홍보비를 '08년 수준으로 증액하는 등 언론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법정단위)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95%)에서 국제단위계를 공식 채택
  - 유럽연합은 2010년부터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미터법 사용을 의무화
  - 중국의 경우 1985년 미터법 도입하여 정착에 성공, 일본은 계량법('51 제정) 개정하여 국제단위계 사용이 성공적 정착
  - 미국은 1866년 미터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야아드·파운드법 병기 사용 등 전환이 매우 느리나 최근 미터법으로 단일화 추진
- (법정계량기관리) 주요 선진국은 법정관리 대상 계량기를 정하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형식승인, 초기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 등을 실시
  - 독일 : 연방경제기술부 PTB, 관리 계량기 21종
  - 프랑스 : BM(계량국), 24개 지방정부에서 36종 관리
  - 영국 : 국가측정사무소 및 지방정부에서 23종 관리
  - 미국 : NIST 도량형사무국에서 31종 관리
  - 일본 : 경제산업성에서 17종 관리
  - 중국 :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에서 60종 관리
- (기술기준개발) 미, 러, 독 등 3국은 OIML(국제법정기구) 기술분과위원회(총 64개)의 64%를 간사국으로 수입하여 Rule Maker 역할 수행
  - \* 18개 기술위(TC)와 46개 분과위(SC)에서 총 118개의 기술기준 개발 중
  - \* ISO/IEC의 경우 국내 대응위원회를 운영하여 10년 만에 순위 14위로 급성장
- (종합관리시스템) 법정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등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기업 및 국민에게 일괄 서비스 제공

## (5) 사업추진절차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 6. 참고자료

- ① 국제법정계량기구
- ② 법정단위 사용 정착 현황
- ③ 계량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
- ④ 소비자감시원 운영

## 참고 1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 □ OIML MAA(Mutual Acceptance Arrangement)

- 중복 시험으로 인한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회원국간 계량기 형식승인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한 인증
- 비자동저울 20개국, 수도미터 7개국, 로드셀 18개국이 참여
- \* 우리원은 비자동저울에 대한 인증서 발행기관('16.9월)과 수용기관('11.11월) 참여하고, KTC는 시험기관으로 참여
- \* 기본 인증시스템(Basic Certificate)와 상호수용협정(MAA)의 차이점

| 구분            | OIML 인증시스템   | OIML MAA             |
|---------------|--------------|----------------------|
| 도입            | 1991년        | 2005년                |
| 관련문서          | OIML B 3     | OIML B 10            |
| 참 가 국         | OIML 회원국     | 22개국(10개 발행국과 이용국)   |
| 인증대상          | 21종(비자동저울 등) | 3종(비자동저울, 수도미터, 로드셀) |
| 최초발행          | 1993년        | 2007년                |
| 총 발행수 ('13.9) | 2990건        | 438건                 |
| 한국 발행수        | 8건           | 2건                   |

###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간 국제기구로 1855년 설립 (한국은 1978년 가입, 現 정회원)
- \* 한정회원 60개국, 준회원은 68개국

#### 〈 법정계량(Legal Metrology) 정의 〉

강제적 또는 계약적인 방법에 따라 공적규제, 무역, 보건, 안전 및 환경에 관련된 측정의 질과 신뢰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립·시행되는 법률적·행정적 및 기술적 절차의 총체

### □ OIML 주요 발간물

| 구분      | 발간물 수 | 구분         | 발간물 수 |
|---------|-------|------------|-------|
| 권고규격(R) | 103   | 기본문서(B)    | 13    |
| 권고문서(D) | 27    | 전문가 보고서(E) | 6     |
| 안내서(G)  | 16    | 세미나 보고서(S) | 5     |
| 용어(V)   | 2     | 합 계        | 172   |

## 참고 2 법정단위 사용 정착 현황

### □ 추진 배경 및 경과

- 우리나라는 1961년에 계량법을 제정하여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단위로 채택하고,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금지**
  - \* 국제단위계 : 미터법이 현대화 된 것으로 m, kg 등이 기본 단위
- '07년부터 일제 잔재인 '평(坪)·돈' 단위 사용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인치, 야드, 파운드 등의 단위는 계도 중심으로 추진
  - '09년에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법령, 지자체 조례 등 제도 정비
  - '10.6월부터 언론광고 상습위반자 과태료 처분
  - '13.1월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모델하우스 등의 위반자 단속
  - '15년부터 미래의 경제주체인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및 10·20대를 겨냥한 SNS 기반 홍보 전개

#### < 추진경과 >

| 1961               | 1964                  | 1983                 | 2007                                    | 2010               | 2013                                     |
|--------------------|-----------------------|----------------------|-----------------------------------------|--------------------|------------------------------------------|
| 계량법 제정<br>(국제단위사용) | 미터법 시행<br>(‘평’ 사용 인정) | ‘평’사용 금지<br>(국제단위사용) | 홍보·계도<br>본격화<br>(평→m <sup>2</sup> 전환우선) | 과태료 부과<br>(일간지 광고) | 과태료<br>대상 확대<br>(인터넷, 현수막,<br>부동산 업소 광고) |

### □ 법정단위(m<sup>2</sup>) 정착 현황

- 주요 언론매체(기사, 광고)의 m<sup>2</sup> 정착율은 '10년 대비 15.0% 증가
  - TV뉴스와 경제신문 기사의 m<sup>2</sup> 정착율이 높으나, 일간신문의 기사 및 신문광고는 낮은 경향

(단위 : %)

| 연도   | TV<br>방송 | 신문(기사) |      | 신문<br>광고 | 평균   |
|------|----------|--------|------|----------|------|
|      |          | 일간지    | 경제지  |          |      |
| 2015 | 93.6     | 78.4   | 88.2 | 84.8     | 85.7 |
| 2014 | 91.4     | 71.2   | 87.0 | 87.9     | 85.0 |
| 2013 | 92.9     | 69.9   | 85.7 | 82.4     | 82.9 |
| 2012 | 92.1     | 69.4   | 84.4 | 82.9     | 8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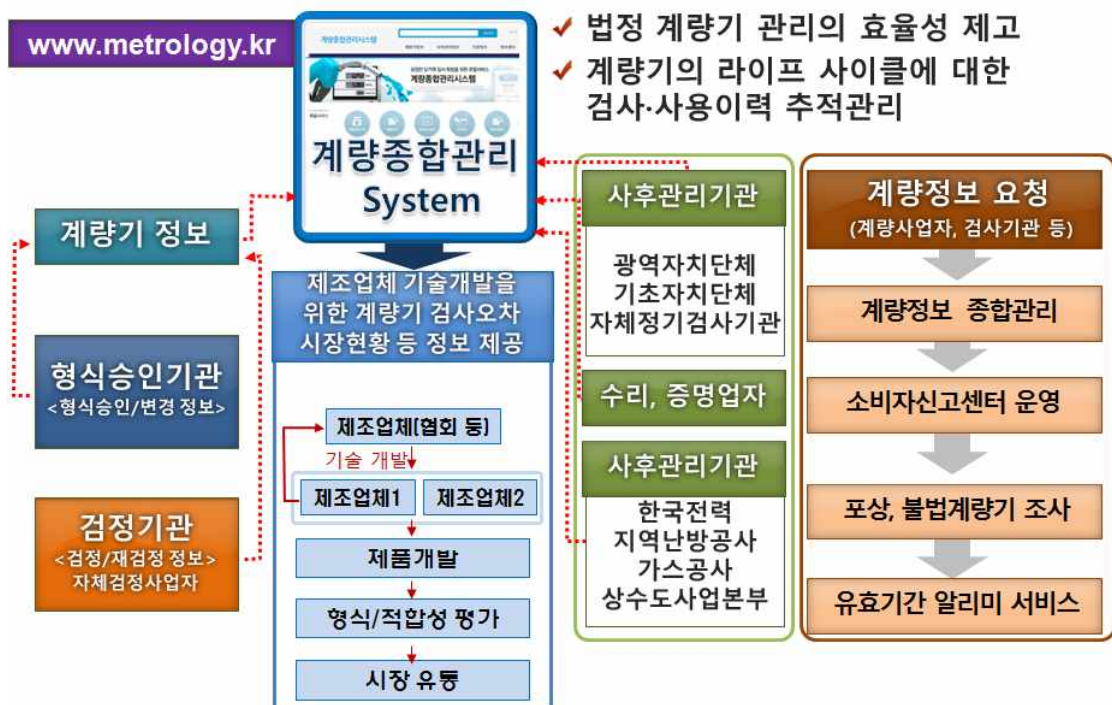
\* 조사대상 : TV(KBS, MBC, SBS, mbn, YTN),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15종

- 전국 6개 광역시의 7,691개 부동산중개사무소 조사결과 “m<sup>2</sup>” 표기는 64.1 %, 비법정단위 표기는 35.9 %였음('15.6월)
  - \* 1차, 2차 계도 후, '15.10월 부동산중개사무소 실태조사결과 “m<sup>2</sup>” 표기는 78.2%로 14.1 % 증가함

### 참고 3

### 계량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

- 시도 지자체·인증기관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계량기 시험·검사·단속 정보의 통합관리 및 대국민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계량기의 검사·사용이력 추적·관리를 위한 데이터 DB 추진
    - 기관별 비전산 형태의 계량 데이터 및 신규생성 데이터 중 주유기 등 생활 활용이 높은 계량기 위주로 DB화
  - 계량기 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추진
    -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사용자에게 온라인(SMS, e-mail)이나 오프라인(우편)으로 검사정보의 사전 알림 서비스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운영
    - 계량기 변조자, 변조 계량기 사용자, 제조결함 계량기에 대한 온라인 신고센터의 구축 및 운영
    - 위반사업자 및 피해사례 언론보도 정보 대국민 서비스



## 참고 4 소비자 감시원 운영

### □ 소비자감시원 운영 현황

- 소비자에 의한 계량분야 시장감시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하여 2015년 시범운영 실시

\* 감시원 60명이 부동산중개업소 비법정단위 사용 감시와 합동점검 지원



#### 주요업무

- ① 비법정단위 사용여부 확인
- ②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 ③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 ④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 지원

#### 감시계획

- ① 부동산중개사무소 비법정단위 사용 감시
- ② 전통/수산물/약재 시장 저울 사용 감시
- ③ 합동특별점검 업무 보조 등

### □ '17년 소비자감시원 운영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 운영 등 계량기 자율관리 확대에 따라 저울 정기검사 여부 확인 감시활동 강화 필요

- 소비자감시원 인력 확대

- 현행 광역도시 중심(5개 지역)에서 위성도시까지 소비자감시원 활동지역을 확대하여 운영(150명)

- 소비자감시원 감시 직무 확대

- 비법정단위 사용 감시 중심의 시범운영에 이어 주요 저울에 대한 재검정, 정기검사 수검여부 감시활동 본격 운영
  - \* 전통시장, 전문시장(한약, 수산물), 대형마트, 정육점 저울의 감시
- 계량측정기술 고도화사업으로 개발한 저울 사후관리를 위하여 NFC 태그 부착 및 정보 등록

- 소비자감시원 교육 강화

- 소비자감시원의 감시역량을 높이고, 감시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상·하반기로 개최

## 국가표준활성화사업 (계속)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국가표준활성화사업 | 4,157 | 4,287        | 3,919        | △368         | △8.6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3 - 309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강병구), 표준정책과장(박주승, 043-870-5340), 연구관(노학엽, 043-870-5346)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출연)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 2. 사업목적

- WTO·FTA 체계에 따른 국제표준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가간 상호협력 확대 등을 위해 국가표준과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추진
-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시장 다변화 등 新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 수요중심의 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운영
- 유망신산업 견인을 위한 융·복합분야 표준인프라 조성
- 초·중·고·대학생, 일반소비자, 기업인을 대상으로 단계별 표준 교육을 실시하여 표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선점 기반 조성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1,187백만원

- 표준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주요 이슈별 표준화 정책개발, 전략 분야 표준화 로드맵 개발 등 표준정책연구
- KS 제·개정·폐지, 표준서식 및 유사표준 중복성 검토 등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등
  - 산출내역 :
    - \* 연구용역 : 18과제×40백만원 = 720백만원
    - \* 회의수당 : 560회×0.8백만원(1회 평균수당) = 450백만원
    - \* 인쇄비 등 기타비용 : 17백만원

②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1,692백만원

- 분야별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시장수요에 따른 신속한 국가표준 개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 산출내역 : 52개 기관×32.3백만원 = 1,692백만원

③ 표준화실태조사 : 180백만원

- 「산업표준화법」 개정(시행 '15.7월)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 60여개의 분야별 표준개발협력기관 체계를 활용하여 산업분야별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실태 및 신규 표준화 수요를 신속 파악·지원
  - 산출내역 : 3,000업체×6만원=180백만원

④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600백만원

- 불량 KS제품 시중유통근절 및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해 KS인증제품 중 품질취약 품목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표시제거,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 수행
  - 산출내역 : 400업체×1.5백만원=600백만원

⑤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 30백만원

- 표준화에 기여한 단체·기업·유공자 등을 포상 등을 위한 세계 표준의 날 행사 개최

- 산출내역 : 행사비 20백만원 + 홍보비 10백만원

⑥ 국제표준올림피아드 : 80백만원

- 청소년 표준화 과제 해결 경진대회인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운영

- 산출내역 :

- \* 대회 운영비 : 과제개발비 및 대회운영비 = 50백만원

- \* 대회장 임차 : 대회장 임차 및 숙박비 등 = 30백만원

⑦ 초등학교 표준화교육 : 150백만원

- 표준화 연구학교 지정 및 찾아가는 표준 교육

- 산출내역 :

- \* 연구학교 지정운영 : 5개교×100명×10만원 = 50백만원

- \* 찾아가는 표준교육 : 50개교×100명×1만원 = 50백만원

- \* 교사연수 : 20백만원×1회 = 20백만원

- \* 교재개발 등 : 30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부처 기술기준과 국가표준(KS)의 이원화 등에 따른 기업의 중복 인증 부담 해소를 위한 강제인증기준과 중복된 국가표준 정비 시급
- 최근 산업환경변화에 따른 국가표준 개발·정비 수요 증가
  - 국제표준 추세 및 新산업분야 표준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표준 개발정비 확대로, 전문가 회의 및 관련 표준연구개발 예산 필요
- 불량KS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방지를 위한 시장 감시 강화
  - 최근 사회적 안전 이슈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해 시판품 조사 확대 시급
- 범국민 대상 표준교육 실시 및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하여 차세대 표준전문가 양성을 통한 국제시장 선점 기반 조성

< 세 부 내 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b>□ 사업명</b>          | <b>4,441</b> | <b>4,287</b>                                                                          | <b>3,919</b>                                                                          | <b>△ 368</b> | <b>△ 8.6</b> |
|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br>정비 | 2125         | 1,545<br>연구용역(26개×40백만)+<br>회의개최(610회×8명×0.1<br>백만)+인쇄비 등(17백만)                       | 1,187<br>연구용역(18개×40백만)+회의<br>개최(560회×8명×0.1백만)+인<br>쇄비 등(17백만)                       | △ 358        | △ 23.2       |
|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1840         | 1,681<br>(52개 기관×32.3백만)                                                              | 1,682<br>(52개 기관×32.3백만)                                                              | 11           | 0.7          |
| ▪ 표준화실태조사             | -            | 230<br>(3,000업체×6만)+기초<br>조사연구(50백만)                                                  | 180<br>(3,000업체×6만)                                                                   | △ 50         | △ 21.7       |
|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192          | 501<br>(334업체×1회×1.5백만)                                                               | 600<br>(400업체×1회×1.5백만)                                                               | 99           | 19.8         |
|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 54           | 50<br>임차비(5백만)<br>+행사비(35백만)+홍보비<br>(10백만)                                            | 30<br>행사비(20백만)+홍보비(10백만)                                                             | △ 20         | △ 40         |
| ▪ 청소년표준올림피아드          | 100          | 100<br>운영비(30백만)+<br>과제개발(30백만)+<br>심사료(10백만)<br>+임차비(30백만)                           | 80<br>운영비(30백만)+<br>과제개발(20백만)+<br>심사료(10백만)<br>+임차비(20백만)                            | △ 20         | △ 20         |
| ▪ 초등학교 표준화교육          | 130          | 180<br>연구학교<br>(5개교×100명×10만)<br>+찾아가는표준교육<br>(50개교×100명×1만)<br>+교재개발 및<br>교사연수(80백만) | 150<br>연구학교<br>(5개교×100명×10만)+<br>찾아가는표준교육<br>(50개교×100명×1만)+<br>교재개발 및<br>교사연수(50백만) | △ 30         | △ 16.7       |
| <b>□ 비목(합계)</b>       | <b>4,441</b> | <b>4,287</b>                                                                          | <b>3,919</b>                                                                          | <b>△ 368</b> | <b>△ 8.6</b> |
| ○ 일반수용비(210-01)       | 85           | 264                                                                                   | 110                                                                                   | △ 154        | △ 58.3       |
| ○ 시험연구비(210-13)       | 538          | 895                                                                                   | 967                                                                                   | 72           | 8.0          |
| ○ 일반용역비(210-14)       | -            | 100                                                                                   | 180                                                                                   | 80           | 80.0         |
| ○ 국내여비(220-01)        | 17           | 17                                                                                    | 16                                                                                    | △ 1          | △ 5.9        |
| ○ 국외업무여비(220-02)      | 12           | 10                                                                                    | 9                                                                                     | △ 1          | △ 10.0       |
| ○ 사업추진비(240-01)       | 50           | 50                                                                                    | 45                                                                                    | △ 5          | △ 10.0       |
| ○ 일반연구비(260-01)       | 1,091        | 760                                                                                   | 720                                                                                   | △ 40         | △ 5.3        |
| ○ 정책연구비(260-02)       | 578          | 280                                                                                   | -                                                                                     | -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 230          | -                                                                                     | -                                                                                     | -            | -            |
| ○ 사업출연금(350-02)       | 1,840        | 1,911                                                                                 | 1,872                                                                                 | △ 39         | △ 2.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WTO체제하의 개방화시대에 따른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 추세를 반영한 국가표준 개발 및 정비 확대
-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 新산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상향식 표준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도입 확대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서 신성장산업 분야 시스템의 전략적 표준화 추진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42.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15.45</li> <li>▪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운영 : 16.81</li> <li>▪ 표준화실태조사 : 2.3</li> <li>▪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5.01</li> <li>▪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 0.5</li> <li>▪ 표준화교육 : 2.8</li> </ul> |
| '17 | 39.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11.87</li> <li>▪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운영 : 16.92</li> <li>▪ 표준화실태조사 : 1.8</li> <li>▪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6</li> <li>▪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 0.3</li> <li>▪ 표준화교육 : 2.3</li> </ul>    |
| '18 | 38.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10.07</li> <li>▪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운영 : 18.71</li> <li>▪ 표준화실태조사 : 2.2</li> <li>▪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4.3</li> <li>▪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 0.5</li> <li>▪ 표준화교육 : 2.4</li> </ul>  |
| '19 | 33.3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7.36</li> <li>▪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운영 : 17.5</li> <li>▪ 표준화실태조사 : 2.1</li> <li>▪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3.8</li> <li>▪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 0.5</li> <li>▪ 표준화교육 : 2.1</li> </ul>    |
| '20 | 33.3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7.36</li> <li>▪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운영 : 17.5</li> <li>▪ 표준화실태조사 : 2.1</li> <li>▪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3.8</li> <li>▪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 0.5</li> <li>▪ 표준화교육 : 2.1</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 국가표준기본법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제22조(제품인증)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 산업표준화법

- 제3조(산업표준화 기본계획등)
-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 제6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협약)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 추진경위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주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확정)
- 2006.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중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

\*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국가표준·기술기준 제정시스템 혁신,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 도입), 민간표준활성화(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 생산자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촉진, 표준전문가인력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 2007.5 산업표준화법 개정(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민간표준 참여확대 등에 대한 산업표준화법 명문화

- 2007.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7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08.7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8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09.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0.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 신성장 원천기술 표준개발 확대, 원천기술 국제표준 선점, R&D-표준화 연계 활성화 등
  - \*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 기업 친화적 인증제도 개선, 사용자 편의형 표준 지원, 측정표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선도 등
  - \*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 생활 밀착형·서비스 표준화, 사회안전·보안 표준화, 공공·행정표준화 등
  - \*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 민간 표준참여 향상, 표준관련 부처협업 등
- 2011.4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2.3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2.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VIP보고)
  - \*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 : 부처별 인증 중복해소, 인증기간 및 비용단축 그리고 규제 합리화 추진 등
  - \* 국가 표준·인증체계 개선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개편,기술기준과 표준과의 조화 및 중복성 사전검토, 기업수요 중심의 KS인증제도 개선 등
  - \* 중장기 글로벌 표준강국 발전 방안 : 원천기술 표준·인증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국제규범 선점을 위한 표준·인증외교 강화 등
- 2013.6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4.3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6.3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수립

####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국가표준활성화 | 45.6  | 47.4  | 42.1  | 42.9  | 39.2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 68백만원 이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232백만원 불용
- '14년 : 37백만원 이월, 집행잔액 등 86백만원 불용
- '15년 : 25백만원 이월, 집행잔액 등 68백만원 불용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48.6<br>( 17.6 ) | -<br>( - )   | -<br>( - )  | 48.6<br>( 17.6 ) | 45.6<br>( 17.6 ) | 0.7<br>( - ) | 2.3<br>( - ) |
| '14년 | 50.4<br>( 20.7 ) | -<br>( - )   | -<br>( - )  | 51.1<br>( 20.7 ) | 49.8<br>( 20.7 ) | 0.4<br>( - ) | 0.9<br>( - ) |
| '15년 | 44.9<br>( 20.7 ) | 0.4<br>( - ) | 9<br>( - )  | 45.3<br>( 20.7 ) | 44.4<br>( 20.7 ) | 0.2<br>( - ) | 0.7<br>(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산업위 지적 사항) 연구개발 과제의 연도말 집행을 지양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주의)
- 연구개발 과제의 연도말 집행을 지양하고 중간 점검 강화 등 과제 관리를 강화하여 이월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조치완료)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표준개발협력기관

| 항목  | 일 본                                             | 미 국                                                         |
|-----|-------------------------------------------------|-------------------------------------------------------------|
| 제도명 | 특정표준화기관<br>(CSB: Competent Standarization Body) | 표준개발기관<br>(SDO : Standard Developing Organization)          |
| 관련법 | 공업표준화법 제12조                                     | SDOAA: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 Advancement Act 등 |
| 기관수 | 일본규격협회 등 3개 기관 지정<br>(원안작성단체 500여개)             | 250여개                                                       |
| 절차  | 심의 간소화 추진                                       | 표준심의위원회에서 SDO개발<br>표준의 절차적 하자 심의                            |

○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교육

- (ISO) 표준교육 운영 우수 대학 시상, 표준교육 개도국 대상 지역워크숍 개최, 제네바 표준교육 대학원 과정 지원

\* '14년도 발간을 목표로 표준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중

- (CEN) 유럽표준화기구(CEN-CENELEC-ESTI) 표준교육 작업반 운영

○ 미국의 표준화 교육

- 국립기술표준원(NIST)를 중심으로 표준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게 표준교육 실시

○ 중국의 표준화 교육

- 국제환경 요인에 충족하는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박사후 과정까지 표준교육을 강화

\* (초·중·고) 표준과 표준화의 개념, 표준의 종류, 표준개발 절차, 국제표준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표준화 활용 장점 등을 교육

○ 일본의 초등생 표준화 교육

- 경제산업성에서는 실생활과 사회에서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 강의

\* (초) 일상생활의 표준사례, 표준의 기능, 그림문자를 사용한 의사소통

\* (중) 표준 및 표준화의 개요, 표준화 및 비표준화 사례, 미래의 표준화

\* (고) 표준개요, 일본의 표준, 표준화 및 국제표준의 중요성, 각국의 활동

○ 영국의 청소년 표준화 교육

- 초·중·고 표준화 교육을 국가 교과과정으로 운영

\* 영국 교육부에서는 7-11세, 11-14세/14-19세를 구분하여 표준화교육 실시

- 영국표준화기구(BSI)는 '08년부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표준화 체험기회 제공

\* 학생이 표준화 주제 선정·계획, 주최측의 심사 후 우수자에게 시상

## (5) 사업추진절차

### ○ 국가표준 정비 절차



### ○ 표준개발협력기관 사업지원 절차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세계 표준의 날)

-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포상자 선정 ▶ 기념식 기획 ▶ 기념식 개최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 과제 개발 ▶ 대회 홍보 ▶ 예선대회 개최 ▶ 본선대회 개최 ▶ 결과 시상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 연구학교 지정 ▶ 교사 W/S ▶ 연구학교 운영 ▶ 중간평가 실시  
▶ 운영보고회 개최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제도 소개

## 참고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제도 소개

### □ 개요

- 국가표준 제·개정절차 중 표준개발·관리 등의 집행업무를 전문성 있는 분야별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제도

-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3항,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 \* 이양업무 : 표준개발 관리 능력이 있는 기관, 단체 등을 지정하고 국가표준 제·개정안 개발 업무 위탁



### □ 추진경과

- 「국가표준행정체계개편방안(‘08.06)」수립, 민간의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제도 운영
  - 국표원은 표준정책·기획, 심의·고시 및 국제표준화 등 주력
  - COSD 기관은 국가표준(KS)의 개발·관리, 표준 확산에 주력

### □ 지정현황

- ‘08년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을 통해 국가표준 개발·관리를 민간 전문기관에 단계적으로 이양

#### < COSD 지정 및 운영 현황 >

| 구 분        | ‘11    | ‘12    | ‘13    | ‘14    | ‘15    | ‘16    |
|------------|--------|--------|--------|--------|--------|--------|
| 국가표준 수(종)  | 23,923 | 24,129 | 20,482 | 20,336 | 20,392 | 20,521 |
| 지정 표준 수(종) | 16,978 | 16,127 | 16,022 | 15,812 | 15,794 | 15,198 |

## 신기술제품인증사업 (계속)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신기술제품인증사업 | 2,247 | 2,137        | 2,223        | 86           | 4.0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4 - 301

\* 담당자 : 적합성정책국장(진종욱), 인증산업과장(정상용, 043-870-5502), 연구관(신재혁, 043-970-5502)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95년~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인증평가, 판로확대)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신제품인증협회,<br>자원순환산업인증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 2. 사업목적

- 국내 최초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 재활용제조제품(GR) 및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제품을 발굴·평가·인증하여 국내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신속한 시장진출 확보 및 판로지원 강화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신기술인증 지원 : 1,710백만원

- NEP, NET, GR인증 420건×0.66(참석율)×5.85(단가) = 1,621백만원  
\* 인증 신규평가 및 연장평가 포함
- 인증제도(NEP,NET,GR)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 등 = 2백만원
- 연구용역비(인증제도 개선·만족도 조사 등) : 30백만원
- 인증업무 관련 법률자문, 인증평가시스템 개선 등 : 57백만원

-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 320백만원
  -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포상심사 및 촉진대회 : 160백만원
    - \* 신기술인증(NET)수여식 행사 홍보 포함
  - 인증기업 판로확대 : 160백만원
- ③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사후관리 등) : 30백만원
  - 22품목×1.4백만원(수당, 시험검사 수수료 등) = 30백만원
- ④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 163백만원
  - 제도운영(인증평가) 및 규제현황 조사분석 등 : 140백만원
  - 적합성인증제도 정책홍보 등 : 23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국내 기업이 개발한 국내 최초 기술과 동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상품화 및 시장진출을 지원, 신기술 보유기업의 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높여 고용창출 활동을 유인하는 등, 국가정책 목표(중소기업 성장희망 사다리 구축 등)와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
  - \* NEP, NET, GR 인증제품이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됨
-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감 인증제품(GR)은 미래 산업 선도 신기술로서 저탄소 성장에 일조
- 아울러 국내 신기술보유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영세화, 내수시장 의존, 생산성 저위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공공기관 의 무구매(의무구매율 20%)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음
- 기업이 융합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나 기존 제도(법, 규정\* 등)하에서는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Fast-Track(6개월내)으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 필요
  - \* 허가,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

< 세 부 내 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b>□ 사업명</b>                  | <b>2,247</b> | <b>2,137</b>                                                      | <b>2,223</b>                                                      | <b>86</b>    | <b>4.0</b> |
| ▪ 신기술인증 등 지원<br>(산출근거)        | 1,801        | 1,710<br>(430건×0.66(참석율)×<br>5.85(단가)),<br>(인증제도 홍보 및<br>연구용역 50) | 1,710<br>(420건×0.66(참석율)×<br>5.85(단가)),<br>(연구용역 및 법률지문<br>등 89)  | -            | -          |
| ▪ 인증제품 판로지원<br>및 확산<br>(산출근거) | 320          | 427<br>(신기술실용화 포상 및<br>행사: 200백만원)<br>(판로확대지원 227백만원)             | 320<br>(신기술실용화 포상 및<br>행사 등: 160백만원)<br>(인증기업 판로확대지원<br>등 160백만원) | △107         | △25.0      |
| ▪ 인증제품 신뢰성제고<br>(산출근거)        | 126          | -                                                                 | 30<br>(사후관리 등:<br>22품목×14백만원)                                     | 30           | 순증         |
| ▪ 융합신제품적합성<br>인증지원<br>(산출근거)  | -            | -                                                                 | 163<br>(제도운영 및 규제현황<br>분석 등: 140백만원)<br>(제도 정책홍보 등:<br>23백만원)     | 163          | 순증         |
| <b>□ 비목(합계)</b>               | <b>2,247</b> | <b>2,137</b>                                                      | <b>2,223</b>                                                      | <b>86</b>    | <b>4.0</b> |
| ○ 일반수용비(210-01)               | 233          | -                                                                 | 57                                                                | 57           | 순증         |
| ○ 시험연구비(210-13)               | 73           | -                                                                 | 30                                                                | 30           | 순증         |
| ○ 사업추진비(240-01)               | 12           | -                                                                 | 2                                                                 | 2            | 순증         |
| ○ 일반연구비(260-01)               | 69           | -                                                                 | 30                                                                | 30           | 순증         |
| ○ 민간경상보조(320-01)              | 1,860        | 2,137                                                             | 2,104                                                             | 33           | △15.4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내기업이 개발한 NET, NEP, GR,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품 등 우수 신기술, 재활용 등 친환경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신기술기반 기업성장 구현 및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전환을 지원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하고 인증 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 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인증 지원제도 미활용 초기 중소기업을 추가 발굴·인증 하여 우수 기술제품 사장화 방지
- 운영방식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나, 관련 협·단체 및 업체 등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공감대 형성 후 관련 법령개정 등을 통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21.3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인증지원 : 17.1</li> <li>▪ 인증제품 판로지원 : 4.27</li> </ul>                                                                 |
| '17 | 22.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인증지원 : 17.1</li> <li>▪ 인증제품 판로지원 : 3.2</li> <li>▪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 0.3</li> <li>▪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지원 : 1.63</li> </ul>    |
| '18 | 18.7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인증지원 : 14.42</li> <li>▪ 인증제품 판로지원 : 2.69</li> <li>▪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 0.28</li> <li>▪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지원 : 1.39</li> </ul> |
| '19 | 16.6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인증지원 : 12.68</li> <li>▪ 인증제품 판로지원 : 2.44</li> <li>▪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 0.26</li> <li>▪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지원 : 1.25</li> </ul> |
| '20 | 16.6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인증지원 : 12.68</li> <li>▪ 인증제품 판로지원 : 2.44</li> <li>▪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 0.26</li> <li>▪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지원 : 1.25</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신제품(NEP)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 신기술(NET)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에 대한 지원)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재활용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산업융합촉진법 제3장(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 추진경위

- '95. 5.10 : 제15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시행토록 결정
- '04.11.25 : 각부처의 유사기술 및 제품인증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통폐합(5개 부처, 7개 신기술 인증 업무를 신기술·신제품 인증으로 통합 정비)
- '06.10.30 : NEP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 '07.10.29 : 공공구매제도 주관부처를 산자부에서 기술표준원으로 변경
- '08. 2.29 :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던 IT분야 신제품(NEP)인증 업무 및 과기부의 신기술(NET)인증 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11.10.6 :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 도입

###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신기술제품인증 | 20.43 | 19.43 | 22.48 | 21.37 | 22.23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1.1억원 잔액, '14년 0.11억 잔액. '15년 0.01억원의 잔액은 경상경비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임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20.43<br>( 10.94) | ( )         | ( )         | 20.43<br>( 10.94) | 19.33<br>( 10.94) | ( )  | 1.1<br>( )  |
| '14년 | 19.43<br>( 10.94) | ( )         | ( )         | 19.43<br>( 10.94) | 19.32<br>( 10.94) | ( )  | 0.11<br>( ) |
| '15년 | 22.48<br>( 18.60) | ( )         | ( )         | 22.48<br>( 18.60) | 22.47<br>( 18.60) | ( )  | 0.01<br>(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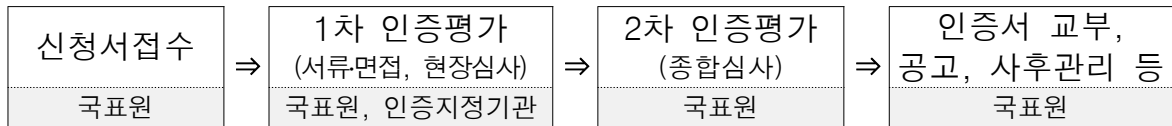
- '14년 예산 재정사업자율평가 시 보통등급(62.0점)으로 평가(기획재정부)
- '15년 산업위 지적사항 : 동 사업 비목 중 민간협회 보조사업을 제외한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예산에 대해 신제품(NEP) 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미흡하므로 NEP 인증제도의 운영방식 개선을 위하여 1억 8,200만원 감액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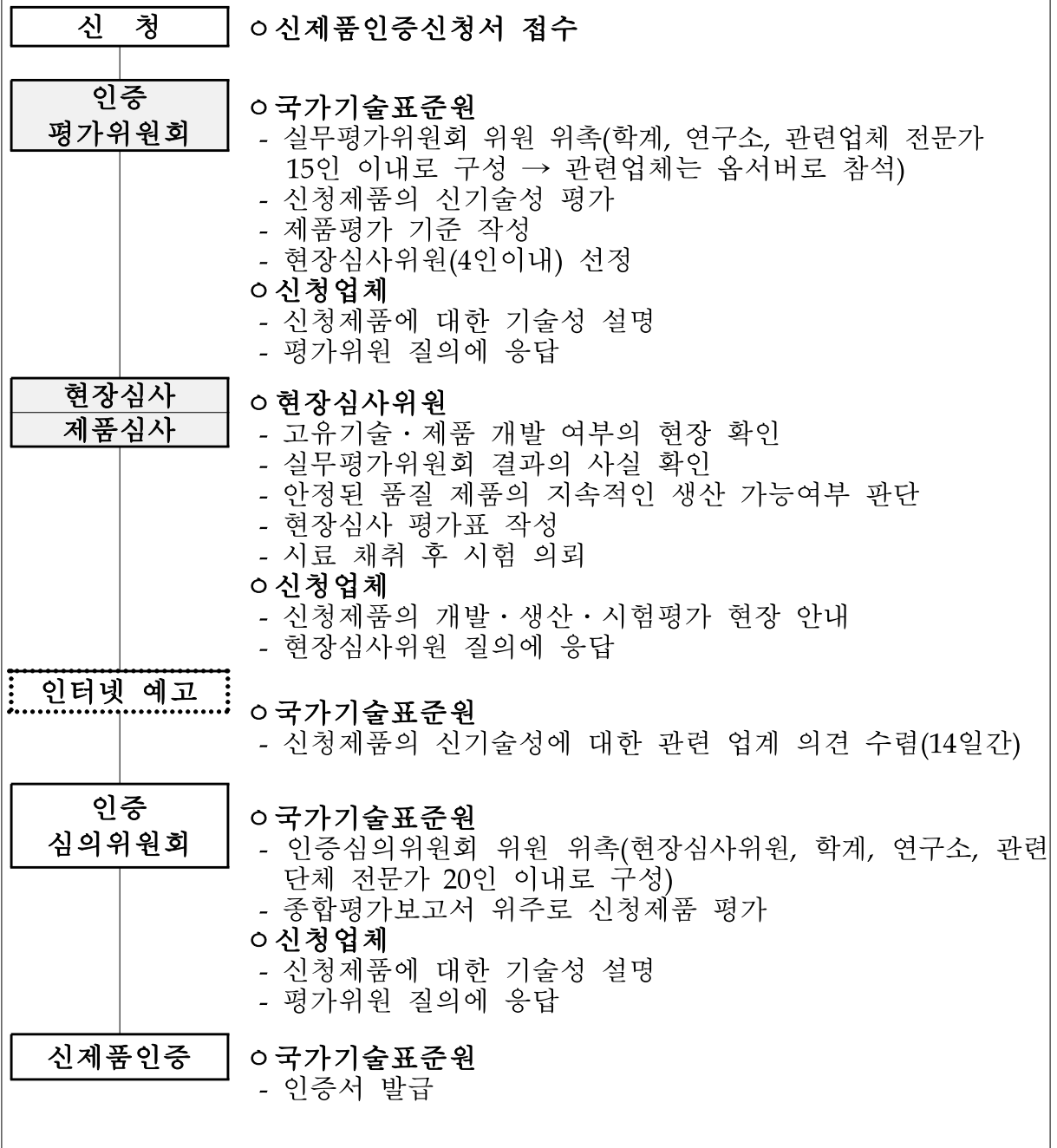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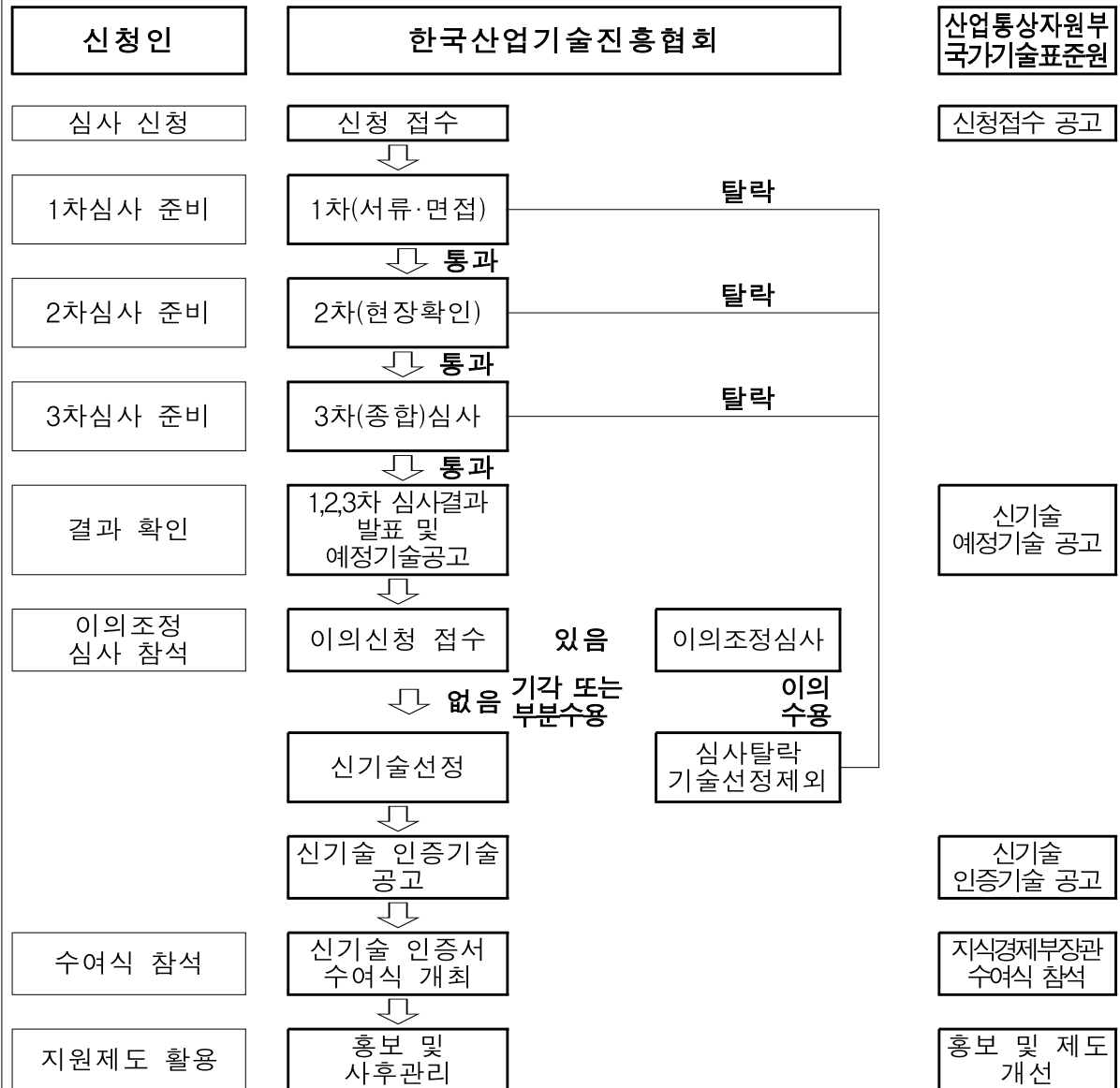
### ① GR인증 집행절차 (소요기간 : 90일)



### ② NEP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90일)



③ NET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120일)



④ 인증제품 판로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8조



⑤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6개월)

|                   |                                                                                                                |
|-------------------|----------------------------------------------------------------------------------------------------------------|
| 신 청               | ○ 제조자등(신청인)→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br>- 신청서 및 별첨 자료 제출                                                                   |
| 접수사실 통보           | ○ 접수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br>- 신청서 사본 및 별첨 자료 송부<br>- 접수 후 5일 이내                                                     |
| 심사대상 여부 통보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신청인<br>- 심사대상 여부와 예정기간 등 통보<br>-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적합성 인증 심사         | ○ 인증 관련 사항 협의                                                                                                  |
| 협의체 구성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체 구성<br>-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br>- 신청 후 30일 이내                                                   |
| 협의체 회의 및<br>안전 의결 | ○ 적합성인증 협의체 회의 및 안전 의결<br>- 적합성 인증기준<br>- 적합성인증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br>- 적합성 인증 시험·검사기관<br>- 그 밖에 적합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결과 통보             | ○ 적합성인증 협의체 회의 결과 통보<br>- 협의체→신청인, 시험·검사기관, 관련 기관<br>- 신청 후 90일 이내                                             |
| 시험·검사 및<br>결과 통보  | ○ 제조자등→시험·검사기관<br>-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및 수수료 납부<br>○ 시험·검사기관→중앙행정기관<br>- 시험·검사 결과통보                              |
| 인증서 발급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신청인<br>- 6개월 이내에 적합성 인증 결과서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br>-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 심사기준 등의<br>고시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br>- 적합성 인증 후 10일 이내 홈페이지 또는 관보 게재<br>- 의견수렴 후 심사기준 등을 관보고시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나인 경우에 대한 절차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신기술제품인증 현황,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개요

## 참고 1 신기술제품인증 현황

### 1. NEP 인증

<신제품(NEP) 인증 현황>

| 구 분<br>연 도 | 전년 이월 | 신청  | 소계(A) | 인증(B) | 부적합<br>및 반려 | 차년<br>이월(C) | 인증률<br>(%)* |
|------------|-------|-----|-------|-------|-------------|-------------|-------------|
| 2013       | 29    | 171 | 200   | 54    | 119         | 27          | 31.2        |
| 2014       | 27    | 166 | 193   | 28    | 121         | 44          | 18.8        |
| 2015       | 44    | 227 | 271   | 61    | 210         | 40          | 26.4        |

\* 인증률 :  $B/(A-C)$

< NEP인증제품 공공구매 매출현황 >

| 구 분<br>연 도 | NEP인증제품 구매액(A)<br>(억원) | NEP인증 유효품목수(B) | 평균구매액*<br>(억원) |
|------------|------------------------|----------------|----------------|
| 2013       | 2,447                  | 176            | 13.9           |
| 2014       | 2,124                  | 144            | 14.8           |
| 2015       | 4,423                  | 134            | 15.6           |

\* 평균구매액 :  $A/B$

### 2. NET 인증

<신기술(NET) 인증 현황>

| 구 분<br>연 도 | 신청(A) | 인증(B) | 부적합<br>및 반려 | 진행(C) | 인증률(%) |
|------------|-------|-------|-------------|-------|--------|
| 2013       | 376   | 103   | 273         | 0     | 27.4   |
| 2014       | 479   | 111   | 368         | 0     | 23.1   |
| 2015       | 427   | 72    | 355         | 0     | 16.8   |

\* 인증률 :  $B/(A-C)$

### 3. GR 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현황>

| 구 분<br>연 도 | 전년<br>이월 | 신청  | 소계(A) | 인증(B) | 부적합 | 반려 | 차년<br>이월(C) | 인증률<br>(%)* |
|------------|----------|-----|-------|-------|-----|----|-------------|-------------|
| 2013       | 27       | 107 | 134   | 66    | 12  | 14 | 42          | 71.7        |
| 2014       | 42       | 109 | 151   | 86    | 15  | 14 | 36          | 74.7        |
| 2015       | 36       | 92  | 128   | 88    | 8   | 7  | 25          | 85.4        |

\* 인증률 :  $B/(A-C)$

### 1. 사업추진 방식

- 기업이 융합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나 기존 제도(법, 규정 등)하에서는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Fast-Track(6개월내)으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

### 2. 시행주체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3. 사업집행 절차

- (신청) 적합성 인증 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하되, 소관부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문 요청
- (심사) 적합성인증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준 등을 마련(최대 90일 이내)한 후, 새로운 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실시(60일 이내)
  - \* 관계부처 공무원, 인증·시험기관 전문가, 관련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
- (인증) 안정성 등에 문제가 없고, 새로운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 인증 처리(필요시, 유효기간 등 조건부 인증 가능)
  -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한차례만 30일까지 연장 가능

### 4. 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

- (필요성) 융합 신제품의 경우 기존 인증체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多,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시 시장출시가 곤란
  - \* 트럭지게차(3년 9개월 소요), 위그선(2년 1개월 소요) 등
-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증체계 마련 필요

○ (주요성과)

<산업용 융합안전모>

|       |                                                                                                                                                                                                 |  |                                                                                    |
|-------|-------------------------------------------------------------------------------------------------------------------------------------------------------------------------------------------------|--|------------------------------------------------------------------------------------|
| 제품명   | 통신조명센서 등이 융합된 산업용 융합안전모                                                                                                                                                                         |  |  |
| 제조사   | (주)KMW                                                                                                                                                                                          |  |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산업통상자원부                                                                                                                                                                                 |  |                                                                                    |
| 인·허가명 | KC인증<br>(보호구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  |                                                                                    |
| 제품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모에 무선통신, 조명, 센서 등이 융합되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이 가능한 융합 안전모</li> </ul>                                                                                       |  |                                                                                    |
| 애로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멍, 무게규정(보호구 의무안전고시)에 의해 안전모 등급인증을 받을 수 없어 현장사용 불가</li> </ul>                                                                                          |  |                                                                                    |
| 인증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 제안한 기준에 의거 시험·검사(안전보건공단)에 합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적합성인증서 발급('14.10.10.)</li> </ul>                                                                     |  |                                                                                    |
| 소요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관련법*에 명시된 인증 기간은 6개월이나, 총 2개월 22일**로 단축</u></li> <li>*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li> <li>** 총 인증 소요기간: '14.7.21. ~ '14.10.10.</li> </ul> |  |                                                                                    |

<LED안전유도블록>

|     |            |  |
|-----|------------|--|
| 제품명 | LED안전 유도블록 |  |
|-----|------------|--|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사업 (계속)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사업 | 1,972 | 4,059        | 4,380        | 321          | 7.9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3700 - 3736 - 301

\* 담당자 : 기술규제대응국장(안병화), 기술규제정책과장(정석진, 043-870-5520), 연구관(안광희, 043-870-5522)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 총사업비   | 해 당 없 음         |
| 사업규모   | 해 당 없 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 2. 사업목적

- 무역기술장벽(TBT)인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규제의 분석·전파, 국제대응·협상 및 정보제공 지원
- FTA대상국과 전략적인 TBT 협상 방안과 효과적 이행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판로 지원 및 애로해소 추진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해외 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 TBT 통보문, 주요 기술규제 번역·분석 : 2,152백만원

\* WTO TBT 통보문 요약문 번역 및 현황조사 : 2,170건 × 70,000원/건 = 152백만원

\* 주요 기술규제 조사 및 규제원문 심층분석 : 400건 × 5백만원/건 = 2,000백만원

- TBT 미 통보문 주요 기술규제 번역심층분석 : 500백만원

\* 100건 × 5백만원=500백만원

- WTO/TBT 대응전략 및 방안마련 연구 지원 : 180백만원
  - \* 해외기술규제 조사·전파 : 4건 × 45백만원 = 180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을 위한 대응회의체 운영 : 28백만원

## ② 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 WTO TBT 위원회 및 양자협력 회의 참가 : 210백만원
  - \* 30건× 2명×3.5백만원= 210백만원
- TBT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가그룹 운영 및 대응 회의 개최 지원 : 93백만원
  - \* 행사 5회×10백만원, 수당 20회×1백만원, 번역비 등 기타 23
- TBT 대응 관련 국제법률 자문 : 40백만원
  - \* 4건× 10백만원 =40백만원
- TBT 활용가이드 제작·배포: 40백만원
  - \* 4건× 10백만원 =40백만원
-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 12백만원

## ③ FTA TBT 협상·이행 강화

- FTA TBT 제도분석 : 100백만원
  - \* 2건× 50백만원=100백만원
- FTA TBT 기술규정 분석 : 150백만원
  - \* 3건 × 50백만원=150백만원
- FTA TBT·MRA 공동연구 : 145백만원
  - \* 2건×72.5백만원=145백만원

## ④ 한·중 FTA TBT 종합지원

- 기술표준분석실 운영 : 290백만원
- TBT 종합지원 포탈 구축 : 80백만원
- FTA TBT 애로해소 : 100백만원
- FTA TBT 교육실시 : 100백만원
- 한·중 FTA TBT 공동사무국 설치 : 150백만원
- 한·중 FTA TBT 대응회의체 운영 : 10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세계 각국은 안전·건강·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제를 통해 무역 기술장벽(TBT)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 \* WTO TBT 통보문 : ('06) 875건 → ('10) 1,874건 → ('13) 2,142건 → ('14) 2,239건
- 최근에는 기술규제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출전략지역인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국가로까지 다변화 및 강화되는 추세임
- 선진국의 기술규제는 복잡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개도국의 기술 규제는 투명성이 부족으로 수출기업에 돌발적 애로 도출
  - \* 개도국의 기술규제 적용범위도 제품에서 제조공정, 운송, 회수 및 폐기 등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반으로 확대되고 사후관리도 강화되는 추세
- WTO에 통보되지 않는 기술규제는 총 규제의 40% 정도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미통보 기술규제의 발굴·분석을 통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
- 양자·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상대국의 새로운 기술규제 정보를 기업에 전달하여 사전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필요
- 주요 경제대국과의 FTA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장벽이 수출애로 주요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 FTA TBT 협상의 전략적 대응 및 시험·인증에 대한 MRA 협상등 이행업무의 효과적인 대응필요
- 중국 비관세 기술규제로 국내 수출기업의 중국 시장진입이 지연되어 FTA 활용촉진을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 필요
  - 중국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의 부합화가 저조하며, 중국은 자국과 국제표준과의 차이점을 비공개하여 정보획득 어려움
  - 따라서, 中 기술표준 등 기술규제에 대하여 타 경쟁국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분석 제공함으로써 중국시장의 사실상 국내시장화 추구

< 세 부 내 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 1,972 | 4,059                                                                                                                          | 4,380                                                                                                                                                   | 321          | 7.9   |
| ▪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br>및 대응지원 | 1,683 | 2,350<br>(통보문번역) 150<br>/2140건×0.07<br>(심층분석) 1500<br>/300건×5<br>(미통보문) 500<br>/100건×5<br>(연구지원) 200 /4건×50                    | 2,860<br>(통보문번역) 155<br>/2215건×0.07<br>(심층분석) 2,000/400건×5<br>(미통보문) 500 /100건×5<br>(연구지원) 200 /4건×50<br>(해외기술규제대응 회의체) 5                               | 510          | 21.7  |
| ▪ TBT 대응 및<br>국제협력 지원    | 289   | 299<br>(대응회의) 127 /<br>16건×2명×4<br>(행사) 50 /5회×10<br>(수당) 20 /20회×1,<br>(법률자문) 40 /4회×10,<br>(홍보물) 40 /4건×10,<br>(번역비 등 기타) 22 | 298<br>(대응회의) 115 / 164건×2명×35<br>(행사) 50 /5회×10<br>(수당) 20 /20회×1,<br>(법률자문) 40 /4회×10,<br>(홍보물) 40 /4건×10,<br>(번역비 등 기타) 23<br>(TBT 국제협력<br>대응회의체) 10 | △1           | △0.3  |
| ▪ FTA·TBT 협상·이행 강화       | -     | 410                                                                                                                            | 395                                                                                                                                                     | △15          | △3.7  |
| - FTA TBT 협상 준비 추진       | -     | 210<br>(제도분석) 100 /2건×50<br>(기술규정분석) 110<br>/2건×55                                                                             | 250<br>(제도분석) 100 /2건×50<br>(기술규정분석) 150 /3건×50                                                                                                         | 40           |       |
| - 상호인정(MRA) 추진           | -     | 200<br>(공동연구) 200 2개국×100                                                                                                      | 145<br>(공동연구) 145 /2개국×72.5                                                                                                                             | △55          |       |
| ▪ 한·중 FTA TBT종합지원        | -     | 1,000                                                                                                                          | 827                                                                                                                                                     | △173         | △17.3 |
| -China기술표준 분석실 운영        | -     | 360                                                                                                                            | 350                                                                                                                                                     | △10          |       |
| -TBT종합지원 포털구축            | -     | 140                                                                                                                            | 80                                                                                                                                                      | △60          |       |
| -FTA TBT애로해소             | -     | 200                                                                                                                            | 147                                                                                                                                                     | △53          |       |
| -FTA TBT교육실시             | -     | 150                                                                                                                            | 100                                                                                                                                                     | △50          |       |
| -한·중 공동사무국 설치            | -     | 150                                                                                                                            | 150                                                                                                                                                     | -            |       |
| □ 비목(합계)                 | 1,972 | 4,059                                                                                                                          | 4,380                                                                                                                                                   | 321          | 7.9   |
| ○ 일반수용비(210-01)          | 114   | 272                                                                                                                            | 173                                                                                                                                                     | △99          | △36.4 |
| ○ 임차료(210-07)            | 27    | 50                                                                                                                             | 50                                                                                                                                                      | -            | -     |
| ○ 국외업무여비(220-02)         | 136   | 115                                                                                                                            | 115                                                                                                                                                     | -            | -     |
| ○ 사업추진비(240-01)          | 12    | 12                                                                                                                             | 15                                                                                                                                                      | 3            | 25    |
| ○ 업무용역비(260-01)          | 1,683 | 3,610                                                                                                                          | 595                                                                                                                                                     | △3,015       | △83.5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3,432                                                                                                                                                   | 3,432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운용 및 국제적 대응을 통한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향상에 실질적 지원
- 수출에 장애가 되는 무역기술장벽을 규제 입안 초기단계부터 입수·분석하여, 협상, 이의제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의견을 반영
  - WTO, FTA TBT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 등 TBT 업무의 국내 총괄 조정기능 및 WTO/FTA TBT 질의처 운영
  - 해외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의견을 반영한 양자 및 다자 협의 신속 추진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40.59 |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23.5<br>▪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 3.0<br>▪FTA TBT 협상·이행 강화 : 4.1<br>▪한·중 FTA TBT 종합지원 : 10.0   |
| '17 | 43.80 |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28.6<br>▪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 2.98<br>▪FTA TBT 협상·이행 강화 : 3.95<br>▪한·중 FTA TBT 종합지원 : 8.27 |
| '18 | 35.66 |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21.1<br>▪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 3.06<br>▪FTA TBT 협상·이행 강화 : 3.5<br>▪한·중 FTA TBT 종합지원 : 8     |
| '19 | 31.59 |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19.6<br>▪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 3<br>▪FTA TBT 협상·이행 강화 : 2<br>▪한·중 FTA TBT 종합지원 : 7          |
| '20 | 31.59 |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19.6<br>▪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 3<br>▪FTA TBT 협상·이행 강화 : 2<br>▪한·중 FTA TBT 종합지원 : 7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5조(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6조의2 (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WTO TBT 협정 제2.2조, 제10.1조, 제10.2조, 한·미 FTA 협정('07)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①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한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 무역장벽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 (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 ① 정부는 국가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평가 절차와 달라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이하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WTO TBT 협정문

### 제2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2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비준수에 의해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이하 생략

### 제10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정보)

10.1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국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아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10.2 그러나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 인하여 회원국이 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하는 경우, 이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각 문의처의 책임의 범위에 한하여 완전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는 잘못 송부되어진 모든 문의가 정확한 문의처로 신속히 전달되는 것을 보장한다.

## 한·미 FTA TBT 협정문

제9.6조 (투명성)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이 장의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조정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을 전달한다.

부속서 9-가(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는 다음이 주관한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미합중국의 경우, 미합중국무역대표부 또는 그 승계기관

## 한·EU FTA TBT 협정문

제 4.10 조(조정 메커니즘) 1. 양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를 지정하고, 당사자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부속서 4(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1. 대한민국의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이다.

### ○ 추진경위

- '06.6 FTA/TBT 협상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과 신설
- '07.4 OECD 보고서 관련 국무조정실 TBT 중앙사무국 운영 계획보고

- '08.9 TBT 중앙사무국 개설 후 무역기술장벽(TBT) 전담 대응(예산 신설)
- '13.12 WTO/FTA-TBT 협상·이행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 대응국 신설
- '15.5.29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기타결 FTA 국내보완대책』에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 15    | 20    | 20    | 40.59 | 43.8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도 불용액 1.46억원은 예산 절감액
- '14년도 0.26억원과 '15년도 0.27억원 불용액은 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 차액임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15<br>( )   | ( )         | ( )         | 15<br>( )       | 13.54<br>( ) | ( )  | 1.46<br>( ) |
| '14년 | 20<br>( )   | ( )         | ( )         | 20<br>( )       | 19.74<br>( ) | ( )  | 0.26<br>( ) |
| '15년 | 20<br>( )   | ( )         | ( )         | 20<br>( )       | 19.73<br>( ) | ( )  | 0.27<br>(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도 예정처 검토 의견
  -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확대·강화중인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증액 필요함
- '15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 등급(82점)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WTO 회원국의 질의처 운영실태

- ◇ 사무국을 설치한 136개 국가중 113개 국가(83%)가 단일 사무국을 운영
- | 사무국(개수) | 1개      | 2개     | 3개    | 4개    |
|---------|---------|--------|-------|-------|
| 국 가     | 113개 국가 | 13개 국가 | 6개 국가 | 4개 국가 |
- ◇ WTO/TBT 협정에 의거, 각 회원국은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개정시 관련 정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타 회원국의 통보내용을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보급해야 함

##### ○ EU

- EU 공동위 산업국에 TBT 지원팀을 운영하여 EU 회원국 27개국에 대한 의견조정 총괄기구 및 대외창구 역할 수행
- FTA 체결국간의 정보제공 및 질의회신 등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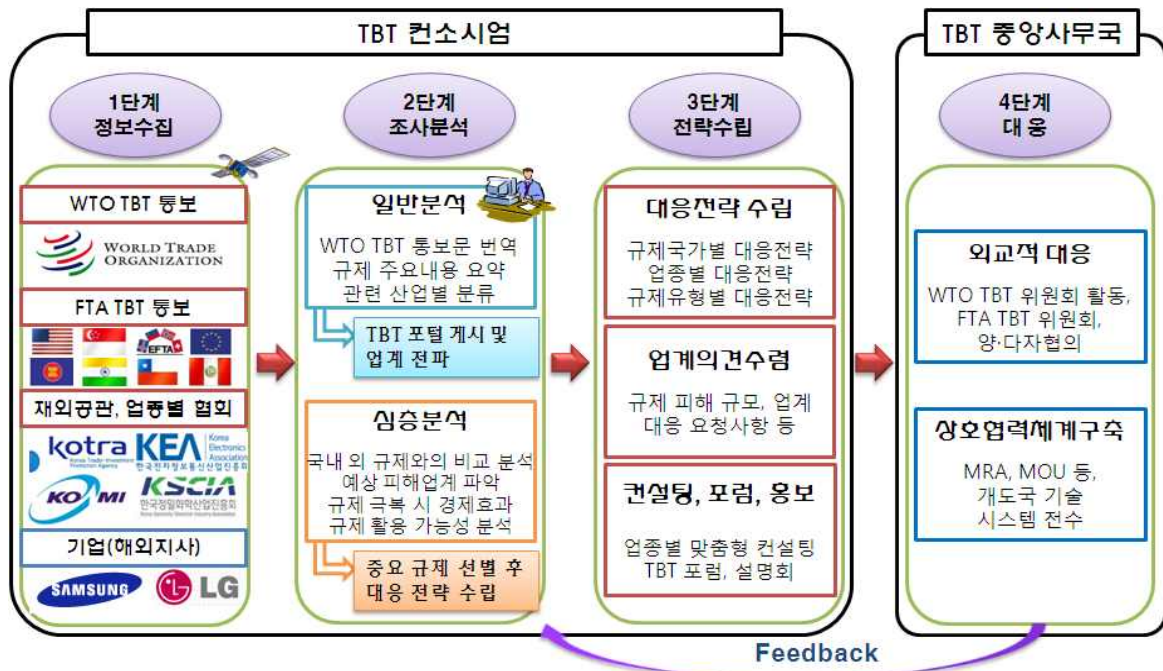
##### ○ 미국

- 미국 상무부 소속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에 국립표준인증정보센터(NCSCI; National Center for Standards and Certification Information)를 설치하여 연방 및 51개주를 대표하는 중앙질의처 역할 수행
- 상무부 Technical Compliance Center에서 해외기술규제, 업계의 수출 애로 모니터링, 미국무역대표부(USTR)과의 협력을 통한 국익 도모

##### ○ 중국

- 국가품질감독검사총국(AQSIQ; State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Quali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Quarantine) 소속 International Inspection and Quarantine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Research Center를 설치하여 중앙질의처 역할 수행

## (5) 사업추진절차



\* TBT 위원회에서는 통보시점은 의견수렴 및 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60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을 권장함(협정문 제2.9조)

- **TBT 대응 컨소시엄 운영 :** 통보문 배포 및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전 기전자 등 3개 분야의 19개 협·단체, TBT 통보문 분석 3개 기관, 통상자문 4개 기관 및 해외거점기관(KOTRA) 등 27개 기관으로 TBT 컨소시엄으로 현재 대응활동 수행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 6. 참고자료

-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동향 및 대응전략, Mega FTA/TBT 및 다자·양자 FTA 협상 대응 및 이행

## 참고1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동향 및 대응전략

□ 세계적으로 각국이 FTA 증가에 따라, 관세로 인한 부담은 낮아지는 반면 기술규제로 인한 부담은 증가

○ 비관세장벽 중 무역기술장벽(TBT)의 증가세 상당치\*가 가장 큼

\* TBT, SPS,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을 관세율로 환산한 수치

→ **TBT 7.3%**, SPS 3.5%, 기타 2.9% (출처 : Aid for Trade at Glance 2015, OECD)

○ 세계 평균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14년 7.1%에 이르고 있으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건수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고공행진 지속



○ 외국의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수출중단 사태도 발생

\* 중복 시험인증, 국제표준과 다른 기준,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

- 우리 수출기업이 직접적으로 애로를 겪는 양자·다자 협의의 TBT 애로 안전\*이 지속적으로 증가

\* ('14년) 42건 → ('15년) 56건 → ('16년) 81건

□ 급증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인 新보호무역 기조의 확산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

○ 美 대선 이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고조되고, 中 주도의 RCEP에 무게가 실리는 등 FTA TBT 협상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 다자·양자 등의 FTA TBT 협상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무역개방 기조를 주도할 필요

## 참고2

## Mega FTA/TBT 및 다자·양자 FTA 협상 대응 및 이행

- 美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TPP 협정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참여국들이 RCEP 협상 추진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 (한·미 FTA)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TBT 분과의 재협상 대응논리 및 민·관 공조체계 마련 추진
  - (RCEP 협상) 중국과 아세안의 규제 투명성 제고 등 WTO 플러스 조항\* 반응을 위한 적극적 협상 추진
    - \* 기술규정 개발 정보 제공, 30일내 정보제공,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수용, 리콜 등 소비자제품 안전 정보 교환 및 협력 등
- (다자간 FTA 협상) RCEP과 차별화된 한중일 경제 공동체를 표방하여 기존 한·중·일 FTA TBT 협상\* 추진 가속화
  - \* △적합성평가기관 내국민대우 및 MRA 조항 재검토 필요(본 조항 합의시 일측에 유리), △ 3국간 규제 일치화 노력을 반영한 '규제조화' 관련 조항 추진
  - 한·메르코수르\* 등 신규 다자간 FTA TBT 협상 개시 대비
    -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 △'15년 교역규모 \$123억
- (양자 FTA 협상) 진행 중인 한·에콰도르, 한·이스라엘 등 양자 FTA TBT 협상 및 한·멕시코 FTA TBT협상 재개 대응
  - 각 지역내 산업, 기술규제 제도 등 차이에 기반한 차별화된 협상 수행
    - \* 교역규모('15): 에콰도르 (9억\$), 이스라엘 (20억\$), 멕시코 (140억\$)
    - \*\* 한·멕시코 FTA 일자: '08.6月, 2차 협상 중단 후 '17. 2月 FTA 예비협정의 예정
- (기체결 FTA TBT특대 대응) 신설·강화 규제 도입, 인증·행정절차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전략적 대응

- (인도) 시험인증애로 해소 추진 협정문 이행 및 개선 작업반 운영('17.1~10, 3회)
- (EFTA) 의약품·의료기기·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 TBT작업반(1/4분기)
- (칠레) 전기/전자 제품 인증애로 개선을 위해 한-칠레 SRM 추진(1/4분기)
- (EU) 위험평가·시장사후관리·무선기기등 협력 규제대화체(2/4분기)

## 기술규제개혁 선진화 체계 구축사업(계속, 국정과제)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기술규제개혁 선진화 체계 구축사업 | 1,119 | 1,119        | 1,172        | 53           | 4.7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4 - 3700 - 3736 - 302

\* 담당자: 기술규제대응국장(안병화), 기술규제조정과장(오광해, 043-870-5550), 사무관(박재탁, 043-870-5557)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15~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 2. 사업목적

-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등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및 관련 규제 개혁 과제 발굴·조사·연구를 통한 규제 합리화 추진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기술규제 영향평가 : 840백만원

- 각 부처별 기술기준, 시험·검사·인증 관련 법령 제·개정시 기술 규제 영향평가를 위한 사업비

· 전문가 분석 : 600건 × 1.4백만원\* = 840백만원

\* 1건당 : (0.35백만원 × 3일 = 1.05백만원) + 자료구입비 0.36백만원

\* '15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건설 및 기타 기술사 : 348,021원)

## ②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 167백만원

- 기업현장의 기술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연계 등 현장중심의 기술규제 애로발굴을 위한 사업비
- 전문가 분석(120건 × 1.1백만원) + 운영비(45백만원) = 167백만원
  - \* 1건당 : 0.35백만원 × 3일 = 1.05백만원
  - \* '15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건설 및 기타 기술사 : 348,021원)

## ③ 미검토 기술규제 발굴 : 165백만원

- 각 부처에서 기술규제 제·개정시 국조실에 미통보하여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사례 및 이로 인한 기업불편 제거를 위한 사업비
- 전문가 분석 : 150건 × 1.1백만원\* = 165백만원
  - \* 1건당 : (0.35백만원 × 2일 = 0.7백만원) + 자료구입비 0.36백만원
  - \* '15 엔지니어링업체 대가 기준 임금(건설 및 기타 기술사 : 348,021원)

## □ 지원 필요성

- 범부처 기술규제개혁 컨트롤 타워 구축과 규제 총량제 실시 등 국정과제(136-4)의 원활한 수행
  - VIP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및 '규제총량제' 도입
  - '덩어리 규제의 해제', 일몰제 개혁 추진 계획, 네거티브 규제 개혁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술규제 분야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규제 영향평가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
  - 등록규제건수: ('10) 13,386건 → ('14) 14,928건
  - 각 부처 운영 기술기준(2만여종) 및 국가표준(KS, 2만여종)과의 불일치 관리 필요

## < 세 부 내 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B-A)        | %    |
| <input type="checkbox"/> 기술규제개혁 선진화<br>체계 구축 | 1,119 | 1,119                           | 1,172                           | 53           | 4.7  |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840   | 840<br>(600건×1.4백만원)            | 840<br>(600건×1.4백만원)            | -            | -    |
| ▪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 85    | 139<br>(100건×0.7백만원 +<br>69백만원) | 167<br>(100건×1.1백만원 +<br>50백만원) | 28           | 20.1 |
| ▪ 미통보 기술규제 발굴                                | 194   | 140<br>(100건×1.4백만원)            | 165<br>(600건×1.4백만원)            | 25           | 17.9 |
| <input type="checkbox"/> 기술규제개혁 선진화<br>체계 구축 | 1,119 | 1,119                           | 1,172                           | 53           | 4.7  |
| ○ 일반수용비(210-01)                              | 65    | 65                              | 50                              | △15          | △23  |
| ○ 임차료(210-02)                                | 30    | 30                              | 10                              | △20          | △67  |
| ○ 국내여비(220-01)                               | 5     | 5                               | 5                               | -            | -    |
| ○ 사업추진비(410-01)                              | 10    | 10                              | 13                              | 3            | 30   |
| ○ 연구개발비(260-01)                              | 1,009 | 1,009                           | 1,094                           | 85           | 8.4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각 부처의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시 부적절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범 부처 기술규제 영향평가 실시(국무총리훈령 제638호, '14.12.31)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13년) 291건 → (14년) 409건 → (15년) 602건
- \* 과도규제 의견제시 : (13년) 55건 → (14년) 126건 → (15년) 102건
- \* 의견 반영 : (13년) 36건 → (14년) 83건 → (15년) 53건

- 국내 기술규제, 국제표준 불일치 등과 비교하여 기준이 과도하거나 절차가 불합리하여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

- \* 기업애로 발굴 : (15년) 발굴 87건 → 제안 24건 → 개선과제 17건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11.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규제 영향평가 : 8.4</li> <li>▪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 1.39</li> <li>▪ 미통보 기술규제 발굴 : 1.4</li> </ul>  |
| '17 | 11.7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규제 영향평가 : 8.4</li> <li>▪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 1.67</li> <li>▪ 미통보 기술규제 발굴 : 1.65</li> </ul> |
| '18 | 9.8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규제 영향평가 : 7.6</li> <li>▪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 1.13</li> <li>▪ 미통보 기술규제 발굴 : 1.1</li> </ul>  |
| '19 | 8.7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규제 영향평가 : 6.5</li> <li>▪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 1.11</li> <li>▪ 미통보 기술규제 발굴 : 1.1</li> </ul>  |
| '20 | 8.7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규제 영향평가 : 6.5</li> <li>▪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 1.11</li> <li>▪ 미통보 기술규제 발굴 : 1.1</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38호)
- 추진경위
  - '12.12.1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신설
  - '12.12.1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훈령 개정
  - '13. 1. 1.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기술규제 영향평가 실시
  - '13. 2. 국정과제 '136.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에 '137-5.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기술인 증세 합리화' 포함
  - '14.12.31. 국무총리훈령 제638호로 개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기술규제 개혁<br>선진화 체계<br>구축 | -     | -     | 1,119 | 1,119 | 1,172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 : 집행 잔액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br>( )    | -<br>( )    | -<br>( )    | -<br>( )        | -<br>( )    | -<br>( ) | -<br>( )    |
| '14년 | -<br>( )    | -<br>( )    | -<br>( )    | -<br>( )        | -<br>( )    | -<br>( ) | -<br>( )    |
| '15년 | 11.2<br>( ) | -<br>( )    | -<br>( )    | 11.2<br>( )     | 11.1<br>( ) | -<br>( ) | 0.14<br>(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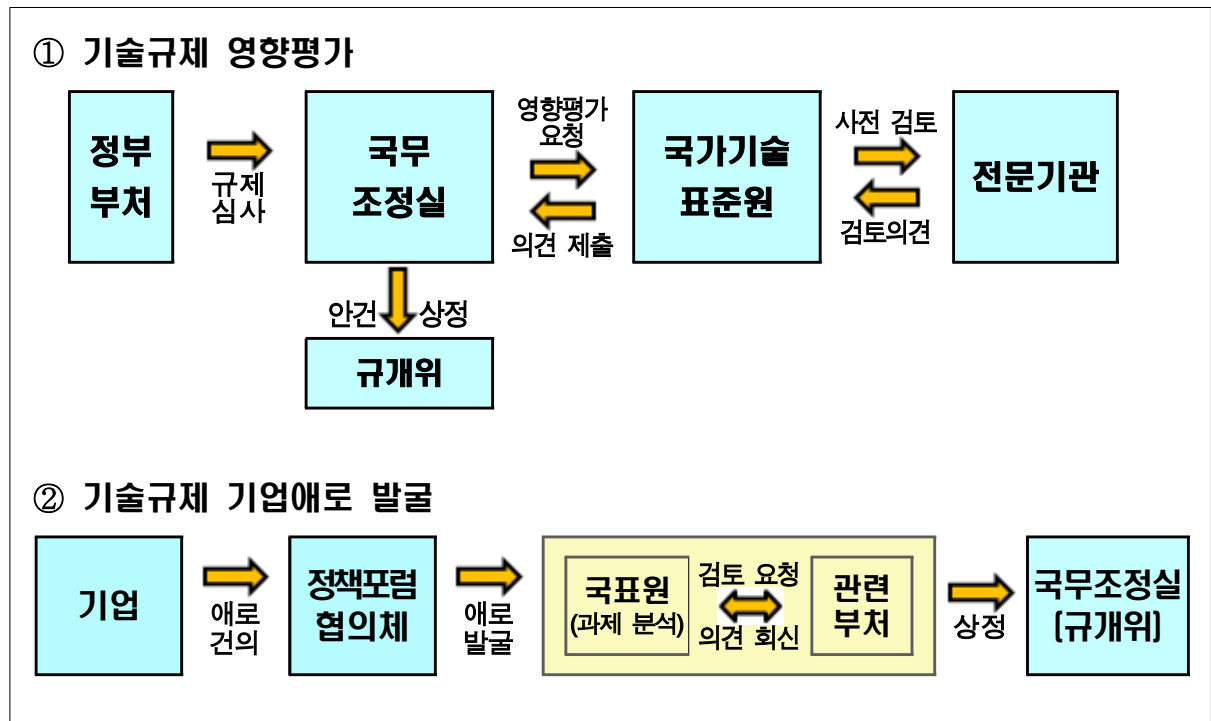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 국가기술이전촉진법(NTTAA :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법률에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에 표준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술기준의 표준 인용현황을 매년 NIST에 보고하도록 함
- [OECD] : 정책당국의 규제목적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별 국가의 국내규제에 국제표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OECD Guiding Principles for Regulatory Quality and Performance", OECD Regulatory Policy Committee, '05년)

## (5) 사업추진절차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 6. 참고자료

- 기술규제 영향평가 및 기업애로 발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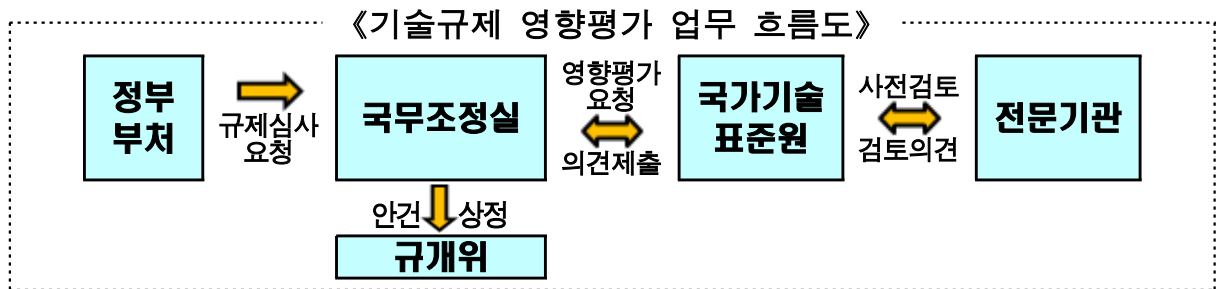
## 참고

## 기술규제 영향평가 및 기업애로 발굴 현황

### ① 기술규제 영향평가

- 각 부처에서 국조실로 의뢰한 규제심사에 대해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규제의 신설·강화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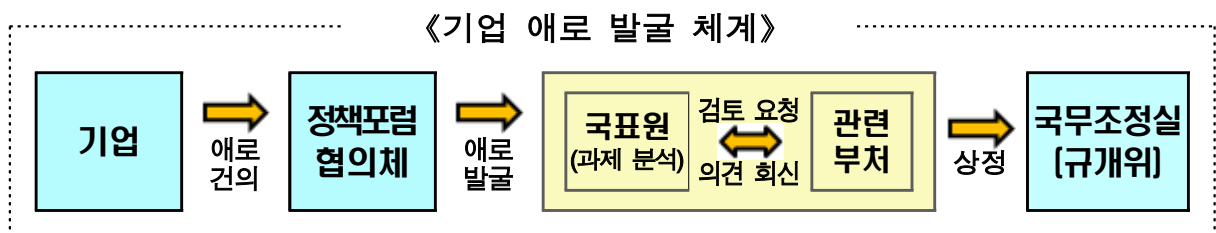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13년) 291건 → (14년) 409건 → (15년) 602건
- \* 과도규제 의견제시 : (13년) 55건 → (14년) 126건 → (15년) 102건
- \* 의견 반영 : (13년) 36건 → (14년) 83건 → (15년) 53건



### ② 기술규제 기업 애로 발굴

- 국내·외 규제와 비교하여 기준이 과도하거나 절차가 불합리하여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발굴

- \* 15년 : 규개위 보고(17건, 9개 과제 완료, 8건 진행 중)
- \* 16년 :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 보고 예정(6.22, 10건)



### ③ 위임 근거

- 국무조정실은 심사 의뢰된 규제의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사전 영향평가를 각 부처에 위임(국무총리훈령 제638호, 14.12.31)

- ① 기술규제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 ② 경쟁제한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
- ③ 중소기업 규제 : 중소기업청

##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사업 (계속, 정보화)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사업 | 631   | 755          | 590          | △ 165        | △ 21.9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40 - 301

\* 담당자 : 기술규제대응국장(안병화), 기술규제협력과장(공석, 043-870-5560), 연구관(유용재, 043-870-5562)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 2. 사업목적

- 범정부적 협업 시스템인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표준·인증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유사·중복인증 발굴 등을 통해 기업 규제해소를 지원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능개선·유지보수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대국민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행정·정책업무 수행을 지원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382백만원

- 범부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382백만원

⇒ 유형(④유지보수), 비목(관리용역비)

| 구분           | 금액            | 요율 | 유지보수비       |
|--------------|---------------|----|-------------|
| 범부처 정보시스템 개발 | 4,139,532,000 | 8% | 331,162,560 |
| 상용SW 도입      | 723,900,000   | 7% | 50,673,000  |
| 합 계          |               |    | 382,000,000 |

②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SW 구매 : 23백만원

- 업무용 SW 구매 : 23백만원

⇒ 유형(⑨기타 운영지원), 비목(자산취득비)

| 품명               | 수량   | 단가      | 금액         |
|------------------|------|---------|------------|
|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 30개  | 300,000 | 9,000,000  |
| PC용 바이러스 백신      | 500개 | 28,000  | 14,000,000 |
| 합 계(백만원단위 이하 절사) |      |         | 23,000,000 |

③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185백만원

- 원내부 정보시스템 운영 : 185백만원

⇒ 유형(⑤위탁운영), 비목(관리용역비)

| 업무활동             |                   | 등급별 투입공수(MM) |         |         |
|------------------|-------------------|--------------|---------|---------|
|                  |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투입인력             |                   | 4            | 12      | 15      |
| 노임단가             |                   | 276,160      | 221,375 | 190,787 |
| 월평균일수            |                   | 21           |         |         |
| 직접인건비합계          |                   | 139,081,845  |         |         |
| 제경비              | 직접인건비×10%         | 13,908,185   |         |         |
|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10%     | 15,299,003   |         |         |
| 부가세              |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 16,828,903   |         |         |
| 합 계(백만원단위 이하 절사) |                   | 185,000,000  |         |         |

## □ 지원 필요성

- 국정과제 수행(정부 3.0,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구축 중인 범정부적 협업시스템(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DB 현행화 등을 위한 제반 운영예산 필요

※ 행자부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정부 3.0 자율과제로 추진('14~'16, 98억원)

- 행자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구축 중인 동 시스템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자부 예규) 제7조(주관기관의 역할)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예산 확보 필요

※ '15년 2차 사업으로 추가구축한 정보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 기간 종료('16.12월)에 따라 '17년 운영비 증액소요 발생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SW 구매 등 지속적인 지출소요 발생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유지보수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원활한 대국민 행정정보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기반 마련

<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화체계 구축                | 631   | 755                    | 590                    | △165         | △21.9  |
|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산출근거)    | -     | 249<br>(유지보수 1건×249백만) | 382<br>(유지보수 1건×382백만) | 133          | 53.4   |
|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산출근거)     | 115   | 200<br>(기능개선 2건×100백만) | -                      | △200         | △100.0 |
|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산출근거) | 84    | 76<br>(SW장비구매 1건×76백만) | 23<br>(SW 구매 1건×23백만)  | △53          | △100.0 |
|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산출근거)       | 267   | 230<br>(유지보수 1건×230백만) | 185<br>(유지보수 1건×185백만) | △45          | △69.7  |
|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 (산출근거)         | 82    | -                      | -                      | -            | -      |
| ▪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산출근거)           | 83    | -                      | -                      | -            | -      |
| □ 비목(합계)                          | 631   | 755                    | 590                    | △165         | △21.9  |
| ○ 일반수용비(210-01)                   | 24    | 24                     | 23                     | △1           | △4.2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67   | 230                    | -                      | △230         | △100.0 |
| ○ 관리용역비(210-15)                   | -     | 249                    | 567                    | 318          | 127.7  |
| ○ 일반연구비(260-01)                   | 198   | 200                    | -                      | △200         | △100.0 |
| ○ 자산취득비(430-01)                   | 142   | 52                     | -                      | △52          | △100.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범정부적 협업 시스템인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표준·인증 정보제공 및 유사·중복인증 발굴 등 기업 규제해소 지원
-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한 행정·정책업무 수행 및 대국민서비스 지원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7.5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1건×249백만원) ⇒ 2.49</li> <li>▪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기능개선2건×100백만원) ⇒ 2</li> <li>▪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SW·장비구매1건×76백만원) ⇒ 0.76</li> <li>▪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1건×230백만원) ⇒ 2.3</li> </ul> |
| '17 | 5.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1건×382백만원) ⇒ 3.82</li> <li>▪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SW구매1건×23백만원) ⇒ 0.23</li> <li>▪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1건×185백만원) ⇒ 1.85</li> </ul>                                                         |
| '18 | 6.6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1건×430백만원) ⇒ 4.3</li> <li>▪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SW구매1건×23백만원) ⇒ 0.23</li> <li>▪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1건×210백만원) ⇒ 2.1</li> </ul>                                                           |
| '19 | 5.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1건×430백만원) ⇒ 4.3</li> <li>▪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SW구매1건×23백만원) ⇒ 0.23</li> <li>▪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1건×135백만원) ⇒ 1.35</li> </ul>                                                          |
| '20 | 5.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1건×430백만원) ⇒ 4.3</li> <li>▪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SW구매1건×23백만원) ⇒ 0.23</li> <li>▪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1건×135백만원) ⇒ 1.35</li> </ul>                                                          |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범정부적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이하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정보의 제공

2. 국가표준 업무의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3. 국가표준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추진경위

- '07.12월 : IT 기반의 국가표준 정보화 전략('08~'12) 수립

- '09.2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부처별 실행계획('09~'12)에 반영

- '12.7월 :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VIP 보고(국경위)

- '13.5월 : 국정과제 '정부 3.0'(행자부 주관)의 세부 사업과제로 반영
- '14.3월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VIP 지시 및 후속조치 이행
  - \*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것은 의견제시 가능토록 실시간 정보제공 할 것
- '14.5월 :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도입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조기구축 요구
- '14.6월 : 총리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중요성 언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IT기반기술표준<br>정보화체계구축 | 6.46  | 5.95  | 6.76  | 7.55  | 5.90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불용 : 조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6백만원
- '14년 불용 : 조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5백만원
- '15년 불용 : 조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5백만원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6.46<br>( ) | ( )         | ( )         | ( )             | 6.1<br>( )  | ( )  | 0.36<br>( ) |
| '14년 | 5.95<br>( ) | ( )         | ( )         | ( )             | 5.8<br>( )  | ( )  | 0.15<br>( ) |
| '15년 | 6.76<br>( ) | ( )         | ( )         | ( )             | 6.31<br>( ) | ( )  | 0.45<br>(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 2016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 지적사항                                                                                 | 답변내용                                                                                                                                                                                                                                                                                 |
|--------------------------------------------------------------------------------------|--------------------------------------------------------------------------------------------------------------------------------------------------------------------------------------------------------------------------------------------------------------------------------------|
| ○ 국가기술표준원 노후서버 교체비용을 건적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조달단가에 비해 높게 편성하였으므로, 조달단가와 차액(2,251만원)을 감액 조정 필요 | ○ 국가기술표준원 노후서버 신규구입은 조달품목을 구입하여야 하나, 10개 정보시스템의 실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부득이 조달품목보다 높은 사양의 서버 구입비용 편성<br>- 조달품목 사양은 10개 정보시스템 탑재 시 메모리와 디스크 용량이 부족<br>* 조달품목 사양 : 메모리/디스크 32GB/900GB (2개 정보시스템 탑재)<br>* 국표원 필요사양 : 메모리/디스크 64GB/2480GB (5개 정보시스템 탑재)<br>- 조달품목과 모델명은 동일하지만 서버 사양이 달라 구매비용 차이 발생 |

#### ○ 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종합점수 83.0점)

- 지적 및 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 국내 유사사례

- 표준·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 시스템과 사업목적은 동일하지만, 단편적인 표준·인증 정보로 제한됨

| 기관명        | 개 요                                                                                                                                                                     | 제공 서비스                                                                                                                                                                                                                                                                                                                                                                                                                                                                                                                                                                                                                                                                  |
|------------|-------------------------------------------------------------------------------------------------------------------------------------------------------------------------|-------------------------------------------------------------------------------------------------------------------------------------------------------------------------------------------------------------------------------------------------------------------------------------------------------------------------------------------------------------------------------------------------------------------------------------------------------------------------------------------------------------------------------------------------------------------------------------------------------------------------------------------------------------------------|
| 한국표준협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표준본부 및 국제인증본부를 중심으로 표준·인증관련 업무 운영</li> <li>• 국제표준기구(ISO)와 해외표준관련 국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표준보급 활동을 수행하며, 수집된 국제표준을 등록하여 관리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정보망(KSS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S, ISO, IEC, JIS 등의 최신 표준 현황</li> <li>- KS 및 국제인증 온라인 구매서비스</li> <li>- KS 및 해외표준 전자문서 열람서비스</li> </ul> </li> <li>• Istandard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표준 및 민간표준화 활동 내역</li> </ul> </li> <li>• KS인증지원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S인증 신청, 발급, 재발급에 관한 통합관리</li> </ul> </li> <li>• 국제인증 조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 제공</li> </ul> </li> <li>• KSA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S인증제도의 전반적인 정보</li> </ul> </li> <li>• KS 및 ISO 표준관련 교육</li> <li>• 민간(단체)표준화 활동 및 지원</li> </ul>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관련 업무 : 표준화본부를 중심으로 표준관련 업무를 운영하고 있음</li> <li>• 시험인증관련업무 :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관련 정보검색 서비스</li> <li>• 용어사전 서비스</li> <li>• 정보통신 부문의 시험인증관련 종합 서비스</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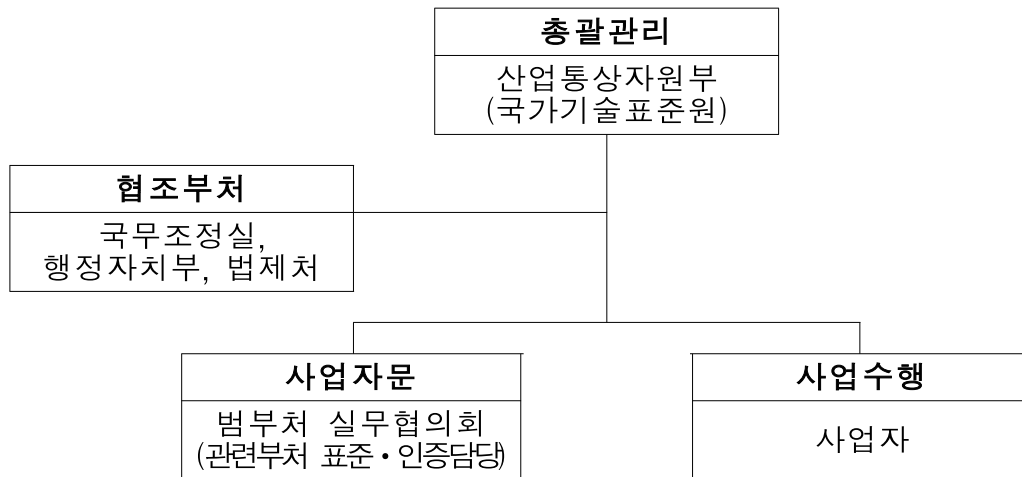
○ 외국 사례

- 각국의 표준화 관련기관에서도 홈페이지 등 정보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해당국(기관)에서 다루는 표준·인증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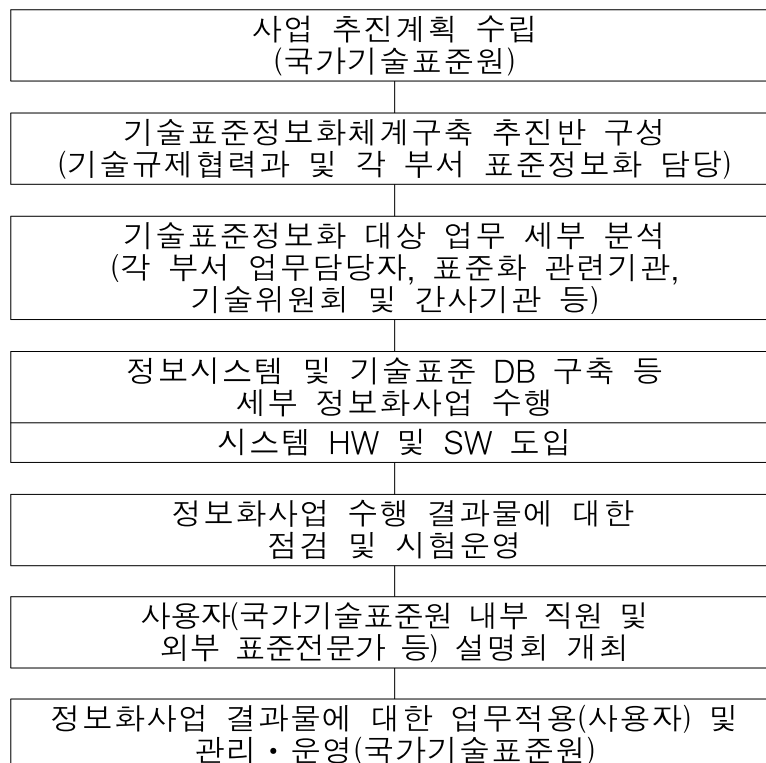
| 국가  | 기관명  | 소개                                                                                                                                               | 정보화 현황                                                                                                                                                                                                                                                                                                                                                                                                                                                                                                                                                                                                               |
|-----|------|--------------------------------------------------------------------------------------------------------------------------------------------------|----------------------------------------------------------------------------------------------------------------------------------------------------------------------------------------------------------------------------------------------------------------------------------------------------------------------------------------------------------------------------------------------------------------------------------------------------------------------------------------------------------------------------------------------------------------------------------------------------------------------|
| 미국  | IS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O는 각국의 표준화 기관에 의해 구성된 범세계적 규모의 연합으로 한 개국 당 한 개의 단체가 가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표준협회(ISO) 포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표준개발, 표준 Store 서비스</li> <li>- 포털 메인 화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표준 표시</li> </ul> </li> <li>• 국제표준협회(ISO)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관련 각종 주요 정보들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PDF로 통계 정보 제공</li> <li>• 국가별 진행 중인 표준 개발 현황 조회 가능</li> </ul>                                                                                                                                                                                                                                                                                                    |
|     | NIS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국가기술 이전 및 진흥법(NTTAA3))에 따라 국가표준(GUS)의 민간표준(VCS)부문을 활용(Use) 강화를 위해 설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BR (Standards Incorporated by Reference) 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 민간표준, 국제표준과 연방규정을 연계하여 검색</li> <li>- '12년 기준 9964건의 표준데이터 보유</li> </ul> </li> <li>• 참조표준 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조표준 데이터의 효율적인 배포 및 활용을 위해 1960년대 구축</li> </ul> </li> <li>• NIST 발표 최신 정보 검색기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워드, 제목, 저자 등을 결합검색 제공</li> </ul> </li> </ul>                                                                                                                        |
|     | ANS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산업 표준 제정 기구</li> <li>• 민간이면서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 자발적 합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조정 역할을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국가표준 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이외에 중국, 인도, 한국의 표준 정보 제공</li> <li>- 미국표준협회의 여러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음</li> <li>- 표준개발조직 활동 사항, 표준 검색 방법 및 사이트, 표준 구입 사이트, 인증기관 목록 검색 사이트를 링크 제공</li> </ul> </li> <li>• 인증서비스 관리 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SI에서 인정한 제품인증기관 목록 및 각 기관별 세부 정보 제공과 인증과 관련된 각종 사항에 대한 정보</li> </ul> </li> <li>• E-표준 교육 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과 관련된 약어, 키워드 별 프로그램, 교육 일정, 표준관련 수업정보를 링크 또는 직접 제공하고 있음</li> </ul> </li> <li>• 표준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li> </ul> |
| 캐나다 | SC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산업부 산하 표준위원회로, 국가 표준 제정/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ndards Sto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주도의 표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li> <li>- 민간이 주도하는 캐나다 표준협회 사이트와 링크 서비스 제공</li> </ul> </li> <li>- 캐나다 국가표준 및 국제 표준의 변경사항에 대해 '표준코드, 표준설명, ICS 코드, 시행일자, 변경 사항, 관련 키워드'별 요약 정보 제공</li> </ul>                                                                                                                                                                                                                                                                                                                   |
| 독일  | DI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비영리 협회로, 기술부문 전반에 걸쳐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는 독일 유일 표준 제정 기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포털 및 웹사이트, CD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li> <li>• 다국어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제 표준 정보의 접근 및 이해도를 높임</li> </ul>                                                                                                                                                                                                                                                                                                                                                                                                                                                                |
| 영국  | BS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산업계에 의해 형성, 조직되어 정부의 승인과 지원을 받고 있음</li> <li>• 유럽통합표준의 제정 및 ISO/IEC의 국제표준화 작업에서 주도적인 역할 담당</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OL(British Standards On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규격으로 바탕으로 유럽, ISO, IEC 규격 중 영국 국가규격으로 채택된 규격에 대하여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li> </ul> </li> <li>• 자국 국내/외 규격에 대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유사아이템에 대한 검색 기능의 제공으로 보다 더 정확한 구매 규격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여건 조성</li> </ul>                                                                                                                                                                                                                                                                                           |

## (5) 사업추진절차

- 범부처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 6. 참고자료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사업 및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현황

## 참고1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사업현황

### □ 추진 배경

- (정보분산) 부처별, 제도별로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분산된 관련정보를 한꺼번에 획득하거나 연관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 기업은 제품 생산·판매를 위한 표준·기술기준·인증 관련 정보 수집 및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기 어려워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등 시간과 비용낭비
  - \* ① 과다한 인증비용 ② 까다로운 인증절차, ③ 표준·인증 정보부족 등을 중소기업 주요 애로사항으로 조사보고(중소기업중앙회, '07년)
- (중복발생) 정부에서도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개발시 부처간 상호 비교분석이 불가하여 유사·중복 제정·운용에 따라 기업부담 가중
  - \* 중소기업 평균 보유 인증수 : 14.9개, 연간 보유비용 : 기업당 3,230만원(대한상의, '10년)

### □ 목적/필요성

- (통합정보 제공)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정보를 통합하여 단일창구에서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 ☞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정보탐색 효율화 및 기업인증 획득을 간소화
- (중복규제 해소) 부처간 표준·기술기준·인증업무를 통합·연계하여 유사·중복 사전예방 및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협업시스템 구축필요
  - 부처별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제·개정시, 중복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정보시스템 필요(유사·중복 사전예방·방지)
  - ☞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변경시 체계적 업무처리 및 실시간 정보 공유
  - ☞ 국무조정실 기술규제영향평가 및 인증규제 일몰제에 적극 활용

#### < 대통령 언급사항 >

-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4.3.20)시 「국가표준·인증 통합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필요성 제기
  - ▶ 『인증제도에 관한 것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것은 의견제시 가능토록 실시간 정보제공 필요』

## □ 서비스 현황 및 목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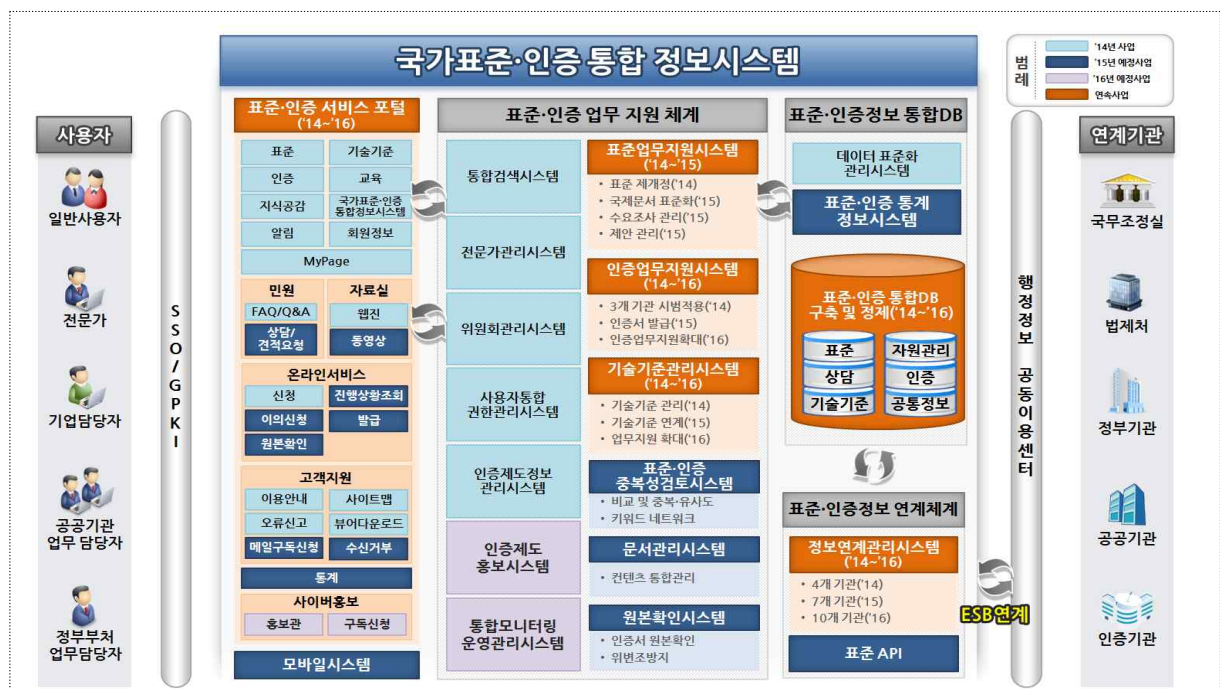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 구축 추진('14~'16, 총 98억원)

① 시스템 기반 구축 → ② 시스템 안정화 → ③ 시스템 개방·확대

### < 국가표준·인증 통합관리 및 서비스 개념도 >



### < 목표시스템 개념도 >



## 참고2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현황

| 구분                           | 시스템명                             | 주요 업무기능                                                | 설치장소                               |
|------------------------------|----------------------------------|--------------------------------------------------------|------------------------------------|
| 국표원<br>행정<br>정보시스템<br>(대국민)  | 국가기술표준원<br>(www.kats.go.kr)      | 우리원 소개, 공지사항, 각종 행사, 기술자료<br>및 분야별 주요업무 게재, e-홍보관 등    | 국가<br>기술<br>표준<br>원내<br>(충북<br>음성) |
|                              | TBT 종합정보허브<br>(www.knowtbt.kr)   | TBT 중앙사무국 소개, WTO 무역기술장벽,<br>TBT 통보문, 국내·외 기술규제정보 제공   |                                    |
|                              | e-KOLAS<br>(www.kolas.go.kr)     | 인정, 평가, 사후관리 등 KOLAS 업무의 전<br>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                                    |
|                              | 한국제품인정제도<br>(www.kats.go.kr/kas) | KAS 소개, KAS 인정기관 및 인정분야 정보 등                           |                                    |
|                              | 사이즈코리아<br>(sizekorea.kats.go.kr) | 인체치수자료 및 표준인체 측정법 소개                                   |                                    |
| 국표원<br>행정<br>정보시스템<br>(업무처리) | 국가기술표준원 업무포털                     | 업무 관련 자료 공유, 업무처리시스템·홈<br>페이지 링크 및 내부 게시판 등            |                                    |
|                              | 정책홍보도우미                          | 정책고객들에게 국내외 표준동향, KS 고시<br>정보 등 정책정보를 e-mail을 통해 일괄 발송 |                                    |

##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사업 (계속)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사업 | 1,968 | 2,266        | 2,311        | 45           | 2.0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3700 - 3741 - 306

\* 담당자 : 적합성정책국(진종욱), 적합성평가과(장혁조, 043-870-5490), 주무관(김은영, 5496)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 총사업비   | 해 당 없 음                                 |
| 사업규모   | 해 당 없 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금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재)한국인정지원센터,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2. 사업목적

- 국제공인기관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국내 기관의 기술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기업 등 지원
- 국내시험·인증의 국제상호인정협정(MRA, MLA) 체결·유지를 통한 국제 동등성 확보, 국제적 시험·인증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 시험·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제 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한 ISO 경영시스템 등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 및 인정기구의 국가단일인정체계 운영
- 시험·인증이 제조업 등 기존 산업에 종속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기존 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육성
  - 시장 성장성, 경쟁 우위 등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새로운 시험·인증분야의 발굴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026백만원

-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900백만원=30백만원×30건
- (표준물질구입) 15백만원=2.5백만원×6건
- (숙련도시험 평가관련 여비) 5백만원=0.2백만원×25회
- (숙련도 위원회) 45백만원=1.5백만원(10명기준×0.15백만원(수당))×30회
- (숙련도확인체계 구축) 61백만원=61백만원

##### ② 국제동등성유지, 국제상호인정기반구축 : 284백만원

-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정기구 운영기준(매뉴얼·절차서, 운영요령 등) 정비 : 120백만원
  - (국제지침서 적용문서개발, 인정기구 매뉴얼/절차서, 지침 개정) 120백만원 = 4건×30백만원
- 인정위원회 운영 등 인정기구 사무국 운영 : 82백만원
  - (시험·교정인정위원회 운영) 63백만원 = 42회×1.5백만원(10명×0.15백만원(수당))
  - (분야별 공인인정서 전용용지 등 인쇄비) 19백만원
- 국제기구(ILAC, IAF) 국제동등성 평가 유지 및 대응 : 45백만원
  - (평가 유지 내부심사, 운영비 등) 35백만원
  - (평가 유지 회의장 등 임차) 10백만원
- 국제상호인정협정(MRA, MLA)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총회, 협정회의 및 국제인정교육 참석 등 국제협력 : 52백만원
  - (IAF/ILAC 총회, APLAC 총회/이사회, PAC 총회 등 국제회의) 17백만원=3건×2명×283백만원
  - (시험 교정, 검사, 숙련도, 메디칼 등 국제 인정교육) 15백만원=5건×1명×3백만원
  - 5백만원=(국제인정업무 협력강화를 위한 관련 국제회의 개최)

③ 국제시험인증제도기반구축 : 558백만원

- ISO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조사 : 140백만원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80백만원 = 2명×40백만원
  - 부실인증신고센터 전산망·서버 유지보수 : 20백만원
  - 인증현황 실태조사 실시 : 17백만원 = 34건×2명×0.25백만원
  - 부실인증처분을 위한 법률자문 : 10백만원 = 10건×1백만원
  - 부실인증 예방활동비 : 13백만원 = 안내책자 발간, 인식제고 활동 등
- 시험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템 등 3개인정기관의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 및 운영 : 300백만원
  - 단일인정체계구축·운영 : 300백만원 = 3개분야×2명×50백만원
- 신수요 시험·인증기법 등 개발 : 90백만원
  - 반부패경영시스템, 의료분야 인정시스템 등 : 30백만원×3건
- 국제적합성평가제도 기반구축 협의 : 18백만원 (시험·인증발전협의, 단일 인정구축협의, 부정성적서·인증서방지를 위해 시험인증기관 등 협의)
- 국제인정동향 세미나 개최 : 10백만원

④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443백만원

-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를 발굴하여 서비스 산업화를 지원해주는 시범사업비 : 350백만원
  - 350백만원 = 175백만원/과제 × 2개 과제
-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비와 여비 : 93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의 현주소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74백만원
  - 시험인증 실태 파악을 위한 국내여비 : 4백만원(0.2백만원×20회)
  - 신흥국·개도국에 시험인증 패키지 수출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 15백만원(3백만원×2.5명×2회)
- \* 예시: 미얀마 공업부와 협의를 통한 섬유시험소 설립추진('15), 베트남 표준계량품질총국과 협의를 통한 한·베기술혁신센터 설립('16)

□ 지원 필요성

- 국내 시험성적서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통한 국제무역 통용 촉진
  - 기업 시험비용의 이중부담을 제거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
  -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으로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수준의 숙련도 시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신뢰성 입증 필요

- 국내 시험·검사 교정 기관 선진화 기반 구축
  - 국내 시험 및 교정기관들의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서 기업 경쟁력 향상, 국민 삶의 질 향상, 선진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수출업체의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제 기준과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운영기준 등의 개발과 숙련도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험교정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활발하지 못함
  
- 글로벌무역 등 경제활동에서 ISO인증이 필수조건이나, ISO 인증의 부실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ISO 인증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 ('10년)
  
- 신 분야 시험·인증의 수요에 적기 서비스 제공 등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국제 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

< 세 부 내 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국제적합성평가기반<br>구축                                     | 1,968                                                                                                                   | 2,266                                                                                                             | 2,311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련도시험 프로그램<br/>개발 및 운영</li> </ul>   | 789<br>750백만원(숙련도25<br>건개발·운영×30백<br>만원)+15백만원(표<br>준물질구입등)+6백<br>만원(국내여비)+15백<br>만원(숙련도위원회운<br>영)                      | 976<br>940백만원(숙련도31<br>건개발·운영×30백만<br>원)+15백만원(표준물<br>질구입등)+6백만원(국<br>내여비)+15백만원(숙<br>련도위원회운영)                    | 1,026<br>900백만원(숙련도30건개<br>발·운영×30백만원)+15백<br>만원(표준물질구입등)+5백<br>만원(국내여비)+45백만원(숙<br>련도위원회운영)+61백만원(숙<br>련도위원회운영)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동등성유지, 국제상호<br/>인정기반구축</li> </ul> | 1,83<br>131백만원(국제동등<br>성평가 매뉴얼 제개정<br>운영기준 개발 등)<br>+ 52백만원(국제동등<br>성평가 수검, 국제협<br>력강화 등)                               | 284<br>180백만원(국제동등성<br>평가 매뉴얼 제개정운<br>영기준 개발 등) + 104<br>백만원(국제동등성평가<br>수검, 국제협력강화 등)                             | 284<br>120백만원(국제동등성평가<br>매뉴얼 제개정운영기준 개<br>발 등) + 164백만원(국제동<br>등성평가 수검, 국제협력강<br>화 등)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시험인증제도기반<br/>구축</li> </ul>        | 548<br>140백만원(부실인<br>증 신고 센터 운영<br>등)+300백만원(국가<br>단일인정체계구축운<br>영)+80백만원(신수<br>요 시험인증기법개<br>발)+28백만원(세미<br>나, 발전방안 협의등) | 558<br>140백만원(부실인증<br>신고센터운영 등)+300<br>백만원(국가단일인정<br>체계구축운영)+90백만<br>원(신수요 시험인증기<br>법개발)+28백만원(세미<br>나, 발전방안 협의등) | 558<br>140백만원(부실인증신고<br>센터운영 등)+300백만원<br>(국가단일인정체계구축운<br>영)+90백만원(신수요시험<br>인증기법개발)+28백만원(세<br>미나, 발전방안 협의등)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br/>지원</li> </ul>       | 448<br>350백만원(시험사업<br>2건)+98백만원(국내<br>외 인증시장 조사)                                                                        | 448<br>350백만원(시험사업<br>2건)+98백만원(국내<br>외 인증시장 조사)                                                                  | 443<br>350백만원(시험사업 2<br>건)+93백만원(국내외 인<br>증시장 조사)                                                                |              |   |
| <input type="checkbox"/> 비목(합계)                                              | 1,968                                                                                                                   | 2,266                                                                                                             | 2,311                                                                                                            |              |   |
| ○ 일반수용비(210-01)                                                              | 54                                                                                                                      | 72                                                                                                                | 162                                                                                                              |              |   |
| ○ 임차료(210-07)                                                                | 25                                                                                                                      | 25                                                                                                                | 25                                                                                                               |              |   |
| ○ 시험연구비(210-13)                                                              | 15                                                                                                                      | 15                                                                                                                | 15                                                                                                               |              |   |
| ○ 국내여비(220-01)                                                               | 10                                                                                                                      | 10                                                                                                                | 9                                                                                                                |              |   |
| ○ 국외여비(220-02)                                                               | 62                                                                                                                      | 52                                                                                                                | 47                                                                                                               |              |   |
| ○ 업무추진비(240-01)                                                              | 18                                                                                                                      | 18                                                                                                                | 18                                                                                                               |              |   |
| ○ 연구개발비(260-00)                                                              | 994                                                                                                                     | 1,284                                                                                                             | 1,245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 440                                                                                                                     | 440                                                                                                               | 440                                                                                                              |              |   |
| ○ 출연금(350-01)                                                                | 350                                                                                                                     | 350                                                                                                               | 350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중기<br>재정계획 | '16   | '17   | '18   | '19   | '20   |
|------------|-------|-------|-------|-------|-------|
| '16~'20    | 2,266 | 2,311 | 2,542 | 2,796 | 3,075 |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업 및 공인기관의 숙련도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 수요조사를 통하여 효과적인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 ISO 인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인증의 유효성을 확보하여 인증의 신뢰성 제고
- 국제적인 시험·인증제도의 국내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 신수요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제도 구축하여 수요자에게 적기에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22.6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상의학분야 등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운영(25건) : 9.76</li> <li>·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2.84</li> <li>· ISO 부실인증센터 운영 및 단일인정체제 구축 : 5.58</li> <li>·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448백만원</li> </ul> |
| '17 | 21.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분야 등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운영(24건) : 9</li> <li>·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2.44</li> <li>· ISO 부실인증센터 운영 및 단일인정체제 구축 : 5.28</li> <li>·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4.28</li> </ul>        |
| '18 | 19.9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분야 등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운영(20건) : 8.51</li> <li>·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2.34</li> <li>· ISO 부실인증센터 운영 및 단일인정체제 구축 : 4.98</li> <li>·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4.08</li> </ul>     |
| '19 | 17.6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미생물 등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운영(15건) : 6.93</li> <li>·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2.04</li> <li>· ISO 부실인증센터 운영 및 단일인정체제 구축 : 4.78</li> <li>·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3.88</li> </ul>  |
| '20 | 17.6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분야 등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운영(15건) : 6.93</li> <li>·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2.04</li> <li>· ISO 부실인증센터 운영 및 단일인정체제 구축 : 4.78</li> <li>·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3.88</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제19조(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의 추진),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제28조(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계량산업의 지원)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제7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향상), 제7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 추진경위

- '94이전 : 국내기업들이 BSI(영국표준협회), 로이드 선급협회 등 외국계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0인증을 획득
- '94이후 :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 공업진흥청에서 ISO 9000인증 업무를 수행
- '97. 5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인정원(KAB)에 위탁
- '00. 9 :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01. 1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인정원에 완전 이양(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도 권한만 법에 존치)
- '02. 3.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12 :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4. 2 : “차세대성장동력 관련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시장 선점” 산자부 업무보고
- '04. 4.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4. 5 : 권역별 종합교정기관 육성대책 수립(장관 보고)
- '04. 6 : 계량측정분야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 7 : 국가측정표준의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12 : 제2차 국가표준 기본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5.12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보고” 제도를 도입('06.12월 시행)
- '07.12 : ISO 9001/14001 인증제도 관리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09.12 :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정고시
- '10. 4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대한 권고
- '12.5 :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 방안 보고(장관 보고)
- '12.7 :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VIP 보고)
- '13.5 :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구성
- '13.6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BI 콘테스트 우수제안 선정
- '13.7 :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 '13.5 :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구성
- '13.6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BI 콘테스트 우수제안 선정
- '13.7 :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 '13.8 : 서비스산업 발전(국정과제 14)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 (13.7.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의 세부과제로 시험인증 서비스 산업화 추진
- '14.1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14.4 :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
- '15.03. : '2015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15.07. : '15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16.02. : '2016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 16.72 | 20.72 | 19.68 | 22.66 | 23.11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불용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16.72<br>( )     | -<br>( )    | -<br>( )    | -<br>( )        | 15.55<br>( )     | -<br>( ) | 1.17<br>( ) |
| '14년 | 20.72<br>( )     | -<br>( )    | -<br>( )    | -<br>( )        | 20.71<br>( )     | -<br>( ) | 0.01<br>( ) |
| '15년 | 19.68<br>( 3.5 ) | -<br>( )    | -<br>( )    | -<br>( )        | 19.64<br>( 3.5 ) | -<br>( ) | 0.04<br>(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해외의 경우(호주 NATA, 영국 UKAS 등), 연평균 50여개 정도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연평균 15~20개 정도에 불과하여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 국제상호인정분야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숙련도 시험운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0~25배의 관련 예산 증액이 요구됨

○ 선도산업표준화 선행대응 관련 일본 정부의 지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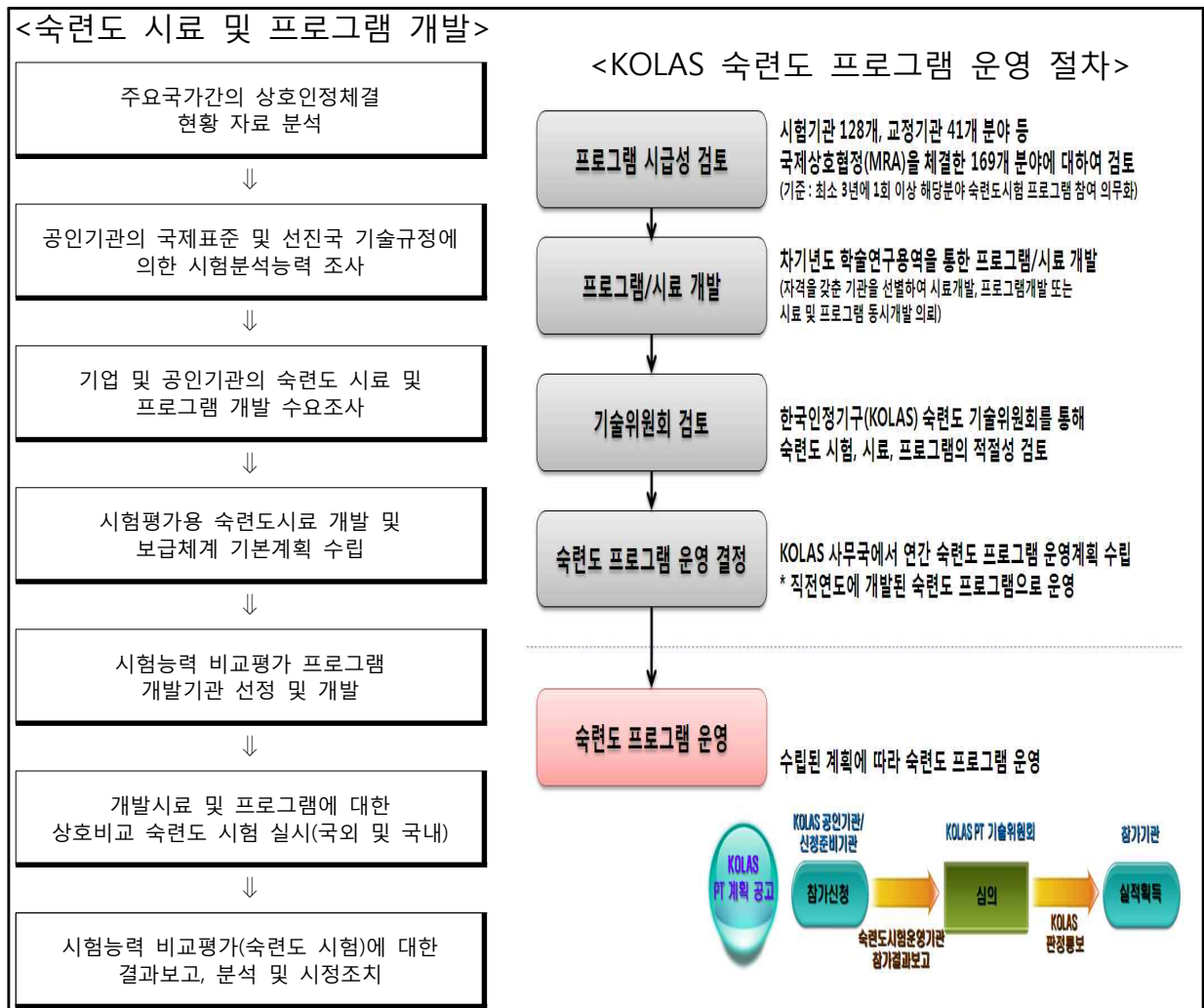
- 일본 경산성의 기술인증연구개발 : 4대 전략분야에 대해 ISO 및 IEC의 국제표준(안) 개발에 매년 약 100억원 지원
- 일본 총무성의 국제기술획득형 연구개발 : 통신분야에 대해 ITU 등의 국제표준(안)개발에 매년 약 20억 지원

○ 국제적합성평가 체제의 구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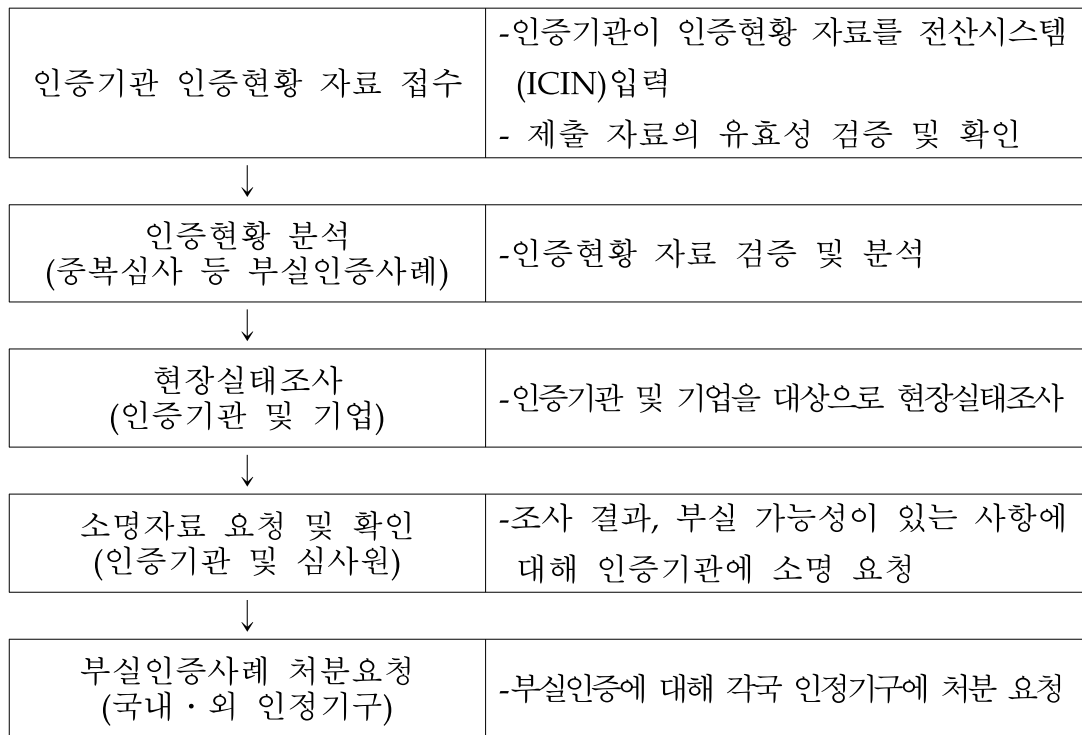
- (EU) 개별 회원국의 통합노력과 병행하여 역내 시험인증제도 통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08)

- \* (영국) '95년 NACCP와 NAMAS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UKAS로 통합
- \* (이탈리아) '09년 2개의 인증제도를 ACCREDIA으로 통합
- \* (독일) '09년 4개의 인증제도를 DAkkS로 통합
- (중국) '07년 CNLA와 NCAB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CNAS로 통합
- (일본) 3개의 인증제도 간 MoU 체결('08), 인증제도 통합 추진중
- (미국) 민간중심의 다원화된 시험인증제도를 운영중이나, 국제기준 제정 등 대외활동 시에는 상무부 소속 NVLAP가 주도
  - \* 국제기구(ILAC 등) 가입 59개국 중 미국(11), 캐나다(2), 일본(3), 태국(3), 인도(2) 및 한국(3) 등 6개국만이 복수 인정기구를 운영
- (한국) 시험·검사(KOLAS), 제품인증(KAS) 및 경영시스템(KAB) 분야로 구분되어 시험·인증제도가 운영 중

##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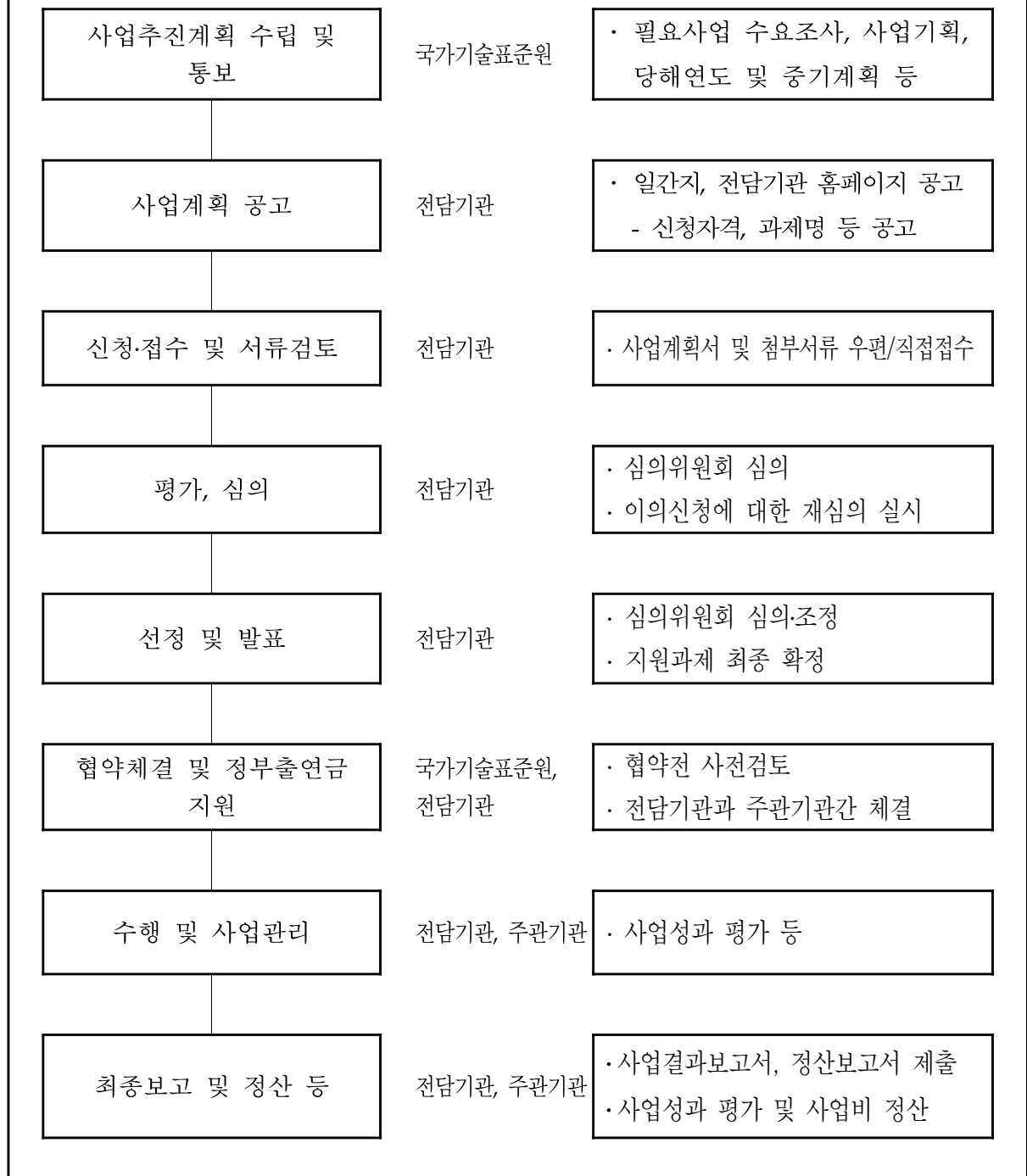
○ ISO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 절차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 6. 참고자료

- 적합성평가 제도 및 국제 상호인정 협정, 숙련도 프로그램 개요

## 참고 1 적합성평가 제도 및 국제 상호인정 협정

### □ 적합성평가 개요

- 정의 : 제품, 서비스, 품질, 시스템 등이 법, 규정, 표준 등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 → 국제적으로 통용

\* 적합성평가의 대상 : 시험, 교정, 검사, 인증 등

### ○ 국내 적합성평가체제

- KOLAS 인정 : 국제기준(ISO)에 따라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시험결과의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제도 운영

\*  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사무국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 KOLAS는 국제기구(ILAC, APLAC)에 가입하여 공인성적서의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해 4년주기 인정기구 평가로 자격유지

### □ 국제 상호인정 협정

- 국가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공인기관 성적서의 국제적 통용과 수용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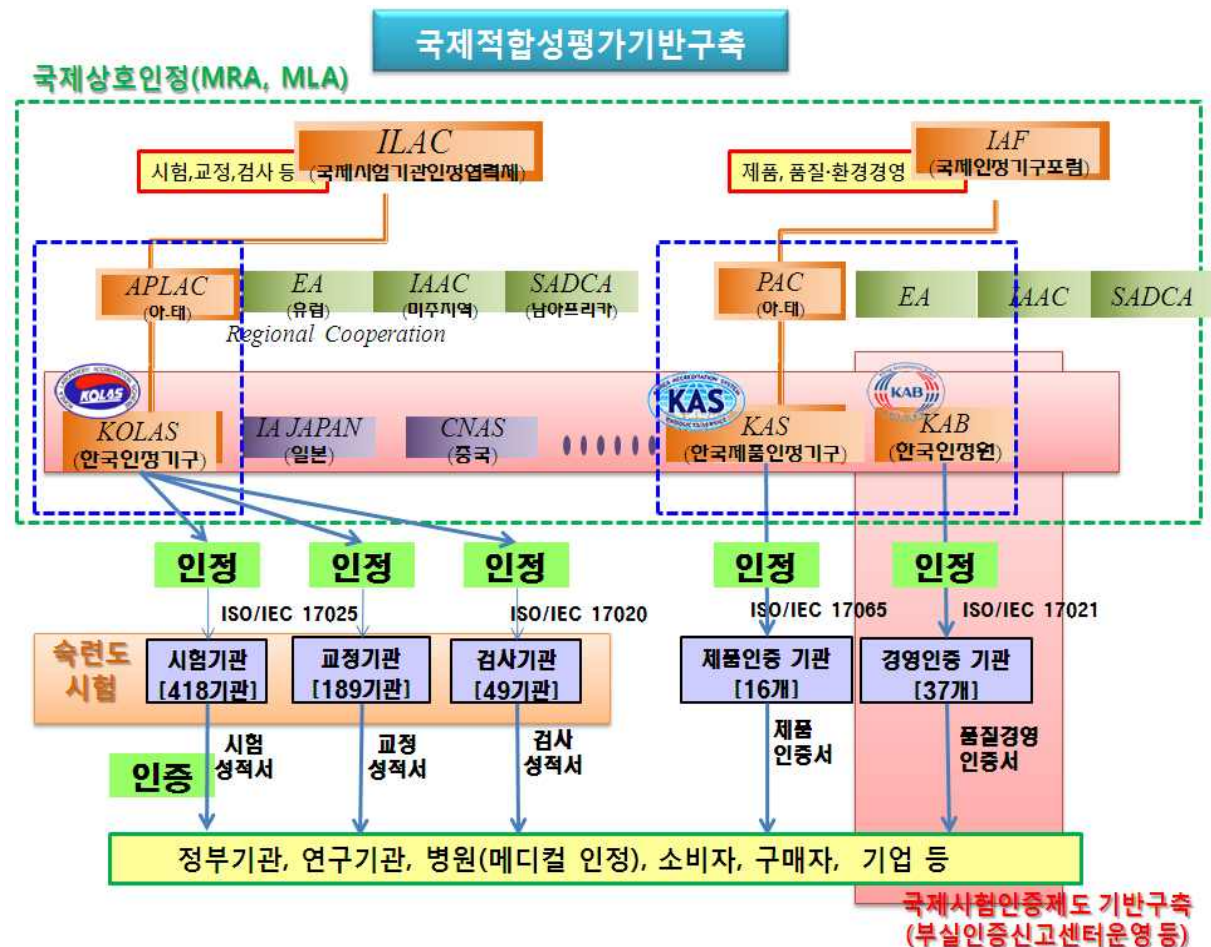
\*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상호인정협정)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은 무역상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각국의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국제적으로 상호인정하기 위해 ILAC-MRA 제도를 운영

\* ILAC-MRA 자격 획득 및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지역기구(EA, APLAC 등)를 통해 ISO/IEC17011 만족에 여부에 대한 동등성평가 수검(재평가 주기 4년)

\* ILAC-MRA : IL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ILAC 국제상호협정

\* ILAC-MRA 체결현황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61개국 74개 인정기구



- \* ILAC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 APLAC : 아태시험기관인정협력체(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 적합성평가제도의 효과

- 성적서 국제상호인정으로 우리나라 수출제품이 별도 시험없이 국제무역상 통용되어 수출기업 지원 효과(시간, 비용절감)
- 법정 규제당국(안전, 보건 등)에게 정책 추진의 기준 및 확실성
- 국제교역 활성화로 인한 국가간 정치적/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 적합성평가제도 성공사례

- \* 사례 1) D 조선회사 : 해양구조물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를 NIST에서 교정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내 교정기관을 통해 계측기를 교정 (연간 120억원의 비용 절감)
- \* 사례 2) L 제조회사: 휴대폰 유럽수출을 위해 KOLAS 시험성적서로도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제품인증을 받아 수출 가능(138억원/년 비용절감)
- \* 사례 3) H 제철 : “H 빔”, “PFC 채널” 등의 호주 수출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요구  
H제철은 KOLAS 시험기관 인정받아 호주 수출 가능(약 50,000톤/년, 약 3천7백만불)

## 참고 2 숙련도 프로그램 개요

### ○ 숙련도시험(PT, Proficiency Testing) 개요

- 정의 : 미지(未知)의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 또는 측정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KOLAS 공인기관 또는 신청 준비기관의 능력을 확인하는 필수 절차임
  - \* KOLAS는 국제상호인정(ILAC/APLAC-MRA)에 의거하여 ISO/IEC 17011 (인정기구요건)의 의무사항에 따라 PT를 운영/관리하고 있음
  - \*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 \* APLAC (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
  - \*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 : 상대국가의 적합성평가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
- 운영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8개 기관
  - \* KOLAS 공인기관은 해당 기술 분야당 3년에 1회 이상 PT에 참여해야 함 (의무)
  - \*\* 우리나라는 총 169개 기술분야 (시험 128개 분야, 교정 41개 분야)를 운영 중에 있음

### ○ KOLAS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절차

-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한 프로그램 시급성 검토
- 직전연도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시료개발포함)에 대한 KOLAS 숙련도 기술위원회 검토
- 연간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숙련도 프로그램 참가 결과는 KOLAS 숙련도 기술위원회 검토 후 실적으로 인정함)



### ○ 숙련도시험의 효과

-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시험/교정성적서가 협정국가에서 동시에 통용이 가능한 국제상호인정(ILAC/APLAC-MRA) 지위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 만족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시험검사기관의인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정부)이 한국인정기구(KOLAS)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인정기구는 국제표준(ISO/IEC 17011)의 요구조건인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계속, R&D)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 29,145 | 30,096       | 29,962       | △ 134        | △ 0.4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4 - 3700 - 3745 - 302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강병구), 표준정책과장(박주승, 043-870-5340), 사무관(박해범, 043-870-5341)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0년 ~ '18(일몰)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정부출연(100%)            |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분석기관 등 |

### 2. 사업목적

-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조표준 개발·보급, 주요 산업분야별 표준기반 R&D 기획연구 및 국책과제의 표준화 조율·지원
- 기술선도 및 융·복합기술 분야 등에 대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 추진, 표준화 기반구축 등을 통해 수출 시장 선점 견인
- 산업기술 분야 참조표준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성장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별 표준기반 R&D 기획 연구, 국책과제 (국가R&D, 실증사업 등) 표준화 조율·지원 등을 통한 국가표준 경쟁력 강화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신성장동력 분야의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 기반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25,912백만원('16년 대비 134백만원 감액)
- 산출내역 ('16년 : 26,046백만원 → '17년 : 25,912백만원)
  - 신규과제 지원 : ('16년) 5,631백만원 → ('17년) 7,957백만원
    - \* 신성장동력 분야 국가·국제표준개발 및 표준기반조성 등 지원  
(다/상) 50개 x 185.5백만원 x 9/12개월=6,957백만원  
(단/상) 5개 x 200백만원 x 12/12개월= 1,000백만원
  - 계속과제 지원 : ('16년) 20,415백만원 → ('17년) 17,955백만원
    - \* 수출 전략산업 등의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대응 지원  
(계속) 58개 x 171.4백만원 x 10/12개월= 8,284백만원  
(종료) 54개 x 179.1백만원 x 12/12개월= 9,671백만원

#####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조표준 데이터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국내 산업·서비스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 3,250백만원('16년 대비 1,000백만원 증액)
- 산출내역 ('16년 : 2,250백만원 → '17년 : 3,250백만원)
  - 국가참조표준 19개 데이터 개발 : 1,900백만원
    - \* 신성장동력, 신소재 등 미래수요를 반영한 19개 참조표준 DB x 100백만원 = 1,900백만원

| 신성장 동력 분야     | 신규 지원 내용                                                            |
|---------------|---------------------------------------------------------------------|
| 바이오헬스         | •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을 위한 뇌지도, 뇌파, 순환계 질환 표지자 등 참조표준 개발                     |
| ICT 융합, 신소재부품 | • 친환경 자동차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차량 경량화 등을 위한 열역학물성, 탄소 복합소재 참조표준 개발 |
| 에너지 신산업       | • 에너지 그리드 및 산업 창출을 위한 전국 태양, 풍력, 지열 등 참조표준개발                        |
| 고급소비재         | • 유전체 기반 개인 맞춤형 안티에이징 서비스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게놈표준, 후성유전체 참조표준 개발          |

- 국가참조표준 활용 모델 기획 및 개발 : 650백만원

\* 기획 1개 × 50백만원 + 개발 2개 × 300백만원 = 650백만원  
(先활용모델 기획 → 활용가능성 평가 → 後중점개발 지원 : 예산활용 극대화)

- 국가참조표준 평가 및 보급 확산체계 운영 : 700백만원

\* 국가참조표준 기술평가 및 등록 : 300백만원, 분야별 데이터센터운영 : 150백만원,  
참조표준 온오프라인 보급·확산 : 150백만원, 제3차 참조표준 중기로드맵 수립: 100백만원

### ③ 기획평가관리비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신규·계속 과제 평가 및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사업비 800백만원(사업비의 2.8%)

## □ 지원 필요성

###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미래 新산업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기존 주력산업 및 기술선도 산업분야의 국제표준화 등 지원 필요

\* 신성장동력 분야 등 정부의 중점 지원분야에 대한 국제표준선점 지원

###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과학·기술 분야 참조표준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비용 및 연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보건·환경분야의 참조표준 개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필요

\* 정부 3.0에 따라 여러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데이터를 참조표준화함으로써 체계적 관리 및 공개·개방을 통한 활용성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 29,145 | 30,096       | 29,962       | △134         | △0.4 |
|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4,095 | 26,046       | 25,912       | △134         | △0.5 |
| ▪ 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2,250  | 2,250        | 3,250        | 1,000        | 44.4 |
|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2,000  | 1,000        | -            | △1,000       | △100 |
| ▪ 기획평가관리비                              | 800    | 800          | 800          | -            | -    |
| <input type="checkbox"/> 비목(합계)        | 29,145 | 30,096       | 29,962       | △134         | △0.4 |
| ○ 연구활동비 등(360-05)                      | 29,145 | 30,096       | 29,962       | △134         | △0.4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표준기반조성 및 중소·중견 기업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 국가표준 개발·보급 등으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조표준 데이터를 지속 개발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운영
  - 여러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데이터를 참조표준화 함으로써 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 공개·개방을 통한 활용성 강화
- 표준선점을 통한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와 함께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로 R&D 초기단계부터 표준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 수행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300.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 260.46</li> <li>▪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22.5</li> <li>▪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10</li> <li>▪ 기획평가관리비 : 8</li> </ul> |
| '17 | 299.6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 259.12</li> <li>▪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32.5</li> <li>▪ 기획평가관리비 : 8</li> </ul>                           |
| '18 | 300.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 260.46</li> <li>▪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32.5</li> <li>▪ 기획평가관리비 : 8</li> </ul>                           |
| '19 | 300.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 260.46</li> <li>▪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32.5</li> <li>▪ 기획평가관리비 : 8</li> </ul>                           |
| '20 | 297.4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 256.98</li> <li>▪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32.5</li> <li>▪ 기획평가관리비 : 8</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및 동법시행령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 추진경위

- '96월 :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99.2월 : 국가표준기본법(제27조) 제정으로 표준개발 지원근거 마련
- '00년 : 30억원 예산 지원으로 표준화기술개발 사업 시작
- '07년 :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과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합
- '08.11월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수립
- '09.5월 : 녹색성장위원회(지경부)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 '10.6월 : 지식경제부 R&D 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16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에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17년 :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통합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07   | 226.2 | 240.96 | 260.46 | 259.12 |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추진경위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참조표준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6년 : 「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국가참조표준 체계구축 계획 반영·개발 추진
- '06.8월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 \* 참조표준의 제정·보급을 위한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데이터센터지정, 참조데이터 평가 및 참조표준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06년~'10년 : 연구소, 대학, 시험기관 등 21개 데이터센터 지정
- '11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신규사업
- '12년 : 24개 데이터센터 지정 21개 데이터센터 운영
- '14년 : 27개 데이터센터 지정 24개 데이터센터 운영
- '15년 : 30개 데이터센터 지정 26개 데이터센터 운영
- '16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에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35개 데이터센터 지정 28개 데이터센터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국가참조표준<br>데이터 개발·보급 | 20    | 24    | 22.5  | 22.5  | 32.5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없음**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4년 | 288.9<br>(288.9)   | ( )         | ( )         | ( )             | 288.9<br>(288.9)   | ( )  | ( ) |
| '15년 | 291.45<br>(291.45) | ( )         | ( )         | ( )             | 291.45<br>(291.45) | ( )  | ( ) |
| '16년 | 300.96<br>(300.96) | ( )         | ( )         | ( )             | 300.96<br>(300.96)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미국
  - '00년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
  - '03년 상무부, 8개 항의 표준화 전략(Standard Initiative) 발표
  - '08년 융합기술 연구개발(나노, 생명과학 재료, 기술 등)에 14.5억달러 투자
- 일본
  - '01년 표준화 활동의 성과보급을 위해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발족
  - '03년 “신시대 표준, 인증제도 보고서”를 통해 표준화전략 등을 추진
  - '07년 경제성장전략 대강 중 국제표준화 전략 목표 수립 및 추진

- '08년 5월 발표한 「Cool Earth 에너지혁신기술계획」에 따라 21개 탄소저감 기술을 선정 및 로드맵 작성·추진

#### ○ EU

- '03년 EU 표준화기구의 2010 Vision(단일표준을 통한 무역촉진) 추진키로 하고 EU 각료이사회를 통해 표준화활동 지원 결의
- '06~'09년 기술융합개발 프로젝트 “Knowledge NBIC Project” 추진
- '07~'13년 범유럽 차원에서 추진하는 FP7에서 융합기술 개발을 확대 및 학제간 연구개발 추진 강화

###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 미국

- '68년 '참조표준법(Standard Reference Act)' 제정
- 미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이 참조표준사업 주도
- 7개 연구부서의 측정과학 연구활동과 연계하여 참조표준 개발
- 38개 분야 172개 참조표준 DB 개발 및 보급
- NIST에서 개발한 참조표준은 약 1,800개 기관에서 활용, 개인 컴퓨터용 제품(PC Product)은 매년 약 6,000개가 판매되고 있음.
- NIST와 미항공우주국(NASA)이 공동개발한 물질의 분광학 데이터는 전 세계 우주항공 산업분야에 널리 활용(연간 약 40억원 판매)

#### ○ 일본

- '76년 통산산업성이 참조데이터 사업 본격 추진
-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산하의 61개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DB(RIO-DB) 구축 및 보급
- AIST 산하 첨단정보계산센터(TACC)에서 연구개발 DB 구축 및 운영
- 생명과학, IT, 나노/재료, 환경/에너지, 지구과학, 측정표준 등의 분야에서 94개 DB 개발 및 보급

○ 독일

- '74년 '참조표준진흥사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 연방재료시험연구원(BAM), 연방물리기술청(PTB)를 중심으로 화학, 재료, 표준물질 등 5개 DB 구축 및 운영
- 민간차원의 데이터 개발 및 보급
- 화공생명기술학회(DECHEMA)는 순수성분 및 혼합물 열역학물성에 관한 세계 최고의 DB인 DETHERM(Thermophysical Property DB) 개발 및 유료 판매

## (5) 사업추진절차

###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                   |                                                     |
|-----------------------|-------------------|-----------------------------------------------------|
|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국가기술표준원           | · 참조표준 육성 및 시행계획 수립                                 |
| 사업계획 공고               | 전담기관              | · 일간지/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br>· 신청자격, 대상분야등 공고              |
|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 전담기관              |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br>우편/직접접수                           |
| 평가, 심의                | 전담기관              | · 심의위원회 심의<br>·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
| 선정 및 발표               | 전담기관              |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br>· 지원대상과제 최종 확정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국가기술표준원,<br>전담기관  | · 협약전 사전검토<br>· 전담기관과 데이터센터, 국가<br>표준참조센터 협약체결      |
| 수행 및 사업관리             | 전담기관,<br>국가참조표준센터 |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 데이터센터 모집공고            | 국가참조표준센터          | · 일간지, 국가참조표준센터<br>홈페이지                             |
| 데이터센터 신청접수<br>및 평가    | 국가참조표준센터,<br>전담기관 | · 일간지/국가참조표준센터 및<br>국표원 홈페이지 공고<br>· 신청자격, 대상분야등 공고 |
| 데이터센터 지정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관보                                  |
| 데이터센터 실적 및<br>등급부여 평가 | 국가참조표준센터,<br>전담기관 | · 참조데이터 적정성 평가 및<br>등급부여                            |
| 실적평가 및 성과분석           | 전담기관              | ·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br>· 사업성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지원근거

## 6. 참고자료

○ 해당사항없음

##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계속, R&D)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 21,660 | 22,089       | 24,166       | 2,077        | 9.4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3700 - 3745 - 303

\* 담당자 : 적합성정책국장(진종욱), 인증산업진흥과장(정상용, 043-870-5500), 사무관(김상연, 043-870-5503)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03 ~ '18(일몰)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출연(일부 내역사업은 25% 이상 매칭) |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분석기관 등  |

### 2. 사업목적

-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품질기반조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측정 산업 선진화 지원, 화학물질관리기반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16,122백만원('16년 대비 17.3% 증가)

- (장비구축) 무역상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국내·외 시험인증 기관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확대토록 국내 시험인증 기관의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구축 필요에 따라 고가의 장비 지원 금액으로 16,122백만원 요구

- (선박ICT융합장비 기술지원센터 구축) '18년부터 500톤 이상 선박에 탑재가 의무화되는 ICT융합 항해통신 및 기관 장비 분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여 1,950백만원 요구
- (BWTS 수출지원 시험장비 구축)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17년 발효되는 선박평형수 강제 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여 1,950백만원 요구
- (기반조성) 고가의 시험평가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비 1,245백만원 요구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4개 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에 3억 이상의 금액을 지원

< 산출내역 >

- (계속) 7개 × 1,785백만원 = 12,500백만원
- (계속) 4개 × 311.25백만원 = 1,245백만원
- (신규) 2개 × 1,950백만원 = 3,900백만원

②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 4,367백만원('16년 대비 24% 감소)

※ 2017년부터 제품안전·품질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품질혁신기반구축 사업을 통합하여 시너지 극대화

- (기술개발) 어린이용품 등 중소·중견기업의 안전취약 위해 제품 및 기술융복합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국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4,028백만원 요구
  -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시행('15.6.4.)으로 안전관리 대상품목 대폭 증가로 제품안전·품질향상기술개발 필요성 증대(안전관리 대상품목이 특별법 시행 전 40품목에서 시행 후 13세 이하 어린이용품 전 품목으로 확대)
- (기반조성) 제품안전성 및 품질수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방법 등 제도개선·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사업비 1,716백만원 요구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의 안전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연평균 약 28,000건)
  - 신제품 또는 안전인증대상에 대한 안전기준 및 품질관리 기술 표준화 개발 등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간 평균 156백만원 지원

< 산출내역 >

- (계속) 4개 × 162.5백만원 = 620백만원
- (신규) 31개 × 165.3백만원 = 5,124백만원

③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2,000백만원('16년 대비 동일)

※ 기반조성 과제를 위한 예산을 줄이고 기술개발 과제 예산 확대

- (기술개발) 신기술 적용 융·복합 계량기의 기술개발, 성능향상을 통한 불법조작방지, 소비자피해 등의 계량기 현안문제 해결 및 지능형 계량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800백만원 요구
  - 기술개발 과제당 1.5억 내외로 12개 기관 선정
- (기반조성) 계량기의 내구성/신뢰성 평가기술 및 검·교정 유효성 검증방법 개발 등을 통해 신뢰성 평가기반을 조성하고, 계량·측정 기술 선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200백만원 요구
  - 기반조성 과제당 1억 내외로 2개 기관 선정

< 산출내역 >

- (신규) 14개 × 143백만원 = 2,000백만원

④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 1,005백만원('16년 대비 -283백만원)

- (기반구축) 유해물질의 위험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794백만원 요구
- (기술개발) 화학물질 취급 단계의 전 주기 관리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적용 및 고도화를 위한 211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 (계속) 1개 × 1,005백만원 = 1,031백만원

□ 지원 필요성

①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경감

- (비용적 측면) 장비 구축 지원대상 기관은 비영리 기관으로서 해외 기관 대비 평균 20% 절감 비용으로 공인성적서 발급 서비스 제공

※ 기업의 인증검사 비용 절감 : '15년도 133억원 예산 투자 대비 435억원(약 3.3배)의 기업부담 경감 효과 발생  
( '15년 수출용 시험성적서 총 94천건 발급, 성적서 1건당 평균 46만원 기업 부담비용 절감)

- (시간적 측면) 수출 기업의 경우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된 국내 시험·인증기관을 활용할시 신속한 공인성적서 발급이 가능
  - \* 추가로 해외 기관에 시험 및 인증을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방지** 효과
- **일자리 창출** : '11~'16년 사이 총 **1,220명**의 일자리 창출, 예산 지속 투자시 매년 **일자리 순증 285명** 지속 창출 가능
  - \* 107명 신규채용, 881명(예산대비고용유발), 232명('16년 예상))
-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국제시험 역량 확충**
  - '15년도 기준 **국제 시험능력은 선진국 대비 82% 수준**(총 5,025종의 국제표준 시험능력 확보)으로써 꾸준히 확대 중
    - \* 국제표준 시험능력(선진국 대비, %) : ('13) 74.5 → ('15)82.5 → ('17, 목표) 87.5
- **2017년도 사업추진 방향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전액 투자**
  - 신산업 관련 분야 투자비중 : ('16년) 65% → (**'17) 100%**
    - \* '17년도 구축장비 자체평가 실시 완료(신산업 분야 구축 장비 후보군 도출)

## ②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공산품·전기용품 등)은 인증 등 규제를 통한 제품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제품안전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 \* 사고건수(소비자원):'13)26,079건→'14)30,375건→'15)27,166건(연평균 약 28,000건 발생)
- 다양한 신제품(드론, 3D프린터 등) 출시,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등 제품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소비자 위해 제품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 제품안전 기술력 향상과 적기 안전기준 개발 등 안전취약제품 원인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
- 선진국 대비 품질경쟁력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국가별 순위는 정체상태이며, 중국의 '가격→품질'로의 산업 체질개선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소재·부품 등 산업에서 對중국 수출경합도가 심화되고 있음
  - \* 선진국 대비 품질경쟁력지수 수준 : ('13) 92.9% → ('15) 94.1% 향상 (코트라)
  - 품질경쟁력 순위 : ('13) 27위 → ('15) 28위 정체 (WEF 세계경제포럼)
  - \* 품목의 63% 對中 품질 비교우위 약화, 87% 수출경합도 심화 (2014, 현대경제연구원)
- 중소기업의 품질혁신 자생력 강화를 통한 주력산업 글로벌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정 및 품질검사 기술 개발 및 공정표준화 등 기반조성 필요

### ③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ICT융복합 기술개발)** 불법 주유기 등 계량기 조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조작 방지 등 신뢰할 수 있는 계량·측정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
  - ICT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계량·측정기술의 고도화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상거래 기반마련이 필요
- **(기술경쟁력 강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계량산업 기술개발 분야에서 ICT융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계량기 제조업체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으로 자체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움
  - \* 국내 계량산업은 계량기 제조업체의 90%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형 산업('15년 계량산업 조사)
  - 최근 법정계량기의 수입량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영세한 국내 계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R&D 지원 필요

< 계량기 대중국 수출입 현황 > (단위: 1,000USD)

|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 수출 | 4,778  | 5,474  | 5,618  | 4,924  |
| 수입 | 28,917 | 40,375 | 43,268 | 54,484 |

- \* HS코드: 중량측정기기와 각종의 저울추 및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
- **(중소기업 육성)** 계량·측정산업은 기술집약적인 분야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기술적 창업효과가 큰 반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5년 정도 뒤쳐져 관련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이 시급
  - \* 국내 계량산업은 계량기 제조업체의 90%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형 산업('15년 계량산업 조사)
  - \* '14년 기술개발 과제 예산 8.15억 전액 중소기업 지원, '15년 기술개발 과제 예산 15억 중 8.5억 중소기업 지원
  - ICT 융·복합화로 전기차 충전기, 스마트미터 등 새로운 계량·측정기기의 선도적 기술개발 지원과 에너지절감, 에너지프로슈머 플랫폼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고용 창출 및 수출 지원이 필요
    -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ICT를 융합한 계량기의 기술기준 개발이 활발함에 따라, 이에 선도적 대응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국제시장 기술선점이 필요
    - \* 스마트그리드 검침기의 경우 한전에서 '30년까지 매년 약 100만대씩 보급 예정

#### ④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 화학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해 국내 화학물질 규제 강화 추세이나, 규제 이행을 위한 기반 미비로 인해 기업 부담 가중 우려
  - \* '15년부터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4년 산업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규제대상 확대 및 내용 강화
  - '11년 기준 유해성 시험 수요 국내 충족률은 평균 46.3%에 불과(인체독성분야 55.3%, 환경독성분야 36.7%)
  - 화평법 등록에 필요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47개 항목 중 11개 항목은 국내 시험 기반 미비, 5개 항목은 시험기관이 1개소에 불과
  - 국내 시험평가 기관의 부재 또는 부족으로 외국 시험평가 기관에 의뢰할 경우, 최대 2~5배의 비용 부담 발생 예상
    - \* 화평법 국회 논의시('13년 4월), 산업계는 국내 시험평가 기반 부족으로 인한 해외 시험기관 종속 문제와 기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조속한 정부 대책 마련 건의
-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등 법률 대응 기반조성 및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저감을 위해 사업장 내 화학물질 통합관리지원 필요
  - \* 관계부처 합동 화학물질 안전 종합 대책('13)에 따라 정부지원 대책 발표(산업부는 화학물질 생애주기별 관리 등 대책 제시)
  - 화평법·화관법 대상 사업장의 95%(1만6천개)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화학물질 관리체계 및 인력 부재로 법률 적기 대응이 어려움을 호소
  -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피해의 대부분이 중소·영세기업에서 발생
    - \* '08년~'11년 사이의 화학물질 피해자 1,452명 중 100인 미만 사업장의 피해자는 1,280명
-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의 초석
  - 국내 GLP인증 시험·평가 인프라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서비스산업으로 육성 가능
- “화학물질 전주기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한 주력산업 제조현장 서비스혁신(ICT융합) 및 고부가가치화
  - 주력산업 제조현장 경영프로세스별 화학물질 안전관리혁신 SW 기술 확보로 SW 중소기업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제조현장의 안전관리 효율성 및 공정 내 유해화학물질 저감에 따른 기술경쟁력 제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     |      |
|---------------------------------------------------------------------|----------------------------------------------------------------------------------------------------------------------------|----------------------------------------------------------------------------------------------------------------------------------|----------------------------------------------------------------------------------------------------------------------------------------------------------------------|---------|------|
|                                                                     |                                                                                                                            |                                                                                                                                  |                                                                                                                                                                      | (B-A)   | %    |
| <input type="checkbox"/> 표준안전기반구축                                   | 21,660                                                                                                                     | 22,089                                                                                                                           | 24,166                                                                                                                                                               | 2,077   | 9.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 기반구축</li> </ul> | 13,300<br>(계속) 7개 × 1,757백만 = 12,300백만원<br><br>(신규) 6개 × 167백만 = 1,000백만원                                                  | 13,745<br>(계속) 7개 × 1,786백만 = 12,500백만원<br><br>(계속) 4개 × 311.25백만x12/12 = 1,245백만원                                               | 16,122<br>(기일치) 7개 × 1,568백만 x12/12 = 10,977백만원<br>(기일치) 4개 × 311.25백만x12/12 = 1,245백만원<br>(단/상) 1개 × 3,950백만x12/12 = 3,950백만원<br>(단/상) 1개 × 5,267백만x9/12 = 3,950백만원 | 2,377   | 17.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li> </ul>    | 5,760<br>[제품안전]<br>(계속) 6개 × 158백만 = 950백만원<br>(신규) 23개 × 143.9백만 = 3,310백만원<br><br>[품질혁신]<br>(계속) 1개 × 1,500백만 = 1,500백만원 | 5,744<br>[제품안전]<br>(계속) 4개 × 155백만 = 620백만원<br>(신규) 23개 × 157.5백만x12/12 = 3,624백만원<br><br>[품질혁신]<br>(계속) 1개 × 1,500백만 = 1,500백만원 | 4,367<br><br>(종료) 4개 × 155백만 x12/12개월 = 620백만원<br>(단/상) 23개 × 217.2백만 x9/12개월 = 3,747백만원<br><br>* 2개 내역사업이 1개로 통합                                                    | △ 1,377 | △ 2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량측정기술고도화</li> </ul>         | 2,000<br>16개 × 125백만 = 2,000백만원                                                                                            | 2,000<br>(신규) 14개 × 142백만x12/12 = 2,000백만원                                                                                       | 2,000<br>(단/상) 14개 × 142백만 x12/12 = 2,000백만원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li> </ul>    | -                                                                                                                          | -                                                                                                                                | 1,005<br>(계속) 1개 × 1,206백만 x10/12개월 = 1,031백만원<br><br>* 기평비(KIAT) 26백만원 포함                                                                                           | 1,005   | 순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평비(KEIT)</li> </ul>         | 600                                                                                                                        | 600                                                                                                                              | 672                                                                                                                                                                  |         |      |
| <input type="checkbox"/> 비목(합계)                                     | 21,660                                                                                                                     | 22,089                                                                                                                           | 24,166                                                                                                                                                               |         |      |
| ○ 연구활동장비구축비(360-04)                                                 | 13,300                                                                                                                     | 13,745                                                                                                                           | 16,341                                                                                                                                                               |         |      |
| ○ 연구활동비(360-05)                                                     | 8,360                                                                                                                      | 8,344                                                                                                                            | 7,825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제공인 인정기관 확보 및 국제상호인정분야 확대를 위해 고난도·신수요 시험장비 구축, 고가 시험평가장비 개발 및 시험분석방법의 원천기술개발 등 시험인증역량 확보로 무역상 기술장벽(TBT)을 극복하고 수출기업을 지원
- 국민 생활수준 및 소득향상에 따라 제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제품의 다양화 및 융복합화로 인한 제품 안전사고 및 위해(危害)사례는 오히려 증가
  - 국민의 안전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발굴하여 개발(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제품안전 기술력 및 품질 향상과 국민 생활 안전 확보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통해 현장수요 중심으로 산업별 공급사슬 전반으로 수평·수직적 품질경쟁력 향상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 품질관리 애로 해결기술 개발 및 기술활용 기반구축 지원
- 공공 상거래 질서 훼손과 국민의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조작 방지 기술개발 및 측정값 신뢰성 문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한 계량·측정 기술개발 등에 우선 지원하여 국민 권익 보호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220.8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137.45</li> <li>▪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 42.44</li> <li>▪ 품질혁신기반구축 : 15</li> <li>▪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20</li> <li>▪ 기획평가관리비 : 6</li> </ul>                   |
| '17 | 241.6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137.45</li> <li>▪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 43.67</li> <li>▪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20</li> <li>▪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 10.05</li> <li>▪ 기획평가관리비(KEIT) : 6.72</li> </ul> |
| '18 | 220.8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137.45</li> <li>▪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 42.44</li> <li>▪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20</li> <li>▪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 15</li> <li>▪ 기획평가관리비 : 6</li> </ul>             |
| '19 | 220.8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137.45</li> <li>▪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 42.44</li> <li>▪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20</li> <li>▪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 15</li> <li>▪ 기획평가관리비 : 6</li> </ul>             |
| '20 | 218.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137.45</li> <li>▪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 42.44</li> <li>▪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20</li> <li>▪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 12.46</li> <li>▪ 기획평가관리비 : 6</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①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8조(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 추진경위

- '00.9월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02.3월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4월 : 「MRA사업」 1차년도 추진(49억원)  
→ 現 '12년(10차) 사업을 추진중(75.34억원), '11년(9차)까지 556억원 투입
- '04.4월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7.2월 : 「시험분석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07.11월 :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수립」 제24차 경제정책 조정회의 의결
- '10.9월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 '12.3월 : 「FTA시대 국가 R&D전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 '14.1월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 ②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 ○ 지원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 추진경위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품질혁신기반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3월 :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장관보고)</li> <li>- '08.12월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li> <li>- '09.4월 : 지원대상과제 선정 및 사업비 지원</li> <li>- '10.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공포</li> <li>- '11.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li> <li>- '11.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li> <li>- '14.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li> <li>- '14.6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15. 6. 4 시행)</li> <li>- '15년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424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경영 실태조사 실시('04.7 ~ 8, 18개 부문 181개 항목)</li> <li>- 품질경영 기본계획 수립('05.3.4)</li> <li>- '06년 :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정부예산(일반회계) 15억원) 신설</li> <li>- '08.2월 : '기술이전사업화촉진(R&amp;D)'의 내역사업으로 통합(직제개정)</li> <li>- '08.10월 : '10년부터 '기술이전사업화촉진(R&amp;D)'에서 분리</li> <li>- '10년 : '기술이전사업화촉진'에서 분리하여 신규 예산 확보</li> <li>- '10.6월 : 지식경제부 R&amp;D 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li> <li>- '10년 : 품질경영기본계획 수립('11~'15)</li> <li>- '14년 : 품질혁신기반구축 사업 실시(20억)</li> <li>- '15년 : 품질혁신기반구축 사업 실시(15억)</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 R&amp;D 사업구조 개편으로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내역사업 통합</li> </ul>                                                                                                                                                                                                                                                                                                        |                                                                                                                                                                                                                                                                                                                                                                                                                                                                                                                                  |

### ③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 지원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 계량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지원 가능

#### ○ 추진경위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추진('12.2월)
- 계량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계량법 전부개정 추진('14.5월 공포)
- 국정과제 1-7(IT·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과 부합

### ④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4조)
- 화학물질관리법(제36조, 제41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 ○ 추진경위

- '11.4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및 '12.9 구미불산사고 등 화학안전 사고 다수 발생
- '12.12 구미불산사고 계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 발표 (총리실)
- '13.5.2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정 공포
- '13.6.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 공포(「화학물질관리법」)
- 사업장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기준 강화(취급기준, 시설설치·관리기준 등)
- '13.7.5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발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국제상호인정 시험평가능력 기반구축 | 96.7  | 108.5 | 133   | 137.45 | 161.22 |
| ○ 제품안전기술 기반조성사업      | 39.5  | 39.5  | 42.6  | 42.4   | 43.67  |
| ○ 품질혁신기반구축           | 28    | 20    | 15    | 15     |        |
| ○ 계량·측정기술 고도화        | -     | 14.5  | 20    | 20     | 20     |
| ○ 중소기업화학물질 관리기반구축    | -     | -     | -     | -      | 10.05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월·불용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산업인프라 구축 및 정부 시험업무 위임 시 정부 예산지원
  - 미국의 경우,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를 제정하여, 민간시험기관에게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및 시험분석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금 등을 지원
- 또한,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ndards Laboratory)라는 거대 조직을 구축하여 시험분석 전문인력양성 강화
  - 적합성분야 전문대학 이상의 기관을 9개 이상 설립하여 전문교육 실시

## ○ 글로벌

- 글로벌 시장교류 확대 및 각국의 시험·인증규제 증가로 세계 시험 인증시장이 최근 5년간 급성장 추세('07년 76조원 -> '11년 132조원)로 국내시장방어 및 글로벌 시장 참여필요

\* 주요국 시험인증산업 GDP내 비중 : 독일(0.52%), 프랑스(0.32%), 한국(0.19%)

## ②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 ○ (제품안전) 국내·외에서도 정부주도로 제품안전에 필요한 정부자금을 지원하도록 법제화

- (국내)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
- (국외) 제조업 단체의 제품안전기준 및 시험방법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美 소비자제품안전법 섹션 5)

### ○ (품질) 중국, 독일 등은 정부주도로 기업의 품질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민간의 경우 현대차 등 '16년 '품질경영'을 재강조하며 관련 R&D 투자를 대폭 확대

- (국내) 현대차는 도요타·GM 및 최근 폭스바겐의 전례를 따르지 않기 위해 '16년 '품질경영'을 재강조하며 관련 R&D 투자를 대폭 확대
  - \* (도요타) '10년 가속벨트 결함으로 전 세계 230만대 리콜 실시
  - (폭스바겐·아우디 등) '15년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전 세계 리콜 진행 중
- (해외) 중국은 '제품품질 업그레이드'가 포함된 中國製造2025(중국제조 2025) 8대 전략을 통해 정부 차원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품질혁신역량 강화'가 포함된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7대 과제 및 품질 문제 발생시 즉시 추적이 가능한 ICT 기반 제조업 부흥정책 추진

## ③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 (실태조사) 독일, 네덜란드 및 일본 등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계량·측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도개선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전기·전자, 기계, 컴퓨터 등의 복합 첨단산업의 육성에 필요 기반산업으로 인식

- 단순하고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모든 산업 현장에 필수적 기기로 인식
- 산업의 고도화에 맞춰 자동화와 연계된 계측시스템으로 전환
  - \*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실태조사 사례 없음
- **(기업특성)** 국제적 계량·측정 기업은 계측기기가 기술집약적, 소품종이 주류를 이루는 특성으로 다국적 기업이 전시장의 65%를 차지
  - 국내 계량·측정기는 제품별 3,000억원 이하의 시장구조로서 대기업의 참여 없이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 다국적기업 : Agilent Technology(미국), Fluke Cooperation(미국), Rohde & Schwarz(독일)
    - \* 국내 측정기 기업은 중소기업(87%) 및 중견기업(13%)으로 대기업 부재
- **(무역규모)** 국제 계측시장은 EU가 41.5%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며, 선진국은 평균 10%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냄
  - \* EU는 전 계측시장 무역규모의 41.5%(177,518백만불)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 14.7%의 성장률을 나타냄
  - \* 중국은 전 계측시장 무역규모의 26.2%(112,185백만불)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 22.7%의 최고성장률을 나타냄
  - \* 미국은 전 계측시장 무역규모의 21.5%(92,141백만불)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 6.4%의 성장률을 나타냄
- **(산업육성전략)** 세계 1, 2위의 미국과 일본의 산업육성 체계는
  - 미국은 연방정부의 담당부처별로 지원하나 일본은 과학기술진흥기구의 국가주도로 산업 지원
  - 미국은 연구비의 90%이상을 공모에 의해 지원하고, 일본은 기기 개발과 요소 기술 프로그램을 나누어 진행
    - \* 국내는 계량·측정기기에 대한 부처별 규제만 있을뿐,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은 전무한 실정임
- **(검정장비 현황)** 독일 등 대다수의 OECD는 국제표준(OIML)에서 요구하고 있는 형식승인 및 검정 등의 검사기법, 설비,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는 턱없이 부족
  - \*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기법, 설비 등이 없이 일부 계량기에 대한 시험·인증만 가능 (예 가스미터(1,000m<sup>3</sup>/H 이하), 수도미터(350mm이하) 등 다수)
  - \* 저울의 경우 국제법정계량기구 상호인정(OIML MAA) 대상 품목이어서 외국에 별도 시험인증 없이 수출이 가능하지만 관련 검사기법 및 설비 등이 없어 대형 저울 등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는 불가능

- (신기술 계량기 개발) 미국, 일본 등 계량분야 선도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차세대 지능형 IT 융·복합 계량·측정기 개발 등을 집중 지원
  - \* 미국(NIST) : 지능형 전력량계 개발지원, 혈당측정기 개발지원 등
  - \* 일본(NMIJ) : 질량 교정 기술개발(밀도 측정방법 등) 지원 등
  -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IT를 융합한 계량기(지능형전력량계, 전기차 충전기 등)의 기술기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

#### ④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과 유사한 제도(REACH)를 운영하는 EU는 법시행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07. 6월 EU REACH 시행, 10월 지원정책 추진)

##### **EU 환경규제 이행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 ECAP, Environmental Compliance Assistance Program >**

- 2천3백만개에 달하는 EU 역내 중소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이들의 관련 환경 법규 이행지원을 위해 마련
- '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약 5백만 유로(약 8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 정보제공, 지원 네트워크 촉진, 지역/현장 환경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지원
-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영향 정보를 포함해, 자원관리 개선 및 에코 이노베이션(eco-innovation)을 통한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에 보급·확산
- 관련 웹사이트: <http://www.ec.europa.eu/environment/s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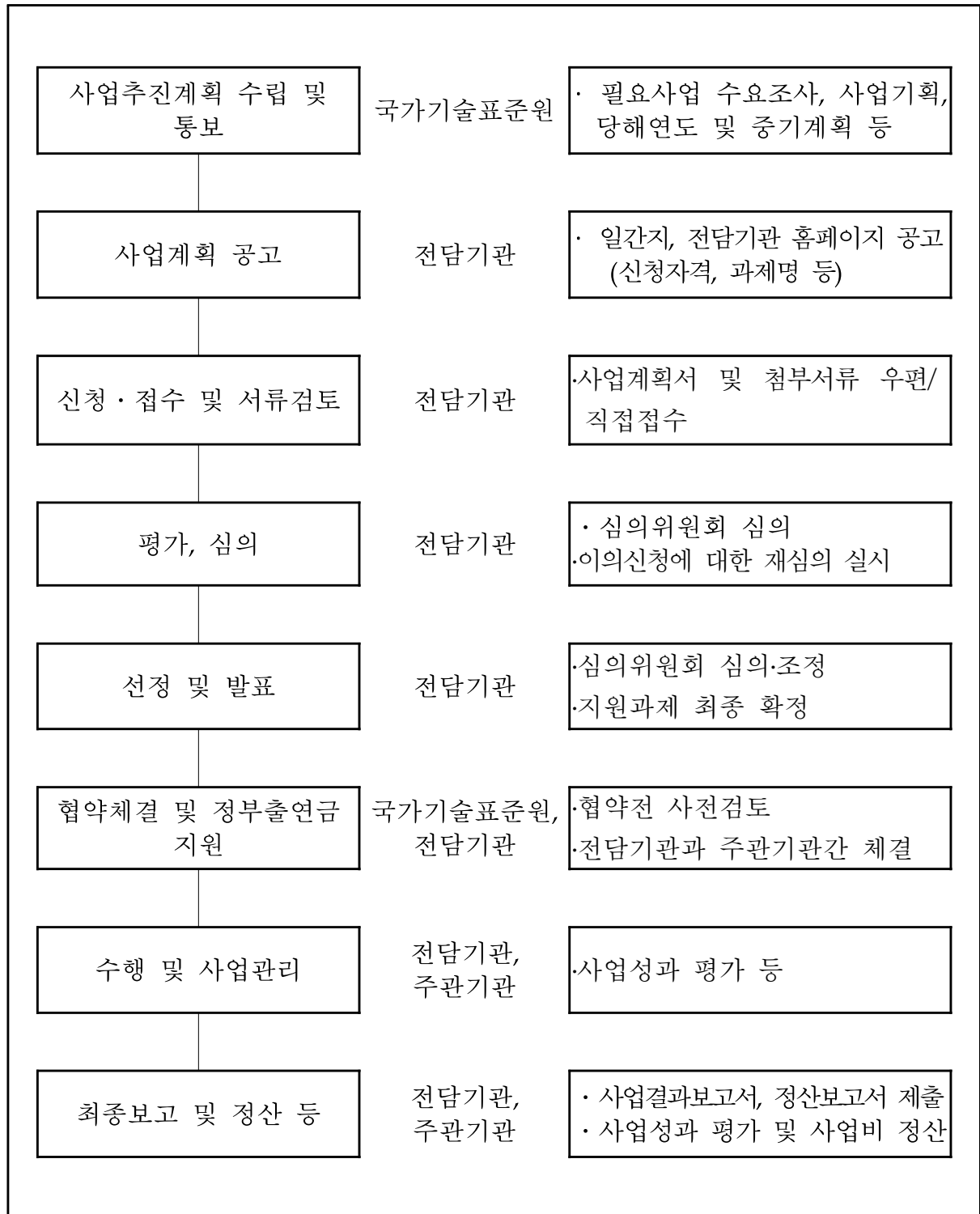
- 금호석유화학,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은 평균 10억 이상의 비용을 투자, 환경안전보건(EHS)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장별 모든 공정에 대해 화학물질 실시간 관리 및 사고예방능력 강화

##### **금호석유화학의 EH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총 20만여 종의 물질 정보와 각국의 규제 정보가 통합 관리돼 전 제품에 대한 화학물질 이력을 추적해 시간을 1일로 단축
- 사업장 별로 매일 20~40건에 달하는 공사와 공정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한 눈에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
-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 오류를 최소화하여 화학단지 내 사고예방 능력 제고
- 출처(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270159i>

## (5) 사업추진절차

### ①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②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 ③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                    |                                              |
|----------------------|--------------------|----------------------------------------------|
| 신규사업 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 - 신청자격, 추진 분야명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공고                 |
| 개념평가                 | 전담기관               | -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신규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를 선정 |
| 사업계획서 접수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 전산양식 인터넷 등록<br>-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 사전 서면검토              | 전담기관               | -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 요청                     |
| 신청과제 평가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 신규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 전담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 - 지원대상과제 보고 및 국가기술표준원 최종 확정                  |
| 선정과제 협약 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 - 협약전 사전검토 및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
| 사업비 정산               | 수행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 수행기관 사업비정산보고서 제출 및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검토          |
| 최종 평가                | 주관 → 전담 → 국가기술표준원  | - 기술개발목표 달성 등 실적을 종합평가                       |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 기술료대상기관에 대한 기술료 징수                         |
| 성과 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 정보시스템에 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

### ④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                 |            |                                           |
|-----------------|------------|-------------------------------------------|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산업통상자원부    | ·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수립                          |
| 사업계획 공고         | 전담기관       | ·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신청자격, 과제명 등)              |
|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 전담기관       |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직접접수                    |
| 평가, 심의          | 전담기관       |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br>·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
| 선정 및 통보         | 전담기관       | · 수행기관 최종 확정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전담기관       | · 협약전 수정사업계획서 검토<br>·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
| 수행 및 사업관리       | 전담기관, 주관기관 | · 사업성과 평가 등                               |
| 성과보고 및 정산 등     | 전담기관, 주관기관 | ·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br>·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 6. 참고자료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계량·측정기술고도화사업 상세 설명자료, 계량·측정기술고도화사업 지원 현황,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 기반구축 사업 내용

## □ 개 요

- (사업목적) WTO 이후 강화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비관세장벽)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수출애로 해소
  - 수출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공인성적서\*를 국내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시험장비를 구축
  - \* 협약에 따라 국내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해외에서 인정
- (현황) 시험인증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국제표준을 시험할 수 있는 국내 시험인증역량은 선진국 대비 82% 수준\*(15년)에 불과
  - \* 선진국 수준인 제조 능력에 비해 국내 시험인증 기반은 매우 미흡한 수준

## □ 지원 필요성

## 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

- (비용) 국내 시험평가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은 해외 소재 시험기관 대비 평균 27% 수준
  - \* 예) 인공관절(의료기기) 인증비용 : 해외기관 2~3억원, 국내 3~5천만원 (83% 절감)
- (시간) 해외 기관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필요한 왕복 소요시간, 체류 시간, 행정절차 처리시간 대폭감소\*
  - \* 성적서 발급 소요 기간 : (평균) 해외 125.7일 → 국내 39.4일
- (기술) 외국기관에 시험 의뢰시 발생할 수 있는 시험과정에서의 新기술유출(회로도 및 부품 등의 세부정보) 발생위험\*을 차단
  - \* 사례 : 업계 관계자 “해외 시험기관에 시험인증을 의뢰해놓고 왔는데, 해외 전시회에 나가보면 똑같은 제품과 디자인이 유통되고 있다” <해럴드 경제>

❖ 제도시행 이후 '15년까지 수출비용 총 1.34조원 절감(산업연구원 용역 결과)

< 비용·시간 절감 例 >

| 제 품         | 해 외          | 국 내          |
|-------------|--------------|--------------|
| 멀티에어컨디셔너    | 5,000만원, 6개월 | 1,000만원, 1개월 |
| 송풍기         | 2,000만원, 6개월 | ⇒ 500만원, 1개월 |
| 고무발포보온재(판넬) | 300만원, 2개월   | 100만원, 15일   |
| 디지털 도어록     | 2,000만원, 2개월 | 300만원, 15일   |

② 시험기관의 구축장비 활용수준 최우수 (산업R&D장비활용 실태조사)

- 시험연구원(장비수 675대)의 장비활용률(96.6%) 및 장비가동률(96.5%)은 전체평균(활용률 92%, 가동률 51%)을 큰 폭으로 상회하며 최고수준\*

\* 장비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신규 장비구축사업 평가시 가점 부여 받음

③ 국내 시험평가기관의 국제적 수준의 시험 역량 확충

- 후발주자로서 선진국과의 격차(82% 수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 (본 사업은 국내 유일의 시험기관 지원 사업임)

\* 국내 시험기관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고가 장비 자체적 구입에 한계

### 산업부 자체평가

<< 투자적격성 분석 결과 [대폭 증가] 등급 >>

- ❖ '17년도 新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부 주요 정책에 매우 부합
- ❖ 사업의 우수성 및 자체 구조조정 방향도 적절하므로 투자 확대

□ 필요성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계량기 신뢰성 확보 및 공정한 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예산 지원 필요(기술개발 R&D)
  - \* '15.10월 주유기 정량미달 이슈화(MBC TV 등 언론 보도)
- 중소기업 중심의 **계량·측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계량·측정기 관리를 위한 **계량행정 관리시스템 개발**에 지원 필요
  - \* 국내 계량산업은 계량기 제조업체의 90%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형 산업('15년 계량산업 조사)

□ 사업 개요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12년)에 따라 “계량·측정기술 고도화사업”을 ‘14년부터 시행 중임
  - \*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 **지원대상** : 법정계량기 12종 및 법정측정기기 6종에 대한 기술개발
- **지원현황** : ‘16년 20억원

| 구 분         | ’14년(14.5억원)  | ’15년(20억원)   |
|-------------|---------------|--------------|
| 기술 개발       | 5개 과제(8.15억원) | 12개 과제(15억원) |
| 기반 구축(조사기획) | 4개 과제(6.35억원) | 4개 과제(5억원)   |

□ ‘16년 사업 현황

- **(기술개발)** 계량기 제조업체 제품개발에 9과제 이상 지원(13.5억원)
- **(기반구축)** 정책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에 4과제 이상 지원(5.5억원)
- **(조사기획)** 취약 기술분야 조사, 개발기술 전파에 1과제 지원(1억원)

□ 사업 기대효과

-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
-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첨단 계량·측정기술 고도화 및 효율적인 계량·측정기 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계량·측정산업의 선진화**

## 참 고

## 계량·측정기술고도화사업 지원 현황

### □ 계량·측정기술고도화사업 현황

#### ○ '14년 현황

| 기획<br>분과 | 심의<br>대상 | 사업구분                         | 선정 과제수 |             | 최종<br>사업비<br>(억원) | 주관<br>기관 | 지원율<br>(기술료)    |
|----------|----------|------------------------------|--------|-------------|-------------------|----------|-----------------|
|          |          |                              | 기술위원회  | 사업심의<br>위원회 |                   |          |                 |
| 기술<br>개발 | 40       | 법정계량기<br>불법조작방지<br>기술개발      | 1      | 1           | 8.15              | 제한<br>없음 | 75%이하<br>(징수)   |
|          |          | 계량·측정기<br>성능향상<br>기술개발       | 6      | 4           |                   |          |                 |
| 기반<br>조성 | 21       | 검교정 기술<br>개발 및 신뢰성<br>평가기반구축 | 3      | 3           | 6.35              | 비영리      | 100%이하<br>(비징수) |
|          |          | 계량·측정기술<br>경쟁력강화<br>기반구축     | 1      | 1           |                   |          |                 |

#### ○ '15년 현황

| 기획<br>분과 | 심의<br>대상 | 사업구분                         | 선정 과제수 |             | 최종<br>사업비<br>(억원) | 주관<br>기관 | 지원율<br>(기술료)    |
|----------|----------|------------------------------|--------|-------------|-------------------|----------|-----------------|
|          |          |                              | 기술위원회  | 사업심의<br>위원회 |                   |          |                 |
| 기술<br>개발 | 11       | 법정계량기<br>불법조작방지<br>기술개발      | 2      | 2           | 12                | 제한<br>없음 | 75%이하<br>(징수)   |
|          |          | 계량·측정기<br>성능향상<br>기술개발       | 7      | 7           |                   |          |                 |
| 기반<br>조성 | 15       | 검교정 기술<br>개발 및 신뢰성<br>평가기반구축 | 6      | 6           | 8                 | 비영리      | 100%이하<br>(비징수) |
|          |          | 계량·측정기술<br>경쟁력강화<br>기반구축     | 0      | 0           |                   |          |                 |

□ 계량측정기술고도화사업 평균 경쟁률 및 평균 지원액

○ 연도별, 분과별 비교

| 연도  | 평균 경쟁률   |          | 평균 지원액(억원) |      |
|-----|----------|----------|------------|------|
|     | 기술개발     | 기반조성     | 기술개발       | 기반조성 |
| '14 | 8 : 1    | 5.25 : 1 | 1.63       | 1.59 |
| '15 | 1.22 : 1 | 2.5 : 1  | 1.33       | 1.33 |

\* '15년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법정계량품목이 축소하여 '14년 대비 '15년 평균 경쟁률이 낮아짐

## □ 사업내용(지원내용)

## ○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 ‘15.1월시행)” 관련 국내 미비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항목\* 중 2개\* 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및 시험항목별 민간 보급형 매뉴얼 개발·발간

\* 유해성 자료등록을 위한 화평법 시험분석 47개항목 중 17개항목은 국내 기반이 없으며, 17개항목 중 9개항목은 산업부, 8개항목은 환경부로 나누어 공동으로 기반구축 추진중(’14.3~)

\*\* (’17년도 기반구축 2개 항목) ① 유전자변이, ② 추가 in vivo 유전독성

- 국내 시험기관의 양적 저변확대를 위해 민간 시험·평가 기술·노하우 이전 및 일반\* 대상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시험평가운영체계 습득 유도

\* 대학, 일반기업, 시험기관 등

## ○ 화학물질 전주기관리 기술 개발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15.1월시행)”관련 중소기업의 자체 화학물질관리역량제고 및 화학사고 예방지원을 위해 사업장내 화학물질 사용 흐름을 관리하는 전주기 시스템\* 실증화 및 고도화

\* (추적·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사용·보관·폐기 방법, 시설·취급 기준, 화학물질관련 규제내용 등의 DB구축 및 화학물질 수불현황(입고·사용·출고), 물질별 위험성을 자체 관리할 수 있는 화학물질 추적·관리 시스템 보급, 현장 실증화 및 고도화

\* (진단·처방 플랫폼) 추적·관리 시스템과 연동, 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처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진단·처방 플랫폼 보급, 현장 실증화 및 고도화, 사용자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 □ 기대효과·성과

- 국내 기반이 미비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운영체계 조기 구축 및 중소기업 사업장 내 화학물질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 확보

- 국내 미비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항목 9개 중 7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 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에 따른 국제공인 GLP\* 인증 획득(∼16.12)
- \* Good Laboratory Practice, 시험 신뢰성 보증을 위한 OECD 국제공인 인증
-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비용 절감, 민간 시험기관 역량 강화 및 육성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 **국내 최초로 5대 화학법령\* 대응 화학물질안전관리·법령이행 기술개발 및 중소영세기업 보급(총 22개사)**
- \* 화평법, 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모니터링·진단·처방 체계 선진화

##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사업(계속)

###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사업 | 1,385 | 1,451        | 1,444        | △7           | △0.4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4 - 301

\* 담당자 : 지원총괄과장(이용구, 043-870-5320), 사무관(이승준, 043-870-5328), 주무관(염동석, 043-870-5331)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 2. 사업목적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임차료 : 400백만원
  - 청사이전에 따른 통근버스 4대 운영
- ② 차량유류비 : 15백만원
  - 평균연간유류비(2.5백만원) x 6대
- ③ 시설장비유지비 : 85백만원
  - 건물유지비(24백만원), 기계,통신 및 전기시설유지비(51백만원), 차량유지비(10백만원)

④ 청사관리용역비 : 907백만원

⑤ 포상금 지원 : 2백만원

- 산출내역 : 포상금 등(2백만원)

⑥ 민간위탁사업비 : 35백만원

- 산출내역 : 충북혁신도시(법무연수원) 공동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비(3,484천원×10명)

## □ 지원 필요성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 세부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 1,385                                                 | 1,451                                                 | 1,444                                                 | △7           | △0.4 |
| ▪ 운영비             | 1,350<br>(청사유지보수 10, 청사관리용역 992, 차량유지비 21, 버스임차료 327) | 1,407<br>(청사유지보수 10, 청사관리용역 977, 차량유지비 20, 버스임차료 400) | 1,407<br>(시설장비유지 85, 청사관리용역 907, 차량유류비 15, 버스임차료 400) | -            | -    |
| ▪ 보전금             | 2<br>(포상금 2)                                          | 2<br>(포상금 2)                                          | 2<br>(포상금 2)                                          | -            | -    |
| ▪ 민간이전            | 33<br>(퇴직금 7, 보험료 26)                                 | 42<br>(퇴직금 16, 보험료 26)                                | 35<br>(3,484천원×10명)                                   | △7           | △0.4 |
| □ 비목(합계)          | 1,385                                                 | 1,451                                                 | 1,451                                                 | △7           | △0.4 |
| ○ 임차료(210-07)     | 327                                                   | 400                                                   | 400                                                   | -            |      |
| ○ 차량유류비(210-08)   | -                                                     | -                                                     | 15                                                    | 15           |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002                                                 | 987                                                   | 85                                                    | △902         |      |
| ○ 차량선박비(210-10)   | 21                                                    | 20                                                    | -                                                     | △20          |      |
| ○ 청사관리용역(210-15)  | -                                                     | -                                                     | 907                                                   | 907          |      |
| ○ 포상금 등(310-03)   | 2                                                     | 2                                                     | 2                                                     | -            |      |
| ○ 민간위탁(320-02)    | -                                                     | -                                                     | 35                                                    | 35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 예산사업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 (억원) |       |                                                                                                                                                                                                       |
|------|-------|-------------------------------------------------------------------------------------------------------------------------------------------------------------------------------------------------------|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16  | 14.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료 : (버스 4대×99백만) ⇒ 4</li> <li>▪ 시설장비유지비 : 9.87</li> <li>▪ 차량선박유지비 : 0.2</li> <li>▪ 연금지급금 : 0.42</li> <li>▪ 포상금지원 : 0.02</li> </ul>                         |
| '17  | 14.4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료 : (버스 4대×99백만) ⇒ 4</li> <li>▪ 차량유류비 : 0.15</li> <li>▪ 시설장비유지비 : 0.85</li> <li>▪ 청사관리용역비 : 9.07</li> <li>▪ 포상금지원 : 0.02</li> <li>▪ 민간위탁 : 0.35</li> </ul> |
| '18  | 14.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료 : (버스 4대×99백만) ⇒ 4</li> <li>▪ 차량유류비 : 0.15</li> <li>▪ 시설장비유지비 : 0.85</li> <li>▪ 청사관리용역비 : 9.07</li> <li>▪ 포상금지원 : 0.02</li> <li>▪ 민간위탁 : 0.42</li> </ul> |
| '19  | 14.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료 : (버스 4대×99백만) ⇒ 4</li> <li>▪ 차량유류비 : 0.15</li> <li>▪ 시설장비유지비 : 0.85</li> <li>▪ 청사관리용역비 : 9.07</li> <li>▪ 포상금지원 : 0.02</li> <li>▪ 민간위탁 : 0.42</li> </ul> |
| '20  | 14.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료 : (버스 4대×99백만) ⇒ 4</li> <li>▪ 차량유류비 : 0.15</li> <li>▪ 시설장비유지비 : 0.85</li> <li>▪ 청사관리용역비 : 9.07</li> <li>▪ 포상금지원 : 0.02</li> <li>▪ 민간위탁 : 0.42</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446호)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29조

#### ○ 추진경위

- 표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 및 표준정책 관련한 신속한 이동성 확보를 위한 차량지원 필요
- 표준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자를 포상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 하고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포상제도 운영

####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국가기술표준원<br>기관운영 | 11.6  | 11.3  | 14.7  | 14.5  | 14.4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 : 10백만원 전용(사유:업무용 차량 운영 예산 부족 등)
- 2014년 : 12백만원 전용(사유:업무용 차량 운영 예산 부족 등)
- 2015년 : 83백만원 불용(사유:통근버스 입찰 차액 72백만원 등)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1,161<br>( - ) | -<br>( - )  | 10<br>( - ) | 1,171<br>( - )  | 1,170<br>( - ) | -<br>( - ) | 1<br>( - )  |
| '14년 | 1,122<br>( - ) | -<br>( - )  | 12<br>( - ) | 1,134<br>( - )  | 1,133<br>( - ) | -<br>( - ) | 1<br>( - )  |
| '15년 | 1,486<br>( - ) | -<br>( - )  | -<br>( - )  | 1,486<br>( - )  | 1,385<br>( - ) | -<br>( - ) | 83<br>(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사항 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 기술표준정책사업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기술표준정책사업 | 2,004 | 1,687        | 1,529        | △ 158        | △ 9.4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4 - 302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강병구), 표준정책과장(박주승, 043-870-5340), 연구관(노학엽, 043-870-5346)

### 1.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 2. 사업목적

-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 분야에 세계시장 선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 글로벌 표준리더국 도약을 위한 국제표준화 기구 참여

### 3. '17년 예산 내용

####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부담금(789백만원)

- ISO, IEC 등 10개 표준관련 국제기구 회원국 부담금 납부
  - 산출내역 : ISO, IEC 등 11개 국제표준화기구

##### ② 운영비(685백만원)

-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분야 관련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기타직보수, 복리후생비 등) : 422백만원

▪ 산출내역 :  $1.85\text{백만원} \times 12\text{개월} \times 19\text{명} = 422\text{백만원}$

- 숙련도 위원회 개최 등 적합성평가(시험·검사·인증·계량·교정·품질업무 등) 운영 수당 등 : 68백만원

▪ 산출내역 : 숙련도운영 등 5분야  $\times 0.1\text{백만원} \times 10\text{명} \times 13\text{회} = 68\text{백만원}$

- 품질경영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 175백만원

▪ 산출내역 : (우수기업 선정)  $2\text{일} \times 2\text{명} \times 130\text{업체} \times 0.25\text{백만원} = 130\text{백만원}$   
(포상물 제작)  $6\text{개분야} \times 500\text{개} \times 0.015\text{백만원} = 45\text{백만원}$

- 국가표준화 정책 수립 운영 및 활동 지원 : 20백만원

### ③ 연구용역비(50백만원)

-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동향 조사·분석

▪ 산출내역 :  $2\text{과제} \times 22.5\text{백만원} = 50\text{백만원}$

### ④ 포상금(5백만원)

- 우수관리부서 포상

▪ 산출내역 : 우수부서( $1\text{백만}$ )  $\times 5\text{과} = 5\text{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글로벌 표준경쟁이 심화되는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표준선진화전략, 국제표준협력방안 등 기술표준정책분야의 지속적인 정책연구개발이 필요
- 국가산업발전 및 글로벌표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표준업무 관련 부서 포상을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개인역량 강화 유도
- 국제표준 선도 및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확대를 위하여,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회원 부담금 납부는 필수적인 사항임

# < 세 부 내 역 >

(백만원)

| 구 분                             | '15결산 | '16예산<br>(A)                                | '17예산<br>(B)                                                  | 증 감<br>(B-A)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기술표준정책 | 1,941 | 1,687                                       | 1,529                                                         | △158         | 9.4   |
| ▪ 운영비                           | 945   | 767<br>(운영지원 422,<br>적합성평가 90,<br>우수기업 255) | 685<br>(운영지원 422,<br>적합성평가 68,<br>우수기업 175,<br>국가표준화 정책수립 20) | △82          | △10.7 |
| ▪ 연구용역비                         | 224   | 115<br>(4과제×28.5백만)                         | 50<br>(2과제×22.5백만)                                            | △65          | △56.5 |
| ▪ 포상금운영                         | 4     | 5<br>(5개×1백만)                               | 5<br>(5개×1백만)                                                 | -            | -     |
| ▪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부담금                 | 768   | 800<br>(11개 가구)                             | 789<br>(11개 국제표준화기구)                                          | △11          | △1.4  |
| <input type="checkbox"/> 비목(합계) | 1,941 | 1,687                                       | 1,529                                                         | △158         | △9.4  |
| ○ 상용임금(110-03)                  | 357   | 380                                         | 380                                                           | -            | -     |
| ○ 일반수용비(210-01)                 | 261   | 255                                         | 263                                                           | 8            | 3.1   |
| ○ 복리후생비(210-12)                 | 4     | 6                                           | 6                                                             | -            | -     |
| ○ 시험연구비(210-13)                 | 294   | 90                                          | -                                                             | △90          | 순감    |
| ○ 일반연구비(260-01)                 | -     | -                                           | 50                                                            | 50           | 순증    |
| ○ 정책연구비(260-02)                 | 224   | 115                                         | -                                                             | △115         | 순감    |
| ○ 포상금(310-03)                   | 4     | 5                                           | 5                                                             | -            | -     |
| ○ 연금지급금(320-03)                 | 29    | 36                                          | 36                                                            | -            | -     |
| ○ 국제부담금(340-02)                 | 768   | 800                                         | 789                                                           | △11          | △1.4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최신 산업환경변화 및 국제표준 동향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기술표준 정책 수립에 요구되는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 국제표준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표준 리더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당분야 국제표준화 기구 국제부담금 확대 등 국제표준협업 강화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16 | 16.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분야 운영비 : 7.67</li> <li>▪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분야 정책연구비 : 1.15</li> <li>▪ 포상금 : 0.05</li> <li>▪ 국제표준화기구 부담금 : 8</li> </ul>    |
| '17 | 15.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 정책 운영비 : 6.85</li> <li>▪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분야 정책연구비 : 0.5</li> <li>▪ 포상금 : 0.05</li> <li>▪ 국제표준화기구 부담금 : 7.89</li> </ul> |
| '18 | 14.8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 정책 운영비 : 6.52</li> <li>▪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분야 정책연구비 : 0.7</li> <li>▪ 포상금 : 0.05</li> <li>▪ 국제표준화기구 부담금 : 7.55</li> </ul> |
| '19 | 13.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 정책 운영비 : 5.58</li> <li>▪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분야 정책연구비 : 0.4</li> <li>▪ 포상금 : 0.05</li> <li>▪ 국제표준화기구 부담금 : 7.1</li> </ul>  |
| '20 | 13.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 정책 운영비 : 5.58</li> <li>▪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분야 정책연구비 : 0.4</li> <li>▪ 포상금 : 0.05</li> <li>▪ 국제표준화기구 부담금 : 7.1</li> </ul>  |

## 5. 고려사항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제22조(제품인증)

-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계량산업의 지원)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품질경영 우수기업 지원)

○ 추진경위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06. 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 수립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 수립
- 2012. 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2013.6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4.3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5.5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 사업명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 ○ 기술표준정책 | 19.4  | 18.5  | 20.0  | 16.9  | 15.3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 : 95백만원 불용(사유:예산절감 및 국제부담금 환율변동 등)
- 2014년 : 125백만원 불용(사유:예산절감 및 전문관 휴직에 따른 인건비 불용)
- 2015년 : 63백만원 불용(사유:예산절감액 및 국제부담금 환율변동 등)

(억원)

| 년도   | 당초예산<br>(A)    | 전년이월<br>(B) | 이·전용<br>(C) | 예산현액<br>(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3년 | 1,945<br>( - ) | -<br>( - )  | -<br>( - )  | 1,909<br>( - )  | 1,814<br>( - ) | -<br>( - ) | 95<br>( - )  |
| '14년 | 1,853<br>( - ) | -<br>( - )  | -<br>( - )  | 1,853<br>( - )  | 1,728<br>( - ) | -<br>( - ) | 125<br>( - ) |
| '15년 | 2,004<br>( - ) | -<br>( - )  | -<br>( - )  | 2,004<br>( - )  | 1,941<br>( - ) | -<br>( - ) | 63<br>(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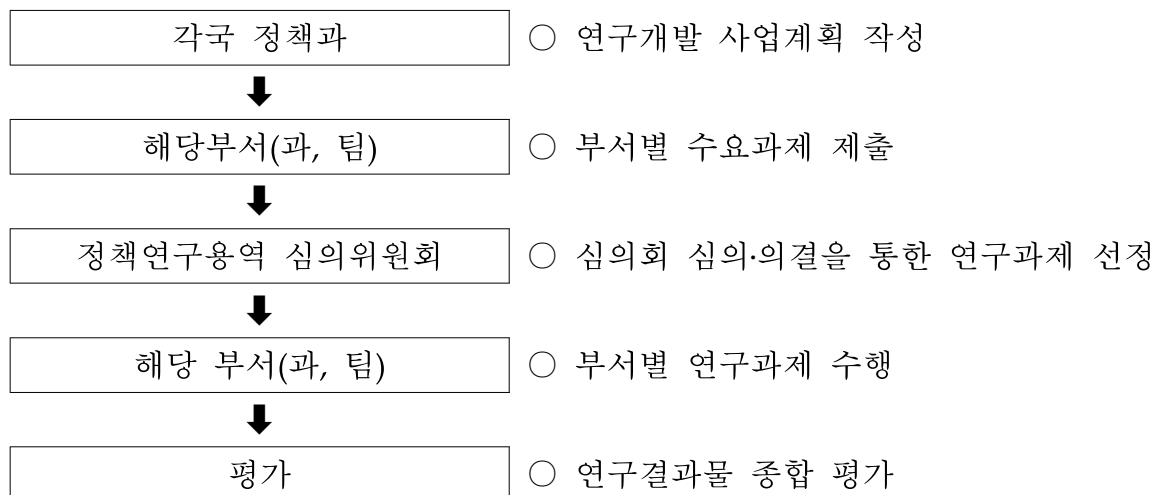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 (5) 사업추진절차

- 연구용역 추진절차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